發 刊 辭

우리가 꿈꾸는 평화적인 남북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를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로 만들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통일에 앞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끄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이 홍콩 및 마카오와 체결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성공 사례는 남북한 경제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은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아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한 국가 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존시키는 일국양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일국양제의 시행과 더불어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편입되었지만 실질적인 통합은 CEPA를 통하여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악화로 남북 관계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중국과 홍콩·마카오 CEPA의 이해」는 중국과 홍콩·마카오 CEPA의 사례를 분석·평가하여 이를 남북 관계에 접목시킴으로써 향후 남북 경제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로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본 책자가 남북관계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법제 정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책자의 발간을 기획하고 감수를 맡아 준 이천세 통일법무과장과 다양한 자료의 번역 및 집필을 담당한 박기동 검사, 이상철 연구위원, 그리고 성실히 교정에 임해 준 통일법무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9년 12월

법무부 법무실장 성 영 훈

목 차

제1편 서 설 ····· 1

제1장 연구의 목적 ····· 3

제2장 본서의 체계 ····· 6

제2편 중국-홍콩 · 마카오 CEPA의 이론적 기초 ····· 9

제1장 개관 ····· 11

제2장 중국-홍콩 · 마카오 관계와 일국양제 ····· 13

제1절 홍콩 · 마카오의 식민지배와 중국 반환 ····· 13

1. 영국의 홍콩에 대한 식민지배와 반환 과정 ····· 13

2. 포르투갈의 마카오에 대한 식민지배와 반환 과정 ····· 16

제2절 일국양제 이론의 개념과 발전 ····· 19

1. 기본 개념 ····· 19

2. 일국양제의 기본원칙 ····· 20

가. 하나의 중국 ····· 20

나. 중국의 사회주의제도 견지 ····· 22

다. 홍콩, 마카오 등의 자본주의제도 장기적 불변 ····· 24

3. 일국양제 이론의 형성과 발전 ····· 26

제3절 법률제도로서 일국양제의 특징 ····· 30

1. 특수한 단일제 국가형태 ····· 30

2. 상이한 법률과 제도의 병존 ····· 32
3.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자치제도 ····· 34
제4절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 36
1. 특별행정구의 법적 근거 ····· 36
가. 중국 헌법 ····· 36
나.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 37
2.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 38
가. 중국의 행정구역으로서 특별행정구 ····· 38
나. 중국의 각 행정구역과 특별행정구와의 관계 ····· 39
제5절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른 특별행정구의 법적 권한과 한계 ····· 43
1. 중국인민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권한 분배의 기준 ····· 43
가. 일반론 ····· 43
나. 권한 분배의 원칙과 기준 ····· 45
2. 특별행정구의 행정, 입법, 사법권 ····· 50
가. 현지인에 의한 특별행정구의 통치 ····· 50
나. 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권 ····· 51
다. 특별행정구의 입법권 ····· 52
라. 특별행정구의 사법권 ····· 53
3. 특별행정구 권한행사의 한계 ····· 54
제6절 독립관세구역으로서 특별행정구 ····· 60
1. 특별행정구와 대외사무 ····· 60
가. 외교사무와 대외사무의 처리 주체 ····· 60
나. 특별행정구의 대외사무 처리 내용과 방법 ····· 62
다. 비주권국가인 특별행정구의 국제기구 가입 ····· 65

2. 특별행정구의 경제제도 ····· 68
가. 사유재산제의 보호 ····· 68
나. 독립적인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 70
다. 화폐와 금융제도의 독자적 운영 ····· 73
라. 자유무역 정책과 무관세의 독립관세구역 ····· 74
3. 중국과 별개의 WTO 회원으로서의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 75

제3장 WTO와 CEPA ····· 78

제1절 WTO 체제하에서의 지역경제단일화 ····· 78
1. GATT 제24조 ····· 78
2.『1994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 81
3 지역경제단일화가 WTO 다자간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 ····· 83
가.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지역경제단일화의 긍정적 영향 ···· 83
나.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지역경제단일화의 부정적 영향 ···· 84
4. WTO체제 속에서의 지역경제단일화 전망 ····· 85

제2절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규범 ····· 87
1. WTO협의 중 지역무역협정의 법률체계와 관련한 내용 ·· 87
가. 투명성 ····· 89
나. 역내 무역자유화 실현 ····· 90
다. 협정의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92
2. WTO 협의 중 지역무역협정 제한의 완화 ····· 92

제3절 중국 4개 관세영토와 지역무역협정 ····· 95
1.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필요성 ····· 99
가.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입지강화 ····· 99
나. 중국의 기치 아래 각 당사자들과의 특수관계 강화 ····· 99

다. 중국의 지역경제단일화전략 발전상 필요 ····· 100
2. 양안의 WTO 가입에 따른 문제 ····· 101

제3편 중국-홍콩 · 마카오 CEPA의 이해 ····· 105

제1장 중국-홍콩 CEPA ····· 107

제1절 CEPA의 출현배경 ····· 107
1. 내부적 요인 ····· 107
2. 외부적 요인 ····· 110

제2절 CEPA의 시행 ····· 112
1. CEPA의 체결주체 ····· 113
2. CEPA의 법적 성격 ····· 114
3. WTO 체제 하에서의 CEPA 특징 ····· 117
4. CEPA의 실시 ····· 118

제3절 CEPA의 내용 ····· 120
1. 개관 ····· 120
2. 화물무역자유화 ····· 122
가. CEPA의 원산지 규칙 ····· 124
(1) 원산지규칙의 성격 ····· 124
(2) CEPA에서 정한 원산지 표준 ····· 128
(3) 원산지증서의 발행 절차 ····· 133
나. 원산지규칙의 문제점 ····· 140
(1) 우회덤핑 문제 ····· 140
(2) 개선 방안 ····· 144
3. 서비스무역자유화 ····· 148

가. CEPA상 서비스무역의 내용 ····· 151
(1) 시장진입 ····· 151
(2)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 152
(3) 법인인 서비스제공자의 성립 기준 ····· 158
(4) 서비스무역제공의 절차 ····· 164
나.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문제점 ····· 169
(1) 서비스무역자유화에 있어서 '홍콩 회사'의 정의 문제 169
(2) 회사제도의 차이 ····· 171
(3) CEPA 적용의 문제 ····· 172
(4) '홍콩회사' 분류기준 자체의 문제 ····· 174
4. 무역투자 간이화의 내용 ····· 178
제4절 분쟁해결제도 ····· 184
1. CEPA 규정상의 문제점 ····· 184
가. 구체적 규정의 미비 ····· 184
나. 사법적 성격의 배제 ····· 186
다. 분쟁해결수단의 다양화와 운용가능성의 확대 필요 ···· 188
2. WTO의 분쟁해결제도 ····· 190
가. 의의 및 법원 ····· 190
나. 적용범위 및 기본적 원칙 ····· 194
(1) 적용범위 ····· 194
(2) 기본원칙 ····· 196
(3) 분쟁해결방법 ····· 198
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CEPA에의 적용 여부 ····· 205
3. 지역경제단일화협정의 분쟁해결제도 ····· 208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제도 ····· 208
나. 유럽공동체의 분쟁해결제도 ····· 209

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분쟁해결제도 ····· 211
라. 지역경제단일화협정들의 분쟁해결제도 비교 ····· 213
4. CEPA의 분쟁해결제도 보완 ····· 214
가. 참조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식 ····· 214
나. CEPA의 분쟁해결제도 보완 시 고려할 점 ····· 216
(1) 협상우선원칙 ····· 216
(2) 전문가(패널)을 이용한 해결방법 모색 ····· 217
(3) 상소기구절차 관련 유의점 ····· 224
제5절 CEPA가 중국과 홍콩에 끼친 영향 ····· 226
1. 개관 ····· 226
2. 화물무역방면 ····· 228
가. 홍콩경제의 비약적 활성화 ····· 228
나. 홍콩산 소비재의 중국 수출 증대 ····· 233
3. 서비스무역방면 ····· 236
가. 개관 ····· 236
나. 서비스무역의 수출입구조 변화 ····· 239
다. 중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방향 ····· 243
라. CEPA가 홍콩산업구조 조정에 미친 효과 분석 ····· 251
4. 무역투자편리화방면 ····· 253
가. 홍콩자본의 중국투자 활성화 ····· 253
나. 중국에 대한 홍콩의 투자구조 개선 ····· 255
다. 투자 증대로 인한 홍콩의 취업률 증가 ····· 262
5. 여행협력 방면 ····· 266
6. CEPA의 정치·사회적 영향 ····· 274

제2장 중국 - 마카오 CEPA ····· 275
제1절 마카오의 경제상황 ····· 275
제2절 중국-마카오 CEPA의 내용 ····· 280
1. 화물무역 ····· 280
가. 원산지규칙 ····· 281
나. 무관세향유를 위한 절차 ····· 283
2. 서비스무역 ····· 285
가. 시장진입 ····· 286
나. 서비스제공자 ····· 286
다. 제출서류 ····· 289
라. 여행협력 및 전문직 자격의 상호 승인 ····· 293
3. 무역투자편리화 ····· 294
제3장 CEPA와 중화경제권 ····· 296
제1절 중화경제권 ····· 296
1 중화경제권의 범위 ····· 296
2. 중화경제권의 중심으로서의 화남경제권 ····· 301
3. 화남경제권의 주요 경제구역 ····· 309
가. 주강삼각경제구역 ····· 309
나. 푸지엔-대만 경제구역 ····· 315
4. CEPA와 화남경제권 ····· 316
제2절 대만의 중화경제권 편입 문제 ····· 320
1. 지역경제단일화 과정에서의 대만의 고립 ····· 320
2. 양안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 327
가. 배경 ····· 327

나. 기본협정의 목적 ····· 332
다. 기본협정에 담고자 하는 내용 ····· 333

제4편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한 CEPA ····· 335

제1장 남북한 경제적 거래의 법적 고찰 ····· 337

제1절 개관 ····· 337

제2절 남북한 특수관계론 ····· 341
1. 개념과 특성 ····· 341
2. 북한의 이중적 법적 지위 ····· 343
3.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법적 함의 ····· 348
가. 국내법적 영역 ····· 348
나. 국제법적 영역 ····· 349

제3절 남북한 경제적 거래의 법적 성격 검토 ····· 350
1. 분단국가의 거래와 민족내부거래 ····· 350
2. 남북합의서의 관점 ····· 351
3. 국내법적 관점 ····· 362
4. 국제법적 관점 ····· 367
5. 종합적 검토 ····· 373

제2장 민족내부거래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 379

제1절 개관 ····· 379

제2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 ····· 379
1. 개발도상국 허용조항(Enabling Clause) 원용 ····· 379
2. WTO협정상의 의무로부터의 면제(waiver) 획득 ····· 381

3. GATT 가입의정서 개정 또는 특별의정서 개정 ····· 383
4.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남북한 특수관계를 반영하는 방안 ····· 386

제3장 중국-홍콩·마카오 CEPA에 비추어 본 남북한 CEPA의 가능성 ····· 388

제1절 개관 ····· 388

제2절 남북한 CEPA의 제약요인 ····· 390
1. 우리 헌법 제3조 ····· 390
2. WTO 체제와 GATT 제24조 ····· 392
3. 북한 ····· 393

제3절 남북한 CEPA 체결의 기반 ····· 394

제4절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정립과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 ···· 397

참고문헌 ····· 400

부 록 ····· 405

제 1 편　서 설

제1장 연구의 목적

중국과 홍콩・마카오는 원래 하나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배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실질적인 분단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콩・마카오는 명실상부한 중국의 일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는 과정에 기여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법제도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일국양제라고 볼 수 있다.

일국양제의 과감한 선택은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를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받으면서 국제사회와 홍콩 및 마카오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단숨에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국양제는 원래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였던 방안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을 목표로 창안한 것은 아니었다. 일국양제는 한 국가 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그에 따르는 모순과 충돌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법제도적인 장치로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일국양제의 시행 이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게 된다.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독립관세구역인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모두 WTO 협정의 규율대상이 되었고 각자가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홍콩・마카오는 과감히 CEPA를 체결하여 국제적 거래질서에서 GATT가 부과한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경제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물론 중국과 홍콩 또는 마카오가 CEPA를 체결한 것은 단순히 GATT가 부과한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과 홍콩이 CEPA를 체결한 2003년 무렵에는 홍콩과 중국에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하였고, 그 여파로 홍콩의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홍콩 경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홍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국의 홍콩 통치에 대한 홍콩 주민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려하였다. 중국과 홍콩이 CEPA를 체결한 이후 홍콩 경제는 곧바로 활성화되었고 중국은 CEPA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EPA 시행 이후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그야말로 진정한 경제공동체가 되었으며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는 중국 없이는 더 이상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졌고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까지 높아져 이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실질적인 정치·사회적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급격히 냉각된 현재의 남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자리잡고 있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정립을 통하여 한걸음 한걸음 남북통일을 준비하여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 CEPA의 체결은 남북한이 진정한 경

제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현재 중국-홍콩·마카오 CEPA에 관한 경제적 측면에 대하여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이론적 토대나 그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CEPA 시행에 따른 영향,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연구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서에서는 중국-홍콩·마카오 CEPA에 대한 보다 기초적이면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국-홍콩·마카오 CEPA 사례를 남북한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남북한 CEPA 체결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중국과 홍콩·마카오 CEPA에 대한 연구가 남북한 경제협력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 본서의 체계

본서는 일국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CEPA를 체결할 수 있었던 이론적 기반인 일국양제 이론과 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 WTO와 CEPA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CEPA 시행의 영향 및 효과 등을 검토한 후 현재 남북한의 경제적 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을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남북한 CEPA의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1편 서설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본서의 체계를 설명하고 제2편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이론적 기초에서는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이론적 기반인 일국양제와 특별행정구의 지위, WTO와 CEPA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제2장 중국-홍콩·마카오 관계와 일국양제에서는 홍콩·마카오의 식민지배와 중국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일국양제 이론의 개념과 발전, 특수한 법률제도로서 일국양제의 특징,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른 특별행정구의 법적 권한과 한계, 독립관세구역으로서 특별행정구의 권한과 국제법 주체성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 WTO와 CEPA에서는 WTO 체제하에서의 지역경제단일화 문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규범 내용, 중국 4개 관세영토와 지역무역협정 관련 문제 등을 서술하였다.

제3편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이해에서는 중국-홍콩 CEPA와 중국-마카오 CEPA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는데, 제1장 중국-홍콩 CEPA에서는 중국-홍콩 CEPA의 출현배경, 중국-홍콩 CEPA의 시행, 중국-홍콩 CEPA의 내용과 원산지규칙 및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 CEPA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EPA가 중국과 홍콩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 제2장 중국-마카오 CEPA에서는 마카오의 경제상황과 중국-마카오 CEPA의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 CEPA와 중화경제권에서는 중화경제권의 범위와 화남경제권, CEPA와 화남경제권 등에 대한 문제, 대만의 중화경제권 편입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제4편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한 CEPA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법적 문제점과 중국-홍콩·마카오 CEPA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한 CEPA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제1장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의 법적 고찰에서는 그 이론적 기초로서 남북한 특수관계론, 남북한 경제적 거래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았고 제2장 민족내부거래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로 개발도상국 허용조항 원용 방안, WTO협정상의 의무로부터의 면제 획득 방안, GATT 가입의정서 개정 또는 특별의정서 개정 방안,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남북한 특수관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 중국-홍콩·마카오 CEPA에 비추어 본 남북한 CEPA의 가능성에서는 남북한 CEPA의 제약요인, 남북한 CEPA 체결의 기반,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정립과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 등의 순서로 서술하였다.

부록으로 중국-홍콩·마카오 CEPA와 그 부속문서, 중국헌법,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등을 수록하여 관련 내용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 편　중국-홍콩 · 마카오 CEPA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개 관

21세기에 들어서 국제 경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적인 자유무역지대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속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칠레 FTA를 필두로 싱가폴, 아세안,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인도,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이미 발효 중에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특정국가와의 호혜조치가 자국의 관심부분에 집중되어 외국인투자를 견인하고 경제성장 및 기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데, 시장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자국시장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1] 한편,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반환 후 세계적인 개방화와 위와 같은 지역경제 일체화 추세로 인해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구조가 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하면서 양측 관계를 한 단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3. 6. 29.과 같은 해 10. 17.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와 각각 이른 바 경제협력강화협정(약정)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하였다. 중국-홍콩·마카오 CEPA는 중국-홍콩·마카오의 상품 등 교역을 활성화하고 홍콩·마카오 기업의 중국내 서비스업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 간소화 및 촉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FTA와 동일한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홍콩·마카오의 CEPA는 그 내용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앞서 우리나라의 FTA

1) 김여선, "중국 CEPA의 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111면

체결 현황에서 언급한 바 같이 FTA 혹은 CEPA는 국가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간 체결된 것이 아니라 1개 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지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이다. 즉 중국-홍콩·마카오 CEPA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자유무역협정'인 것이다.

그러면 1개 국가인 중국과 홍콩 또는 마카오가 어찌하여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는 CEPA를 체결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WTO 체제가 지배하는 현재 국제거래질서에서 FTA 또는 CEPA의 체결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다른 한편 중국과 홍콩 또는 마카오가 1개 국가인 이상 일응 중국의 국내법적 조치로도 충분히 CEPA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CEPA를 체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살펴보기에 앞서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이론적 기초로서 중국-홍콩·마카오의 관계와 WTO와 CEPA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중국-홍콩·마카오 관계와 일국양제

제1절 홍콩·마카오의 식민지배와 중국 반환

1. 영국의 홍콩에 대한 식민지배와 반환 과정

홍콩은 주강 하구의 동쪽, 중국 남해연안에 있으며, 광저우로부터 약 140㎞ 떨어져 있다. 홍콩섬과 구룡반도, 신계와 부근의 섬들을 포함하며, 면적은 1104㎢이다. 명나라 때 향나무를 중계운송하기 시작하면서 '홍콩(香港)'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홍콩은 '香港'의 광동어 발음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홍콩은 총 18개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총 인구는 7,054,867명인데 주민의 약 98%가 중국인이며, 나머지 2%는 필리핀·영국·인도·미국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식 언어로는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한다.[2)]

홍콩은 원래 광동성 신안현[현재의 '선전(深圳)'시]의 일부로 중국(당시는 '淸')의 영토였으나 1840. 6. 발발한 1차 아편전쟁으로 영국군이 홍콩섬을 점령한 후 1842. 8. 29. 영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남경조약으로 홍콩섬이 영국에 할양되었고 1843. 4. 5. 영국은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임을 선포하였다. 그 후 1843. 6. 26. 영국은 정식으로 홍콩정부를 수립하여 본격적인 식민통치를 시작하였다. 1856. 2차 아편전쟁 후 1860. 10. 24. 영국과 청나라는 북경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으로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구룡반도를 추가로 할양받았다. 그 후 1898. 6. 9.

---

2) http://100.naver.com/100.nhn?docid=172527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홍콩의 신계 지역[3]을 추가로 99년간 조차하게 되었고 영국이 파견한 총독은 홍콩의 행정권, 입법권, 부분적 사법권, 군사권 등을 보유하면서 영국 국왕을 대표하여 홍콩을 통치하였다.

1949. 10. 1. 모택동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은 '홍콩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정부는 영국과 청나라 사이의 홍콩 관련 3개 불평등조약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1971. 10. 25. 중국의 UN 회원국 지위 획득은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반환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한편, 영국의 홍콩 신계에 대한 조차기간은 총 99년으로 1997. 6. 30. 그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영국은 그 조차기간이 만료되면 홍콩 섬과 구룡반도에 대한 계속적인 통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

영국은 신계지역의 토지계약 연장 등 홍콩지역 조차의 연장을 희망하였으나 중국은 영국에 대하여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 중국이 홍콩의 주권을 회복한다는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고 중국 정부는 홍콩을 특수지구로 분류하여 특수한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1997. 7. 1. 홍콩을 회수하여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홍콩 회수 후 반드시 홍콩의 사회안정과 경제번영을 보장한다는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총 12가지 정책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중영연합성명의 주요내용이 되었다.[4]

---

3) 심천강 이남 지역 및 부근 235개 도서를 포괄하는 것으로 총 면적은 975.1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4)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서문「홍콩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나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점령되었다. 1984년 12월 19일 중·영 양국정부는 홍콩문제에 관한 연합성명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7년 7월 1일에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함을 확인함으로써 오랫동안 중국인민의 홍콩을 회수하려는 공동의 염원을 실현하게 되었다.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중국과 영국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홍콩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먼저 등소평은 영국의 대처수상이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홍콩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주권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두번째는 홍콩반환 이후 중국의 홍콩 관리에 대한 방안으로 일국양제 구상을 시행한다는 것,[5]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홍콩 반환은 외교경로를 통한 순리적이고 평화로운 협상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종래의 홍콩에 대한 할양 및 조차 조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홍콩에 대한 주권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기간연장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홍콩 반환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중국이 1982. 12.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개정을 통해 일국양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를 계기로 1983. 7. 중국과 영국은 홍콩문제에 대한 제2단계 협상에 들어갔다. 당시 영국의 입장은 1997년 이후 홍콩에 대한 주권 및 관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홍콩에 대한 최대한의 자치보장을 요구하면서 홍콩특별행정구가 중앙인민정부에 소속되는 것과 중국군의 홍콩 주둔을 반대하였고 이는 홍콩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1983. 9. 27. 홍콩반환문제에 관한 9가지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였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일국양제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였다.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은 중국정부가 중·영 연합성명에서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시행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의 실시를 보장한다.」 참조

5) 일국양제 구상은 원래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등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홍콩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먼저 적용되었다.

원칙[6]을 설명하였는데, 이 9가지 원칙은 일국양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괄한 것으로 이후 중영연합성명의 기초가 되었다.

1984. 5. 일국양제 이론에 의한 중국통일이라는 구상을 천명한 조자양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되면서 일국양제 구상은 최종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지닌 국가의 기본 방침이 되었고 이를 기초로 1984. 9. 26. 중국과 영국은 연합성명초안을 완성하고 1984. 12. 19. 정식으로 서명한 후 비준절차를 거쳐 1985. 5. 27. 중영연합성명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결국 1997. 7. 1. 자정을 기해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다[7].

2. 포르투갈의 마카오에 대한 식민지배와 반환 과정

마카오는 중국 남해 연안, 주강(珠江) 하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로부터 약 150㎞, 홍콩으로부터 약 64㎞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마카오는 마카오반도와 타이파섬(氹仔島)·, 콜로아네섬(路环島)을 포함하며, 면적은 27.3 ㎢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

6) 9가지 원칙의 내용은 (1) 1997년 7월에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수한다. (2)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수한 이후에는 홍콩인민들에 의해 홍콩이 통치되도록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게 한다. (3) 식민통치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홍콩의 현행법률제도는 변화되지 않는다. (4) 중국은 홍콩의 방위책임을 담당한다. 그러나 홍콩에 중국인민해방군을 주둔시키지 않는다. (5) 중국은 홍콩의 외교책임을 담당한다. 그러나 홍콩주민들의 국경출입과 이민업무의 관리, 그리고 대외무역 등에 대해서는 홍콩이 자주권을 갖는다. (6) 자유경제제도는 불변이다. (7) 외국인도 홍콩의 공사기관에서 계속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각종 공민권을 누릴 수 있다. (8) 홍콩의 최고책임자는 홍콩을 대표하는 단체의 공동추천에 의해 중국정부의 임명을 거쳐 선출된다. (9) 중국정부는 홍콩에 대해 세금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 중국이 홍콩 반환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① 중국의 강력한 국력 ② 일국양제 정책의 실효성, ③ 등소평 등 중국지도부의 결단과 주도면밀한 지휘 ④ 중국과 영국 당사자들의 끈질긴 노력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503,000명 수준이며 총인구 중 중국인이 95.2%, 포르투갈인이 2%, 필리핀인이 1.2%를 차지하고 있다.[8)]

마카오 역시 홍콩과 마찬가지로 원래 광동성 향산현[현재의 "중산"(中山)시]의 일부로 중국의 영토였으며 명나라는 마카오에 대외무역사무를 책임지는 시박사(市舶司)와 세관 등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1553년경 포르투갈인들이 처음으로 마카오에 상륙한 후 중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정주하기 시작하자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582년 포르투갈은 청나라와 마카오에 대한 조차조약을 체결하고, 1623년부터 포르투갈 정부는 마카오에 총독을 파견하여 청나라 정부의 통제[9)] 하에서 중계무역을 시작하였다.

1차 아편전쟁 직후인 1843년 마카오 반도에 포르투갈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하였고, 1845. 11. 20. 포르투갈은 법령 반포를 통해 마카오 반도를 자유항으로 선포하였다. 1847년에는 중국 관원을 몰아냈으며 1849년부터는 그 동안 납부하던 은 500냥의 토지세 등의 납부도 중단하였고, 1851년에는 타이파와 콜로아네를 점령함으로써 마카오 전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1887. 12. 1. 청나라 정부와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영원히 포르투갈이 관리한다'는 내용의 "중포우호통상조약(천진조약)"을 체결하면서 마카오는 완전한 포르투갈의 식민지통치를 받게 되었다. 한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정부는 마카오 문제에 대하여 홍콩문제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이 청나라와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지만 오히려

8) http://100.naver.com/100.nhn?docid=59172

9)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라기보다는 포르투갈이 청나라에 토지세와 상세 등으로 은 500냥을 납부하고 청나라 관원의 통제를 받은 순수한 임차지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정부는 1955년 “해외성조직법”을 통하여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해외성 중 하나임을 선포하였다.

1974. 4. 25. 포르투갈에서 혁명이 발발하고 이에 따라 포르투갈은 모든 해외식민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마카오를 포르투갈이 관리 중인 중국영토의 일부임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1979. 2. 8. 중국과 마카오가 수교한 후 중국과 포르투갈 쌍방은 홍콩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카오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는데 1984년 홍콩 반환에 관한 중영연합성명이 먼저 체결되자 1986년 6월부터 중국과 포르투갈은 마카오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시하면서 중국정부는 2000년 이전에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함과 아울러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 마카오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국양제 구상과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향후 50년간 자본주의제도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결국 중국과 포르투갈은 1987년 마카오문제에 관한 중포연합성명[10]에 서명하였고, 비준 절차를 거쳐 1988년 1월 15일 중포연합성명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 역시 정식으로 중국에 반환되었다.

---

10) 중포연합성명에는 마카오반도, 타이파(감자도), 콜로아네(노환도)는 중국영토로서 중국정부가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 중국정부는 일국양제의 방침에 따라 헌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인민정부에 속하며 외교와 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관하여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 및 입법기관은 이 지역 사람들로 구성되고, 마카오 행정장관은 마카오의 선거를 거쳐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하며, 마카오 현행의 사회·경제제도, 생활방식,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담았는데 이는 추후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에 그대로 규정되었다,

제2절 일국양제 이론의 개념과 발전

1. 기본 개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의 홍콩 및 마카오의 반환과 일국양제 이론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일국양제 이론은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이론이지만 실제로는 홍콩에 가장 먼저 적용되었다.

일국양제는 '일개국가 양종체제'의 준말로서 하나의 국가 안에 성격이 서로 다른 2가지 제도(또는 체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즉 1국가 2체제 또는 1국가 2제도를 의미[11]한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홍콩, 마카오는 물론 대만과의 통일에 있어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등소평에 의해 중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등소평은 일국양제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내에서 10억 인구의 대륙은 사회주의제도를 실행하고 홍콩과 대만은 자본주의를 실행한다"[12]고 언급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하였는데, 중국은 일국양제 이론을 바탕으로 영국과 포르투갈을 설득하여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에도 중국은 일국양제 이론을 바탕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국양제 이론에서 '일국' 즉 '하나의 국가'란, '국가주권의 불가분성과 중화민족의 통일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일 후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있

11)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 법제」 1995. 21면
12) 등소평, 「등소평문선」제3권, 인민출판사 1993. 58면

고 최고 행정기관으로는 국무원(國務院)이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유일한 합법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대만과 홍콩, 마카오는 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별행정구로서 중앙정부의 수권(授權)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일 뿐이라는 것이다.[13]

'2체제'의 의미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범위 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체제가 병존하는 것이지만 두 사회제도가 단순히 평행적으로 존재하거나 두 정치실체가 상호배척·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원리인 사회주의체제가 그 주축이 되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체제가 상호촉진하여 공동 발전한다는 것이다.[14]

2. 일국양제의 기본원칙

가.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이론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의 중국' 이다. 중국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만든 통일적인 다민족국가라고[15] 규정하면서 대만 역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로서 대만동포를 포함한 중국인민 모두는 중국의 통일완수를 위한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규정하고

13)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홍콩 및 마카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하여는 홍콩 및 마카오에 보장하지 않았던 군대의 보유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일국양제하의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다른 성·시·자치구는 물론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와도 다르게 자신의 사법제도와 黨·政·軍 계통을 보유할 수 있으며 중국은 관리 및 군대를 대만에 파견하지 아니하고 대만은 중국중앙정부에 대표를 파견하여 참정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26면

15)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서언 중 「中華人民共和國是全國各族人民共同締造的統一的多民族國家」

있다.[16] 이렇듯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상에는 오직 한 개의 중국이 있을 뿐이며, 중앙정부는 베이징에 있다"는 것으로 "중국정부는 중국의 분열과 영토보존을 해하려는 목적의 어떠한 언행도 결연히 반대하고,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또는 '1국가 2정부'를 모두 반대하며, 대만독립을 야기하는 일체의 기도와 행동에 반대한다"는 것이다.[17]

또한,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역시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18]라고 선언하는 한편, 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행정구역 중 하나로 중앙정부에 직할되고[19], 중앙정부는 홍콩과 마카오 각 특별행정구의 외교와 방위을 전담하며[20]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 공무원을 임명[21]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결국, 일국양제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는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며, 일국양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이론적 수단인 것이다.

일국양제이론에 의하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며 이는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홍콩, 마카오 등은 중화인민

16)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서언 중 「台灣是中華人民共和國的神聖領土的一部份。完成統一祖國的大業是包括台灣同胞在內的全中國人民的神聖職責」
17) http://www.gwytb.gov.cn/bps/bps_zgty.htm.
18)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조
19)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조
20)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3~14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3~14조
21)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조

공화국의 불가분적인 지방행정구역일 뿐이며 홍콩, 마카오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국가주체의 정치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주권을 분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행정구는 일국 내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비록 중국의 다른 지구에 비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지만 이는 중앙에서 수여하는 것이지 특별행정구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일국양제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일국양제의 구성과 운영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22]

나. 중국의 사회주의제도 견지

일국양제 이론은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가 동시에 하나의 국가 안에 병존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등소평은 "우리의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주체를 견지하는 바탕 위에서 가능하고 중국에 사회주의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수

22)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대만과의 관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전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로서 중국은 1971년 10월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므로 유일 합법정부라는 중국의 지위 및 그 일부분에 속하는 대만의 지위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염원하는 양안의 중국인민은 모두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위 대만의 자결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서 이에 배치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2008. 35면

없다"고 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위해 비로소 일국양제정책을 수립하여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23]

홍콩, 마카오의 자본주의제도는 50년간 불변[24]하지만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국가 건설 목표[25] 역시 변하지 아니한다. 즉, 일국양제 구상의 실행은 사회주의제도의 실행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통일은 바로 중국의 사회주의제도가 불변한다는 기초 위에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 헌법상의 근거는 중국 헌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헌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26]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일국양제는 위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의 일부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본주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사회주의를 헌법적 기본원칙으로 견지한다고 하여 홍콩, 마카오에 사회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특

---

23) 법무부「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1995. 31면

24)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조

25)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서언 중「中國各族人民將繼續在中國共産黨領導下，在馬克思列寧主義.毛澤東思想指引下，堅持人民民主專政，堅持社會主義道路，不斷完善社會主義的各項制度，發展社會主義民主，健全社會主義法制，自力更生，艱苦奮鬥，逐步實現工業.農業.國防和科學技術的現代化，把我國建設成爲高度文明.高度民主的社會主義國家」

26)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中華人民共和國是工人階級領導的.以工農聯盟爲基礎的人民民主專政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制度是中華人民共和國的根本制度。禁止任何組織或者個人破壞社會主義制度」

별행정구의 자본주의 제도가 서로 보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다. 홍콩, 마카오 등의 자본주의제도의 장기적 불변

'하나의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함께 홍콩, 마카오, 대만의 자본주의제도와 생활방식의 장기적 불변을 견지하는 것도 역시 일국양제 이론의 핵심적인 기본원칙이다. 등소평은 반복하여 홍콩, 마카오 등의 자본주의제도는 불변한다는 원칙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특별행정구는 자기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대륙과는 다른 제도를 실시하고 사법권과 종심권이 부여된다고 하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 회수 후 홍콩 및 마카오의 현행 사회, 경제제도는 불변이고, 법률이나 생활방식도 불변이며 자유항 및 국제무역, 금융중심지의 지위도 불변하고 기타 국가와 경제발전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하였다.[27] 일국양제의 독창성은 중국통일 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장기적으로 일부 영역의 자본주의제도를 유지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홍콩,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에 자본주의 제도를 50년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랜 식민지배 과정에서 자본주의 제도에 익숙해진 홍콩과 마카오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만으로는 오랜 기간 영국과 포르투갈이 통치하면서 자본주의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아 통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등소평은 사회주의의 보통원리를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가지 제도를 두는 일국양제를 구상하여 이 난제를 해결하였다.

---

27) 법무부「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1995. 35면

중국은 일국양제 정책 하에서 중국헌법 제31조[28]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이라는 법률 형식으로 홍콩, 마카오의 자본주의제도의 장기불변 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기본법에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자본주의제도가 50년간 불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들 지역의 자본주의제도는 장기적 불변이라는 법률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29]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를 공존시킨다는 주장은 제안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 및 성공가능성에 대해 많은 회의가 있었고 특히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에 대해 특별행정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륙과는 다른 기존의 자본주의체제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홍콩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였다. 특히 반환일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많은 홍콩인들의 탈(脫)홍콩 추세가 나타나면서 홍콩사회는 극도의 불안에 빠졌다. 그러나 홍콩반환 12년이 지난 현재 세계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 또한 '두 체제의 병존'에 대해 더 이상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다. 홍콩 주민들도 정치적 자유문제에 있어서는 그전에 비해 불만이 있고 종종 대륙의 중앙정부를 향해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적어도 경제·문

---

28)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國家在必要時得設立特別行政區。在特別行政區內實行的制度按照具體情況由全國人民代表大會以法律規定」

29) 등소평은 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 50년간 자본주의제도의 불변을 규정한 의미를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전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고 이제 발전도중의 단계에 있는 국가이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30년 내지 50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50년은 중국의 현실과 발전에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50년이라 함은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등소평은 50년 불변이라고 말하지만 50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법무부「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1995. 36면

화 등의 면에 있어서는 12년 전 회귀를 앞둔 시점에서의 불안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륙의 경제가 날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국-홍콩 CEPA 등을 통해 홍콩 경제도 동시에 활황을 맞고 있으며 오히려 지나친 대륙의존도를 걱정하는 상황이다.[30]

3. 일국양제 이론의 형성과 발전

문화대혁명을 거친 후 중국은 등소평의 지도 아래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개혁개방의 추진과 함께 대만과의 통일과 홍콩, 마카오의 반환 역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 하였다. 즉 일국양제 이론은 1976년 등소평 체제가 출범한 이후 자신들의 통치기반 확립을 위해서 대내외적인 정책의 변화 및 주변 국제정세에 맞추어 통일정책을 포함한 기존의 대만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성된 것이다.[31]

---

30)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37면

31) 일국양제 이론의 태동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1976년 10월 장칭 등 4인방이 반혁명집단으로 숙청되면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덩샤오핑은 실사구시 정신의 회복에 착수하였는데 실사구시 사상노선의 정립은 일국양제 방침을 제시하게 된 정치적 기반이 되었으며 ② 1970년대 말 이래 국제정세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동서간의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의 기류가 확대되었으며 장기간 적대적 관계에 있던 미중 양국 간에도 변화가 생겨서 1978년 말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한편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보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정세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짜고 '평화 및 발전이 세계적인 이슈'라는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③이에 따라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은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라는 실용주의 경제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면서 이를 위한 평화적인 내외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중국의 4개 현대화 정책은 종합

1978. 12. 15. 등소평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제3차 국공합작을 실행하여야 한다. 대만과 대륙이 통일을 이룩한 후에 대만의 사회경제제도 · 생활방식 · 외국투자는 불변하고, 군대는 지방의 무력으로 변경된다.”고 말하였는데, 이 발언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구체화된 “일국양제”에 관한 설명이었다.[32]

1979. 1.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발표하여 양안간의 회담을 통해 군사대치상태를 종식하고, ‘3통 4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대만에 제의하였고 1979. 6. 1. 중국이 「대만동포에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발표한 이후 1981년 초 등소평은 ‘조국통일 6개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대만의 현 체제 인정 ② 대만인민의 현재 생활수준 보장 ③ 대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보장 ④ 대만의 군사력 유지보장 ⑤ 대만의

적인 경제발전 우선정책으로서, 기존의 대내외적 정책방향을 대폭 전환하지 않고서는 추진자체가 불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내적인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대외개방을 통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필요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다. 경제발전에 최대의 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정책을 포함한 기타 정책은 이를 보조 ·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자연스레 홍콩 · 마카오 · 대만문제 등을 포함한 기존의 통일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혁 · 개방 정책의 추진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정치 · 이념적인 통일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통일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1982년 9월 영국의 대처 수상이 중국을 방문한 계기로 홍콩반환 협상이 본격화되었고 홍콩반환 협상의 성패가 앞으로 마카오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영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영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홍콩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 일국양제 이론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27-29면

32)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36면

대외관계 유지 ⑥ 지방정부로서의 자치권 인정이다. 곧바로 뒤이어 1981. 9. 30. 중국과 대만의 통일(이하 “양안통일”)에 대한 9조항의 방침[33]을 발표하였는데, 양안통일에 대한 9조항의 방침은 일국양제 구상이 처음으로 정책화되어 가는 것이었다.

1982. 1. 11, 등소평은 처음으로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한 9조항의 방침과 일국양제 구상의 관계를 언급하였는데, 등소평은 “9조항의 방침은 하나의 국가, 두 가지 제도에 관한 것으로 그 핵심은 중국에서 두 가지 제도는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대만은 대륙의 제도를 파괴하지 말아야 하고, 대륙도 대만의 그 제도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홍콩문제도 대체적으로 9조항의 방침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34]고 말하였다. 이 때부터 “일국양제”는 이론구상에서 정책으로 완성되었고, 중국과 대만의 통일, 홍콩 및 마카오 반환의 기본방침이 되었다.[35] 그 후 등소평은 1983. 6. 25. 일국양제 이론을 구체화한 ‘중국대륙과 대만의 평화통일 실현 6개조 구체적 구상’[36]을 제시하였는데[37] 위와 같이 중국과 대만을 통일에 대한 9조

---

33) 9개조 방침의 주요 내용은 「① 3차 국공합작을 위한 쌍방 대표의 파견 및 의견교환 ② ‘3통 4류’의 추진 ③ 통일 후에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군대를 유보할 수 있음 ④ 대만의 현행 사회·경제체제 및 생활방식의 보장, 외국과의 경제·문화교류 유지 ⑤ 대만당국자 및 각계 인사의 국가관리 참여 ⑥ 대만의 지방재정이 곤란할 경우 중앙정부가 보조 가능 ⑦ 대만주민의 대륙이주와 자유왕래 허용 ⑧ 대만 공·상업계 인사의 대륙투자 허용 및 합법적인 권익과 이윤보장 ⑨ 조국통일을 위한 대만 각계각층의 건의 환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4) 王叔文, 「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導論」,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0년, 2면

35)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36면

36) 實現臺灣和祖國大陸和平統一的六條具体構想

37) 6개조 구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이 된 이후에 중국은 대만에 군대를 파견하여 주재시키지 않고 대만 내정을 감독하거나 개입, 간섭하지 않으며 대만의 인사, 군사를 간섭하지 않는

항의 방침과 중국대륙과 대만의 평화통일 실현 6개조 구체적 구상으로 표현된 일국양제 구상은 1985. 3.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었고 현재도 대만 통일과 관련한 주요한 통일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일국양제는 1982. 12. 4. 중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 헌법을 통해 이론을 넘어 법률・제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당시 통과된 중국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한 때에는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제정한다."[38]라고 규정하여 일국양제 구상의 실현모델인 특별행정구의 설치를 헌법규범으로 정립하여 법률적 근거를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 4. 4.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홍콩 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시키고 1993. 3. 31.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마카

다. 그리고 대만 스스로 외국에 대해 무기를 구매하여 그 자신의 자위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밖에 경제사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생활방식 및 당・정・군, 정보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② 통일 후에 대만은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질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법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중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대만 입법기관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대만을 관리할 수 있다.

③ 통일 후에 대만은 독자적인 사법기관과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

④ 통일 후에 대만은 독자적인 외교권을 보유해도 좋다. 대만은 독자적인 대외경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 출입허가(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⑤ 통일 후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만은 자신의 국기(國旗)를 사용할 수 있고 '중국대만(中國臺灣)'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

⑥ 통일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 설치되고 완전한 자치권을 누리고 삼민주의와 자본주의를 실시할 수 있다

38)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國家在必要時得設立特別行政區。在特別行政區內實行的制度按照具體情況由全國人民代表大會以法律規定 」

오 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하여 일국양제 구상을 법률제도로 확립하였다

제3절 법률제도로서 일국양제의 특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국양제는 정치적 이론체계이면서 법률제도적 근거로 갖추었다. 법률제도로서 일국양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특수한 단일제 국가형태

순전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국가형태는 국가권련 내부의 구조에 따라 단일제 국가 형태와 연방제 국가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국가형태의 가장 고전적인 구별론이기도 하다. 연방제 국가는 구성국이 연합하여 통일된 국가구조형태를 구성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단일제 국가는 지방행정구역으로 구성되는 단일주권의 국가형태를 말한다. 다만, 오늘날 국가의 결속력과 통합력이 강화되면서 연방국가는 단일국가화하고 있고, 단일국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연방국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구별론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39]

한편, 일국양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관계를 살펴보면 홍콩·마카오의 각 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및 독립적

39) 성락인, 「헌법학」, 법문사 2005. 96면.

인 사법권과 종심권이 있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방 및 외교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의 내무사무(內務事務)는 특별행정구가 관리하고, 또한, 특별행정구는 나아가 대륙과 완전히 다른 정치·경제·사회 법률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특별행정구는 많은 연방제 국가의 연방 구성주가 가지지 못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서 특별행정구의 지위는 연방제 국가에서의 주의 지위와 완전히 다르며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에 불과한 지위에 있다. 이는 특별행정구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와 같이 중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통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결국 일국양제이론에 의하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인데 이는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고 홍콩, 마카오 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적인 지방행정구역에 불과하며 일국양제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주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홍콩, 마카오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국가주체의 정치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주권을 분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40] 특별행정구의 모든 권리는 중국이 수여하는 것일 뿐 특별행정구가 어떠한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41] 즉 특별행정구의 모든 권력은 특별행정구의 고유한 것이 아니고 중국 인민정부가 수여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주권이 없고 주권은 오로지 중국 본토에 귀속된다.

특별행정구의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어떤

---

40)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1995. 32-33면

41)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48면

의미에서 기본법은 바로 중앙이 특별행정구에 권한을 수권한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42] 특별행정구는 중국헌법과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어떠한 이유나 방식으로도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중국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제 국가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중국과는 상이한 법률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중국은 일반적인 단일제 국가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단일제 국가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국양제는 중국만의 특수한 단일제 국가형태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상이한 법률과 제도의 병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국양제는 상이한 법률과 제도를 포함하는 법률체계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43]이며 그에 따른 법률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중국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44]에서 제정한 법률이며 사법권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종심권은 최고인민법원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일국양제 정책에 따라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년 동안 사회주의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

42)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49면
43) 중국 헌법 제1조
44) 중국 헌법 제2조 및 제57조

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45], 이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률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특별행정구의 기존 법률과 특별행정구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적용된다.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 후 원래 홍콩과 마카오에서 적용되던 원래의 법률은 특별행정구기본법과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특별행정구의 법률로서 효력이 유지된다.[46][47] 특별행정구의 법률은 중국 반환 이전의 법률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기존에 특별행정구에서 적용되던 법률은 여전히 특별행정구 법률의 주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르면 특별행정구가 성립될 때 적용되던 원래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특별행정구기본법과 저촉된다고 선포한 것 외에는 특별행정구의 법률로 채용되고, 특별행정구의 원래 법률 아래에서 유효하던 문건, 증명문건,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고, 특별행정구의 승인과 보호를 받는다.[48] 또한, 특별행정구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입법권이 있고, 계속하여 원래 있던 법률의 전통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49]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구인 입법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그 구성원은 특별행정구의 영주민[50]

---

45)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5조

46)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49면

47)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8조

48)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6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45조

49)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7조

50)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입법회는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인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선출 ·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국적이 아닌 홍콩 영주민과 외국에 거류권이 있는 영주민도 전체 의원수의 20% 범위내에서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고, 어떠한 행정수반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특별행정구 입법회는 특별행정구기본법이 규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외교, 국방 등 특별행정구기본법이 규정한 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제외한 범위에서만 모든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사법권[51]과 종심권(終審權)[52]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행정구 법원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현지 법관과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일국양제는 하나의 헌법체계 내에서 상이한 법률과 제도를 병존시키는 법률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자치제도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행정구에 본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자치를 실시하고,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하도록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특별행정구의 행정, 입법, 사법 등 전 영역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별행정구에 중국과는 다른 법률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67조), 그러나 마카오는 이와 달리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이면 입법회의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67조)

5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권과 입법권, 행정권은 상호 분립되고, 사법권은 법원이 전적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법권은 법원의 재판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시행하여, 사법권은 사법기관이 행사하는 재판과 법률감독의 권력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사법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하는 재판권과 인민검찰원이 행사하는 법률감독권으로 구분된다.

52)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82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84조

과 특별행정구에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입법권과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행정 부분까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국양제와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에 광범위한 행정관리권을 위임하여 실질적인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가 특별행정구에 위임한 행정관리권이란 국가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권력[53]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방, 외교 및 기타 반드시 중앙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사무를 제외한 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행정사무는 모두 특별행정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는 특별행정구 영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54]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통상 선거 또는 협상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출하되 중앙인민정부는 형식적으로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행정구의 주요 행정관원도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지명하고 중앙인민정부에서 임명한다. 한편, 국방, 외교 및 기타 반드시 중앙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사무를 제외한 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행정사무는 일반적으로 토지 및 자연자원의 개발관리권, 사회치안유지보호권, 각종 정책수립권, 재정권(조세부과

53)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60면

54) 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제도와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방행정관리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①특별행정구의 기구는 현지의 영주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의 주민에 의하여 구성되고 일반적인 중국 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점, ②특별행정구는 기본법에 따라 스스로 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는 점, ③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에 직할되고 중앙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특별행정구가 기본법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있다.

권), 금융관리권(화폐발행권), 무역관리권(관세권), 해운관리권, 민항관리권, 교육관리권, 의료위생관리권, 노동관리권, 중앙정부의 수권을 받은 대외사무처리권, 출입경관리권 등을 말한다.[55] 위와 같은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특별행정구가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중앙인민정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56] 고도의 자치가 보장된다. 결국 일국양제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한 특수한 지방자치제도라고 파악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제4절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1. 특별행정구의 법적 근거

가. 중국 헌법

'특별행정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안통일에 관한 9조항의 방침"에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 후 대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용어로 처음 사용[57]되었는데, 그 후 홍콩 및 마카오의 반환문제 등이 함께 대두되자 중국 헌법적으로 '특별행정구'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82. 12. 4.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헌법을 통해 일국양제의 구상이 특별행정구라는 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져 보장되게 되었다.

---

55) 자세한 내용은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61-65면

56) 엄밀히 말하자면 "중앙인민정부가 헌법 또는 특별행정구기본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섭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이다.

57) 방침 제3조 「국가통일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대만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중국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한 때에는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제정한다."[58]라고 규정하여 일국양제 구상이 헌법규범으로까지 정립되기에 이르렀고 특별행정구에 관한 중국 헌법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던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특별행정구에 관한 헌법적 근거의 마련은 홍콩 · 마카오의 반환이 아니라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이다.[59]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행정구는 대만문제가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 문제의 해결에 먼저 적용되었고 현재까지도 훌륭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나. 홍콩 ·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별행정구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은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었으나, 막상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 문제가 중국의 현안으로 대두되자 반환 당사국인 영국과 포르투갈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중국 헌법의 규정만으로는 특별행정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특별

58)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國家在必要時得設立特別行政區。在特別行政區內實行的制度按照具體情況由全國人民代表大會以法律規定」

59) 헌법개정위원회 부주임 彭眞은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작년 건국기념일에 葉檢英이 발표한「9조방침」은 평화통일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대만의 현행 사회, 경제제도가 불변이고, 생활방식도 불변이며, 외국과의 경제, 문화관계도 불변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개정초안 제31조에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에 대한 주권, 통일, 영토보전의 원칙에 있어서 중국은 반드시 폭넓은 융통성을 가지고 대만의 현실과 대만 인민 및 각계 인사의 희망과 요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입장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행정구에 자체에 대한 법제화가 추가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90. 4. 4.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연이어 1993. 3. 31.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중국헌법 제31조를 근거로 이를 법률적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일국양제 구상을 법제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특별행정구 설립의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이다.

2.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가. 중국의 행정구역으로서 특별행정구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행정구역[60] 중 성급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다른 행정구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중국과 분리될 수 없으며 중국이라는 단일제 국가에서 일종의 지방정부일 뿐이므로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앙인민정부와 특별행정구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이며, 연방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와도 다르다.[61] 따라서 특별행정구의 권한은 중앙인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중앙인민정부와 구분된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일반적인 행정구역과 구분되는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행정구는 일반 행정구역에는 없는 고도

60) 중국의 행정구역은 ① 중앙정부기구 ② 성급 정부(23개 성, 5개 민족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행정구) ③성과 자치구에 속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④ 현과 자치현에 속한 향, 민족향, 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61)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2003. 49면

의 자치권[62]을 보유하면서 사회주의를 시행하는 일반 행정구역과 달리 자본주의제도를 시행하며 특별행정구와 중앙인민정부와의 관계는 중국 헌법과 특별행정구기본법이라는 명문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구의 설립, 시행하는 제도 내용, 구역 등은 임의로 변경되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없다. 또한 특별행정구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의 통일과 그 지역의 안정적인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한 지방에 설립한 것으로 중국에서 운용 중인 경제특구처럼 이를 임의로 확대하여 설립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중국의 행정구역으로서 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고, 일반적인 행정구역과 상이한 사회경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특수한 지방에 설립한 새로운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중국의 각 행정구역과 특별행정구와의 관계

(1) 중앙인민정부와의 관계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지방행정구역 중의 하나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63]. 여기서 중앙인민정부는 국무원을 말하는 것이나 국무원은 국가최고행정기관으로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므로 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에도 직할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중국 헌법과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특별행정구의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중앙인민정부의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

62)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일반적인 지방정부가 갖는 자치권 외에 연방제 국가의 각 주에 버금가는 자치 권력을 갖는다.

63)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2조

위원회와 국무원으로 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주로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대한 개정과 해석을 통해 특별행정구에 적용하는 법률을 결정하고 특별행정구의 전쟁상태 또는 긴급상태 등을 선포하고 특별행정구에 대해 감독권과 관할권을 행사한다.

국무원은 행정장관과 주요공무원에 대해 임명을 하고 특별행정구 관련 외교사무와 국방사무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특별행정구에 대한 관할권과 감독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기구들이 모두 이러한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특별행정구가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가지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재판감독권과 검찰권은 특별행정구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별행정구의 법원, 검찰 부문과 대륙의 법원, 검찰 부문은 서로 어떠한 상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64]

한편, 특별행정구가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인민정부가 임의로 특별행정구의 내부 사무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며 특별행정구는 직접 자기 명의로 전국성 사무관리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여 헌법이 보장한 각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65]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행정구가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되는 이상 양자는 지휘와 감독, 수권과 피수권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별행정구가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고 하여 특별행정구가 중앙인민정부의 각 부문에 직할되는 것은 아니다. 즉 특별행정구와 중앙인민정부의 각 부문의 관계는 특별행정구와 중앙인민정부의 관계와

64)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70-71면
65)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52면

는 다르다. 여기서 중앙인민정부의 각 부문이라 함은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에 소속된 각 부, 위원회, 직속기구와 사무기구를 말한다.[6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인민정부와 특별행정구간의 관계가 지휘와 감독의 관계인 반면에 중앙인민정부 의 각 부문은 특별행정구가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 간섭할 수 없을[67] 뿐만 아니라 일국양제 구상의 취지를 할 때 특별행정구와 중앙인민정부의 각 부문은 상호에 예속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각기 독립적으로 관할과 구역에서 나누어 직접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자가 국무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68]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는 특별행정구 정부의 내부사무에 관여할 수 없고 이들이 특별행정구내부에 기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설령 기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특별행정구의 사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그 결과 특별행정구 정부와 업무연계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협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66) 국무원에는 24개 부와 5개 위원회가 있고, 그 밖에 국무원비서실이 있다. 또한 국무원에는 17개 직속기관, 6개 전문성부급사무기구, 10개 직속 부급 사업단위가 있고, 그 밖에 국무원부위원회에서 관리하는 19개 국이 있다.

67)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22조 참조

68) 다만 외교와 국방 부문에는 예외가 있다.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의 외교와 국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므로 중앙인민정부에서 외교와 국방을 맡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특별행정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외교부는 전문적으로 홍콩과 마카오, 대만을 담당하는 부처를 두어 중앙정부의 이들 지역문제에 대한 정책을 집행한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수한 당일 외교부는 홍콩과 마카오에 파견기구를 두어 양 특별행정구와 유관한 외교사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의 방위사무를 책임지는 관계로 특별행정구가 설립되는 날 국무원 국방부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두 특별행정구에 군대를 파견하고 주둔시켜 특별행정구의 방위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처럼 중앙인민정부의 각 부문과 특별행정구의 각 부문과의 관계 또한 중앙인민정부의 각 부문과 성급 인민정부의 각 부문처럼 지휘나 지도관계가 아닌 완전히 독립된 계통이므로 특별행정구 정부의 각 업무부문은 이중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특별행정구 정부에만 책임을 지고, 특별행정구 행정장관만 중앙인민정부와 특별행정구에 책임을 진다.[69]

⑵ 일반 지방정부와의 관계

중국의 일반 지방정부는 중국의 성, 민족자치구, 직할시를 말한다. 중국의 일반 지방정부는 중국의 1급 지방행정구역으로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과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이중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상호간의 관계는 서로 간섭할 수 없는 평등한 관계이다. 지방정부와 특별행정구의 상호 관계 역시 중국 내부의 지방과 지방간의 관계로 상호 간섭 또는 예속하는 관계도 아니며 각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나누어 집행하고 직접 국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호 독립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70] 특별행정구 기본법 역시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특별행정구의 사무에 대해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71]하면서 일국양제, 고도자치, 현지주민에 의한 통치원칙을 엄격하게 관철하고 있다.

---

69)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65-66면
70)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68면
71)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22조

⑶ 특별행정구 상호간의 관계

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에는 홍콩과 마카오의 관계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국가 명의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지만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후에는 양자의 관계를 국제 관계로 볼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의 일부로서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관계가 되어 중국의 국내법과 특별행정구간의 협의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두 특별행정구 모두 성급 지방행정구역으로 서로 예속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제5절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른 특별행정구의 법적 권한과 한계

1. 중국인민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권한 분배의 기준[72]

가. 일반론

중국의 일국양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구간의 권력관계는 쌍방협상이나 분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이 일방적으로 수권하는 형태로 연방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73] 중국이 단일제 원칙을 고수

72)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56-58면 참조

73)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권력과 책임의 배분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①제로섬(zero-sum) 분배규율설은 어느 국가이든 정부권력의 총량은 일정하므로 만약 중앙정부가 향유하는 권력이 많으면 지방정부가 향유하는 권력은 적게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관계에서 국가주권을 강조하면 특별행정구의 자치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권을 향유하고 나머지의 권력을 모두 특별행

하고 있는 이상 모든 권력은 중앙정부에 속하고,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에 수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이런 원칙에 입각하였다.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은 중국의 입법사상 처음으로 입법형식을 빌려 중앙과 지방 권력과의 사이에 권한을 나눈 입법으로 여기서는 중앙과 특별행정구간의 권력의 분배와 그 한계, 조건 등은 물론 중앙이 직권을 행사하고 관리를 책임지는 사무와 특별행정구의 직권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기술로 보면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집중하여 규정하는 방식과 분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종합하

정구에게 위임하여 행사토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만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의 중앙정부가 되고 나머지는 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고도자치이고, 그래야 비로소 특별행정구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외교와 국방만이 국가주권의 전부가 아니고 국가주권에는 기타 내용도 포함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② 대등지위설은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구는 대등하여 국방과 외교사무에 있어서만 중앙정부가 특별행정구의 중앙정부이고, 기타 일체 사무는 쌍방이 대등한 것으로 만약 쌍방간에 권한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독립적인 헌법법정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헌법법정은 쌍방 동수의 법관으로 구성되고 권력도 동일하며 외국법관을 초빙하여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권한쟁의 심리에 참가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이는 단일제 하에서 중앙과 지방은 대등하지 않고 중앙정부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 중앙정부임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논리구성의 기초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③ 또 다른 견해는 중앙과 특별행정구 각자가 향유하는 권력 및 쌍방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권력을 반드시 기본법에 포함시켜야 하고 명백히 기본법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라고 규정된 사무, 즉 잉여권력은 중앙이 일국양제 시행의 결심과 성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특별행정구가 향유토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과 특별행정구는 단일제 하의 권력수여 관계로 모든 권력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 속해야 하므로 잉여권력은 중앙정부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④ 마지막으로는 중앙과 특별행정구가 향유하는 권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중앙과 특별행정구가 공통으로 향유하는 회색지대 내지 한계를 정하지 않은 권력으로 하자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 역시 단일제 하에는 어떠한 회색지대나 한계미정의 권력도 있을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였는데 기본법은 서문과 총 9장으로 이루어졌고, 서문에서는 홍콩, 마카오문제의 유래,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를 해결하는 방침 및 기본법의 헌법적 근거와 원칙을 제시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정치, 경제, 법률, 사회 각 방면에서 특별행정구에서 실행하는 제도에 대한 중요원칙을 규정하여 일국양제의 총체적 구도를 담고 있으며, 제2장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관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중앙과 특별행정구간의 권한배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별행정구기본법에 규정된 중앙정부가 향유하는 권력은 특별행정구 창설권, 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 개정, 해석권 및 위헌심사권, 특별행정구 정부 조직권, 비상상태선포권, 외교사무권, 방위권이고, 특별행정구가 향유하는 권력은 고도의 자치권, 전국성 사무의 관리권, 국가통일과 주권수호를 유지할 책임 등이 있다.

나. 권한 분배의 원칙과 기준

⑴ 국가통일성 확보와 국가주권의 수호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서문에는 특별행정구의 목적은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조에서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부분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스스로 국가배반, 국가분열, 반란선동, 중앙인민정부전복, 국가기밀절취행위 등 5종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과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국방, 외교, 긴급상태, 주요공무원의 임명, 기본법의 제정, 해석, 개정은 중앙

정부에게 맡겨져 있는 등 일국원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조는 먼저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단일제 국가구조 하의 1급 특별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고 천명하고 있어 중앙과 특별행정구간의 권한배분시 반드시 단일제 원칙, 즉 원시권력은 중앙에 속하고 특별행정구 권력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권되는 것으로 천부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기본법 제19조 제3항은 외교와 국방 등 국가행위에 대해 특별행정구는 관할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제정방식, 기관, 절차를 보면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중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에서 제정한 것이지 상호 협상의 결과가 아니고 더욱이 특별행정구 스스로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양자간의 권한배분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⑵ 특별행정구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일국양제 원칙 하에서 양제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특별행정구가 행사하는 권력에 관한 규정은 고도자치의 정신이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였는데, 국가의 통일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범위 외의 권력은 중앙이 행사할 수 없고, 전부 특별행정구가 행사토록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였다. 예컨대 기본법 제2조, 제20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행정구에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 사법권 및 종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도자치권을 부여하고, 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중앙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의 권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조는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하나의 지방행정구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2조에서도 중앙인민정부 소속의 각 부문은 특별행정구가 기본법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 간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인민정부 소속의 각 부문이 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할 때는 특별행정구의 동의와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지 주민에 의한 특별행정구 통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행정구기본법에 행정장관은 현지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회의 구성원이나 입법회, 법관도 현지 주민에 의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⑶ 특별행정구에 대한 번영과 안정의 보장

먼저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홍콩과 마카오의 역사와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중국은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일국양제의 방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자본주의제도 및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50년간 불변하고, 특별행정구에 대해 법에 의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정의 독립, 독립적인 세수제도, 화폐금융제도, 토지계약에 대한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행정구 기존의 법률은 본 기본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 의해 수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지하고, 특별행정구에서 실시되는 법률은 기본법과 기존의 법률 및 특별행정구 입법회

에서 제정한 법률에 한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특별행정구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⑷ 긴급상황에서의 융통성 확보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중앙정부의 권한행사 내용에 대해 정상상황과 긴급상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행정구 정부가 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을 유지할 책임을 지고 중앙인민정부가 파견하여 방위사무를 책임지는 군대는 특별행정구 지방사무에 관여할 수 없으나 필요시 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앙인민정부에 대하여 주둔군이 사회치안유지 및 재해구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각 특별행정구에 실시되는 법률은 기본법과 기존의 법률 등에 한정하고 전국성 법률의 적용은 부속서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정하거나 특별행정구내 정부가 통제불능 정도의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특별행정구가 비상상태를 선포하는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관련 전국성법률을 특별행정구에 실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특별행정구 주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보장된다. 다만 긴급상태인 경우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의해 중국의 전국성법률이 실시되므로 제한될 여지가 있고, 기타 국가안전이나 공공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이 법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는 있다.

또한 기본법 해석에 있어서 특별행정구기본법은 기본법의 해석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고, 상무위원회에서 특별행

정구법원에게 기본법 해석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중앙인민정부 관리사무 또는 중앙과 특별행정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본법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무위원회에 그 조항의 해석을 요청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개정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개정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고, 개정제안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및 특별행정구에 있고, 그 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⑸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권력분립과 관련하여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은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으로 분류되어 각각 특별행정구 정부, 입법회, 법원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행정구의 자치권 범위 외의 사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상호견제과 관련하여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행정구의 설립, 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권력이 있으나 기본법의 개정은 연합성명에서 천명한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특별행정구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특별행정구의 역사와 현실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별행정구기본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행정장관은 현지 중국공민으로 선거 또는 협상에 의해 선출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회나 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부터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석과 관련한 제약을 받고, 이들 기관 상호간에도 적절한 수준에서 견제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특별행정구의 행정, 입법, 사법권

가. 현지인에 의한 특별행정구의 통치

특별행정구기본법을 통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일국양제의 실현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특별행정구의 핵심적인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반드시 특별행정구 현지인이 담당하도록 하여 현지인에 의한 특별행정구의 통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행정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행정구 정부는 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으로 그 수장은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으로 되어 있다[74] 그런데 특별행정구의 수장인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거 또는 협상에 의하여 선출하되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하지만 40세 이상으로서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연속해서 20년 이상을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특별행정구 영주민 중에서 중국공민이 담임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75] 또한 특별행정구의 주요 공무원은 현지에서 통상 연속해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인 중국공민만이 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76]

한편,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인 입법회의 구성원 역시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인 중국공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非)중국적의 특별행정구 영주민과 외국에 거류권이 있는 특별행정구 영주민도 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전체 의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77]

또한 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현지 법관과 법조계 및 기타 방면

---

74)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59, 60조,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61, 62조
75)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44, 45조,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46, 47조
76)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61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63조
77)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67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68조. 마카오의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으로 입법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의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은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만이 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8]

나. 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권

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79] 행정관리권은 중국중앙인민정부가 특별행정구기본법을 통하여 특별행정구에 부여한 중요한 자치권 중 일부이다.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르면 국방, 외교 및 기타 반드시 중앙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 내에 속하는 대부분의 행정사무를 모두 특별행정구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토지와 자연자원의 개발관리권 ② 사회치안 유지·보호권③ 정책수립권 ④ 독립적 재정권과 조세징수권 ⑤금융관리권 ⑥화폐발행권 ⑦무역관리권 ⑧ 해운 및 민항의 관리권 ⑨교육관리권 ⑩의료위생관리권 ⑪과학기술문화체육관리권 ⑫전문직 자격평가심사권 ⑬노동관리권 ⑭ 사회복지정책수립권 ⑮출입권관리권 등을 들 수 있다.[80]

---

78)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88, 90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88, 89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경우 종심법원장만 반드시 마카오영주민이 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9)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6조

80)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61-65면

다. 특별행정구의 입법권

입법권은 정치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행정관리권 및 사법권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권력의 기본골격을 구성한다. 또한 입법권은 권력행사의 중요한 내용이자 표현으로 특별행정구 입법제도의 성격과 내용은 특별행정구의 정치적 지위 및 정치구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행정구가 중앙인민정부와 별개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보유한다[81]는 것은 일국양제 하에 있는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기존의 특별행정구 법률과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인데[82]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인 입법회는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하지만 등록절차의 해태가 해당 법률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만약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의 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후 관련 법률을 반송할 수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반송된 법률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법률의 효력상실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적용되는 전국성법률은 부속서에서 열거

81)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7조
82)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8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7조

한 것 외에는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부속서에서 열거한 법률도 특별행정구에 의한 공포 등 입법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한다. 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정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내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고 결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국중앙인민정부는 관련 전국성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시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별행정구의 입법권은 지방자치권의 범주에 속하며, 지방입법권의 일종이다. 둘째, 특별행정구의 입법권은 중앙정부가 부여한 권한으로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셋째, 특별행정구는 외교, 국방 및 기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특별행정구 입법권의 범위와 효력은 동 행정구역의 자치권 범위내의 입법에만 국한된다. 넷째, 특별행정구는 본 지역 내에서 향유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의 모든 업무에 관한 법률을 자율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다.[83]

라. 특별행정구의 사법권

사법권은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 사법기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재판권과 법률감독권을 말한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심판권과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특별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한다[84]. 특별행정구

83)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224면
84)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9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9조

법원은 기존의 법률제도 및 원칙의 계속적인 유지가 법원의 심판권에 가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특별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있다. 다만 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 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는 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와 관련된 사실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행정장관이 그 문제에 관하여 발급한 증명문건을 득하여야 하고, 상기 문건은 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데 행정장관은 증명문건을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문건을 득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별행정구의 사법권은 입법권, 행정권에 비하여 중앙인민정부의 간섭이 대부분 배제된 채 철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행정구에 종심법원을 설치하고, 종심권을 특별행정구에서 행사함에 따라 중국의 다른 기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85] 특히 우선 반환의 대상이 된 홍콩의 경우에는 영미법계의 전통에 따라 사법우위의 경향이 강하여 홍콩 주민들이 주권환수 이후에도 사법권의 독립으로 주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함에 따라 정치 우위적 경향이 강한 중국 당국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보를 많이 하여 타협한 결과로 판단된다.[86]

3. 특별행정구 권한행사의 한계

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권, 입법권, 사법권의 행사는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엄격한 한계가 규정되어 있다. 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

85) 특별행정구의 사법제도는 기존 홍콩과 마카오의 식민통치 종주국인 영국의 영미법계와 포르투갈의 대륙법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권환수 이후에도 기본법에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두 지역의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특별행정구의 자체 입법으로 사법제도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86)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279면

권, 입법권, 사법권의 행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특별행정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라는 점이며 특별행정구가 행사하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사법권은 특별행정구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그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특별행정구기본법 제1조와 제2조에서 이미 명확하게 특별행정구가 행사하는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여 놓은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일 뿐이며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 또한 특별행정구는 특별행정구와 관계되는 외교사무와 방위사무를 관할하지 못하며 중앙인민정부가 특별행정구와 관계되는 외교사무와 방위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다만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에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인민정부가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87]

한편, 홍콩·마카오의 법률해석제도는 중국의 법률해석제도와 서로 다르며 각기 독립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후 법률해석 면에서 완전히 중국 현행의 법률해석제도에 근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홍콩의 기존의 해석제도를 완전히 유지하여 기본법에 대한 해석문제를 다룰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의 귀속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88]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특별행정구의 권한행사 근거인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보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특별행정구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87)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15조,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15조
88)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351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특별행정구의 권한행사 근거인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별행정구의 자치범위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을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89] 특별행정구 법원도 사건을 심리할 때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기타 조항에 대해 해석할 수 있지만[90] 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관계에 대한 특별행정구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는 종국판결을 내리기 전에 특별행정구의 종심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91][92]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을 하고 홍콩특별

89) 이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기본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해석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특별행정구의 자치범위 내의 조항에 관한 해석권을 특별행정구 법원에 위임하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 이 부분의 조항에 대해 자체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부분의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90) 이 규정은 앞의 규정과 종합하여 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에 기본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행정구 법원의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이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행정구의 종심법원이 요청한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전에 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시행함으로써 특별행정구는 기존의 법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지만 이러한 제도는 중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특별행정구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기본법에 대해 해석을 내릴 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기본법에 대해 해석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법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중국과 특별행정구 위원 각 6명 총 12명으

행정구 법원이 당해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93]

한편, 특별행정구기본법 이외의 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특별행정구가 향유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행정구 법원에 속하며 중앙인민정부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중국의 지방법원이 법률해석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통적인 체제를 타파하는 것으로 중국과 특별행정구에 서로 다른 법률해석 제도가 병존할 수 있는 것은 일국양제 체제이기

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 위원은 특별행정구거류권을 취득한 외국거류권이 없는 중국공민이어야 한다. 그들은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주석, 종심법원 수석법관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위임방식으로 임명된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특별행정구에서 실시되는 전국성법률의 증감문제, 기본법의 해석문제 및 개정에 관한 의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견을 제공한다. 기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기본법을 해석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92) 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해 조항이 중앙인민정부의 권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행정구 법원의 상기 조항에 대한 해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 종심법원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한 경우'란 첫째, 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법의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대한 조항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필요 없이 특별행정구 법원이 자체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둘째, 동 조항의 해석은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만약 영향이 없다면 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셋째, 사건의 종심판결을 내리기 전에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종심판결이 아닌 단계에서는 사건에 대해 상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송법정의 기본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 착오가 있다면 상소법원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심판결이 내려지면 다시는 상소할 수 없기 때문에 종심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93)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8조,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143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률을 적용할 때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합성명과 기본법에 의하면 특별행정구의 종심권은 특별행정구 종심법원에서 행사하며, 특별행정구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동일한 사법체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하급 관계에 있지 않다.[94]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최종해석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는 점과 관련하여 중국 측은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것이고, 그 해석권은 제정·의결한 기관에 속하는 것이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대해 해석권을 갖는다. 해석권과 종심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이것들을 혼동하여 한 가지로 묶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95]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현행 법률해석제도에 근거하여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기본법률이고 그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해야 하며 지방정권으로서의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해석권이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한다."라는 중국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중국헌법 제67조에 규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권에만 초점을 맞춘 입장이라는 비판이 홍콩의 많은 학자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일국양제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즉, 기본법의 해석권 문제의

94)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354면
95)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351-352면

해결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 해석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가 향유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도 충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특별행정구기본법의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특별행정구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행정구가 설립될 당시 홍콩에서 시행 되어온 기존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법과 저촉된다고 선언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행정구의 법률로 채용하고, 만약 이후에 어떤 법률이 본법과 저촉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개정하거나 효력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다.[96]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개정제안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는데 홍콩특별행정구의 개정안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분의 2 이상 및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 다수의 동의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동의를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홍콩특별행정구 대표단을 통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법의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가 이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으나 특별행정구기본법 시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행정구의 의견을 먼저 고려하여 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특별행정구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

96)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60조,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145조

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어떠한 개정도 홍콩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존에 정한 기본방침정책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97]

제6절 독립관세구역으로서 특별행정구

1. 특별행정구와 대외사무

가. 외교사무와 대외사무의 처리 주체

특별행정구의 외교사무는 중앙인민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명확히 규정[98]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국가에서 외교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므로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으로서 지방행정구역인 특별행정구의 외교사무[99]도 당연히 중앙인민정부가 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는 중국 외교부에서 전적으로 처리한다[100]. 중국 외교부가 특별행정구의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중앙인민정부가 특별행정구에서 행사하는 국가권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특별행정구는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의 대외사무를

97)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9조,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144조
98)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3조,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14조
99) 여기에서 말하는 '외교사무'란 국가원수·외교부·정부수반 등 국가이름으로 진행되는 외국정부와의 외교회담·조약체결·외교문서의 발송·국제회의나 국제조직에 참여하는 등의 대외사무를 말한다.
100) 중국외교부는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각각 중국외교부 대표기관을 설치하고, 중앙인민정부를 대표해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의 외교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의 대외사무란 외교사무와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경제 · 문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외 교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사무나 중앙인민정부가 특별행정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한 대외적인 사무를 말한다.[101]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배 시절에도 홍콩과 마카오는 독립된 외교권은 아니더라도 경제 · 무역 · 금융 등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가입과 이와 관련한 외교교섭 등에 있어서는 준회원의 대우를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대외사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연원에 근거하여 중국 역시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가 독자적으로 국제조직에 가입하는 등의 대외사무를 시행하여온 기존 현실을 존중하여 특별행정구로 하여금 중앙인민정부의 위임에 근거하여 여러 대외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하였다.[102]

---

101) 대외사무는 외교사무와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① 외교사무의 주체는 주권국가인 반면에 특별행정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외사무의 주체는 주권국가 관할하에 있는 특별행정구 정부이다. 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정치권력조직을 구비하고, 관할하는 지역과 주민이 있으며, 관할범위 내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는 있으나 원시적으로 비주권지역이므로 국가가 행사하는 외교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 ② 외교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내정으로서 국가행위이므로 타인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기본법 규정의 대외사무는 중앙인민정부의 수권하에 특별행정구가 행사한다. ③ 외교권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에 속하고, 특별행정구가 행사하고 있는 대외사무권은 고도의 자치권의 일부이다. 외교사무는 국가업무에 속하며 국가가 처리하는 외교사무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외교사무의 범위도 무한하다. 그러나 특별행정구가 처리하는 대외사무의 권한은 제한적이고,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대외사무의 범위 또한 한정적이다. 특별행정구가 처리하는 대외사무는 경제, 문화방면의 대외교류 과정에서 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업무이다. 또한 특별행정구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권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기본법에서 부여한 권한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02) 위와 같은 대외사무 처리의 수권은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환수를 분명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홍콩과 마카오의 기존 대외사무 처리 관행을

나. 특별행정구의 대외사무 처리 내용과 방법

특별행정구가 처리하는 대외사무의 내용과 그 방법을 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행정구의 대표는 중국정부대표단의 구성원 자격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진행하는 특별행정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교담판에 참가할 수 있다[103] 특별행정구는 경제·무역·과학·금융·통신·여행·문화·과학기술·체육 등 적당한 영역에서 '중국홍콩' 또는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단독으로 세계 각국·각 지구 및 관련 국제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104] 특별행정구가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경제·무역·금융·해운·통신·여행·문화·체육 등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특별행정구가 중국 홍콩 또는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단독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거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여기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는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체결한 「세관협력 및 상호 행정협력에 관한 협정」,[105] 이스라엘과 체결한 「과학기술 자문 및 통신 합작 협력사항에 관한 협정」,[106]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107]등이 있다.

특별행정구는 국가단위로 참가하고, 특별행정구와 관계되는 적당한 분야의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특별행정구의 대표를 파견하여 중

인정하려는 일국양제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제무역·금융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대외사무 처리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03)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0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35조

104)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1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36조

105) 1999년 5월 13일 체결

106) 2000년 3월 7일 체결

107) 2003년 4월 2일 체결

국 대표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중앙인민정부와 관련 국제조직 또는 국제회의가 허용하는 신분으로 참가하고, '중국홍콩',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특별행정구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전제 요건은 특별행정구의 '적당한 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아야 한다. 현재 특별행정구가 중국홍콩 또는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국가단위로 참가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는 국제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등이 있다. 또한, 특별행정구는 '중국홍콩',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국가단위로 참가하지 않은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들 국제조직 및 국제회의는 대부분 비정부 또는 민간국제기구와 국제회의이다. 현재 특별행정구가 참가하고 있는 것에는 세계무역기구(WTO), WTO 법률지원센터,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동북아식품데이터시스템스(NEASIAFOODS) 등이 있다.

더욱이 특혜무역 또는 관세 관련 국제협정에 대하여는 특별행정구 기본법 자체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행정구를 독립관세지구로 규정하면서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명의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국제 방직품에 관한 부속협정" 등 특혜 무역 관련 협정을 포함한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가 취득하였거나 또는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해서 유효한 수출할당액·관세특혜와 체결된 기타 유사한 협정은 모두 특별행정구가 향유하도록 되어 있다.[108]

나아가 중국이 이미 참가하고 있고 특별행정구도 일정한 형식으로

108)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2조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는 특별행정구가 적당한 형식으로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중국이 아직 참가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행정구가 이미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계속 참가할 수 있다.[109] 이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는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참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체결한 국제협정은 중앙인민정부가 특별행정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특별행정구의 의견을 물은 후에 특별행정구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110]. 중국이 아직 참가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행정구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국제협정은 여전히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별행정구가 적절한 안배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협조하여 기타 관련 국제협정이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도록 한다.[111] 실제로 홍콩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중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제조약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러한 조약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연락하여 홍콩특별행정구로 하여금 본 조약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112]

특별행정구는 필요에 따라 중앙인민정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고 외

---

109)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2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37조

110) 상해협력기구헌장(Charter of the Cooperation Organization),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sian-Pacific Postal) 관련 협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1)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3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38조

112) 예를 들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정식 조약체결국 정부만이 UN 관련기구에 동 관할지역에서 상기 규약들의 관련규정에 대한 집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두 규약의 정식 조약체결국은 아니었지만 1997년 10월 중국정부는 융통성 있는 방법을 취하여 UN 관련기구에 홍콩에서의 두 규약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작성하였고, 규약의 관련기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대표가 출석하여 답변하였다.

국에 관영 또는 반관영의 경제 및 무역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도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이 있으면 특별행정구에 영사기구 또는 기타 관영, 반관영의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113]

다. 비주권국가인 특별행정구의 국제기구 가입[1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로서 외교적으로 단독의 정치적 실체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안정 및 번영과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홍콩과 마카오가국제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기구는 국경을 뛰어넘는 일종의 다국 간 기구이다. 광의의 국제기구는 둘 이상의 국가 또는 그 정부, 국민, 민간단체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설립한 각종 기구를 말한다. 협의의 국제기구는 국가 또는 그 정부가 기구의 구성원인 국제기구나 정부 간의 국제기구를 말한다. 그런데,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의해 홍콩이나 마카오가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국내법에 불과할 뿐 국제기구가 특별행정구기본법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홍콩이나 마카오가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는 해당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국제관계이론과 실무에서는 비주권 지역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국제기구의 상이한 형식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 간 국제

113)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6, 157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41, 142조
114)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150-152면

기구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무릇 국가 또는 그 정부로 구성되는 국제상설기구는 모두 정부 간 기구이며 그 주요 회원은 국가이다. 비정치적 국제기구는 전문적 국제기구라고도 하는데 국가 간의 정치, 외교, 군사 등의 국가 관련 사무와 관련되지 않고, 주로 기술, 행정 방면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제기구이다. 예컨대 세계기상기구는 각국 기상기구 사이에 기상 방면의 서비스와 교류를 책임지므로 그 전문영역 내에서 모종의 관리권을 향유하는 비주권 지역이 기구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편 비정치적 전문국제기구의 정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비주권 지역이 정식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아개발은행 정관」 제3조는 비주권적 영토도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WTO도 그 회원을 "주권국가"와 "독립적 관세지역"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홍콩과 마카오도 독립적 관세지역의 신분으로 WTO의 독립적 회원이 되었다.

오늘날 국제기구에서 비주권 지역이 그 국제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요건은 엄격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비주권 지역은 국제기구의 정식회원이 될 수 없지만 많은 국제기구가 업무적 목적을 위하여 비주권 지역이 그 준회원이 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정관」 제8조는, 스스로 국제관계를 책임지지 않는 영토(territories)는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회원 또는 기타 당국의 대리 신청을 거쳐 준회원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협약(國際海事機構協約)」 제8조에서도, 모든 영토 또는 일부 영토는 만약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회원 또는 UN이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협약을 적용하는 경우, 회원 또는 UN이 서면으로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하면 본 기구

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제기구는 업무적 필요에 의해 비주권 지역이 옵저버(observer) 신분으로 그 기구의 일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옵서버는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 신분으로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옵서버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뿐 아니라 비주권 지역 및 사회단체도 가능하다. 옵서버 신분으로 국제기구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경우 총회의 토론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오늘날 국제기구에서 정부 간 국제기구의 회원은 주로 국가이고, 비주권 지역은 국제기구의 회원은 될 수 있으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예컨대, 비주권 지역은 단지 일부 전문적 국제기구에만 참가할 수 있고, 설령 비주권 지역의 참가를 허용하는 국제기구 중에서라도 비주권 지역의 참가 신분은 주권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주권국가는 참가한 국제기구에서 정식회원이 되지만 비주권 지역은 소수의 국제기구에서 정식회원의 신분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뿐 대다수 국제기구는 준회원 또는 기타 비정식 회원의 신분으로만 참가를 허용하며, 국제기구에서의 권리나 의무도 여러 가지의 제한을 받는다. 1997년 이전이든 아니면 그 이후이든 홍콩은 국제관계의 주체가 아니며 비주권 지역의 신분으로 국제기구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제기구 회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마카오는 WTO 독자적인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러한 점이 중국-홍콩·마카오의 CEPA의 출발점이 되었다.

2. 특별행정구의 경제제도

가. 사유재산제의 보호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대외 개방의 창구로서 세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가 반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국양제의 시행을 천명하고 있다.[115]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국양제의 핵심은 중국은 사회주의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50년간 변경 없이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함에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가장 근본은 바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특별행정구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50년간 변화시키지 아니하며[116]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명시[117]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 재산의 취득・사용・처분 및 상속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수용된 재산의 소유자는 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상은 재산의 당시 실제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자유로이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업소유권과 외국인의 투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118] 구체적으로도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다.

---

115)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2003. 404면
116)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5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조
117)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6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6조
118)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5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3조

또한 사유재산제도의 또다른 근간인 토지제도[119]와 관련하여서도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설치 이전에 허가 · 결정 또는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한 토지계약 및 토지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의하여 승인과 보호를 받는다고 선언하고[120], 특별행정구 정부에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위임하고 있다.[121] 1985년 5월 27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도 홍콩의 부동산 산업의 위축을 염려하여 홍콩정부가 새로이 토지계약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만 홍콩기본법상 자본주의제도의 시행기간을 50년으로 잡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 만기는 2047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더라도 새로이 지가를 징수하지 않고 매년 토지평가액의 3%를 지조로 납부하도록 하였다.[122] 신계의 토지와 정옥지 등에 대하여는 상기 3%의 지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양도및물자조례(土地轉讓及物業條例)에 의하여 홍콩 내 토지를 등기하고 지권을 확정한 1984년 6월 30일자에 그 토지의 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이거나 그 후 새로이 토지계약을 한 자가 1898년 이래 신계 원주민이거나 그 부계의 승계인이면 기존의 임차료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설치 전에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119) 홍콩은 마카오와 달리 영국정부가 자본주의제도를 시행하면서도 토지에 대해서만은 國有로 하고 개인에게는 임대차관계로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대한 통치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를 만기로 약정한 토지사용관계나 토지사용료 등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환수를 약정한 「중 · 영연합성명」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1985년 5월 27일 이후에도 홍콩정부가 새로이 1997년 7월 1일 이후를 만기로 하는 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20)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0조,

121)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3조,

122)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1조

없는 토지계약은 홍콩특별행정구가 독자적으로 법률과 정책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123] 이를 보호하고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설치되기 전에 비준 또는 결정한 기한이 1999년 12월 20일을 넘는 합법적인 토지계약 및 토지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는 법에 의하여 승인하고 보호되며,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설치된 후에 새로이 비준하였거나 비준할 토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해당 토지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4][125]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과 다른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50년간 불변의 자본주의제도의 시행 즉 일국양제의 핵심 영역을 이루는 것으로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사유재산제도의 보호는 다음에 살펴 볼 재정과 조세, 화폐와 금융제도, 무역과 관세 등 모든 경제 관련 다양한 부문에서 홍콩과 카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근원적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독립적인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앞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홍콩과 마카오 각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과는 다르게 사회주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출항목과 지출금액 등에 많은 차이가

123)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3조
124)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20조
125) 토지소유관계에 대하여 홍콩은 국유로 하고 있으나 마카오는 원칙적으로 국유이나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에 이미 법으로 확인된 사유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토지정책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데 영국은 본국에서는 토지소유권의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식민지인 홍콩에 대하여는 홍콩의 토지를 모두 영국황실의 소유로 하고 그 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으로 한 반면 포르투갈은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한 현실에 기초하여 중국의 주권환수 이후에도 변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수입인 세금에 있어서도 생산수단과 기업을 모두 국가가 독점하는 사회주의제도와는 달리 사유화되어 있는 자본주의제도에 있어서 세율이나 세금의 종류 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은 특별행정구가 각기 재정의 독립을 유지하고, 각 특별행정구는 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적합하고 실제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6] 이에 따라 중국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하고 세금과 재정수입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 조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127]

위와 같이 홍콩과 마카오에 재정과 조세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일국양제의 본질에 기인한 측면 외에도 홍콩과 마카오를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환수하면서 그 동안 영국과 포르투갈이 해왔던 경제적 착취를 중국정부는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전의 효과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환수 이후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홍콩과 마카오의 재정적 부담을 강요할지도 모른다는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의 정치·경제적인 우려를 불식시켜 홍콩 및 마카오의 중국반환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으려는 취지도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128]

미 언급한 특별행정구의 재정권 독립을 위하여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29] 또한, 특별행정구의 재정에 대한 결산은 행정기관에서 작성하여 행정장관

126)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6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4조
127)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6, 108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4, 106조
128)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405면
129)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48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

이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130][131] 특별행정구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행정구 입법회에 제출하면 입법회에서는 이를 심의하고 통과[132]한다.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하여 서명한 후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며[133], 입법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행정장관은 입법회에 임시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입법회와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법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또한 입법기관이 이미 해산되어 행정장관이 신청한 임시지출을 승인할 수 없게 되면, 행정장관은 새로운 입법기관이 구성되기 전에는 전년도 지출기준에 의하여 임시단기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134] 등 재정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독립적인 재정과 더불어 홍콩과 마카오 각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조세제도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조세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는 낮은 세율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그 자금을 통해 각종 산업을 진흥,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반환 즉,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유지시켜 항구적인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을 꾀하

130)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48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
131) 특별행정구의 예산과 결산은 중앙인민정부에 보고되고 등록되지만 승인 받는 것은 아니므로 중앙인민정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특별행정구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수지균형에 역점을 두어 적자를 피하여야 하고, 현지의 생산총액의 증가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32)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73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71조
133)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48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
134)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51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3조

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35]

홍콩과 마카오 각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홍콩과 마카오의 기존 저율의 조세정책을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6]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기존의 저율의 조세정책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세금의 종류, 세율 등의 세무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자주적 결정권도 향유하고 있다.

다. 화폐와 금융제도의 독자적 운영

홍콩 달러와 마카오 파타카는 해외에 널리 알려진 국제화폐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환수 이후에도 홍콩과 마카오의 법정화폐로 계속 유통시키고, 각 화폐의 발행권은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속하도록 하였다.[137] 화폐의 발행제도와 준비금제도는 법으로 정하되 발행 시에는 100%의 준비금이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행정구 정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정은행을 정하여 화폐 발행의 대리직능을 행사하거나 계속 행사하게 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달러의 발행기초가 건전하고, 화폐계획이 홍콩달러의 안정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숙지한다는 요건 하에 지정된 은행으로 하여금 법정권한에 의거하여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속발행 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138] 이에 따라 홍콩의

---

135) 법무부, 「홍콩 ·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407면
136)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8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6조
137)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1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8조
138)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1조

경우에는 현재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중국은행 등 3곳의 은행에서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적절한 경제 및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여, 홍콩이 국제금융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139]하고 있다. 독립적인 화폐제도와 함께 홍콩은 개방적 금융제도와 낮은 세율을 무기로 세계 각국의 은행,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들이 상주하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선물·증권 등 각종 금융시장의 번창과 함께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었는데,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중국 반환 이후에도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언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특별행정구 정부는 독자적으로 화폐금융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금융기업 및 금융시장의 경영자유를 보장하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140] 환율조정을 위하여 외환기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41] 또한 특별행정구는 외환통제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홍콩 및 마카오 화폐의 자유로운 태환과 외환·황금·증권·선물시장의 계속적 개방을 명시하는 한편, 자금의 유동과 유입 및 유출의 자유를 보장하였다.[142]

라. 자유무역 정책과 무관세의 독립관세구역

홍콩과 마카오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배 시대부터 자유무역항으로 발전해 왔는데, 자유무역항으로서 홍콩과 마카오의 위와 같

139)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9조
140)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0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7조
141)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3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9조
142)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2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9조

은 특별한 지위는 중국이 일국양제를 채택하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경제적 번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홍콩과 마카오를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관세의 자유무역항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143],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하여 화물·무형재산·자본유통의 자유를 보장하였다.[144]

특히 특별행정구기본법에 홍콩과 마카오의 각 특별행정구를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관세구역으로 명시하는 한편, 중국홍콩 또는 중국마카오 명의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방직품에 관한 부속협정" 등 특혜무역 관련 협정을 포함한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가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145] 이에 따라 홍콩 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취득하였거나 또는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해서 유효한 수출할당액·관세특혜와 체결된 기타 유사한 협정은 모두 특별행정구가 향유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는 원산지규칙에 따라 중국과는 별개로 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재화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46]

3. 중국과 별개의 WTO 회원으로서의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WTO의 회원자격은 주권을 가진 국가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세계

143)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4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0조
144)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5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1조
145)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2조
146)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3조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라 'WTO 협정') 제1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자신의 대외무역관계 및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자적인 관세영역은 자신과 WTO 사이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WTO 설립 협정에 가입할 수 있고 이러한 가입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하여 적용된다"[147]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만이 아니라 자치권을 보유한 독립관세구역"[148]도 WTO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WTO의 회원국이 되는 자격은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성'(material economic independenc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을 보유한 '어떠한 조직'(any organism)이라고 말할 수 있다.[149]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관세구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홍콩 또는 중국마카오 명의로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가 또는 가입할 수 있다.

주권국가뿐만 아니라 비주권 국가인 독립관세구역도 WTO 회원이 될 수 있다는 WTO 설립협정 제12조와 특별행정구기본법을 종합하면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별개의 WTO 회원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에 반환되기 전인 1995. 1. 1. 이미 WTO에 가입하여 그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바 있어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새로운 독립적 지위를 창설하여 부여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규정으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다.[150]

---

147) 박덕영, 이재형 공편 「WTO 통상집」2006. 26면
148) "any state or 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
149) 박노형,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 법조 통권 530호, 2000. 10. 35-57면

홍콩과 마카오가 WTO에 가입한 이후 2001. 12. 11.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2002. 1. 1. 대만까지 WTO에 가입하면서[151] 중화경제권은 총 4개에 달하는 각기 별개의 WTO 회원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이 각기 WTO에 가입한 이상 주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은 각기 WTO 회원으로서의 지위와 의무를 부여받고 각기 WTO 협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다. WTO 회원으로서의 중국은 중국 대륙만을 의미할 뿐 홍콩이나 마카오를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홍콩과 마카오 역시 독립관세영역으로서 중국과 구별되는 별개의 WTO 회원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이 각기 독립관세구역으로서 각자가 WTO 회원인 이상 중국과 홍콩 또는 중국과 마카오의 무역관계는 단순한 국내상거래가 아니라 상이한 WTO 회원간의 무역관계가 되고 곧바로 WTO 체제의 규율대상이 되는 무역관계가 되는 것이다.

---

150)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2조,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37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참가하고 있고 홍콩(마카오)도 이미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적당한 형식으로 그 조직에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직 참가하지 않고 있으나 홍콩(마카오)은 모종의 형식으로 이미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적당한 형식으로 그 조직에 계속 참가하도록 한다.」 참조

151) http//www. wto. org

제3장 WTO와 CEPA

제1절 WTO 체제하에서의 지역경제단일화[152]

1. GATT 제24조

오늘날 국제사회는 무역, 투자, 금융 등 방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존하는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WTO협정으로 대표되는 다자간무역체제 속에서 국제경제에 장애가 되는 장벽들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국제경제융합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지역경제의 통합조정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다. 지역경제단일화가 발전하여 유럽공동체(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등의 지역경제기구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둥인 WTO체제는 지역경제에 의해 초래된 각종 보호무역주의의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WTO와 각 지역경제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인지, 지역경제기구와 그 내부에 경제발전정도가 각기 다른 개별 국가가 어떻게 세계화경제의 혜택을 공유할 것인지, WTO로 대변되는 다자간무역체제 내에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기구를 보다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역경제단일화와 세계경제화가 융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지도해 갈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긴박하고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세계화경제는 상품·화폐·자본·자원 등의 요소가 국제시장에서

152) 慕亞平·李伯僑, 「區域經濟一體化與CEPA的法律問題研究」, 法律出版社, 2005, 3-14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유통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 각국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조화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의지를 최대한 구현하면서도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원칙·규칙·기구·절차에 관한 제도적 안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역경제단일화는 지리적으로 비교적 인접한 2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조약체결을 거쳐 확립하는 경제무역연합의 과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동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에 그 기반이 형성되었다. 1947년부터 1997년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가 통보를 받은 지역경제단일화 협의는 163개이며 그 중 60% 이상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GATT에서 지역경제단일화 관련 규정은 GATT 제24조에 집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취소 정도에 따라 지역경제단일화는 무역특혜안배, 자유무역지구,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의 5개 단계로 구분한다. 그런데 동 규정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임시협의라는 3개 단계만을 규정하였을 뿐이며, 공동시장이나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GATT 제24조에 의하면, 관세동맹이란 "단일관세지역을 이용하여 2개 이상의 관세지역을 대체"하는 것이다. 관세동맹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동맹을 구성하는 각 지역의 실질적 의미의 모든 무역 또는 각 지역 원산품의 실질적 의미의 모든 무역에 대해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규장을 취소하였을 것 ② 비동맹지역에 대한 각 회원의 무역에 대해서 동맹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관세 및 기타 무역규장을 적용할 것 ③ 비회원인 GATT 체약당사자가 징

수하는 관세 및 실행하는 기타 무역규장에 대해서, 동맹관계나 임시 협정을 맺지 않았을 때에 동맹을 구성하는 각 영토에서 실시하는 관세 및 무역규장의 일반적 제한수준보다 전체적으로 높거나 엄격하지 않을 것 등이다.

자유무역지구란 둘 이상의 관세지구의 집단을 가리키는데, "① 구성지구의 회원은 당해 각각의 관세지구를 원산으로 하는 상품의 무역에 대해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규장을 실질적으로 취소하였을 것 ② 비회원인 GATT 체약당사자가 징수하는 관세 및 실행하는 기타 무역규장에 대해서, 구성지구의 회원은 자유무역지구나 임시협정을 맺지 않았을 때에 자유무역지구를 구성하는 각 지구에서 실시하는 관세 및 무역규장의 제한수준보다 높거나 엄격하지 않을 것."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구의 차이점은 관세동맹의 회원은 비회원에 대해서 통일된 관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유무역지구의 회원은 각자의 세제(稅制)를 여전히 보유하면서 역내 회원의 일부 상품에 대해 감세·면세를 시행하며 그 대우는 최혜국대우보다도 우대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밖에 제24조는 이들 두 가지 지역경제 집단의 가입·성립을 위한 임시협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GATT 최혜국대우 원칙의 중요한 예외로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 간에 진정한 자유무역이 형성되도록 보장하고, 기타 GATT 회원의 무역이익으로 조성된 손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한다. 하지만 GATT 제24조는 규정상 모호한 면이 있어서 구체적인 실시에 있어 곤란한 점이 있다. 예컨대 "실질적 의미의 모든 무역"에 대해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규장을 취소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 의미의 모

든 무역"이 무엇인가에 관해 의견이 나뉜다. 그리고 "관세동맹 외부의 관세 및 기타 무역규장이 동맹관계나 임시협정을 맺지 않았을 때에 동맹을 구성하는 각 영토에서 실시하는 관세 및 무역규장의 일반적 제한수준보다 전체적으로 높거나 엄격하지 않을 것"과 관련하여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산정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고 그 결과 「1994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가 탄생하였다.

2. 「1994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이하 「제24조 양해」라고 함)

「제24조 양해」는 서문에서 "본 협정의 목적은 구성 영토(constituent territories) 간의 무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회원과 동 영토 간의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협정을 형성하거나 확대하려는 경우 참가당사자는 다른 회원의 무역에 대한 불리한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GATT 제24조의 시행 중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15개의 조문을 통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보상규정도 두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동맹 형성 전후에 적용하는 관세 및 기타 무역법규의 평가문제에 관한 것이다. 「제24조 양해」는 가중평균관세율(weighted average tariff rates) 및 징수한 관세에 근거하여 관세와 비용을 전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계량화(quantification)와 종합(aggregation)

이 어려운 다른 무역법규의 영향범위에 대해서는 개개의 조치·법규·관련 상품(products covered)·무역흐름의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둘째,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로 옮겨가는 임시협정(interim agreement)의 "합리적 기간"에 관한 것이다. 「제24조 양해」는 합리적 기간을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10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임시협정의 참가 당사자들이 10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기한연장의 필요에 대한 완전한 설명(full explanation)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관세동맹 형성으로 인한 회원의 관세 변화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넷째, 종전에는 상품무역이사회심의가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사회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관세동맹 혹은 자유무역지구 또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구의 형성으로 이끄는 임시협정에 관련된 제24조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153]에서 상술·적용한 「GATT 1994」[154] 제22조 및 23조를 원용할 수

153) 「WTO 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Annex 2이다.

154) GATT 1947이 국제조약인데 반해, GATT 1994는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 of 15 April 1994)」의 「WTO 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구성부분일 뿐이다. 즉 GATT 1994는 「WTO 설립협정」의 Annex 1A인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의 한 내용이며, 그밖에도 Annex 1A에는 'Agriculture', 'Textiles and Clothing', 'Anti-dumping', 'Rules of Origin', 'Safeguards' 등등이 있다.
한편 「WTO 설립협정」의 Annex 1B는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이며, Annex 1C는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nnex 2는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nnex 3은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Annex 4는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이다.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각 회원은 「GATT 1994」의 모든 규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영토 내의 정부 및 주무기관이 이들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지역경제단일화가 WTO 다자간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단일화는 한편으로는 WTO의 다자간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것으로서 지역 내부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부의 무역장애를 감소 내지 제거함으로써 작은 범위 내에서 진정한 자유무역을 실현한다.

가.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지역경제단일화의 긍정적 영향

첫째, 다자간무역협상 중에 각 집단의 역량을 균형 잡히게 하여 각 당사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선진국은 지역경제집단을 결성하여 세력을 키워서 개별 초강대 경제대국에 필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간무역 규칙제정에 있어 소수의 초강대 경제대국이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는 국면을 타파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역시 지역경제집단을 결성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단일화는 다자간무역체제의 시험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들어섰다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과연 어떠한 다자간무역체제를 건설해야 하는지, 국제경제질서를 어떻게 재편성해야 하는지 등은 이론적 연구와 실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지역경제단일화에 관계되는 주체들의 범위는 비교

적 적고 이해관계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전세계 무역다변화와는 다른 면이 있어서 시험무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 내 협상과 다자간 협상은 상호 촉진이 가능하다. 지역경제의 회원들은 대외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표출해야 하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면 다자간 협상에 임해서 재차 의견절충을 하는 절차는 피할 수 있다. 그리고 WTO협의의 관련 규칙에 따르면 지역경제조직 내부의 자유화정도는 전체 다자간체제보다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회원 사이의 협상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나.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지역경제단일화의 부정적 영향

첫째, 지역경제조직의 내부규칙은 지역경제조직 내의 일부 집단의 이익 때문에 다자간무역체제의 원칙 및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다자간무역 법률제도의 시행에 영향을 주곤 한다. 즉 지역경제조직을 창설할 때 그 법률적 틀이 요구수준에 미흡하거나, 지역경제조직의 운용과정에서 규칙에 위반되는 미세한 움직임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단일화조직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역이전효과'가 있고 비교우위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조직 내외적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게 되고 다자간무역체제의 안정적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조직은 국제시장에서 독과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지역경제조직은 개별상품의 국제시장가격을 독과점하여 자신들의 지역경제조직을 편향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조직의 통일적 행동은 보호

무역조치의 시행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으며, EU와 같이 선진국들로 구성된 지역경제조직은 그 경제역량이 더욱 강대해져 가격에 대한 전횡을 행사할 수도 있다.

끝으로, 지역경제 내부의 이익에 집착하다보면 지역적인 안배에 중점을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세계무역자유화에 대해 소홀할 수가 있을 것이다.

4. WTO체제 속에서의 지역경제단일화 전망

세계무역체제나 지역경제체제나 모두 국가이익의 조정이 필요하며, 개별 국가는 모두 자국이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다자간무역체제와 지역경제체제가 조합하기를 바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경제단일화는 3차례의 발전기를 겪었다. 첫 번째는 1950~60년대로서, 당시 수많은 국가들은 전쟁 이전의 무역장벽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고 연이어 지역적 무역조직을 창설하여 역내(域內)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70~80년대 초기이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였고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무역체제의 움직임은 약화되었다. 각국의 무역자유에 대한 열망은 다시금 지역경제집단으로 모아졌고 이로써 고조기를 맞게 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WTO 창설 초기이다.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세계 각국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지역적 무역자유화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난 후 회담결과의 시행에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고 규칙합의에도 미비점이 드러나자 다수 국가는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었

고 지역경제단일화의 추세는 여전히 거세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지역경제단일화는 WTO에 의한 통일된 다자간무역체제 하에서 다시금 고조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각국의 불평등한 정치·경제발전은 지역경제단일화가 발생·발전하는 근본원인이다. 각국의 경제력이나 경쟁능력은 각기 차이가 있고 그 처한 국제환경 역시 우열이 있다. 따라서 상호 경쟁 과정에서 주도권을 얻기 위해 자국과 상황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과 연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지역경제단일화 또한 일정한 관성을 갖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미국·일본·유럽공동체는 각자 힘을 키우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합종연횡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이끌고 있으며, 유럽공동체는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고, 일본도 아시아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 상호 간의 경쟁·협력은 세계경제무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추세가 되었으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에서 충분히 표출되었다.

셋째, 세계화경제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세계화경제 과정에서 각종 도전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 국가는 변방화의 위험을 겪고 있으며, 무역과 국가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경·무역·노동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경제로 인해 초래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역내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WTO체제 아래에서 또 다른 질서 즉 지역경제를 구

축하려는 생각은 자연스레 실현될 것이다.

넷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각 규칙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회원들이 처한 다양한 경제발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면서 때로는 명백히 각 회원들의 이익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경제단일화는 상기한 통일된 규칙에 대한 법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 회원들이 지역경제 단일화를 획일화된 규칙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제2절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규범[155]

WTO가 성립된 후에 특히 1999년 시애틀회의 이후에 다자간무역체계는 무역자유화 방면에서 진행이 더디었고,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물결이 다시금 일게 되었다. 지역무역자유화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역내 국가들도 주변화(周邊化)가 되어 국제무역에서 배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단일화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거나 참여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1. WTO협의 중 지역무역협정의 법률체계와 관련한 내용

WTO는 지역무역협정을 긍정하여, 지역간에 특혜적 성격의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역내(域內) 무역자유화 진행정도가 역외(域外)보다도 높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는 비차별적 대우의 예외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를 본다면, 지역무역협정은 WTO와 마찬가지로 무역자

155) 慕亞平·李伯僑, 앞의 책, 15-27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유화 추구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다만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어서, 당연히 WTO의 관련 규정 및 제반 협의의 규범을 받는다는데 있다.

WTO의 제반 협의 중 지역무역협정의 성립에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GATT 1994」 제24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의 '경제단일화', 1979년의 「차별적 및 보다 우호적인 대우, 그리고 호혜주의와 개발도상국가의 보다 충분한 참여에 관한 결의(Decision on the 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and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상의 '수권조항(enabling clause)'이 있다. 수권조항 제2(c)항은 개발도상국가 사이에 관세나 비관세수단을 상호 감소 내지 배제하는 지역적·세계적 협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수권하였다.[156] 다만 WTO에 가입한 중국·대만·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함)·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함) 중 오직 중국만이 개발도상국 자격으로서 WTO에 가입하였으므로, 상기한 수권조항은 중국·대만·홍콩·마카오 간의 경제협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56)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Decision of 28 November 1979.

~ 중략 ~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pply to the following:

~ 중략 ~

(c) Regional or global arrangements entered into amongst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s an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or conditions which may be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imported from one another; ~ 중략 ~

1990년대 초반 이래 지역무역협정은 계속되고 있는데, 2008년 12월 현재 약 421개 지역무역협정이 GATT나 WTO에 보고되었다. 이 중에서 324개의 지역무역협정은 GATT 1947(또는 GATT 1994) 제24조에 의거한 것이고, 29개는 수권조항에 따른 것이고, 68개는 GATS의 제5조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이들 중 230개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WTO에 통지되지 않은 것, 서명하였으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 현재 논의 중인 것 등을 고려한다면 2010년까지 약 400여 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무역협정 중 자유무역협정(FTAs)과 부분적 범위협정(partial scope agreement)이 90% 이상이며, 관세동맹은 10% 미만이다.[157]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의 기본이념은 무역장벽의 종합적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협정참여자들 간의 무역 편의를 증진하고, 국제무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WTO 제반 협의, 특히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를 위주로 보면, WTO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요구하고 있다.

가. 투명성

투명성은 WTO협의의 기본원칙이다. GATT 제10조에서는 각 회원국가의 무역 법률・규장・정책・결정・재결 규정은 모두 공포되어야 하며 이로써 각국 정부와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약(締約)당사자 어느 일방의 정부・정부기구와 다른 체약당사자 정부・정부기구와의 사이에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

157)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참조(2009년 8월 24일 방문).

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또한 GATT 제10조와 GATS 제5조는 모두 지역무역협정의 회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제7항에서는 WTO 회원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 혹은 임시협정(interim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상품무역이사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상품무역이사회의 토론 후 동의를 거쳐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사를 하고, 상품무역위원회에 심사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GATS 제5조 제5항에서는 WTO 회원이 서비스무역단일화 협정을 위하여 어떠한 체결·확대가 있거나 또는 중대한 수정이 있고, 일방 회원이 구체적 승낙(commitment)을 수정(modification) 내지 철회(withdrawal)할 의사가 있고, 그로 인해 양허표(schedule) 상의 조문과 요건이 불일치하면 이를 90일 전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158]

나. 역내 무역자유화 실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노동력 이동 등의 방면에서 WTO요청에 따라 기존의 비교적 넓은 범위의 제한조치를 취소하고 역내 보다 많은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 이는 WTO 회원이 일부 특정 상품에만 특혜대우를 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을 하지 않거나,

---

158) GATS Article 5

5. If, in the conclusion, enlargement or any significant modification of any agreement under paragraph 1, a Member intends to withdraw or modify a specific commitment inconsistent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its Schedule, it shall provide at least 90 days advance notice of such modification or withdrawal and the procedure set forth in paragraphs 2, 3 and 4 of Article XXI shall apply.

또는 다른 국가의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GATT 제24조 제8항에 의하면, 관세동맹 혹은 자유무역지구 등을 불문하고 그 회원 간의 실질상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상업법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GATS 제5조 제1항을 보면, 체약당사자들은 상당한 서비스 분야별 대상범위에 대해서 당해 협정을 체결할 때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현재의 차별적 조치들을 취소하고, 신규 혹은 더욱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substantially sectoral coverage)는 그 분야의 수, 영향을 받는 무역량 및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하는 규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59]

상술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평가할 때는 이들 협정과 관계국간의 경제단일화 또는 무역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과의 관계가 고려될 수 있다(제5조 제2항).

---

159) Article 5

1.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ny of its Members from being a party to or entering into an agreement liberalizing trade in services between or among the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an agreement:
(a) has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1, and
(b) provides for the absence or elimination of 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 in the sense of Article XVII, between or among the parties, in the sectors covered under subparagraph (a), through:
(i) elimination of existing discriminatory measures, and/or
(ii) prohibition of new or more discriminatory measures,
either at the entry into force of that agreement or on the basis of a reasonable time-frame,
except for measures permitted under Articles XI, XII, XIV and XIV bis.

다. 협정의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WTO는 지역무역협정이 WTO가 구축하고자 하는 다자간무역체계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는 지역무역협정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동맹·자유무역지구·서비스무역단일화가 성립된 경우 당해 협정에 미가입한 WTO 회원에 대해서 그러한 협정이 성립되기 이전의 수준과 비교하여 무역장벽이 높아져서는 아니 된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지역무역협정의 승낙과 규정 하나하나가 GATT·GATS에서 규정한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지역무역협정의 의무 및 조항이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 이외의 무역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GATT 및 GATS 모두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GATT 제24조 제6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자가 아닌 WTO회원에 대한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 하에 지역무역협정의 일방 체약자가 관세인하양허표 규정과 상이한 방식으로 관세율을 높일 것을 제의하면 제28조 소정의 양허표 수정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보상적 조정(compensatory adjustment)을 결정할 때에는 관세동맹의 기타구성국의 해당관세의 인하로 인하여 이미 부여된 보상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WTO 협의 중 지역무역협정 제한의 완화

지역무역협정 체계에 대한 WTO 협의는 충분하지 않다. GATT 제24조에서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인정하는 물꼬를 튼 것은 당초 EU

단일화의 발전을 바라는 의미에서였다.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발전추세는 당초의 예상을 벗어났지만, 각국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다자간무역에 대한 지역무역협정의 작용에 대해 다소간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심리는 WTO협의에도 반영되어 지역무역협정 제한에 대해 엄격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 WTO 규범은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 대우 문제에는 미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지역무역협정 및 분쟁해결시스템에 완화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들 규범의 준수에 대해 각국은 비교적 큰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24조와 WTO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WTO 회원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회원들은 제24조는 단지 제1조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대한 예외일 뿐이며, 지역무역협정의 체약당사자는 반드시 GATT의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홍콩, 일본, 인도 등이 그러한데, 제24조는 지역무역협정의 회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무역협정이 GATT의 기타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한다.

예컨대 한국은 "제24조는 지역무역협정(RTAs)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는 2가지 이유가 있으며 첫째는 역사적인 이유로서 50여 년 전에 다자간 무역체계가 시작될 당시에 이미 지금 지역무역협정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실체가 있었기에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논리적인 것인데 즉 세계적 자유무역을 성취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집합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을 진흥하려는 바람이 고려된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의 존재이유는 보다 폭넓은 다자간 자유화 과정

내의 지역적 기반 위에 무역을 자유화하는 기능에 있다. 따라서 제24조의 예외적 지위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지역무역협정의 기본원칙기능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제24조는 지역무역협정 참가자들이 취하거나 유지하는 무역정책 내지 GATT에 어긋나는 조치들을 법적 보호망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160]

반면 또 다른 회원들은 제24조가 기타 모든 GATT 협정에 대한 예외라고 주장한다. 제24조 제5항의 "본 협정의 규정(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이란 문구는 어떤 조항을 특별히 지명한 것이 아니고[161], 다자간 조약에 대해 국제법에서는 다자간 조약의 체결당

---

160) World Trade WT/REG/M/14, 24 November 1997, para. 10.

10. The representative of Korea said his delegation, too, welcomed the papers by the Australian and Hong Kong, China delegations, as well as the background notes by the Secretariat. ~ 중략 ~ As was widely recognized by the Committee, Article XXIV contained an important derogation from the MFN rule, giving RTAs special status. There were two reasons for this. One was historical, in that at the inaugura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ifty years ago, there had been entities similar to what were now known as RTAs, and it was necessary to grandfather them. The other, more fundamental reason was economic or theoretical, in that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promote free trade through RTAs as part of Members' collective effort to achieve world-wide free trade. ~ 중략 ~ The raison d'etre of an RTA was its function of liberalizing trade on a regional basis in the wider process of multilateral liberalization. Therefore the exceptional status of Article XXIV was understood in light of the building-block function of RTAs in furthering multilateral liberalization. ~ 중략 ~ Article XXIV should not be used as a legal cover for GATT-inconsistent measures or trade policies which the parties to RTAs might take or maintain. ~ 후략 ~.

161) Article 24

5. Accordingl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s between the territories of contracting parties, the formation of a customs

사자는 보다 광범위한 협정체결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의무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규정이 제3자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한 WTO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U 등이 이러한 입장이다.[162]

한국, 일본, 홍콩 등 지역무역협정에의 참여정도가 비교적 덜한 국가들의 경우 지역무역협정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고 특히 단일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 그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에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반면 EU는 현재 경제단일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경제실체이므로 단일화에 유리한 해석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제3절 중국 4개 관세영토와 지역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는 그 전신(前身)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여 1995년 1월 1일에 성립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內地)[163], 중국 마카오, 중국 홍콩, 대만은 모두 1개 주권국가에 속하지만 각각 독립된 경제실체로서 WTO에 가입하였다.[164] 다만 대만과는 정치적 사정에 따라 자유무역지구를 창설하

---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or the adoption of an interim agreement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Provided that:(따라서,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국 영역간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거나 또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필요한 잠정협정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다음의 제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동 한국어 번역은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의 조약정보란의 국문번역본을 사용하였다

162) WT/REG/M/14, para. 13; WT/REG/M/15, para. 54 참조-慕亞平·李伯僑, 앞의 책, 20쪽

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관세영토 간에 자유무역지구를 창설하였다. 가입 순서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국 홍콩(Hong Kong, China)

홍콩은 기존 GATT 체약당사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WTO 협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 WTO 성립 당시에 창설회원이 되었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후에 WTO에서의 홍콩의 명칭은 "중국 홍콩"으로 바뀌었다. 1984년의 중영연합성명(중화인민공화국과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홍콩문제에 관한 연합성명)[165] 및 1990년의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중국 홍콩'의 명의로서 계속하여 WTO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중국 마카오(Macao, China)

마카오도 홍콩과 입장이 비슷하다. 마카오 역시 기존 GATT 체약

164) 이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에 입각한 입장이며,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1국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정치적·정책적 변화가 있어 왔다. 본서에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통치하는 중국을 1개의 주권국가로 보고 대만은 그 영토의 1부분이라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기초로 다루고 있다(편자 주).

165) 1984년 12월 중순 영국의 대처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12월 19일 중국 총리 쟈오즈양(趙紫陽)과 영국의 대처 수상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성대한 「중영연합성명」 조인식을 거행하였고, 각각 본국의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성명」에 서명하였다. 「연합성명」은 1985년 4월,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의 비준심의에 회부되었고, 4월 10일에 동 회의에서는 「연합성명」을 비준하였으며,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리셴넨(李先念)은 「연합성명」의 비준을 명하였다. 1985년 5월 27일, 중영 양국 정부는 홍콩문제에 관한 「연합성명」의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였고, 이 성명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다. 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 하에서 순조롭게 홍콩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사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WTO 협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 WTO 성립 당시에 창설회원이 되었다. 1999년 12월 20일 중국이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후에 WTO에서의 마카오의 명칭은 "중국 마카오"로 바뀌었다. 1987년의 중포연합성명 및 1993년의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서 계속하여 WTO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중국(China)

중국은 GATT의 창설 체약당사자이다. 1986년 7월 중국은 GATT에 '복귀'를 신청을 하였으며, 1995년 11월에는 'WTO 가입' 신청으로 변경하였다. 약 15년의 신청과정을 겪은 후 2001년 12월 11일에 중국은 마침내 WTO의 제143번째 회원이 되었다. 또한 「WTO협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국 영역 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신분으로 가입하였다.

④ 중국 타이베이(Chinese Taipei)

대만은 1992년 9월에 GATT 가입을 신청하였고, 1995년 1월 15일에는 'WTO 가입' 신청으로 변경하였다. 약 10년의 신청과정을 겪은 후 2002년 1월 1일에 WTO협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단독관세영역'의 신분으로서 WTO의 제144번째 회원이 되었다. 가입 시의 공식 등록 명칭은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Chinese Taipei)"이며 약칭하여 'Chinese Taipei'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중국 타이베이'라고 번역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중화 타이베이'라고 번역한다.

상술한 중국의 4개 WTO 회원 중 중국(China)만이 '개발도상국가'

의 신분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중국만이 국제법상 주권국가(sovereignty)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며, WTO 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 회원이 누리는 특별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WTO 협정 제4.1과 제4.2조에 따라 중국,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중국 타이베이는 각각 WTO의 각료급 회의와 총이사회에 참가하며 각기 중국 대륙지구, 홍콩특구, 마카오특구, 대만지구의 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며 서로 예속당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특수상황을 인정하여 '하나의 중국에서 4개 지구가 참여(一國四席)'하는 것을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홍콩·마카오와 중국과 관계는 지방특별행정구와 중앙정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 간의 자유무역지구는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형식을 취하여 창설하였다.

홍콩의 경우 금융·상업무역·교통·정보·제조 등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마카오는 관광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주로 전자·석유화학·농업 등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은 에너지·원재료·방직업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목적은 무역투자자유화이며, 분업협력과 비교우위산업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4개 관세영토의 경제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협력 범위는 상품무역에서의 저(低)관세 혹은 영(零)관세 등에만 그치지 않고 역내 원산지 공동인식, 산업협력, 서비스업 자유화, 투자자유화 등 방면도 포함한다.

1.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필요성[166]

중국 대륙과 대만지구가 연이어 WTO에 가입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4개의 중국 구성원 간에는 기타 WTO 회원들과는 다른 일종의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이들 4개 중국 구성원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중 중국과 홍콩, 마카오가 CEPA(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를 체결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었다.

가.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입지강화

각국은 세계화 경제 속에서 일정 지역의 경제협력체에 속속 가입하고 있는데, 시장개척과 자국경제발전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지역협정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합치된 목소리를 내어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협정은 역내 경제정책을 통일하고 대외 경제정책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국제경제상의 협상에서 통일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이로써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경우, 각 회원들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총회 및 각종 협상에 임하여서는 역내 이익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중국의 기치 아래 각 당사자들과의 특수관계 강화

국가주권원칙에 의한다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가는 기타

166) 慕亞平·沈虹, "建立泛中國自由貿易區的必要性及其法律依據探討", 慕亞平·李伯僑, 앞의 책, 84-93쪽을 정리하였음.

국가·지구의 상품·서비스·서비스제공자에게 특혜혜택을 줄지 여부 및 특혜혜택범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WTO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 간의 관계 또한 WTO 규칙의 제약을 받는다. 중국의 경우,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특혜혜택을 주는 경제무역관계를 이미 홍콩·마카오·대만과 맺고 있었는데,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한 이후 이러한 관계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상호간의 특혜혜택을 계속 보유하려면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WTO의 기타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하였다. 이에 기타 WTO 회원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4개 관세영토 간의 특혜혜택은 그대로 보유하기 위해 양안(兩岸) 4개 지역 간에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WTO 규칙 내에서 일종의 특수관계를 창설하게 되었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WTO 규칙에서 인정하는 것이었기에 중국의 4개 지역이 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었다.

다. 중국의 지역경제단일화전략 발전상 필요

현재 세계는 세계화와 지역경제단일화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체제가 갖는 결함 때문에 각 국가는 소범위의 지역경제모임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하나의 지역경제집단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가들은 여러 개의 지역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중국도 기타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문제되는 것이 중국이외의 기타 지구, 즉 홍콩·마카오·대만이 포함되는가이다. 예컨대 중국이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ASEAN(동남

아시아 국가연합)과 소위 "10+1"의 자우무역지대를 창설함에 있어서, 주권국가가 아니라 독립관세구역인 홍콩·마카오·대만이 그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이들 관세영토를 가입시키는 것이 역내에서 자국의 대외적 창구를 통일하고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2009년 8월 15일 ASEAN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동남아국가연합 회원 정부와의 전면적 경제협력구조 협의투자협의(中華人民共和國政府與東南亞國家聯盟成員國政府全面經濟合作框架協議投資協議)」[167]를 체결하였는데, 동 투자협의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가입 시 WTO가 정의한 중국의 전부 '관세영토'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168] 따라서 이후에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할 경우 이들 관세영토를 포함한 협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양안의 WTO 가입에 따른 문제

중국과 대만 이 모두 WTO에 가입함으로써 양자가 동일하게 광대한 세계시장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167) 영문으로는 「AGREEMENT ON INVESTMENT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다.

168)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a) investors of another Party; and
(b)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in its territory, which shall be:
(i) in respect of China, the entire customs territory according to the WTO definition at the time of her accession to the WTO on the 11th day of December 2001. For this purpose, for China, "territory" in this Agreement refers to the customs territory of China;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대립적인 입장차가 존재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내부의 경제무역관계는 WTO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WTO 회원들인 중국·중국 홍콩·중국 마카오·중국 타이베이 사이의 경제무역 관계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설령 해당 분쟁사항이 WTO 체계 내에서 조정하는 분쟁사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해당 유형의 분쟁사항은 동시에 특수한 국내 무역분쟁에도 해당하므로 국내의 분쟁해결방식을 통하여 쌍방 간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169] 반면에 대만지구에서는 WTO 회원 간의 경제무역 관계이므로 WTO 규칙을 적용하여 규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EU의 경우에도 EU의 개별 가맹국이나 EU 자신에 대한 WTO 규칙의 적용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EU의 경우, 첫째, 가맹국들이 모두 주권국가이며, 둘째, EU라는 단일한 대표기구가 각 가맹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4개 지역이 WTO에 가입한 '일국사석(一國四席)'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WTO에 가입한 중국 4개 지역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WTO 규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는 중국의 주권 범위 내에 속하므로 국내문제로 해결하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지만, 대만과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동일 주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된다.

WTO 가입을 기화로 중국 내 4개 지역 모두 '세계화 경제'의 격랑

169) 傅崐成, "從南中國的區域經濟一體化走向大中華經濟圈", 王貴國 主編, 「區域安排法律問題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20면

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경쟁의 격화로 이어지게 된다. 대만의 경우 홍콩이나 마카오와 달리 중국과의 CEPA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WTO 체제 내에서 양안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 특히 우편 · 왕래 · 상업의 소통을 강화하는 소위 '3통(通郵, 通航, 通商)'을 대폭 개방하고 양안 간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170]

170) 傅崐成, 위의 글, 124면.

제3편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이해

제1장 중국-홍콩 CEPA

제1절 CEPA의 출현배경[171]

1. 내부적 요인

1980년대 이래 중국과 홍콩은 지속적으로 경제무역관계가 발전하여 왔다.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한다고 선포한 이후 1992년에는 시장경제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1997년에는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였고,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주요 조치들 및 사건을 거치면서 중국과 홍콩 간의 관계는 점점 긴밀해져 갔으며, 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중국의 국제경쟁력과 종합적인 국력을 신장시켰다.

또한 개방이 계속되고 특히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시장은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 상인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점점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중국-홍콩 간의 무역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홍콩의 제1무역상대방이 되었다. 홍콩의 무역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 2001년 37%, 2002년 39%, 2003년 43%로서 여전히 수위(首位)를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홍콩을 중계하여 타지로 수출된 화물의 가치가 홍콩을 경유한 화물 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0년 35%, 2001년 37%, 2002년 40%, 2003년 44%로서

171) 索光擧, 「CEPA 條件下內地與香港法律適用問題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6-10면.

역시 수위를 달리고 있었다.

한편 다년간 홍콩은 중국의 제1무역 상대였지만, 다수 선진국들로부터 도전을 받아 왔다. 예컨대 1993년에는 홍콩은 중국의 최대무역상대국가라는 지위를 일본에 내주어야 했는데, 당해 연도 중일 간의 무역액은 390.3억 달러로 중국-홍콩 간의 무역액 324.9억 달러를 앞섰다. 그런데 그 후에도 중국의 무역거래 상대방의 순위에서 홍콩은 계속 하락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2003년 중국과 6대 무역상대방의 무역액을 보면, 일본이 1,336억 달러, 미국이 1,264억 달러, 유럽연합(EU)이 1,253억 달러, 홍콩 874억 달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782억 달러, 한국 632억 달러이었다. 즉 홍콩은 중국의 제4대 무역상대국가(지구)에 불과하였고, 앞 순위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무역액의 격차도 크게 벌어진 반면, 후순위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여 순위가 계속 하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가 없었다.

중국과 홍콩 간의 쌍방향 투자를 예로 들면, 홍콩은 중국의 제1외자도입원의 지위를 시종 지켜왔다. 2003년 말 까지 중국에 투자한 홍콩의 실제투자 누적액은 2,226억 달러로서 규모가 꽤 컸다. 그런데 중국에서 실제 이용한 외자 총액에서 홍콩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하강하였다. 1980년대 중국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투자비중은 60% 이상이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 이 비중은 50% 이하로 낮아졌고, 2003년에 이르면 40% 대까지 떨어졌다.

홍콩이 중국의 무역상대방으로서의 순위가 하락하고, 중국이 실제 이용한 외자총액에서 홍콩으로부터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하게 된 구체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ⅰ) 홍콩을 경유한 중계무역이 대외무역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제조업상품의 수출가

치는 매우 낮았다. 이는 대외무역규모가 증대되는데 일정한 제약요인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홍콩의 제1무역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홍콩의 경우는 중국의 무역상대방 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러한 추세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ii) 중국에서 사용하는 외자총액 중 홍콩으로부터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는 요인을 보면 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비중이 증가한 것에도 일부 요인이 있지만, 홍콩의 대외직접투자지역이 변화된데 주된 원인이 있다. 예컨대 홍콩특구의 <2003년 경제개황>에 따르면, "과거 5년 사이 홍콩의 대외투자규모는 매우 컸는데, 홍콩의 '최대 제1차' 대외 직접투자지구는 영국령 버진 군도(The British Virgin Islands)였으며, 중국의 중국 역시 대외 직접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라고 밝히고 있다. '최대 제1차' 투자목적지와 '가장 중요한' 투자목적지라는 표현상의 차이는 현실적인 투자금액의 차이로 나타난다. 버진 군도와 중국에 대한 홍콩의 대외직접투자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2년 말까지 홍콩의 대외투자금액 중 버진 군도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7.6%인 반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4.9%였다.

이는 전세계적 범주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기능의 작용 결과이며 국제경쟁이 가열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홍콩 간의 경제무역관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구정부의 공동관심사였던 것이다. 중국 내부적으로 중국과 홍콩 두 지역 사이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었고 두 지역의 경쟁력도 높일 방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에 CEPA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중국-홍콩 CEPA의 출현 배경에 대해 홍콩 특별행정구 공업

무역서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Principal Trade Officer인 Doris Chen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홍콩이 각기 WTO 회원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질서에서 중국과 홍콩의 경제관계를 법제도적으로 국내관계와 동일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한편, CEPA가 체결된 2003년의 경우 홍콩의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창궐 등의 여파로 홍콩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홍콩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홍콩의 경우 CEPA 체결에 대하여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CEPA의 체결로 홍콩에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중국이 홍콩에 경제적 혜택 내지 홍콩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홍콩주민들의 중국에 대안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한 국가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관점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홍콩의 경제적 경험과 지식을 흡수하게 되어 중국경제를 글로벌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172]

2. 외부적 요인

지역경제집단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예컨대 1958년 1월에는 서유럽 6개국의 공동시장이 성립되어 운행되고 있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도 전 세계적으로는 100여 개의 지역경제집단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후로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무역보호주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이 국제무역상의 공동규칙을 준수하지 않게 되자, GATT를 대체하여 전(全)세계무역을 통합관리하게 될 WTO 다자간무역협상이 수차례 좌초되었다.

---

172) 2009. 12. 1. 홍콩 공업무역서를 방문하여 면담한 바 있다.

이에 많은 국가 및 지구(地區)들은 지역경제집단이나 자유무역지구(WTO)를 만드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FTA가 체결되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새로이 체결된 양자간 FTA는 19개에 달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FTA 체결에 적극 가담하였다. GATT로부터 WTO로 다자간무역체계도 계속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 회원들 간의 지역무역기구 창설도 같이 이루어졌다. 1947년의 GATT 및 1994년 GATT 모두 체약국들간에 자유무역지구나 관세동맹을 맺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지역무역기구를 창설하는 방식 및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 즉 1947년 GATT 제24조 제4항은 “체약국은 자발적인 협정을 통하여 협정 당사국의 경제간에 보다 더 긴밀한 통합을 발전시켜 무역의 자유를 증대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체약국은 또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이 동 구성영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영역과 기타 체약국간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기구는 모두 배타성을 지녀 역내 우대혜택을 역외의 WTO 회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집단이 계속 증가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예컨대 미국 · 캐나다 · 멕시코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보면, 관세 취소로 인해 멕시코의 기성복 및 방직품이 대량 미국시장에 유입됨으로써 동종 상품에 대한 중국의 미국시장 내의 점유를 대체하여 제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지역무역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제2절 CEPA의 시행[173]

중국과 홍콩은 상술한 대내·외적 요인에 대응하여 2002년 1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개시하여 2003년 6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과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于建立更緊密經貿關係安排)」(이하 CEPA라 함) 제1장 제2조 제1항과 2항 규정에 의하면, 대륙과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는 '일국양제(一國兩制)' 및 WTO 규칙제도 하의 것으로서, '일국양제'는 CEPA 운용의 전제조건이 되며, WTO 규칙은 그에 대한 한계로 기능한다.

중국과 홍콩은 모두 WTO 회원이기에 CEPA를 시행할 때에는 WTO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CEPA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CEPA의 순리적인 시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승인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홍콩의 권리는 중앙정부의 수권으로부터 기인하고 국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1국'이라는 근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CEPA 역시 대륙과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는 반드시 '일국양제'의 전제 하에 창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 해협 양안의 4개 지역 사이에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1국가의 주권사무에 속하는 내정(內政)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4개 지역은 모두 WTO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WTO를 회피하여 시행할 수는 없다.

---

173) 慕亞平·盧嘉嘉, "論CEPA的性質及其實施問題", 慕亞平·李伯僑, 앞의 책, 97쪽 이하; 索光擧, 앞의 책, 16면이하

1. CEPA의 체결주체

CEPA의 체결주체를 보면 한쪽은 중국의 내지이고 다른 한 쪽은 홍콩이다. 중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副部長)이 서명하였고, 홍콩 쪽에서는 홍콩특구 재정사(財政司) 사장(司長)이 대표로서 서명하였다. CEPA에서는 CEPA 협정의 일방 주체인 중국에 대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부(全部) 관세영토를 가리킨다"고 명백히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부 관세영토'라 함은 '중국 전부의 관세영토'를 가리키며, 여기에 중국 홍콩 특별관세영토, 중국 마카오 특별관세영토, 중국 타이완(臺灣)·펑후(澎湖)·진먼(金門)·마주(馬祖) 단독관세지역("중국 타이베이"라 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CEPA 명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Areas, FTAs)"와 "협정(Agreement)"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기로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지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가 지역적 성격의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경제단일화 조치에 사용된다. 그리고 국제법상 "협정"이란 용어는 둘 이상의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법률문서에 이용된다. 이미 중국과 홍콩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피하기 위해 쌍방간 법률문서에 "안배(安排, arrangement)"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쌍방 대표가 서명·반포하고 각자의 지역에서 적용한 법률문서가 있었다.

즉 1999년 6월 21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는 이러한 안배(arrangement) 방식을 채택하여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안배(關于內地與香港特別行政區相互執行仲裁裁決的安排)」를 체결하였다. 이 안배는 양 지역의 법원이 상대방의 중재판정을 수리·집행하는 구체적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것인

데, 각각 사법해석과 홍콩「중재조례」개정을 통해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CEPA 서명 이후 상무부, 재정부, 공상행정관리총국, 건설부, 문화부, 해관총서(海關總署) 등은 단독으로 또는 연합하여 CEPA 관련 일련의 국내 행정규칙(원어: 行政規章)을 반포하였다.

CEPA 체결자의 명칭 역시 동 법률문서를 "협정(agreement)"과 구분하고자 하는 기초자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쪽의 서명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이며, 홍콩 쪽의 서명당사자는 홍콩의 WTO상 공식명칭인 '중국 홍콩(Hong Kong, China)'가 아니라 홍콩특구 재정사(財政司) 사장(司長)이다. 이는 CEPA가 동일 국가 내의 상이한 행정기구가 상이한 관세지역을 대표하여 서명한 문서임을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에 대하여 홍콩 특별행정구 공업무역서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Principal Trade Officer인 Doris Chen은 중국-홍콩 CEPA는 무역에 관한 합의이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의 무역 관련 부서에서 상호 체결한 것이며 'Agreement'가 아닌 'Arrangement'를 사용한 것은 중국과 홍콩이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 CEPA의 법적 성격

홍콩·마카오는 주권국가인 중국에 속하지만, 중국에 복귀된 후에도 그 일부 외사권(外事權)은 여전히 유보되어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다른 국제법상의 주체와 조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진다. 또 CEPA

체결과정에서 중국과 홍콩은 평등한 주체의 신분에서 서로 권리의무의 협상을 하고 승낙을 하였다. 이는 단일국가에서 입법기관을 통해 국내법이 통과되는 과정과 CEPA의 체결 과정이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으며,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발한 하나의 정책적 조치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결과이다. 따라서 CEPA를 단순히 중국의 국내법적의 문제에 위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서는 조약에 대해,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한다.[174] 즉 조약의 당사자는 국제법상의 주체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이하 '홍콩특구기본법'이라 함) 제13조와 제151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관련 대외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을 가진다. 홍콩은 경제·무역·금융·항운·통신·관광·문화·체육 등의 영역에서 '중국 홍콩'의 명의로 세계 각국 및 각 지역 그리고 관련 국제조직과 관계를 맺고 관련 협약을 체결·이행할 수 있다. 한편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51조 조문상 홍콩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인 "각 지구(地區)"에는 중국 내지(內地)도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에 속

174) Article 2. Use of terms
1.
a) 'treaty' mean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s in written form and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whether embodied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two or more related instruments and whatever its particular designation;

하므로 완전한 주권을 구비하지는 못하며 대외적 조약체결권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기본법」에서 수여한 것이다. 그래서 홍콩과 중국 사이에서 체결한 협의는 하나의 주권국가 내의 서로 다른 법역(法域) 간에 체결된 구제협의(區際協議)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기본법」에서 홍콩에 부분적인 외사권을 부여하고 홍콩이 단독관세지역으로서 WTO에 가입한 이후, 홍콩은 조약의 단독체결권 및 기타 WTO 회원과 지역경제기구를 설립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WTO 규칙상 본다면, 홍콩과 중국은 단독관세지역의 신분으로서 지역적 경제연맹에 가입하거나 조직할 수 있다. '일국양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홍콩이 중국과 상술한 영역에서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홍콩이나 마카오 등은 주권국가인 중국에 소속한 지역이므로 이들 상호 간에 체결된 어떠한 협의는 기존의 국제실무상의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중국-홍콩 CEPA는 분쟁해결에 있어 WTO나 ICSID의 적용가능성이 배제하고 있음을 근거로 조약으로 볼 수 없으며, 준조약 내지 사실상의 조약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175]

이상을 종합 고려한다면, WTO의 토대 위에서 CEPA를 통해 창설하는 특혜적 조치들은 일종의 지역간 협의 즉 구제협의(區際協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단 CEPA는 기존에 홍콩-중국 간에 체결된 다른 구제협의와는 차이가 있다. 즉 국제사법상 언급되는 국내의 '구제(區際)'와는 같은 것이 아니다. CEPA의 경우, WTO 틀 안에서의 "단독관세지역"간의 구제(區際)이기에 WTO 규칙이 보다 많이 적용 된다.

---

175) 김여선, 「중국 CEPA의 법적 고찰」,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116-117면

3. WTO 체제 하에서의 CEPA 특징

WTO 체제 내에서 최혜국대우는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회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각국의 경제제도가 다르고 경제발전정도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GATT는 서비스무역협정의 틀 속에서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허용한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일부 회원들의 특수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정 상황의 경우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수 있고, WTO의 허가를 얻은 후에는 잠시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날 수 있다. 주요한 예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개발도상국가의 공산품 및 반제품 수출에 대해 특혜조치를 부여하고, 비관세조치상 보다 많은 특혜혜택을 주는 차별대우를 하는 것

② 자유무역지구, 관세동맹 등에서 규정하는 일부 국가가 향유하는 대우를 WTO의 기타 회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제단일화기구 내부에서 인정되는 대우를 당해 기구의 멤버가 아닌 WTO 기타 회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WTO 회원이 동식물 및 사람의 생명 · 건강 ·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출입에 대해 취하는 보장조치가 있다.

④ 국가안전을 위해 예외가 인정된다. 국가안전이 위협당할 경우 최혜국대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분쟁해결시스템 상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반보조금 · 반덤핑 조치를 포함한 기타 보복조치 등이 있다.

WTO 회원들은 각종의 예외조치를 채택하여 WTO 체제 하에서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지역경제방식으로서 현재 대다수 국가들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

재 이러한 지역경제단일화 방식에 대해 WTO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WTO가 지향하는 “통합되고 보라 존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지역경제단일화는 WTO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경제단일화는 무역증대와 수익제고를 통하여 지역 내의 복리를 발전시키고 역내 정치협력과 제3국과의 협상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내 회원 사이에서 향유하는 특혜일 뿐 전 세계의 무역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차별적 조치의 일종이라고 파악한다.

반면, 지역경제단일화 방식은 관련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최혜국 대우상의 특혜조치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는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견인하게 되므로 WTO의 설립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4. CEPA의 실시

홍콩이 중국에 복귀 된 이후 제정된 「기본법」 제151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협의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정황과 필요성에 근거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에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협의는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앙인민정부는 필요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적당한 안배를 취하도록 수권 · 협조를 하여 기타 관련 있는 국제협의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제협의(國際協議)가 아닌 구제협의(區際協

議)에 대해서는 「기본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CEPA가 발효되기에 앞서 홍콩정부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여 CEPA상의 합작항목이 실현되도록 도왔다. 예컨대, 생산자가 공업무역서(工業貿易署)에 공장등기를 신청하면 홍콩세관(원어: 海關)에서 상품종류 및 생산능력을 조사 · 검토하였다. 또 서비스제공자가 공업무역서에 <홍콩 서비스제공자 증명서(香港服務提供者證明書)>를 신청한 이후 중국의 유관기관에 가서 개업등록 ·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홍콩과 중국을 연결하는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허위보고 · 위증 · 밀수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과 홍콩간의 CEPA에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했던 것은 WTO체제 하에서 중국과 홍콩간의 CEPA의 지위이며, 다음으로는 CEPA로 인해 중국과 홍콩에 초래될 충격 및 그 정치적 영향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했다. CEPA를 통해 중국과 홍콩은 1차적으로 양자간 경제무역 협력관계의 체계화를 이루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국양제'의 틀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도시 중 하나인 홍콩과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 경제협력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분명 하나의 도전이자 혁신이며 모험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과 관련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홍콩의 입장에서 본다면, 홍콩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부분에서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로(大路)를 연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홍콩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단일화 여정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과 기타 국가가 체결한 협의는 모두 홍콩에 미쳐야 한다."는 점은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제3절 CEPA의 내용

1. 개 관

「중국과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CEPA)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6개의 부속문서가 체결되었다.

「화물무역 무관세의 실시에 관하여(關于貨物貿易零關稅的實施)」,

「화물무역의 원산지규칙에 관하여(關于貨物貿易的原産地規則)」,

「원산지증서의 체결 및 조사심의 절차(關于原産地證書的簽發和核查程序)」,

「서비스무역영역의 개방의 구체적 승낙에 관하여(關于服務貿易領域的具體承諾)」,

「'서비스제공자' 정의 및 상관 규정에 관하여(關于'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

「무역투자 간이화에 관하여(關于貿易投資便利化)」이다.

그리고 2004년 10월 27일에는 다시 『「중국과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內地與香港關于建立更緊密經貿關係安排」補充協議』) 및 3개의 부속문서가 체결되었다. 그 부속문서는 다음과 같다.

「홍콩원산의 수입화물에 대해 중국이 무관세를 시행하는 제2기 상품명단(第二批內地對原産香港的進口貨物實行零關稅的産品淸單)」,

「화물무역 특혜조치를 향유하는 제2기 홍콩화물의 원산지표준 표(第二批享受貨物貿易優惠措置的香港貨物原産地標準表)」,

「중국이 홍콩에 대해 개방하는 서비스무역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수정(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

2005년 10월 18일에는 『「CEPA」보충협의 2』(『「內地與香港關于建立

更緊密經貿關係安排」補充協議二』)를 체결하였고, 2006년 6월 27일에는 『「CEPA」보충협의 3』(『「內地與香港關于建立更緊密經貿關係安排」補充協議三』), 2007년 6월 29일에는 『「CEPA」보충협의 4』(『「內地與香港關于建立更緊密經貿關係安排」補充協議四』), 2008년 7월 29일에는 『「CEPA」보충협의 5』(『「內地與香港關于建立更緊密經貿關係安排」補充協議五』), 2009년 5월 9일에는 『「CEPA」보충협의 6』(『「內地與香港關于建立更緊密經貿關係安排」補充協議六』)을 체결하였다.

2009년 8월 현재, 중국과 홍콩 간의 CEPA는 본 합의와 6개의 보충협의 및 그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CEPA」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CEPA는 특정조치의 채택을 통하여,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무역 및 투자합작을 강화하고, 쌍방의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쌍방은 ① 쌍방 간의 모든 화물무역의 실질적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감소 또는 철폐 ②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점진적 실현, 쌍방 간 모든 실질적인 차별조치의 점진적 감소·철폐 ③ 무역투자 간편화 촉진이다.

표1. CEPA의 각 단계별 개방과 협력내용[176]

단계	실시일자	화물무역내용	서비스무역내용
제1단계	2004.1.1.	제1차 374 종류의 홍콩생산품은 무관세로 중국에 수입	관리자문, 회의전람, 광고, 회계, 부동산건축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의료 및 치과, 소매, 물류, 화물대행, 창고저장, 운수, 관광, 시청서비스, 법률, 은행, 증권, 보험, 부가가치전신 서비스 등 18개 서비스업종 개방

176) 歐江波·伍慶, "CEPA實施以來粵港服務業合作狀況與改進策略", SOUTH CHINA REVIEW(September, 2008), 51면.

단계	실시일자	화물무역내용	서비스무역내용
제2단계	2005.1.1.	총 713 종류의 홍콩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무관세 시행	공항서비스, 문화오락, 정보기술, 직업소개소, 인력중개기구, 특허대리, 상표대리, 전문기술자격고시 등 8개 서비스 영역 추가 개방
제3단계	2006.1.1.	모두 1,370 종류의 상품에 대해 CEPA 원산지규칙 합의가 달성되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됨	23개 항목의 개방조치 도입, 10개 서비스업종에 포괄
제4단계	2007.1.1.	CEPA 원산지규칙 합의가 체결된 생산품이 37종류 증가하여, 모두 1,407 종류가 됨	15개 항목의 개방조치 증가, 0개 서비스업종에 포괄. 홍콩주민이 자영업을 개설하는 방면에 5개 경영범위 추가개방.
제5단계	2008.1.1.	CEPA 원산지규칙 합의가 체결된 생산품이 모두 1,465 종류로 됨.	40개 항목의 개방조치 추진, 28개 서비스영역 포괄. 그 중 11개는 새로 증가된 서비스 영역임. 즉 건축물청결 서비스, 시장조사연구 서비스, 관리자문 관련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촬영서비스, 체육서비스, 양로서비스, 인쇄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환경서비스, 공용사업서비스.
제6단계	2009.1.1.		29개 항목의 시장개방조치를 새로 증대되어 17개 서비스영역을 포괄함.

2. 화물무역 자유화

화물무역자유화는 본래 GATT의 주요 규칙 중의 하나였다. 화물무역자유화를 구현하기 위해 GATT는 체약국 상호 간에 시장개방, 관세 삭감, 수량제한취소 등을 규정하였다. WTO가 성립된 이후에도 GATT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WTO에 가입하기 전에 중국과 홍콩 사이의 화물무역관세는 대등하지가 않았다. 즉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중국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납세가 필요하

였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관세 종합수준이 1992년의 42.7%에서 2004년에는 10.4%로 내려갔으며, 그 중 공산품의 관세는 9.5%로 떨어졌다. 하지만 홍콩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여전히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CEPA의 시행으로 인해서 양 지역 간의 화물무역관세의 비대칭 및 실질적 자유화 문제는 순리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CEPA 제2장에서는 양 지역간 화물무역자유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중국은 2차에 나누어 홍콩이 원산지인 상품의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한다. 2004년 1월 1일부터 수출금액이 비교적 큰 273개 세목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시행한다.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273종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를 시행한다.

② 중국은 홍콩이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할당하지 않는다.

③ 중국과 홍콩의 일방은 상대방이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④ 중국과 홍콩의 일방은 상대방이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대해 반보조금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⑤ CEPA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 상품의 수입이 격증하고, 수입당사자의 동종 상품생산에 엄중한 손해 또는 엄중한 손해의 위협을 조성하면, 수입 당사자는 서면방식으로 수출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상품의 수입특혜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가능한 빨리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룬다.

⑥ 엄격한 원산지증서 발급절차 및 심의조사 관리감독체계를 제정·시행하여, 홍콩 원산인 상품이 중국에 수출될 때 무관세 특혜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이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화물무역자유화에 있어서는 중국과 홍콩 각기 상대방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와 반조조금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중국은 홍콩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물무역자유화에서는 중국이나 홍콩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가. CEPA의 원산지 규칙[177]

(1) 원산지규칙의 성격

원산지규칙(rules of origin)은 어느 한 국가 또는 지구(地區)를 화물원산지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화물원산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원산지규칙은 어느 국가가 관세율, 수량제한(쿼터제), 반덤핑·반보조금 조치 등 무역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된다.

지역무역협정이 성행하기 전인 1980년대 이전에도 원산지규칙은 UN·GATT와 같은 국제기구나 각국들이 수출입무역에 대해 통계·분석을 하면서 화물의 원산지·이전 유통지·최종수입소비지 등으로 구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심화됨에 따라 원산지규칙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큰 관련이 있는 경제대책으로서의 문제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원산지규칙은 분명한 정책조절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무역정책상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CEPA의 원산지규칙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드러난다.

177) 索光擧, 앞의 책, 44-70면

첫째, CEPA의 원산지규칙은 차별적 무역정책을 실시하는데 이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국과 홍콩의 생산자들이 이익을 얻는다. CEPA에서 중국은 2년 내에 홍콩 원산의 모든 화물의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기로 양허하였으며, 홍콩이 원산지가 아닌 화물은 이러한 무관세의 혜택을 향유할 수가 없다.

둘째, 특정상품에 대해 특수한 원산지규칙을 제정함으로써 CEPA는 중국과 홍콩간의 중간상품 및 최종상품의 무역형태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이며 국제 직접투자의 흐름과 투자액에 변화를 줄 것이다.

셋째, CEPA의 원산지규칙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이다. 기타 국가의 동일한 상품이나 경쟁상품이 주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서 중국과 홍콩의 공업생산품에 대한 보호효과가 나타난다.

CEPA에 의거하여 무관세를 향유하는 화물은 홍콩이 원산지인 화물에 한정되며,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이나 홍콩에서 간단한 가공을 거친 화물의 경우 원산지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관세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다. CEPA상의 원산지규칙은 지역무역협정상의 원산지규칙이며 우대혜택을 주는 원산지규칙에 속한다. 따라서 CEPA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당부분 원산지규칙이 완비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예컨대 원산지 표준이 아주 낮을 경우 중국이나 홍콩이 아닌 제3자가 홍콩에 공장을 세워 자유무역항(自由貿易港)인 홍콩의 특징을 이용해 중국 시장에 직접 진입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반면 원산지 표준이 매우 높을 때에는 홍콩에서 제조한 상품이라도 원산지규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게 됨으로써 무역자유화나 해외투자유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CEPA의 원산지 규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상품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 외에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매우 뚜렷하다.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칙은 상품의 원산지 확인, 무역편중, 무역보호, 직접투자유치 등의 기능을 가진다. CEPA의 원산지 규칙 또한 물론 이러한 기능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외부자본의 홍콩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고 홍콩 제조업의 재(再)진작을 돕는 것이다.

홍콩의 현재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그 결과 홍콩경제는 외부적 요소의 영향에 쉽게 노출되고 경제안정에도 장애가 된다. 이에 홍콩은 제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CEPA에서는 원산지 규칙을 제정할 때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이용하였다. CEPA의 원산지 규칙에서는 가공절차표준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자가 홍콩에서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실질적 투자를 하여 홍콩에서 특정 가공절차를 완성하면 홍콩원산지 자격을 취득한다.

둘째, 홍콩의 현실을 고려하되 국제관례를 존중하였다.

교토의정서[178]가 나온 이후 각국이나 각 지역은 나름의 사정에 맞

178)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COP3) 제3차 당사국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게 조정하였을 뿐 거의 대부분이 세목번호변경 표준, 부가가치 표준, 가공공정 표준을 원산지규칙에 채택하였다. CEPA 역시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따랐다.

한편 홍콩은 자연자원이 매우 빈약하다. 홍콩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화물은 방직품, 의류, 보석장식, 화장품 등인데, 이들 상품은 모두 원료를 수입해 홍콩에서 가공 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진 홍콩에서, 만약 부가가치기준을 위주로 하여 홍콩산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한다면 당초에 홍콩 원산지규칙에 따라 홍콩원산자격을 획득하였던 수많은 상품들이 앞으로는 수입원가비중이 커지거나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가공한 비중이 적어 홍콩원산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써 무관세로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입장에서는 현지에서 부가가치가 증대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제조 · 가공공정을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홍콩의 제조업 발전에 더욱 유리하다.

CEPA에서 무관세를 향유할 대상으로 제1차로 규정한 273종의 상품 중 완전획득 표준을 채택한 것은 7개 세목번호이며, 제조 · 가공공정을 표준으로 삼은 것은 183개, 세목번호변경 표준을 채택한 것은 46개, 가공 공정표준 및 종가백분비의 혼합표준을 채택한 것이 38개이다. 가공 공정표준을 채택한 상품이 221개 에 달하여 1차 무관세 향유 상품의 81%를 차지하였다.

또한 CEPA는 부가가치 표준을 규정할 당시 종가백분비를 30%로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 Wiki 백과 참조 (http://ko.wikipedia.org/wiki/%EA%B5%90%ED%86%A0_%EC%9D%98%EC%A0%95%EC%84%9C).

확정하였다. 이 수치는 다른 지역무역협정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기준인데, 이렇게 기준을 낮춘 주된 이유는 생산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홍콩의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다. CEPA 부속문서 2에서는 부가가치 증대부분에 대해서 원료가치, 조립부품가치, 노동가치, 상품개발지출가치라는 4개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홍콩의 노동력 원가가 비교적 높으며, 상품개발지출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30%의 부가가치증대 요건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부가가치증대 비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홍콩의 제조업체는 실리를 얻게 되며, 동시에 홍콩이 원산지가 아닌 화물이 불법적으로 우대혜택을 받고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세수(稅收)의 탈루를 막고, 중국 산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⑵ CEPA에서 정한 원산지 표준

CEPA의 부속문서 2에서는 홍콩이 원산지인 화물의 인정표준에 대해 각국 및 기타 지역무역협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산지표준인 '완전획득표준'과 '실질적 가공' 표준을 채택하였다. 즉 부속문서 2의 제2조에서는 일방이 직접 다른 일방으로부터 수입하여 CEPA에 따라 무관세를 실시하는 화물은

(ⅰ)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은 그 일방이 원산지이며

(ⅱ)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이 아닌 경우는 당해 일방에서 실질적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원산지로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가) 완전 획득 표준

완전 획득이란 완전히 자국의 원료 · 부품만을 사용하여 제조 생산한 상품을 말하며, CEPA에서는 완전히 홍콩에서 생산한 제품과 재차의 생산 가공을 거쳐 획득한 상품을 의미한다.

CEPA 부속문서 제3조에 의하면,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이라 함은 다음을 가리킨다.

① 당해 일방에서 채취 또는 추출한 광산품
② 당해 일방에서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이나 식물상품
③ 당해 일방에서 출생하고 사양(飼養)한 동물
④ 당해 일방에서 위 ③호 소정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⑤ 당해 일방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상품
⑥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중국의 선박인 경우)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를(홍콩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 게양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어류 및 기타 해산품
⑦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중국의 선박인 경우)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를(홍콩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 게양한 선박상에서 본조 제⑥호 소정의 상품에 가공을 하여 획득한 상품
⑧ 당해 일방에서 수집한 것으로, 당해 일방의 소비과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물품(원어: 廢舊物品)
⑨ 당해 일방에서 가공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재료(원어: 廢碎料)
⑩ 본조 제①호 내지 ⑨호의 상품을 이용하여 당해 일방에서 가공하여 얻은 상품

다만 가공·처리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완성한 것인지 아니면 상호결합하여 완성한 것인지를 여부를 불문하고 (ⅰ) 화물의 운수·저장을 위해 진행한 가공이나 처리 (ⅱ) 화물적재운송의 편의를 위해 진행한 가공이나 처리 (ⅲ) 화물판매를 위해 진행한 포장·전시 등의 가공이나 처리아래에서 규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은 모두 미세가공처리를 한 것으로 보며, 화물이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실질적 가공 표준

일방에서 완전히 취득한 화물이 아니면, 일방 경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후에는 당해 당사자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다. CEPA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원어: 製造或加工工序)"[179], "세목번호 변경(원어: 稅號改變)"[180],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 "기타

179) 특정공정기준 (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 상품의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특정 생산공정이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예컨대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 TV는 브라운관(CRT) 생산국을 원산지 국가로 하는 것이다. 단,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의한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제조나 공정이 있어야 원산지를 부여 하는 방식(positive test rule)과 일정한 제조나 공정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negative test rule)이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참조 (http://cert.korcham.net/certweb/html/origin/co03_02.jsp).

180) 세목변경기준 (the Change in Tariff Heading Method, CTH) :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때 세번변경의 기준은 대개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를 사용하며, CTH 기준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단,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의한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CC (Change of Chapter) : HS 2단위 변경,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HS 4단위 변경,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HS 6단위 변경 등이 있다.

표준" 또는 "혼합 표준"을 사용하여 실질적 가공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①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은 일방의 경내에서 가공을 한 후 얻은 화물에 기본적 특징을 부여한 주요 제조공정 또는 가공공정을 가리킨다.

② "세목번호 변경"은 일방의 원산이 아닌 재료가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가공을 거쳐 생산된 후에, 획득한 상품이 「상품명칭 및 코드번호 협조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중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고 또한 당해 일방 이외의 국가·지구에서 더 이상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를 변경하는 어떠한 생산·가공·제조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③ "종가백분비"란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원료·조립부품·노동가치·상품개발지출가치의 합계가 완제품수출의 FOB 가격 대비 30% 이상이고, 또한 최후의 제조·가공공정이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④ "기타 표준"이란 상술한 "제조·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이외에 쌍방이 채택하기로 동의한 원산지확정방법을 가리킨다.

⑤ "혼합 표준"이란 상술한 두 개 이상의 표준을 동시에 사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규칙 이외에, CEPA

상품 분류에 있어 HS 코드가 가장 널리 쓰이며, 행정적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는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참조 (http://cert.korcham.net/certweb/html/origin/co03_02.jsp).

부속문서 2의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일반적인 원산지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6조에 따르면 간단한 희석·혼합·포장·병에 담는 포장(원어: 裝瓶)·건조(원어: 干燥)·조립(원어: 裝配)·분류·장식은 실질적인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기업이 생산하거나 가격을 정하는 조치의 목적이 본 부속문서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역시 실질적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화물의 생산·측정시험·검사에 사용되지만 화물에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은 상품, 화물의 유지보호·조작에 속하는 설비, 생산과 관련 있는 건축물 등 간접 원재료에 대한 규정이다.

즉 제7조에 따르면 화물원산지를 확정할 때는 화물제조과정 중에 사용한 에너지·공장·설비·기기·공구의 산지(産地)는 고려하지 않으며, 또한 제조과정 중에 사용되었지만 화물의 성분 또는 구성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재료의 산지도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제8조에 의하면, 화물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정황은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는다.

(ⅰ) 적재한 화물을 따라 함께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에서 당해 화물과 함께 분류한 포장·포장재료·용기

(ⅱ) 화물과 함께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에서 당해 화물과 함께 분류한 부속품·예비품·공구·소개설명자료

⑶ 원산지증서의 발행 절차

(가) 발급기관

CEPA 부속문서 3의 「원산지증서의 발행 및 심의조사 절차(關於原産地證書的簽發和核查程序)」에서는 홍콩원산지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CEPA상의 무관세를 향유하는 홍콩 원산의 화물은 중국에 수출하기 전에 수출자 또는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홍콩의 증서발급기관에 원산지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홍콩이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홍콩원산지증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공업무역서(工業貿易署)와 홍콩법례(香港法例) 제324장 「비정부 발급 원산지출처증서 보장조례(非政府簽發産地來源證保障條例,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에서 인정한 '인가기구(認可機構, approved body)'이다. 동 조례상 인정된 인가기구로는 홍콩중화제조상연합회(香港中華廠商聯合會), 홍콩공업총회(香港工業總會), 홍콩총상회(香港總商會), 홍콩인도상회(香港印度商會), 홍콩중화총상회(香港中華總商會)이다.[181]

홍콩의 증서발급기관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해관총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서의 양식은 쌍방 협의로 정하고, 홍콩 공업무역서는 원산지증서의 인장(印章) 양식을 해관총서에 보내 비치하여야 하며, 원산지증서 인장 양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즉시 해관총서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181) 香港法例 第324章 「非政府簽發産地來源證保障條例」 附表 참조

(나) 증서작성

홍콩 증서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는 다음의 사항이 나타나야 한다.

① 원산지증서에는 유일한 일련번호, 지정된 단일한 화물도착항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원산지증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의 8자리 등급의 세목번호에 따라 상품의 중국 협력제작 일련번호(産品內地協制編號)를 기재한다.

③ 원산지증서는 부속문서 3이 표1의 서식에 따라 A4 용지에 인쇄하며, 중문(中文)을 사용한다(원산지증서 양식은 아래의 그림 1을 참조).

④ 원산지증서의 계량단위는 적용되는 실제 거래가 성사된 계량단위에 따라 기재한다.

(다) 원산지증서의 효력

① 원산지증서 1부는 동시에 중국에 들여온 한 무더기의 화물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② 1부의 원산지증서에서 포괄할 수 있는 화물은 CEPA 부속문서 1의 표1에 열거된 화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5개 항목 8자리 세목(稅目)을 넘지 않는 화물이다.

③ 원산지증서는 지우고 고치거나 중복 날인(원어: 疊印)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이 필요한 때에는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증서의 유효기간은 증서발급일로부터 120일이다.

⑤ 원산지증서가 도난·유실·훼손된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기업은 원(原)증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홍콩의 증서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원증서의 부본(副本) 1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부본에는 “실증을 거친 진실한 부본(經證實的眞實副本)”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원증서가 이미 사용되었다면 나중에 발급된 부본은 무효로 되며, 나중에 발급된 부본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원증서가 무효가 된다.

(라) 제출 및 조사 관련 절차

① 중국과 홍콩 쌍방은 연락망을 통한 조사방식을 사용하여 무관세를 향유하기 위한 홍콩화물의 원산지 신청에 대해 관리를 하고, 전용회선을 통하여 전자데이터방식으로 다음의 정황을 해관총서에 전송한다.

(ⅰ) 2004년 1월 1일부터는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홍콩공업무역서는 전(前) 분기에 무관세를 향유한 홍콩화물의 생산 및 증서발급 자료를 해관총서에 전송·비치하여야 한다.

(ⅱ) 홍콩의 증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서를 발급한 후, 홍콩 공업무역서는 즉시 원산지증서의 기본상황(일련번호, 수출자 명칭, 공장등기번호, 도착항, 상품의 중국 협력제작 일련번호, 화물명칭, 계량단위 및 수량, 금액 및 화폐제도, 홍콩 증서발급기관 명칭 등) 정보를 전용회선을 통해 해관총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ⅲ) 신고지의 해관은 홍콩 공업무역서에서 전송한 전자자료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서와 다른 점이 있는지를 대조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기재(원어: 核注)하여 홍콩 공업무역서에 보낸다.

(ⅳ) 쌍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홍콩원산의 화물을 수입할 때 수입자는 수입화물에 대해 무관세를 향유하려면 신고지의 해관에 이를 표명하고 원산지증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증서를 제출받은 신고지 해관에서는 오류가 있는지를 대조확인한 후 수입화물에 대해 무관세를 누릴 수 있는 대우를 허가한다.

③ 사정상 연락망을 통한 대조확인을 할 수 없으면 수입자의 요청에 응하여 신고지 해관은 수입수속 및 화물통관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CEPA의 적용이 없는 수입관세율에 따라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보증금을 징수한 후, 신고지 해관은 당해 화물이 통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원산지증서의 상황을 대조확인하고 대조확인결과에 근거하여 보증금반환수속 또는 보증금의 수입관세로의 전환 수속을 즉각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신고지 해관이 원산지증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해관총서 또는 기타 수권 받은 해관을 통하여 홍콩 해관에 심사협조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요청을 받은 홍콩 해관은 청구를 받은 후 90일 내에 회답을 하여야 한다.

⑤ 홍콩 해관이 90일 내에 화물원산지 증서와 관련한 심사와 확인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관총서는 신고지 해관에 수입수속과 화물통관 처리를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화물에 대해서는 CEPA의 적용이 없는 수입관세율에 따라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신고지의 해관은 홍콩 해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수입관세로 전환한다.

(마) 기타 사항

① 쌍방은 CEPA 부속문서 2의 원산지규칙의 집행과 부속문서 3에서 필요로 하는 상호 간의 행정협조를 해관총서와 홍콩 해관이 서명한 「상호협조합작안배(合作互助安排)」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홍콩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원산지정보, 원산지증서 내용의 진위, 무관세를 누리는 홍콩 화물이 원산지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부속문서 3의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에 유용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쌍방 동의하에 상대방 지역에 사람을 파견하여 현지 방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수입화물의 원산지심사와 관련하여 교류한 자료에 대해 쌍방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또한 원산지증서를 신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누설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법절차에서 제공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2. 상품별 원산지증서통계[182]

(2009년 9월 30일 현재)

	상품유형	원산지증서 신청 누계	승인을 받은 원산지증서 누계
1	식품, 음료수	12,972	12,739
2	식품찌꺼기(원어: 食品殘渣) 및 동물사료	86	84
3	광산품	1	-
4	화공(化工)상품	2,823	2,739
5	약용 및 간병용품	6,112	6,018
6	착색제(원어: 著色劑)	1,674	1,642
7	화장품	75	66
8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7,490	7,409
9	피혁 및 모피제품	83	74
10	종이제품 및 인쇄품	1,654	1,591
11	방직 및 기성복	13,044	12,527
12	유리 및 유리제품	2	-
13	장식 및 귀금속	487	482
14	금속 및 오금(五金)[183] 제품	2,186	2,162
15	기기(機器) 및 기기용구	25	24
16	전기 및 전자제품	767	743
17	광학・카메라・영화 기기 및 부품	204	197
18	시계 및 부품	336	322
19	가구	1	1
20	완구・게임・운동 용품	1	1
21	기타	5	5
	소계*	49,553	48,351

주(註) : (*) - 1부의 원산지증서가 동시에 1개 유형 이상의 상품을 포괄하는 경우 합계 수치는 모든 유형별 원산지증서의 수와 다를 수 있음.

182) 홍콩 공업무역서(工業貿易署) ->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 -> 統計及研究 참조 (http://www.tid.gov.hk/tc_chi/cepa/statistics/cocepa_statistics.html).

183) 금・은・동・철・주석

그림1. 원산지증서[184]



表格 1

出口商 (名稱及香港地址) Exporter (full name and Hong Kong address)

證書編號 CERTIFICATE NO.

簽證日期 DATE OF ISSUE

證書有效截止日期 VALID UP TO

收貨人 (名稱及內地地址) Consignee (full name and Mainland address)

原 產 地 證 書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原產地證書發證機構標誌】

離港日期 Departure Date

工廠登記編號 Factory Number

船隻／飛機／火車／貨車編號 Vessel/Flight/Train/Vehicle No.

裝貨地 Place of Loading

內部專用 For Internal Use Only

到貨口岸 Port of Discharge

包裝標誌，數量及貨櫃編號；包裝件數及種類；貨物摘要及產品內地協制編號；離岸價(港元) Marks, Nos. and Container No.; No.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and Mainland HS Code; FOB value (HK$)

數量（計量單位） Quantity (Quantity Unit)

商標名稱或標籤 Brand Names or Labels (if any)

[原產地證書採用淺綠色紙質文本，
紙張上已加入發證機構防偽水印。]

本人謹證明以上描述之貨物均符合《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下貨物貿易的原產地規則的要求。
I HEREBY CERTIFY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ULES OF ORIGIN FOR TRADE IN GOODS UNDER CEPA.

【原產地證書發證機構印章】

【原產地證書發證機構簽署】

版 權 所 有 COPYRIGHT RESERVED

184) CEPA 附件3 表1 참조

나. 원산지규칙의 문제점

(1) 우회덤핑 문제

20세기 중반에 출범한 GATT 체제는 공평한 국제무역질서를 창설하고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줄곧 노력하였다. 각 체약당사자들의 공동노력 하에 수차례의 회담을 한 결과 관세장벽은 크게 낮아질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무역량이 계속 증대됨에 따라서 각국 간의 무역마찰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유럽과 미국 등은 비관세장벽 조치를 연이어 강화하였는데 특히 반덤핑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반덤핑조치가 계속 강화되면서 수출상인들은 수입국이나 제3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통하여 반덤핑조치를 우회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우회방법이 이용되었다.

① 수입국 경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수출상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품의 부품을 수입국에 수출하고, 수입국에서 조립한 후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각국 세관의 세칙(稅則) 분류상 부품과 완성품이 동일 세칙에 속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반덤핑세의 부과를 피하는 것이다.

② 제3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즉 수출상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품을 제3국에서 완성한 후 당해 완성품을 제3국 상품으로 수입국에 수출한다.

③ 상품의 가벼운 변형(minor alteration) 방식이다. 수출상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품에 대해 기능과 무관한 부분에 변형을 가함으로써(예컨대 외형의 변형) 수입국의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대상과는 구분이 되게 하여 반덤핑세의 부과를 피하는 방식이다.

④ 사후 개발 방식이다. 즉 수출상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품에 대해 기능적인 개조를 함으로써 당초 반덤핑조사 기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으로 만든다.

수출상은 이러한 우회방법을 이용하여 수입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수입국의 정당한 무역이익에 손해를 준다. 따라서 이러한 우회행위를 제한하고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하였고, 세계 각국은 반덤핑법 내에 우회방지조항(anti-circumvention)을 두어 상술한 각종의 우회행위를 제한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공동체(EU)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명 스크루 드라이버 규정이라 불리는 우회덤핑방지규칙을 채택하였는데, 1987년 6월 22일의 1761/87호 조례가 그것이다. 각국은 통상적으로 반덤핑조사 중 확정한 반덤핑세율에 따라 반덤핑세를 징수당한 상품과 관련 있는 수입부품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한 상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한다.

2003년 CEPA가 체결될 당시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0% 정도였는데, CEPA 체결을 통해 중국 원산인 화물을 수입할 경우 홍콩은 무관세를 실시하고 중국 역시 홍콩이 원산지인 273개 세목의 화물에 대해서 무관세를 시행하였다. 또한 273개 세목 이외의 화물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는 무관세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중국과 홍콩은 상호 간의 무역에 있어서 우대혜택을 부여하게 되었지만, 외국의 수출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중국의 반덤핑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는 의미도 된다. 이는 홍콩의 특수한 지위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4.1조와 제4.2조[185] 규정에 따라 중국,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중국 타이베이는

185) 제4조. 세계무역기구의 구조

각각 WTO의 각료회의 및 일반이사회에 참가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예속 받지 않으며 각자 중국대륙지구, 홍콩특구, 마카오특구, 대만지구의 경제적 이익을 대표한다. 이렇듯 WTO체제하에서 하나의 국가가 4개의 의석을 가지는(원어: 一國四席) 특수한 상황이 되었다. WTO 체제하에서 중국과 홍콩 간의 무역관계는 실질적으로는 평등한 2개 관세지역 간의 관계인데, 외국 수출상인들은 CEPA를 이용하여 홍콩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 시장에 덤핑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WTO 규칙을 십분 활용한다는 기초위에서 CEPA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CEPA 규정은 WTO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WTO 협의는 주협의 및 17개의 부속협의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회원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WTO의 여러 규칙 중 비차별원칙은 그중에서도 기본 원칙의 하나이며 최혜국대우와 국민대우원칙이 이에 포함된다. WTO 가입당사자들은 WTO에 가입할 때 WTO 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전체로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차별원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WTO 회원으로서 중국과 홍콩은 비차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홍콩에는 반덤핑법이 없다. 또한 중국의 「반덤핑조례(反傾銷條例)」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덤핑은 수입상품의 수량이 격증하는 것을 제어하고 경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

1.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개최되는 각료회의가 설치된다.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료회의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요건에 따라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2.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일반이사회가 설치된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또한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제7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승인한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WTO에서 그 회원에게 수권(授權)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무역 주체는 반덤핑의 법률체계를 갖고 있는데 반해, 홍콩은 오래 전부터 자유무역항이었기에 반덤핑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대외무역법」이 있는데 제69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단독 관세지역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홍콩에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국무원에서 제정한 「반덤핑조례(反傾銷條例)」에서는 홍콩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반덤핑조례」는 행정법규로서 법률보다는 효력이 낮으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대외무역법」에서 홍콩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이상 그 하위 법규인 「반덤핑조례」 역시 적용이 되지 않고 따라서 우회금지조항 역시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중국과 홍콩은 반덤핑조치를 서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CEPA 제7조의 규정이다.[186] 반덤핑조치는 자국의 경제 및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국제무역질서와 수입국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상인은 홍콩에 반덤핑법이 없고 동시에 중국의 관련 법률이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콩에 덤핑하고 간단한 가공을 거치면 '홍콩 상품'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홍콩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홍콩은 전형적인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로서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 다

186) 제7조 반(反)덤핑조치
쌍방은 일방이 상대방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한다.

만 중계무역이 홍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한편 중국 또한 중계화물의 최대시장이어서 관련 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중계화물 중 약 88%가 중국과 관련이 있고 그 중 약 35%의 중계화물이 중국에서 판매되었다고 한다. CEPA 체결 이후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무역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CEPA의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다수의 외국 상인들이 홍콩에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홍콩에 덤핑매도한 상품들을 이들 홍콩에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직접 중국시장에 보내거나 아니면 약간의 가공을 한 후 중국시장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홍콩은 대표적인 자유항으로서 거의 무역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서 수많은 국제무역화물이 그 중간 유통지를 홍콩에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수출상인들에게는 CEPA의 무관세가 상당한 유혹이 아닐 수 없으며 관세를 절약하기 위해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여 단순가공을 진행하거나 명의만 걸어 놓는 등의 활동을 하게되는 것이다. 결국 CEPA하에서 우회덤핑의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홍콩 원산지 개념요건을 강화하여 CEPA에 무임승차하여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홍콩 회사'와 '홍콩 제조'의 기준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회덤핑이 초래하는 위해를 막는 관건이 될 것이다.

⑵ 개선 방안

첫째, 원산지 인정표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CEPA의 원산지규칙은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판단기준도 매우 복잡하여 중국과 홍콩의 상황에 안성맞춤적인 특성이 부족하다. CEPA 원산지규칙 중에서 「우대조치를 향유하는 화물의 원산지 표

준표(享受優惠措施貨物的原産地標準表)」에서는 '세관수출입세칙(海關進出口稅則)' 8자리 수와 세목(稅目)을 기초로 하여 1차로 세금을 줄여주는 273개 세목 상품의 명칭, 세목번호, 구체적 원산지 표준을 발표하였다. CEPA 원산지표준에서는 현재 홍콩에서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가지고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완전획득 표준을 채택한 것은 7개 세목번호이며, 제조·가공 공정을 표준으로 삼은 것은 183개, 세목번호변경 표준을 채택한 것은 46개, 가공 공정표준 및 종가백분비의 혼합표준을 채택한 것이 38개, 그 밖에 1개의 세목번호는 일부는 완전획득 표준을 채택하고 일부는 혼합표준을 채택하였다. 이상을 보더라도 CEPA에서는 가공공정표준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동시에 세목변경이나 종가백분비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공공정표준은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조작도 용이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객관적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국제적으로 공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국에서 인정한 특정 공정을 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차이가 나기 십상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상품의 생산공정도 바뀌게 된다. 현재 인정되는 특정 공정도 도태되거나 무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자국의 관련 업종에서 특정 공정을 인정하도록 건의한 경우 편향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CEPA 부속문서 2에서 원산지를 인정하는 3가지의 구체적 표준을 확정하기는 했지만 원산지표준·원산지규격·인증 등 방면에서 아직 통일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실질적 변경'의 3가지 표준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대되어야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것인지, 세목번호변경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어느

절차를 거쳐야 중요한 공정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여겨질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누적규칙(cumulation rule)[187]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적규칙에서는 특정제품의 생산이 같은 특혜 대상국들을 거쳐 생산될 때 이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를 인정해 준다. 만일 누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종 생산과정이 발생한 국가에서의 부가가치만이 적용될 것이나, 누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생산과정을 거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모두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것처럼 간주된다. 누적규칙을 이용할 경우 역내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역내 원산의 재료와 중간상품을 사용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상호 간의 무역을 확대할 수 있다.

만약 CEPA에서 원산지의 누적을 인정할 경우, 중국에서 '종가백분비율' 표준을 가지고 홍콩 원산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상품의 일부 원재료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면 이들 원재료는 홍콩의 원재료와 같이 취급됨으로써 30%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홍콩 상품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따라서 홍콩의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관련 상품을 수입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게 되어, 원재료가 풍부한 중국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양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홍콩에서 필요로

187) 누적조항이란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할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누적조항은 FTA 체결국들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역내국간의 경제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원산지 누적조항(Cumulation of Origin)을 이용하면 한국 본사와 현지 생산기지 간에 통합효과(특혜관세 혜택)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체결된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EFTA FTA, 한국-아세안 FTA에서 누적조항이 인정된다. - FTA 포탈 사이트 참조 (http://fta.customs.go.kr/)

하는 중국의 원재료 수요량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자연스레 국외로부터의 수입감소로 이어져서 외국 상인들의 우회덤핑행위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소량표준의 도입이 요청된다.

소량표준은 원재료 · 중간상품을 포함하지 않는 화물이 보다 쉽게 원산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규칙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규칙에서는 백분비율을 7~10%로 하는 소량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넷째, CEPA 원산지표준의 일부 규칙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CEPA 부속문서 2에서는, 제조 · 가공 공정이란 일방의 경내(境內)에서 가공을 한 후 얻은 화물에 기본적 특징을 부여한 주요 제조공정 또는 가공공정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화물원산지의 제조 · 가공 공정을 판단하는 데는 다음의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ⅰ) 일방 경내에서 이루어 질 것 ⅱ) 화물에 기본적 특징을 부여하는 공정일 것 ⅲ) 주요한 공정일 것 ⅰ)의 요건은 확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나 ⅱ)와 ⅲ)의 요건은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홍콩이 강세를 보이는 시계산업의 경우 시계칩은 시계제조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시계제조공정에 있어서 시계칩 제조공정을 주요한 공정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시계칩을 시계틀에 조립장착하는 공정을 주요공정이라고 할지가 의문이다. 기타 컴퓨터, 텔레비전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 밖에 '종가백분비율' 규정 역시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종가백분비를 산출하는 공식 중에 노동가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생산과정에 있어서 어느 비용까지가 노동가치에 산입되는지 불분명하다.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자일 경우, 당해 생산업자가 운용하는 일체의 노동력의 가치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상품을 생산하는데 관련 있는 노동력의 가치만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3. 서비스무역자유화[188]

서비스업은 전 세계무역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GDP에서 일반적으로 60% 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기존 GATT 체약당사자들은 1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비스무역총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면에서 정의하고 있다.[189]

---

188) 索光擧, "CEPA條件下內地與香港法律適用問題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71-93면 요약정리; 慕亞平·李伯僑, 앞의 책, pp. 137~149, pp. 161~170 정리.

189) Article I
Scope and Definition
1. This Agreement applies to measures by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rade in services is defined as the supply of a service:
(a)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b) i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to the service consumer of any other Member;
(c)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d)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f a Member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① 한 회원의 영토로부터 기타 회원의 영토를 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상 국경을 넘은 제공이라고 한다.
② 한 회원의 영토 내에서 기타 회원의 소비자를 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상 경외소비(境外消費)라고 한다.
③ 한 회원의 서비스제공자가 기타 회원 영토 내의 상업존재(commercial presence)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업존재라고 한다.
④ 한 회원의 서비스제공자가 기타 회원 영토 내의 자연인 존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상 자연인 존재라고 한다.

WTO에서 분류하는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이 크게 20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성발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운수, 국가 간 은행 및 국제적 융자기구의 서비스 및 기타 금융서비스, 국제보험과 재보험, 국제정보처리 및 전달, 국제자문업무, 해외공정 하청 및 노무(勞務) 수입, 국제전신서비스, 국제 광고 · 설계, 국제임차, 애프터서비스 · 기술지도 등 서비스, 국제 시청(視聽)서비스, 국제 회계사 ·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문화 · 교육 · 위생의 국제교류서비스, 국제여행, 다국적 상업 도소매 서비스, 전문기술 · 기능의 다국적 훈련, 장기 또는 임시의 국제전람 · 국제회의 서비스, 국제 창고저장 및 포장서비스, 다국적 부동산건축판매 및 물류관리 서비스, 기타 정부 ·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다.

CEPA에서는 중국과 홍콩 간의 서비스업을 21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즉 법률서비스, 회계 · 회계감사(원어: 審計) 서비스, 건축설계 서비스, 공정(工程)서비스, 집중공정서비스, 도시기획 및 풍경조경림 설계 서비스,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의료 및 치과

서비스, 광고서비스, 관리자문서비스, 회의서비스 및 전람(원어: 會展)서비스, 부가가치 전신(원어: 增值電信)서비스, 시청서비스, 소매(원어: 分銷)서비스, 보험서비스, 은행서비스, 증권서비스, 여행 및 여행관련 서비스, 해운 및 보조서비스, 도로운수서비스, 창고저장(원어: 倉儲)서비스, 화물대행서비스, 물류서비스이다.

서비스업에 있어서 중국과 홍콩 사이에는 격차가 매우 크다. 홍콩의 경우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하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의 67%에서 2002년에는 86.3%로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서비스업을 대외개방한 이래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현재 3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한 GDP 증가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CEPA의 실시는 중국-홍콩 간 서비스업의 시행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가는데 좋은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CEPA 부속문서 4(附件四) 표1은 2004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7개 서비스부문을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에게 개방할 것을 양허하고 있다. 그 중에는 상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 대리서비스, 금융서비스, 여행 및 여행관련 서비스, 운수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할 당시 상술한 업종을 대외개방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부 투자방식의 제한이나 지역제한이 있으며 대부분은 모두 과도기를 두고 있다. 예컨대 관리자문 서비스의 경우 WTO에 가입 시 외상(外商)이 합자(合資)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을 허용하였고, 6년 후에 비로소 독자(獨資)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람서비스의 경우는 외상이 중외합자기업(中外合

資企業)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을 허용하였고, 광고서비스는 외상이 독자기업을 설립하는데 4년의 과도기간을 두었고, 부동산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급부동산에는 외상독자기업을 불허하였다.

CEPA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은 협상을 통하여 홍콩이 중국에 대하여 보다 개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정하여 실시하고 구체양허표에 넣기로 하였다.

가. CEPA상 서비스무역의 내용

(1) 시장진입

중국의 서비스무역시장 개방은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다. 중국은 1990년대 이래 서비스무역 입법을 서둘렀으며, WTO 회원이 된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서비스무역총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중화인민공화국 서비스무역 구체 승낙 양허표」에서 승낙한 구체적인 수준·범위·진행정도에 의거하여 서비스무역의 법률·법규를 제·개정하였다.

서비스무역 시장진입에 대한 중국의 주요 규정으로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들에 규정이 있다. 이들 규정은 외자의 형식별로 규정한 것이며 서비스업의 합자·합작·독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홍콩의 경우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수출입무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는다. 홍콩에는 통일적인 대외무역법률이 없기 때문에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14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 지위를 유지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화물무역에 널리 사용되는 관세 등과 같은 조치를 서비스무역 부문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시장진입규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홍콩의 경우 중국에 비해서 제한이 그리 크지는 않다.

CEPA 제11조에 따르면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일방은 첨부문서 4에 열거된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상대방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제한적 조치의 점진적 감소 또는 철폐를 실행한다. 둘째, 일방의 요구에 응하여 쌍방은 협상을 통해 쌍방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한층 더 강화한다. 셋째, 본조 제2호에 근거해 실행하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모든 조치는 첨부문서 4에 보충 기재한다. 그리고 본 부속문서가 미치지 않는 서비스무역 부문이나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WTO 가입 의정서(中華人民共和國加入世界貿易組織議定書)」 부속문서 9 「서비스무역 구체적 승낙 양허표 제2조 최혜국대우면제 목록(服務貿易具體承諾減讓表第2條最惠國待遇豁免淸單)」에 따라 집행한다.

⑵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지역경제집단은 주로 상품에 대해 원산지 규칙을 적용하였으나, 그 이후 세계무역이 급속히 발전하고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우루과이회담에서 관련 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원산지규칙은 점차 서비스무역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무역의 합작을 하는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의 지역집단에서는 원산지규칙을 이용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원산지를 판단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집단의 서비스무역에서 원산지규칙을 도입하는 주된 목

적은 어느 회원이 무역상 우대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함이다.

CEPA에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경제학상의 서비스는 유형의 상품과 대비되는 일종의 특수한 형식의 노동상품이다. 법적 의미에서의 서비스는 어떤 자가 타인에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인데, 의무를 이행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이를 받는 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 지시를 받아 의무이행 · 노동제공을 하며, 그 의지 또한 서비스를 받는 자의 통제 ·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

CEPA는 부속문서 4 「서비스무역영역의 개방에 관한 구체적 승낙(關於開放服務貿易領域的具體承諾)」에서는 서비스의 개방을 하는 구체적 분야에 대한 양허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를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홍콩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본 부속문서 표1에 기재된 구체적 승낙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CEPA에서 말하는 '홍콩의 서비스'와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분된다. 즉 홍콩으로부터 제공되거나 홍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홍콩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며, 각각은 GATS의 "다른 회원의 서비스"의 두 가지 경우에 대응된다.

부속문서 5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에서는 CEPA상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자연인' 또는 '법인'을 서비스제공자로 정하고 있다.

(가) 자연인

서비스제공자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 자연인은 중국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公民)을 가리키고, 홍콩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을 가리킨다. 즉 자연인인 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있어서 중국과 홍콩이 동일하지 않다.

홍콩은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자연인 신분을 확정하는 방법은 중국과 차이가 있다. 다만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의 하나이므로 홍콩주민은 중국국적 외에는 특수한 국적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홍콩법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영주민(원어: 永久性居民)' 개념이다.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조례」에 따르면 영주민만이 비로소 완전한 거류권을 향유한다. 「기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영주민과 비영주민은 권리의무 및 복리처우 방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과 비영주민을 구분하는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홍콩의 영주민과 비영주민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 「기본법」 제24조는 1997년 홍콩이 반환된 이후의 홍콩 영주민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동 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약칭하여 홍콩주민은 영주민과 비영주민을 포함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은 다음과 같다.

①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공민
②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홍콩에서 연속 7년 이상 통상 거주한 중국공민
③ 상술한 ①, ②에서 열거한 주민이 홍콩 밖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④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들어와 홍콩에서 연속하여 7년 이상을 거주하고 홍콩을 영주지로 하고 있는 중국국적이 아닌 사람
⑤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상술한 ④에 열거한 주민이 홍콩에서 낳은 만 21세 미만의 자녀
⑥ 상술한 ①~⑤에 열거한 주민 이외에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에 단지 홍콩에만 거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국의 법률을 보면 자연인을 경계 짓는 기준은 일치하지 않는데, 예컨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和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選擧法)」에서는 국적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에서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CEPA 요건에 부합하는 자연인은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인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3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CEPA는 중국의 자연인에 대해서 국적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총협정(GATS)」 제28조를 보면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190] '사람'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가리키며,[191] '다른 회원의 자연인'은 당해 다른 회원이나 기타 어느 회원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가리키며, 또한 당해 다른 회원의 법률에 의거하여 (ⅰ) 당해 다른 회원의 국민이거나 또는 (ⅱ) 당해 다

190) (g) "service supplier" means any person that supplies a service;
191) (j) "person" means either a natural person or a juridical person;

른 회원의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192]

이상을 보면 「서비스무역총협정(GATS)」은 자연인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다른 회원의 자연인'은 당해 다른 회원의 법률에 의거할 때 그 회원의 국민이거나 또는 그 회원의 영주권이 있는 자연인일 것을 요구한다. 당해 회원에 국민이 없거나 또는 「WTO협정」에 가입할 당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있어서 영주민에 대한 대우와 국민에 대한 대우를 실질적으로 같이 대우하기로 통지한 경우에 영주권 기준을 이용한다. 홍콩의 경우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기에 국민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연인의 신분을 확정할 때 영주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CEPA와 GATS의 규정은 일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회원의 자연인'은 반드시 다른 회원이나 기타 회원 영토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GATS의 규정에 따를 경우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자연인은 반드시 중국공민이거나 홍콩 영주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홍콩 또는 기타 WTO회원의 영토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점에 대해 CEPA는 신분에 대한 요건만을 규정할 뿐이며 거주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CEPA의 규정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2) (k) "natural person of another Member" means a natural person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Member or any other Member, and who under the law of that other Member:
(i) is a national of that other Member; or
(ii) has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in that other Member, in the case of a Member which:

(나) 법인

CEPA 부속문서 5에 따르면 법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크게 법률서비스제공자와 비(非)법률서비스제공자로 구분된다. 이중 법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비(非)법률서비스제공자에 비해서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

법인의 구분에 있어서 중국 · 홍콩의 법률제도는 CEPA와 차이가 있다. 중국 「민법통칙(民法通則)」 제36조를 보면 법인은 민사권리능력 및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하고, 법에 의거하여 민사권리와 민사의무를 독립적으로 향유하는 조직이다. 또한 법인은 독립하여 민사책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의 법률에서는 법인의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립등기지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회사법(公司法)」 제192조는 "본법에서 외국공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외에서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96조에 따르면 외국회사가 중국 경내에 설립한 지사는 중국법인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통칙」 제41조 제2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회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 법인요건을 갖추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심의비준을 거쳐 등기하면 중국법인의 자격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홍콩 역시 법인의 신분은 설립등기지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회사조례(公司條例)」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1명 또는 1명 이상의 자는 어떠한 합법적 목적을 위하여 조직정관상에 서명하고 본 조례 중 등기에 관한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 단체로서의 지위를 구비한 유한법률책임회사나 무한법률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홍콩법률상으로는 무한책임회사가 존재하는데 중국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CEPA는 법인에 대해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인이란 중국이나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된 법률실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그 소유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정부인지 여부와도 관계없고, 회사·기금·조합기업·합자기업·독자기업·협회 등을 포괄한다. CEPA에서 이렇듯 중국이나 홍콩의 규정과 달리 규정을 둔 이유는 법인의 정의규정은 단지 CEPA상의 우대혜택을 향유하는 법인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지 법인의 국적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홍콩법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새로운 법적 정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CEPA상 홍콩회사의 자격을 적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의 범위에 대해 CEPA 규정이 비록 폭넓게 정의하고 있긴 하지만 첫째 요건은 바로 중국 혹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설립된 법률실체여야 하므로 회사·기금·조합기업·합자기업·독자기업·협회인지는 중국이나 홍콩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⑶ 법인인 서비스제공자의 성립 기준

자연인의 국적이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반면 법인의 국적을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이에 CEPA 역시 홍콩의 법인 서비스제공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설립등기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업무집행 현지화 기준으로 나뉜다.

(가) 설립등기지 기준

CEPA 부속문서 5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에서 등록 혹은 설립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3~5년 이상 종사하여야 한다. 이는 설립등기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업의 신분을 확정함에 있어 설립등기지를 표준으로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칙이다. 역내(域內)에서 등기한 서비스제공자는 영업 또는 업무집행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설립등기지 기준에 부합한다. 역내의 일반 서비스제공자는 현지에서 등록한 공상영업허가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기타 서비스제공자는 현지 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특정 업종에 대한 업무집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의 전문 서비스제공자는 현지에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무역총협정(GATS)」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CEPA의 설립등기지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GATS 제28조 (m)항에 따르면,[193] '다른 회원의 법인'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① 당해 다른 회원의 법률에 따라 구성(constitute) 혹은 조직(organize)되고 당해 다른 회원 또는 기타 회원의 영토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활동(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에 종사하는 법인

② 상업존재(commercial presence)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193) (m) "juridical person of another Member" means a juridical person which is either:
(i) constituted or otherwise organized under the law of that other Member, and is engaged in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or any other Member; or
(ii) in the case of the supply of a service through commercial presence, owned or controlled by:
1. natural persons of that Member; or
2. juridical persons of that other Member identified under subparagraph (i);

경우에는 ⅰ) 당해 회원의 자연인이 보유·지배하는 법인이거나 ⅱ) ⅰ)호에 따라 확인된 당해 다른 회원의 법인이 보유·지배하는 법인.

즉 GATS는 설립등기지와 자본지배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하여 법인신분을 확정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여기서 자본지배기준의 경우에는 자연인이 지배하거나 법인이 지배하는데, 주주인 법인의 국적은 역시 설립등기지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하면, 법인이 다른 회원국에서 성립되거나, 당해 다른 회원의 자연인이 보유·지배하거나, 다른 회원국에서 성립한 법인이 보유·지배하는 경우는 모두 '다른 회원의 법인' 요건을 충족한다.

GATS 제28조 (g)항은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각주 규정을 보면, "서비스를 법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지사나 대표사무소와 같은 기타 형식의 상업존재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서비스 제공자는 본 협정상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한 대우를 그러한 상업존재를 통하여 부여받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94] 이러한 주석이 의미하는 것이 GATS의 우대조치를 향유하는 범위가 상응하는 회원국 경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회원국 경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법인의 지사·대표처 등 형식의 상업존재도

194) Where the service is not supplied directly by a juridical person but through other forms of commercial presence such as a branch or a representative office, the service supplier (i.e. the juridical person) shall, nonetheless, through such presence be accorded the treatment provided for service suppliers under the Agreement. Such treatment shall be extended to the presence through which the service is supplied and need not be extended to any other parts of the supplier located outside the territory where the service is supplied.

포괄한다는 것인지가 의문이지만,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주석은 비록 법인의 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을지라도 당해 법인이 우대혜택을 받는 요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 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혜를 향유하는 것은 여전히 요건에 부합하는 법인이며 지사는 본사의 법인격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지에서 혜택을 향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CEPA에는 이러한 주석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CEPA는 양자간 문서로서 그 혜택은 상대방에게만 부여하는 것이기에 사정이 간단하며, 전술한 지사는 홍콩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률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195]

CEPA 제12조 제2항을 보면 (중국이나 홍콩이 아닌) 기타 WTO 회원의 서비스제공자는, 만약 (중국이나 홍콩의 어느) 일방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그 일방 내(內)에서 부속문서 5에 규정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CEPA하에서 당해 일방에게 부여한 서비스제공자의 혜택을 향유할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이 조항은 GATS 제5조 제6항을 차용한 것인데, GATS 제5조 제6항은 "어느 다른 회원의 서비스제공자가 제1항 소정의 협정참가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면 본 협정에서 부여한 대우를 향유할 권한을 가지며, 당해 서비스제공자가 그 협정참가자의 영토 내에서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면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96] 그리고 제5조 제1항은 "본 협정은 어느 회원이 협정참가자들 간에 서비

195) 慕亞平 · 李伯僑, 앞의 책, 145면

196) A service supplier of any other Member that is a juridical person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 party to a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entitled to treatment granted under such agreement, provided that it engages in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to such agreement.

스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협정에 참가하거나 체결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한다. CEPA는 바로 이 조항에서 가리키는 성격의 협정이기 때문에 동 조항은 CEPA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GATS 제5조 제6항에서 '다른 회원의 서비스제공자'가 관련 자유무역협정 당사자의 법률에 의거해 설립한 법인이라면 동일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고 특히 강조한 까닭은 바로 GATS의 정의에서 이미 '설립등기지'와 '자본통제지'라는 표준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어느 회원국에서 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다른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조 제6항은 우대혜택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표준으로서 등기설립지를 통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특정 자유무역협정하에서 우대혜택을 향유하는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자본통제표준에 따라 확정한 기타 WTO 회원의 서비스제공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대혜택을 향유하는 서비스제공자를 협정참가자의 법률에 의거해 설립한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술하였듯이 CEPA 부속문서 5 제2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서비스제공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은 중국이나 홍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률실체이다. 그렇다면 내지 또는 홍콩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기만 하면 CEPA의 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부합한다. 따라서 CEPA 제12조 제2항에서는 '기타 WTO 회원의 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중복되는 규정으로서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197]

197) 慕亞平·李伯僑, 앞의 책, 146면

(나) 업무집행 현지화 기준

전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현지화는 매우 중요하여 업무집행의 현지화를 법인신분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현지에 등록한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경우 해외의 법률사무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현지의 업무집행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수가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률사무소로 평가되지 못한다. 그 외에도 의사, 설계사, 평가사 등의 전문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단체의 경우 그 업무집행자격을 가지는 자의 50% 이상이 현지 인력이고 현지의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역내(域內) 전문서비스 단체로 인정된다.

「서비스무역총협정(GATS)」에서는 법률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업무집행 현지화 기준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CEPA의 경우 법률서비스 개방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법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현지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법률서비스부문 중 부속문서 4(즉 「서비스무역 분야 개방의 구체적 승낙에 관하여(關於開放服務貿易領域的具體承諾)」)에 있는 관련 서비스를 홍콩변호사사무소가 중국에서 제공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법례에 근거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유효한 상업등기를 취득한 홍콩변호사 사무소이어야 한다.

② 관련 변호사사무소의 독자(獨資)경영자 및 모든 조합원은 홍콩에서 등록한 개업변호사이어야 한다.

③ 관련 변호사사무소의 주요 업무범위는 홍콩에서 홍콩 현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관련 변호사사무소 또는 그 독자(獨資)경영자, 또는 조합원은 법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관련 변호사사무소는 홍콩에서 3년 이상(3년 포함)의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였어야 한다.
⑥ 관련 변호사사무소는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업무장소를 홍콩에 보유·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이상을 보면 CEPA에서는 홍콩 변호사사무소의 업무집행인원의 현지화 비율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단지 주요 업무범위가 홍콩에서 현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홍콩의 사무변호사(원어: 律師, solicitor)나 법정변호사(원어: 大律師, barrister)가 홍콩 현지의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CEPA 조항은 홍콩 변호사사무소의 현지 업무집행 종사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된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CEPA는 업무집행 현지화 기준 이외에도 홍콩법률사무소는 홍콩의 관련 법례에 의거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상업등기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도 법인에 대해 설립등기지 및 업무집행 현지화라는 이중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⑷ 서비스무역제공의 절차

서비스무역은 CEPA에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줄곧 추진해왔던 중점내용이다. 서비스영역 개방조치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실체가 CEPA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을 향유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제공자의 신분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CEPA 부속문서 5의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와 절차들을 정하고 있다. 우선 제6조에 의하면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CEPA상의 우대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제출할 자료

① 법인인 경우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홍콩의 관련기관이나 관련인이 심의 · 검증을 한 문서자료 · 법정성명(法定聲明)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제출하여야 할 문서자료는 다음과 같다.

(ⅰ) 홍콩특별행정구 회사등기소(원어: 公司註冊處)에서 발급한 회사등기증서 부본

(ⅱ) 홍콩특별행정구 상업등기증과 등기부 내 자료의 발췌문 부본

(ⅲ)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과거 3년(또는 5년) 동안의 홍콩에 있는 회사의 연차보고서 또는 회계심사를 거친 재무보고서

(ⅳ)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에서 업무장소를 보유 · 임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정본이나 부본(홍콩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중국에서의 해운서비스인 경우에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적재량의 50% 이상이 홍콩에서 등기되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ⅴ)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과거 3년(또는 5년) 간의 소득세 신고서 · 세액산정(원어: 評稅) · 납입통지서의 부본(결손(缺損)이 발

생한 경우,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결손상황에 관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유관부문에서 증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vi)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홍콩에서의 종업원급료 및 퇴·휴직금 신고서 부본, 그리고 당해 서비스 제공자가 본 부속문서 제3조. 가. (2). 5)[198]에서 규정한 백분비율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 문서나 그 부본

(vii)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홍콩에서의 업무 성질·범위를 증명하는 기타 관련문서나 그 부본

둘째, 법정성명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와 그 책임자는 홍콩특별행정구 「선서 및 성명조례(宣誓及聲明條例)」의 절차·요청에 의거하여 법정성명을 하여야 한다. 고의로 허위나 부실의 성명을 한 자는 홍콩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셋째, 증명서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본 부속문서 제6조에서 규정한 문서자료와 법정성명을 홍콩특별행정구 공업무역서(工業貿易署)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공업무역서는 필요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유관부문이나 법정기구·독립전문기구(전문가)에게 사실확인의 증명을 위탁할 수 있다. 공업무역서는 본 부속문서에서 규정한 홍콩서비스제공자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증명서'를 발행한다.

---

198) 5) 직원고용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에서 고용한 직원 중 홍콩거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민 및 편도증서를 소지하고 와서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전체 직원 수의 50% 이상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경우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홍콩영주민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중국공민인 자는 홍콩·마카오주민 중국왕래통행증(원어: 回鄕證)이나 홍콩특별행정구 여권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절차

① CEPA 부속문서 4의 서비스를 중국에서 제공하려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중국의 심의기관에 상술한 문서자료·법정성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국의 심의기관은 홍콩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을 심의할 때 홍콩서비스제공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를 한다.

③ 중국의 심의기관은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 내에 이를 홍콩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상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홍콩의 공업무역서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④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의 공업무역서를 통하여 상무부에 서면으로 이유를 제출하여 재차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규정된 시간 내에 공업무역서에 서면회신을 하여야 한다.

한편, CEPA 실시 이래 2009년 9월 30일 현재 1,386건의 "홍콩서비스제공자 증명서(香港服務提供者證明書)" 신청이 있었고 이중 1,342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한다.[199]

199) 홍콩 공업무역서(工業貿易署) ->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 -> 統計及研究 참조 (http://www.tid.gov.hk/tc_chi/cepa/statistics/hkss_statistics.html).

표3. 홍콩서비스제공자증명서(香港服務提供者證明書) 신청서 통계

(2009년 9월 30일 현재)

	서비스 업종	신청 수	신청승인
1	법률 서비스	17	17
2	회계,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2	2
3	건축전문서비스 및 관련 공정 서비스	74	70
4	의료 및 치과 서비스	6	5
5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및 정보기술 서비스	16	16
6	부동산 서비스	24	23
7	광고 서비스	106	100
8	시장조사연구 서비스	0	0
9	관리자문 및 관련 서비스	38	30
10	채광(採鑛) 관련 서비스	0	0
11	자연과학 및 공정학의 연구·실험개발 서비스	0	0
12	공용사업 서비스	1	1
13	직업소개기구 서비스 및 인력중개기구 서비스	56	56
14	건축물 청결 서비스	0	0
15	촬영 서비스	1	1
16	인쇄 서비스	3	2
17	번역 및 통역 서비스	0	0
18	회의·전람 서비스	10	10
19	부가가치 전신(電信) 서비스	39	34
20	전신(電訊)서비스·전화카드 판매 서비스	0	0
21	시청 서비스	29	28
22	소매(分銷) 서비스	263	257
23	환경 서비스	0	0
24	모든 보험 및 관련 서비스	7	7
25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증권 불포함)	9	9
26	증권·선물 서비스	8	8
27	사회 서비스	0	0
28	관광 및 관련 서비스	22	21
29	문화오락 서비스(시청 서비스 제외)	5	5
30	체육 서비스(골프장 건설 불포함)	0	0
31	운수 및 물류 서비스	565	558
32	항공운수 서비스	78	75
33	상표대리 서비스	7	7
소계		1,368	1,342

나.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문제점[200]

(1) 서비스무역자유화에 있어서 '홍콩 회사'의 정의 문제

상술하였듯이 중국과 홍콩은 서비스무역 방면에 있어서 관리자문, 회의전람, 광고, 회계 등 17개 업종의 시장진입을 완화하였다. 중국의 개방조치로 인해 홍콩의 회사 및 서비스제공자는 WTO에 대해 중국이 약속한 개방시간표에 앞서서 먼저 중국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 및 부동산, 물류, 운수, 소매(원어: 分銷), 법률, 시청 서비스 업종들의 경우 CEPA에 대한 중국의 개방조치는 WTO에 가입하면서 양허한 것보다 크다.

CEPA는 지역경제조치의 일종 형식으로서,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중국과 홍콩 이외의 기타 WTO 회원은 중국이 홍콩에 부여한 우대조치를 WTO 협정에 의거하여 자신들에게도 허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WTO 회원국이 아닌 자들 또한 자신들이 체결한 양자간 통상항해조약 상의 최혜국대우의 요구에 의거하여 중국이 홍콩에 부여한 우대조치를 자신들에게도 부여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본 협정은 어떤 회원이 체약 당사자 간에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협의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그러한 협의를 이루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201], 동조 제6항에서는 "제1항 소정의 협의

---

200) 慕亞平 · 林昊, "對CEPA中香港公司定義問題的探析", 「區域經濟一體化與CEPA的法律問題研究」, 法律出版社, 2005, 114-126면 요약정리.

201) 1.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ny of its Members from being a party to or entering into an agreement liberalizing trade in services between or among the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an agreement:

의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을 조직한 어느 기타 회원의 서비스제공자는 단지 당해 체약당사자 경내에서 실질적 경영업무(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에 종사하는 한 당해 협의에서 부여한 우대혜택을 향유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202] 동조 제8항은 "제1항에서 언급한 어떤 협의의 체약당사자인 WTO 회원은 기타 회원이 당해 협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무역이익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203]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중국이나 홍콩 이외의 기타 국가·지구의 법인·기타 기구·자연인이 홍콩에서 홍콩 법률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위 말하는 '실질적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양허한 개방시간표 및 우대조치를 넘어서서 「CEPA」상 홍콩회사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한 시장진입, 상업존재, 전문자격의 승인, 최저등록자본액 방면 등에서의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중국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WTO 회원에게도 그 취득한 무역이익으로부터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CEPA」상 '서비스제공자' 및 '홍콩 회사'에 관한 정의의 내포 및 외연에 관한 것은 기타 국가·지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며, 「CEPA」 상 중국이 홍콩회사 및 홍콩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

202) 6. A service supplier of any other Member that is a juridical person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 party to a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entitled to treatment granted under such agreement, provided that it engages in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to such agreement.

203) 8.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any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not seek compensation for trade benefits that may accrue to any other Member from such agreement.

한 우대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가에 실제로 관계되며, 「CEPA」의 효과가 과도하게 넘쳐나 우대혜택이 남용되지는 않는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⑵ 회사제도의 차이

홍콩에서의 회사설립에 대해 홍콩의 회사 관련법에서는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회사 자본에 있어 수권자본제도와 주식인수납입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저자본액 요건은 없다. 설립기간도 짧아 14일이면 가능하고 유령회사(원어: 空殼公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의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회사로서 홍콩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면 종합재무제표를 구비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종합재무제표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였다. 또한 1998년 1월부터 홍콩 「회사조례(香港公司條例)」에서는 "퇴출절차(원어: 除名程序)"를 도입하여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제 면에 있어서는 홍콩에서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자본의 유입유출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홍콩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기에 매력적인 곳으로서 전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홍콩의 자본을 외자(外資)의 특수형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외자에 준해 세수(稅收) · 시장진입 등 방면에서 우대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국내의 민영자본은 세수나 시장진입 등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외상투자기업은 '내국인보다 우대(원어: 超國民待遇)'를 받는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자국 민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원어: 次國民待遇)'를 받고 있는 것도 일정 정도는 사실이

다. 이에 따라 보다 나은 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일부 내부 민영기업들 역시 홍콩 또는 기타 투자안전국이라 불리는 해외의 자본도피처에 설립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 내국자본이 아닌 '외자' 내지 '홍콩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대만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 대만당국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만기업들 역시 홍콩이나 기타 자본도피처에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204]

상술한 사정들로 인해 CEPA에서 '홍콩회사'의 구분기준을 제정할 당시 회사설립지로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교우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⑶ CEPA 적용의 문제

첫째, CEPA는 국제법상의 근거는 있으나, 국내법상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WTO는 '국제기구', '국제무역조약 집합체', '다자간 무역협상 장소'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기초한 WTO 규칙은 국제조약 또는 특수한 국제조약체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WTO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는 CEPA는 국제법상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04) 예컨대 대만의 선박왕 창룽파(張榮發)는 대륙시장에 신속히 진입하기 위해서 '창룽해운(張榮海運)' 소속 모든 컨테이너선 148 척 중 절반 이상을 이탈리아·영국으로 편의치적(便宜置籍)하였다. 이로써 대륙 항구에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창룽그룹의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보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 左志堅·陳中小路, "臺灣船王超百億造船計劃直指內地", 「21世紀經濟報道」, 2003.8.19; 慕亞平·林昊, 앞의 글, 119면 재인용

중국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법 제151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는 경제·무역·금융·항공운수·통신·여행·문화·체육 등의 영역에서 '중국 홍콩'의 명의로 세계 각국·각 지구(地區)·관련 국제기구와 단독으로 협의를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각 지구'에 중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CEPA는 국내법적 근거를 흠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기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홍콩 간에 체결되는 관련 합의의 국내법상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사실이다. 기본법 제15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협의의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의 사정을 고려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에 홍콩에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미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협의는 계속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적당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수권·협조하여 기타 관련 국제협의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즉 동조에서는 국제조약의 홍콩적용 문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홍콩은 중국 주권이 미치는 하나의 지구(地區)로서 중국과 홍콩 간에 체결된 협의는 한 국가 내의 서로 다른 지구 간의 구제협의(區際協議)이기 때문에 제153조에 따라 해결할 수는 없다.

둘째, CEPA를 시행함에 있어 직접 적용되는 효력이 없기에 중국이나 홍콩의 법 규정에 대항할 수 없다.

국제조약의 국내 적용문제에 대해 중국의 「헌법」이나 「입법법(立法法)」에는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통칙」이나 「어음수표법」 등의 개별법에서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충돌될 경우 국제조약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구제협의의 국내적용 문제에 대한

명문규정도 없다. 중국과 홍콩 사이에 체결된 CEPA는 홍콩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CEPA의 주체는 중앙인민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이며, 직접 법인·자연인·기타 기구를 구속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立法會)에서 CEPA가 미치는 '홍콩회사'에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기 전에는 CEPA 상의 '홍콩회사'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홍콩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⑷ '홍콩회사' 분류기준 자체의 문제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한 협상 요강(關于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的磋商紀要)」에 따라 중국과 홍콩 쌍방은 CEPA 부속문서 5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그 중 '홍콩회사'의 구분기준에 대해서는 업종 별로 기준을 달리 정하였는데, 회의전람·관리자문·광고·운수·소매(원어: 分銷)·화물운송대리·창고저장·물류·여행·시청·부동산과 건축 및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것, 보험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들 3가지 기준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른 점도 있지만 '홍콩회사'의 구분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성립되었을 것, 둘째, 홍콩에서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기업이 홍콩에서 종사하는 업무성질과 범위 ② 기업이 홍콩에서 소득세(원어: 利得稅)를 납부할 것 ③ 기업이 홍콩에서 실질적 경영에 종사하는 연한 ④ 기업이 홍콩에서 업무장소를 소유 혹은 임차하여 실질적 경영에 종사하여야 할 것 ⑤ 기업이 홍콩에서 고용한 직원이 전체 직원 수의 50% 이상일 것이다.

이상의 기준을 보면 '홍콩회사'의 정의에 대해 비록 회사의 국적을 확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제법상 회사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을 전통적인 기준인 회사설립근거법률을 판단기준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실질적 상업경영'을 더하여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술한 기준을 보면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러한 기준이 실질적인 장벽이 되지는 못함을 발견할 수 있다.

홍콩에 등록하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된 홍콩의 유령회사를 매수한 서비스제공자가 종합문서서비스 · 상업전화 · 법정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기비용을 추가한 원스톱 서비스비용은 수천 홍콩 달러에 불과하다.[205] 따라서 홍콩회사로 인정되기 위한 상술한 제한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회의전람 · 관리자문 · 광고 · 운수 · 소매 · 화물운송대리 · 창고저장 · 물류 · 여행 · 시청 · 부동산과 건축 및 관련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홍콩회사'의 구분기준 중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① 중국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성질은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과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또 홍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

---

205) 예컨대 HKBSS라는 홍콩 회사에서는 홍콩에 유한회사를 설립 · 등록하거나 홍콩의 기존 회사를 매수하는 서비스를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홍콩달러로 7,500 위안이라고 한다. - http://www.hkbss.com/hkreg.htm. 참조, 2003년 9월 8일 방문 ; 慕亞平 · 林昊, 앞의 글, 122면 재인용
한편 2009년 10월 15일 상기 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홍콩에 신(新)회사를 설립 · 등록하는 비용은 인민폐 6,000위안이며, 홍콩의 기존 회사를 매수하는 비용은 인민폐 6,500 위안이며, 비서 제공비용이 1,000 위안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 편자 주

업은 상업등기증, 연도보고서나 업무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에 대해서 본다면, 홍콩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그 업무성질과 중국에서 종사하려는 업무성질을 일치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지주회사가 다른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는다면 상관 자료 제출·증명에 있어서는 홍콩에의 등록서비스나 홍콩의 기존 회사매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얼마든지 대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 중에 홍콩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 신고표나 납세영수증명 등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업이 적자로 인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홍콩에서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

이 요건을 본다면, 기(旣)설립된 홍콩회사를 매수하는 때에는 소득세가 없음을 신고함으로써 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③ 상술한 서비스를 중국에서 제공할 것을 신청하는 기업은 이미 홍콩에서 설립등록·등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3년 이상의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206]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이미 홍콩에서 설립등록·등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의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하며,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에서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연한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기존의 유령회사를 매수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206) 「안배」 효력발생일로부터, 쌍방 이외의 서비스제공자가 구매 또는 합병 방식을 통하여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지 만 1년이 된 경우, 당해 피(被) 매수·합병된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에 속한다.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홍콩기업은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할 업무장소를 홍콩에서 보유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그 업무장소는 업무의 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연락처, letter-box company(원어: 信箱公司)[207], 모회사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성립된 회사들의 경우 모두 CEPA 상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 본다면, 홍콩에서 회사설립 · 등록서비스 또는 기(旣)설립된 유령회사의 매수(買收)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는 회사주소등록증명 · 상업서비스전화 · 상무비서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상업적 왕래 문서의 처리를 통하여 영업장소의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

⑤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에서 고용한 직원 중 홍콩거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민 및 편도증서를 소지하고 와서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전체 직원 수의 50% 이상을 점유하여야 한다.

이 요건 역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즉 이 요건에는 총 사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고용직원의 유형에 겸직사원 · 실습생 · 계약직 사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따라

207) 신상공사란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국제재무관리를 보다 잘 처리하기 위해서 세금이 낮은 국가(또는 지구)나 면세 국가(또는 지구)에 설립한 재무적 자(子)회사를 말한다. 다국적 기업에 속하는 계열회사에서 무역이 발생할 경우 이들 회사의 영수증발급과 현금결산을 처리하는 직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제이전가격을 적절히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상공사를 설립하는 지역 중 주요한 곳은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의 개발도상국가(또는 지구)들로서, 은행전신 등의 기초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서비스업 발전에 진력하고 저율의 세수정책을 통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있다.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회사의 총직원 수를 2인으로 한다면, 홍콩에서의 회사설립·등록서비스 또는 기(旣)설립된 유령회사의 매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는 비서업무를 수행할 비서 1인을 제공하면 이 제한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4. 무역투자 간이화의 내용

CEPA 제16조는 "쌍방은 투명성제고, 표준일치화, 정보교류강화 등의 조치와 협력을 통하여 무역투자 간편화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무역투자촉진, 통관 간이화, 상품검사검역, 식품안전, 품질표준, 전자상거래, 법률·법규 투명도, 중소기업협력, 중의약산업 협력 등이다.

무역투자 간이화를 위해 CEPA 부속문서 6에서는 상술한 7개 방면에서의 협력에 대해 사항별로 협력시스템 및 협력내용을 규정하였다.

① 무역투자촉진 방면

중국과 홍콩 쌍방은 양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상호 간의 무역 및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투자발전에 대한 현실 및 수요증가에 기초하여 무역투자촉진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협력을 위하여 연합지도위원회(聯合指導委員會) 관련 업무 조직을 통하여 양 지역간 무역투자촉진 협력에 관한 지도·조정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협력내용을 보면 각자의 대외무역 및 외자도입 관련 정책법규의 통보와 홍보, 쌍방 무역투자영역 중에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 교환, 협상진행, 상호투자촉진 및 해외투자에 대한 긴밀한

협력 방면에서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전람회 개최, 해외전람회 조직 · 참가 방면의 협력강화, 쌍방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무역투자촉진 관련 기타 문제에 대한 교류진행이다.

② 통관간편화 방면

쌍방은 해관총서(海關總署) 및 홍콩해관의 고위급지도자 사이의 업무연계 연례회의를 통하여 통관간편화 협력을 지도 · 협조하고, 해관 및 관련부문의 전문가 소그룹을 통하여 통관간편화 협력의 전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력내용은 상호 통보제도 창설, 통관 및 통관관리 간편화 관련 정책법규의 통보, 쌍방 통관제도의 차이 및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 · 교류의 진행, 통관간편화 협력강화의 구체적 내용 모색, 진일보한 협력확대의 내용 탐구, 해상운송 · 육상운송 · 복합운송 · 물류 등의 방식을 이용한 통관 중 감독관리 강화 및 통관효율제고 방면의 협력, 항구에서의 돌발사건에 대한 응급시스템창설 방면에서의 협력강화, 유효한 조치의 채택, 쌍방의 순조로운 통관을 최대한도로 보호 · 유지, 정기적 연락제도의 창설, 해관총서 광동지서와 홍콩해관 사이의 "광동성-홍콩 해관 항구통관효율업무 소그룹(粵港海關口岸通關效率業務小組)"의 기능발휘, 쌍방 해관의 "데이터교환 및 육로 · 항구통관전문가 소그룹"의 업무강화, 데이터 네트워킹 연구 및 항구 전자통관수속시스템의 실행가능성 발전, 기술적 수단을 통한 통관위험의 관리강화, 통관효율제고이다.

③ 상품검사 · 검역, 식품안전, 품질표준 방면

쌍방은 화물무역 및 인적왕래 중에 중국과 홍콩 주민의 신체건강 ·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대비하여 상품의 검사검역·식품안전·위생검역·인증인가·표준화영역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유관부문간 현재의 협력통로를 이용하고, 상호방문과 협상 그리고 각종 형식의 정보소통을 통하여 당해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전력설비상품의 검사감독 측면이다.

쌍방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쌍방은 기존에 창설된 소통경로를 통하여 정보의 상호교환·교류를 강화하고, 기계·전력설비상품의 안전에 관계된 정보교환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기계·전력설비상품에 나타난 안전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검사감독 담당자들의 교육촉진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중국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과 홍콩의 기계·전력설비공정서(機電工程署)가 2003년 2월 12일에 체결한 「기계·전력설비상품 안전협력 안배(機電産品安全合作安排)」의 관련 업무를 진력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동식물 검사·검역 및 식품안전 측면이다.

쌍방은 현재의 검사검역협조시스템을 이용하고, 동식물검사검역 및 식품안전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여, 쌍방이 각자의 관련법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셋째, 위생검역 감독관리 측면이다.

현재의 소통 경로를 이용하여 두 지역의 전염병발생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위생검역에 관한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홍콩과의 왕래가 빈번한 꽝둥(廣東)·선쩐(深圳) 각 항구를 왕복하는 소형선박의 위생·감독 문제에 대해

탐구하기로 하였으며, 열대전염병 · 매개생물의 조사와 예방, 특수물품 · 방사능물품의 감측(監測) · 감독관리, 생물성 발병인자의 운수 · 검사 · 치료 · 통제 등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인증인가 및 표준화관리 방면이다.

쌍방은 각자의 관련 기관의 합격심사(테스트 · 인증 · 검사를 포괄), 인가, 표준화관리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전자상거래 방면

중국과 홍콩은 향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예상하고, 전자상거래의 응용 · 확대를 통해 쌍방의 무역 및 투자에 보다 많은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 · 협조 하에, 관련 업무 팀을 구성하고, 전자상거래 협력의 소통통로 및 협상 · 협조체계를 만들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쌍방 협력 및 공동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규칙 · 표준 · 법규의 연구 및 제정 방면에서 전문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우수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창조하며, 건강한 발전을 추진 · 확보하기로 하였다.

둘째, 기업에서의 응용 · 확대 · 교육 등 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두 지역 정부부문의 추진 · 조정기능을 발휘하고, 전자상거래의 홍보를 강화하며, 두 지역 기업 간의 상호교류를 추진하며, 시범항목의 확립을 통하여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로 했다.

셋째, 전자정부추진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경제무역정보의 교류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⑤ 법률법규의 투명도 방면

양 지역 간의 경제무역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초 중의 하나는 바로 법률법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연합지도위원회에서 설립한 유관 업무팀 및 상호 설립한 대표기구를 통하여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투자·무역 및 기타 경제무역영역에서의 법률·법규·규장(規章)의 반포 및 개정상황에 대한 정보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둘째, 간행물, 웹사이트 등 다종 매체를 통해 정책·법규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관련 법규의 시의적절한 공지를 통하여 법규를 모르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다양한 방식의 경제무역관련 정책·법규의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중국의 WTO 자문처, 중국투자지침 웹사이트, 중국무역지침 웹사이트,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국 및 무역투자촉진국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상(工商)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⑥ 중소기업협력 방면

쌍방은 취업기회확대, 경제발전촉진, 사회안정의 유지·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에 쌍방 정부부문 간에 양 지역 중소기업협력을 촉진하는 업무체계를 세우고, 중소기업의 협력 및 공동발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전략 및 부양정책의 지원을 공동 탐구하고,

둘째,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쌍방 중개기관의 조직형식과 운용방식을 교류하고, 중개기관의 협력을 추진하며,

셋째, 양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통로를 만들고, 관련 출판간행물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쌍방 정보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결합 및 자료교환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며,

넷째, 각종 형식을 통해 두 지역 중소기업의 직접교류 · 소통로를 만들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⑦ 중의약(中醫藥)산업협력 방면

중국과 홍콩은 중의약 산업이 시장전망이 크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의약에 대한 산업화 발전과 중의약의 현대화 · 국제화 등 방면에서 우위를 갖도록 촉진하고, 이 분야의 협력전개는 쌍방의 경제 · 사회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두 지역의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약(中藥) 관련 법규제정 및 중의약 관리방면에서의 상황을 상호 통보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중의약연구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약(中藥)발전전략 및 발전방향 등 방면의 정보자료를 교류 · 공유한다.

셋째, 중약(中藥) 등록관리방면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중약에 대한 규범적 관리를 하여 상호간의 중약무역에 편의를 높인다.

넷째, 임상실험의 설비관리 및 법규요건 등 방면에서 협력하고, 임상실험 데이터를 상호승인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중약품질표준 방면에서의 교류협력하고, 중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여섯째, 양 지역의 중의약기업이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고, 국제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한다.

일곱째, 중의약산업의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중의약산업의 협력 중에 나타나는 문제를 교류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4절 분쟁해결제도[208]

1. CEPA 규정상의 문제점

가. 구체적 규정의 미비

경제무역과 관련하여 다자간 또는 양자간 경제협정이 체결되고 때로는 지역적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협정을 시행·집행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지역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 해결규칙, 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일련의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CEPA의 주요 내용은 중국과 홍콩 간의 관세와 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여러 부문에 관련되어 있다. CEPA는 WTO협의가 중국-홍콩 간에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서 무역장벽을 없애고 경쟁규칙을 규범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 구체적 목표는 무역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취소하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며, 무역투자의 편의를 높여 중국과 홍콩 간에 경제무역협력의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공동발전을 이루려는 것임은 앞서 살펴보았다.

---

208) 索光擧, 앞의 책, 94-108면; 慕亞平·李伯僑, 앞의 책, 127-136면; 李春艷, "論CEPA爭端解決機制的重構", 中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17-55면 정리

그런데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CEPA 및 그 부속문서들에는 분쟁해결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지 '연합지도위원회(聯合指導委員會)'를 설립하여 분쟁해결을 담당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즉 CEPA 제19조에서는 쌍방이 고위층대표 또는 지정된 관리로 구성한 연합지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동 조항은 CEPA 협정 중 제6장 '기타조항'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9조의 조문명칭은 '기구 배치(원어: 機構安排)'이다. 이는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조문의 주요 초점은 CEPA를 집행하는 조직기구를 명확히 한다는 데 있다는 느낌을 준다. 실제로 제19조는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동조 제3항 제3호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기타 동 조항의 대부분은 기구의 구성과 직능과 관련한 사항이다.

동 위원회는 연락판공실(聯絡辦公室)을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반(工作組)을 설립할 수 있는데, 연락판공실의 경우 중앙인민정부 상무부 및 홍콩특별행정구 상공과학기술국(工商及科技局)에 각기 설치한다.

동 위원회의 직능을 보면, CEPA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CEPA 규정의 해석을 담당하며, CEPA 집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해결을 책임지고, CEPA 내용의 증보 및 개정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연구반(工作組)의 업무지도 및 CEPA 실시와 관련한 기타 모든 사무의 처리를 담당한다.

동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일방이 요구사항을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협상일치의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CEPA 시행·해석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연합지도위원회 체계 내에서 쌍방의 협상일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양자간 협상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무역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합의를 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이미 선험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분쟁해결제도는 그 특성상 절차적 내용이 많고 규정해야 할 사항도 많다. 따라서 CEPA 본 합의에 넣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부속문서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CEPA의 경우 6개의 부속문서는 각각 화물무역의 영(零)관세, 화물무역의 원산지규칙, 원산지증서의 발급 및 심사절차, 서비스무역영역 개방에 관한 구체적 승낙,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 무역투자편리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CEPA를 체결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분쟁해결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준다.

이미 GATT나 WTO 혹은 기타 여러 다자간·양자간 무역체계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은 컸으며, 그러한 해결절차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점점 커졌다. 이에 WTO의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s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Disputes, DSU)」는 WTO가 분쟁해결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규범이다.

나. 사법적 성격의 배제

CEPA 규정에 따르면 쌍방은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 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점은 미뤄두고 먼저 서로 의견이 같은 점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에 의해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외교적 방법으로 다툼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해결이란 공권력이라는 특징이 있는 정치적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이 있는 화해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법적 절차와 법적 표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적 해결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음은 사실이다. 첫째,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벌여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룬다면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다. 서로가 고정적인 형식이나 엄격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쌍방간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다기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해결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자율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정치적 해결이 경우 쌍방이 자율적으로 협상을 하여 해결을 하게 되므로 쌍방간의 우호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나의 주권국가에 소속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홍콩의 입장에서는 쌍방 간 발생한 분쟁을 법적인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임에는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쌍방이 경제무역에 있어서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홍콩이 가지는 고도의 자치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

반면 법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준사법적(準司法的) 성

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WTO의 분쟁해결제도이다. WTO에서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한 것은 국제무역이 '힘에 의한 외교'에 따라 좌우되던 것에서 '규범적인 법률'에 지배되는 것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다. 회원들의 정치·경제적 힘이 아니라 제3자의 중재, 전문가집단, 상소기구의 심사절차를 거쳐 판단을 받고 상세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현된다면 분쟁해결의 투명성·구속성·안정성·효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 분쟁해결수단의 다양화와 운용가능성 확대 필요

CEPA상 규정된 분쟁해결제도는 우호적 협상 하나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호적 협상을 통하여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의 무역분쟁이 해결된다면 그 역시 바람직한 분쟁해결방식이다. 다만 이것이 분쟁해결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식이라면 분쟁해결수단의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모든 분쟁을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상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장기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대체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분쟁해결수단이 하나인 경우 무역분쟁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분쟁해결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지역적 협정을 보면 국제무역의 복잡한 현실에 유효하게 대처하고 해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WTO의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보면 협상(consultation), 주선(good offices), 조정(conciliation), 중개(mediation), 중재(arbitration), 전문가그룹(패널), 상소기구심사 등을 상호 결합한 다양한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

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협상,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의 알선 · 조정 · 중개, 기술고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전문가중재그룹(arbitral panel) 중재 등의 분쟁해결제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209]

CEPA에서는 상술하였듯이 '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기구는 상설기구가 아니며, CEPA 협정의 내용에 대한 개정 · 증보의 초안을 작성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기타 사무처리를 하는 등 여러 기능이 혼합된 기구이다. 반면 무역분쟁은 법률문제가 복잡하며 쌍방의 이익도 대립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는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런데 CEPA 규정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쌍방의 고위층대표나 관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서, 법률이나 경제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확실하지 않고,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전문가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적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연합지도위원회의 경우 분쟁해결의 전문성제고라는 점과 마찰될 여지가 있으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CEPA상 규정된 "연구반(工作組)"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는데, 실무그룹의 설립요건이나 절차 , 운영규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실무그룹의 의견에 대해 지도위원회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듯 CEPA의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한데 반드시 CEPA에 단독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는 없으

209) NAFTA Article 2001, 2006, 2007, 2008, 2014 등 참조

며, CEPA 당사자 역시 WTO회원이므로 WTO의 일반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보기로 한다.

2. WTO의 분쟁해결제도

가. 의의 및 법원(法源)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WTO회원 간에 WTO의 각 협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WTO 회원이 아닌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일국 정부와 다른 일국의 사법(私法) 주체 사이에 발생한 무역분쟁 또는 두 사법 주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WTO의 회원은 GATT 1994에 의거해 자신이 향유하는 이익이 손해를 입거나 또는 다른 회원이 일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GATT 1994의 목표실현에 장애가 발생하면 분쟁해결절차를 가동할 수 있다. WTO 출범 이후를 돌아보면 이러한 분쟁해결제도는 회원 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로서 WTO 체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10]

동 제도는 힘에 의한 해결로부터 규칙에 따라 해결하는 단계로 이행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각 회원들의 정치·경제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의 원만한 시행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분쟁해결기제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WTO나 CEPA와 같은 협정에 있어서는

210) 杜玉璟, "CEPA 法律問題研究", 西南政法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년, 139면

그 성공적 안착을 담보하는 관건의 하나이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원(法源)으로 주요한 것에는 WTO 체제 하의 개별 협정 중에서 국제무역분쟁해결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우선 개별 협정들 중 무역분쟁해결과 관련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① GATT 제22조 및 제23조는 분쟁해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211] 이에 따르면 체약 당사자는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

211) ※ 제22조 (협의)

1. 각 체약국은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이 행하는 사정의 설명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또한 동 사정 설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체약국단은,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한 해결을 보지 못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과 협의할 수 있다.

※ 제23조 (무효 또는 침해)

1. 체약국은 (a)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결과, (b)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의 조항에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적용한 결과 또는 (c) 기타 다른 어떤 사태가 존재하는 결과로서, 본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에 부여된 모든 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되거나,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문제의 만족한 조정을 위하여 관계가 있다고 동 체약국이 인정하는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동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받은 체약국은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인 기간내에 관계 체약국간에 만족할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애로가 본조 제1항 (c)에 규정된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문제를 체약국단에 의뢰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의뢰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약국에 대하여 적당한 권고를 하여야 하며 또는 동 문제에 관하여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약국,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및 적당한 정부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사태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정당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동 사태하에서 체약국단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본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어느 체약국에 대한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적용이 사실상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정지조치가 취하여진 후 60일 이내에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의사를 서면으로 체약국단의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협상을 통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에 관련 문제의 '조사(investigate)'를 의뢰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체약국단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② WTO 협정 부속문서 1(다자간 무역협정) 및 부속문서 4(복수국간 무역협정)의 분쟁해결조항 ③ WTO 협정 부속문서 2의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집단(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있다.

GATT 제23조 제2항에서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관계 체약국간에 만족할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문제를 체약국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체약국단은 당해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약국에 대하여 적당한 권고를 하거나 적당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 즉 전문가집단의 보고서는 체약국단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일단 통과가 된 전문가집단(패널)의 보고는 향후 분쟁사안에 있어 특히 동일한 당사국의 분쟁의 경우, 비록 패널보고서에는 "선례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새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WTO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패널보고서에 비해 더욱 권위가 있는데 상소기구 역시 이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일본 주류세 징수사안'(WT/DS 8, 10, 11)[212]에서 상소

있으며, 동 탈퇴는 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12) 1995년 6월 21일 EU는 GATT 제22조에 의거하여 일본과의 협상을 제안하면서 일본이 「주세법(酒稅法)」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어 7월 7일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WTO의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4조 제11항에 의거하여 협상참가를 요청하였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다.
1995년 7월 20일, EU·캐나다·미국은 일본과 협상을 하였고, 7월 21일 미국은 단독으로 일본과 협상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9월 14일, EU·

기구는 선례의 견해를 언급하였고, 대한민국의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분쟁'사안(WT/DS 98)[213]에서 이전 상소기구보고의 의견이 수차례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선례(先例)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패널보고이던 아니면 상소심보고이던 모두 GATT와 WTO의 분쟁해결과정에서 원용되고 참고가 되면서 분쟁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과정에서 무시 할 수 없는 일종의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캐나다 · 미국은 각각 GATT 제23조 제2항 및 DSU 제6조(미국은 또한 DSU 제4조를 제출함)에 따라 패널설치를 청구하였다.
1995년 9월 27일 3방의 제1차 청구 및 일본의 동의에 따라 분쟁해결기구(DSB)는 패널을 구성하여 관련 문제를 심사하도록 결정하였고 9월 30일 패널이 구성되었다. 1996년 7월 11일 패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원에게 배포하였고, 8월 6일 일본이 상소하였다. 9월 9일 상소심의 심리가 시작되었고 10월 4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일에 분쟁해결기구(DSB)는 상소심의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패널은 일본이 국내세 보다 높은 고관세를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므로 GATT 규정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상소심에서도 패널 보고서 중 일부에 대해 개정의견을 냈지만 패널보고의 최종 결론에는 동의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주세법을 개정하여 GATT 규정에 맞추도록 결론지었다. 일본은 1998년 2월 1일 패널보고를 시행할 것임을 제안하였고, 제소자 측이 동의하였다.
- 中國 河北商務部 웹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hecom.gov.cn/wtofadian/wen/wtoal/al132.htm).

213) 한국 정부는 분유의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혼합분유의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를 거쳐 '97.3.7.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혼합분유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시행함
EU는 산업피해조사의 적정성, 수량제한(Quota)조치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97.8.12. 동 조치를 WTO에 제소하여 '98.7.23. 패널이 설치됨
패널은 '99.6.21. 우리나라의 조치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WTO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는 상기 패널 판정을 1999.9.15. 상소하였으나 1999.12.14.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재확인함. 우리나라는 2000.5.20.까지 판정 결과를 이행하기로 EU와 합의하여, 동일자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함으로써 이행을 완료함.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다자통상외교 WTO 부분 참조(www.mofat.go.kr).

세 번째로는 국제관습규칙이 있다.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분쟁해결제도는 국제 공법의 관습적 해석 규칙(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에 따라 관계 협정에 존재하는 규정들을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214] 또한 WTO 협정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 체약국단 및 1947년도 GATT의 틀 내에서 설립된 기구의 결정, 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관습규칙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원이라고 할 것이다.[215]

나. 적용범위 및 기본적 원칙

(1) 적용범위

WTO 분쟁해결제도는 WTO 협정 효력발생일 또는 그 후에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부속문서(appendix) 1에 열거된 협정[216]의 해석이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분쟁에 있

---

214) *Article 3 (General Provisions)*

2.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is a central element in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Members recognize that it serves to preser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and to clarify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ose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215) 杜玉璟, 앞의 논문, 139~141면.

216) Appendix 1에 따르면 동 양해가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WTO 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어 WTO 회원 간에 적용된다(DSU 제1조, 제3조 제11항).[217] 따라서 인적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국가회원과 지역회원, WTO 창립회원과 후에 가입한 회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시간적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상기한 DSU가 적용되는 협정(covered agreements)과 관련하여 1995

---

(2) 다자간 무역협정
  i)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ii)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iii)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3)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i) 민간항공기의 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ii)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iii) 국제 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vi) 국제 우육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217) ※ Article 1 (Coverage and Application)
1.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shall apply to disputes brought pursuant to the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s listed in Appendix 1 to this Understanding (referred to in this Understanding as the "covered agreements").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shall also apply to consult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Members concerning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ferred to in this Understanding as the "WTO Agreement") and of this Understanding taken in isolation or in combination with any other covered agreement.

※ Article 3 (General Provisions)
11. This Understanding shall be applied only with respect to new requests for consultations under the consultation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mad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With respect to disputes for which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was made under GATT 1947 or under any other predecessor agreement to the covered agreements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the relevant dispute settlement rules and procedures in effect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

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분쟁에만 적용되며, GATT 1947 및 동경라운드 규칙과 관련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는 기존의 GATT 분쟁해결제도를 적용한다. 물적 적용범위의 경우, 기타 분쟁해결제도의 규칙·절차를 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WTO 체계하의 모든 법적 문서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가 적용된다. 따라서 WTO 회원은 관련 협정에 근거하여 획득한 직·간접 이익이 손해를 입거나 또는 관련 협정의 목표실현이 기타 회원이 취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단독으로 제소할 수도 있고 여러 회원과 함께 제소할 수도 있다. 또한 WTO 회원은 어느 분쟁사안이 자신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나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회원을 통하여 당해 문제에 관한 협상에 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패널에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도 있다.

⑵ 기본원칙

분쟁해결제도에서 지향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해결관례 준수의 원칙이다. 「WTO 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 체약국단 및 1947년도 GATT의 틀 내에서 설립된 기구의 결정, 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고 한다.[218]

---

218) Article XVI (Miscellaneous Provis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or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the WTO shall be guided by the decisions, procedures and customary practices followed by the CONTRACTING

그리고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3조 제1항에서는 GATT 1947 제22조와 제23조의 토대 위에 동 분쟁해결제도가 창설·발전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219] 따라서 기존의 GATT 체제하에서 형성된 분쟁해결의 관례는 WTO 체제하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각 회원의 이익형평보장의 원칙이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은 각 회원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각 회원으로 하여금 관련 협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여 권리의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취한 조치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소제기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중하고 선의를 다하여 분쟁해결제도를 운용할 원칙이다.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3조 제7항과 제10항은 회원에게 분쟁해결절차에서 신중하고 선의의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220]

PARTIES to GATT 1947 and the bodies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of GATT 1947.

219) Article 3 (General Provisions)

1. Members affirm their adherence to the principles for the management of disputes heretofore applied under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47, and the rules and procedures as further elaborated and modified herein.

220) Article 3 (General Provisions)

7. Before bringing a case, a Member shall exercise its judgement as to whether action under these procedures would be fruitful. ~ 이하 생략 ~.

10. It is understood that requests for conciliation and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hould not be intended or considered as contentious acts and that, if a dispute arises, all Members will engage in these procedures in good faith in an effort to resolve the dispute. It is also understood that complaints and counter-complaints in regard to distinct matters should not be linked.

넷째,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해결의 원칙이다. 국제무역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에 DSU와 그 부속문서 3(Working Procedures)과 4(Expert Review Groups)에서는 분쟁해결의 각 절차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두고, 관계자들의 독립성·공정성·비밀유지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원칙이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그 해결절차에서 개발도상국과 최저발달회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부 의무를 감경해주고 다른 회원들과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별한 고려는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예컨대 제4조 제10항에서는 회원들은 협상 기간 동안 특정한 문제와 개발도상국 회원의 이익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밖에도 제8조 제10항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분쟁일 경우 패널은 개발도상국의 요청이 있으면 개발도상국 회원으로부터 적어도 1명의 패널리스트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제12조 제10항, 제24조 제1항과 제2항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나타난다.[221]

⑶ 분쟁해결방법

지역경제단일화 법률의 유효성은 제정한 법규 및 그에 따른 기구설립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규범들이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범대상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지, 법률에서 규정한 권리·의무가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이라고 할 것이다.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기초로 구축된

221) 杜玉璟, 앞의 논문, 142면

분쟁해결제도는 WTO 법률체계의 핵심내용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협상, 조정, 알선, 화해, 중재, 패널(panel) 절차, 상소기구(appellate body) 심사 등의 방법과 절차 등이 포함된다.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과거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던 데서 탈피하여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확립하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처리한다.

첫째, 협상의 경우 관련 당사자는 협상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협상요청에 대해 응답하여야 하며, 협상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가 제때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 제소자 측에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 직접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222] 만약 협상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제소자 측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7항).[223]

둘째, 주선(good offices), 조정(conciliation), 중개(mediation)가 있다. 이들 방식은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voluntarily)

---

222) 3. I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is made pursuant to a covered agreement, the Member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shall,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reply to the request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nd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in good faith within a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If the Member does not respon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or does not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a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or a period otherwise mutually agreed,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then the Member that requested the holding of consultations may proceed directly to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223) 7. If the consultations fail to settle a dispute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a panel during the 60-day period if the consulting parties jointly consider that consultations have failed to settle the dispute.

진행되는 절차이다(제5조 제1항). 분쟁 당사자는 아무 때나 주선·조정·중개를 요청할 수 있고, 수시로 개시·종료될 수 있다(동조 제3항). 협상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선·조정·중개에 들어간 경우, 제소자 측은 패널설립을 요청하기에 앞서 협상요청을 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또한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면 패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조정·중개가 계속될 수 있다(동조 제5항).

셋째, 패널 절차이다.

WTO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패널기구를 설치하여 논의하는 과정이다. 패널절차는 분쟁해결양해서의 핵심이며 분쟁사안의 심사와 판정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고 있다. GATT 성립 초기에는 보통 6개월에 1번 모이는 전체회의에서 분쟁사안을 처리했는데 이후 3~5명의 전문가그룹에게 분쟁사안을 넘겨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들 전문가 패널은 각자의 고유한 신분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어느 국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전문가그룹 형식이 점점 확립되어감에 따라 WTO 분쟁해결은 사법적 성질을 띠게 되었다. 상기한 WTO의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패널의 구성, 패널의 기능, 절차, 자료청구권, 보고서초안 작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나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구성은 정부 측 또는 민간인 중에서 적격한 자로 구성되는데, 그 독립성과 다양한 배경 그리고 폭넓은 경험을 중시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분쟁 당사자 또는 제3참가자가 된 정부의 시민은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과 관련한 패널로 종사할 수 없다(동조 제3항).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널조사기간을 정하였는데 즉 패널을 구성한 날 및 수권조사조항이 확정된 날(from the date that the composition and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have been agreed upon)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당사자에게 발행되는 날까지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이 썩기 쉬운 것인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정이 긴급한 때에는 3개월 안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8항).[224]

6개월 안에(또는 긴급상황인 경우는 3개월) 보고서를 발행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패널은 지연사유 및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 설립 시부터 WTO 회원들에게 보고서가 전달될 때까지의 기간(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o the circulation of the report to the Members)은 9개월을 넘지 못한다(제12조 제9항).[225]

넷째, 상소심 절차(Appellate Review)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제3당사자가 아닌 분쟁당사자만이 패널

---

224) Article 12(Panel Procedures)

8. In order to make the procedures more efficient, the period in which the panel shall conduct its examination, from the date that the composition and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have been agreed upon until the date the final report is issued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s a general rule, not exceed six months.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relating to perishable goods, the panel shall aim to issue its report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in three months.

225) 9. When the panel considers that it cannot issue its report within six months, or within three months in cases of urgency,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issue its report. In no case should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o the circulation of the report to the Members exceed nine months.

보고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련 문제의 실질적인 이해를 가진다고 분쟁해결기구에 통지한 제3당사자는 상소기구에 서면제안(written submission)을 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

상소의 내용은 패널보고서에 관련된 법률문제 및 패널절차에서 내린 관련 법률해석에 국한된다(제17조 제6항).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개별 사안은 그중 3인이 처리한다(제17조 제1항). 상소기구는 법률과 국제거래에서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정부와도 어떠한 관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직·간접으로 이익충돌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분쟁의 심리(consideration)에도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제17조 제3항).

원칙적으로 상소기구의 절차는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상소기구에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의견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만약 6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연사유 및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넘지 못한다(제17조 제5항).

다섯째, 집행절차이다. 상소심의 보고가 회원들에게 배포된 후 30일 내에 회원들의 총의(consensus)에 의해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지 않는 한, 상소심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며, 분쟁당사자들은 이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제17조 제14항).

또한 패널보고서나 상소심보고서가 채택된 날 이후 30일 내에 개최된 분쟁해결기구 모임에서 관련 회원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rulings)과 권유(recommendation)의 이행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들 판정이나 권유를 즉시 따르는 것이 실행 불가한 경우, 관련 회원은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기간은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였다면 관계 회원이 제안한 기간으로 하며, 그러한 승인이 없는 때에는 판정·권유가 채택된 날 이후 45일 내에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한 기간으로 하며, 그러한 동의가 없으면 판정·권유가 채택된 날 이후 90일 이내에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하여 결정된 기간으로 한다(제21조 제3항).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된 후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한 일방은 DSU가 적용되는 협정(covered agreements)에 의해 당해 관계 회원(피제소회원)에게 적용되는 양허(concessions) 또는 기타 의무를 중지시키기 위해 분쟁해결기구로부터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제2문).[226]

그 밖에도 WTO는 GATT에 비해 분쟁해결의 절차에 대해 보다 높은 권위를 부여하여 규범화된 절차와 규칙을 형성하였다. 합의관할을 강제관할로 변경시켰고,[227] 투명성의 요청에 따라 절차의 공정을 더욱 기하였으며, 역(逆)총의제도(reverse consensus)[228]를 확립하

---

226) *Article 22 (Compensation and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2. If no satisfactory compensation has been agreed within 20 days after the date of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ny party having invok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may request authorization from the DSB to suspend the application to the Member concerned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227) 어느 일방 회원이 분쟁미해결을 원인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투소하면 다른 일방은 반드시 응소해야 하고, 쌍방은 모두 최종 통과된 재결이나 건의에 대한 분쟁해결기구의 집행상황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28) 총의는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견을 제거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만 출석한 회원이 안건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 유사한 점이 있다. WTO 출범 이전에는 체약국이 패널

여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지연·저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6조 제4항).[229] 과거에는 패널보고서의 채택에 있어 분쟁 당사자를 포함한 총의(consensus)가 요구되었으므로 특정 분쟁당사국의 반대가 있으면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역총의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당사국이 항소하거나 또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총의로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패널보고서를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230]

또한 패널보고에 대한 시행·감독을 확립하여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설치를 봉쇄할 수 있었고 이러한 봉쇄 가능성으로 인해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 체약국은 패널 보고서의 채택을 봉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WTO 출범 이전에는 이러한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WTO는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에 소극적인 회원국이 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위 '역총의방법'을 도입하였다. '역총의방법'이란 총의에 의하여 DSB에 제기된 안건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DSB가 안건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역총의방법'은 DSB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절차진행을 종료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며, 그 결과 과거 GATT하의 문제점이었던 피소국에 의한 패널설치의 저지, 보고서채택의 저지 등의 가능성이 사실상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DSU는 제소국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재형,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2집, 288-289면.

229) *Article 16 (Adoption of Panel Reports)*

4.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circulation of a panel report to the Members, the report shall be adopted at a DSB meeting unless a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the DSB of its decision to appeal or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adopt the report. If a party has notified its decision to appeal, the report by the panel shall not be considered for adoption by the DSB until after completion of the appeal. This adoption procedur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Members to express their views on a panel report.

230) 박덕영,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2003년, 202면.

이러한 사법적 성격의 무역분쟁해결제도는 각국 국내의 임의적 무역제한에 비해 보호주의적 성격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CEPA에의 적용 여부

하지만 이러한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들 제도를 중국과 홍콩 간의 CEPA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첫째, 기존의 지역경제일체화 협정과는 달리 하나의 국가 내부의 두 지역 간의 경제일체화인 CEPA 체계하에서는 내부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다. CEPA의 당사자가 모두 WTO의 회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일체의 분쟁을 WTO에 제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 현재 수많은 자유무역협정들은 이미 전통적 의미에서의 관세감량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다루는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규정과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실체적 규정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무역협정에는 WTO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지역무역협정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 전부가 WTO의 관할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는 관세인하, 원산지규칙, 특수한 세관조치, 경쟁규칙(competition policy), 상무적 목적의 입국(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 등에 대해 특유한 규정을 두고 있다.[231] CEPA의 경우 금융협력, 관광협력, 전문가자격의 상호인정, 무역투자편리화 등의 내용도 이미

231) 예컨대 경쟁규칙에 대해서는 Chapter 15에서, 상무적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Chapter 16에서 규정하고 있다.

WTO규칙의 조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들 사항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232]

셋째,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다자간 무역체제 하의 분쟁해결기제이다. 따라서 각 회원의 이익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이익이 강조되는 기본 토대 위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남북(南北)국가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속에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므로 끊임없는 경쟁이 요구된다. 반면 CEPA는 단일 국가 내의 상이한 지역 간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중국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단일 목표가 가능하며 상호간의 기본적 이익과 입장이 대립할 여지는 적으며, CEPA하의 규칙은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하다.

넷째, 다자간 무역체계의 실체적 규칙은 각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CEPA는 일국 내부의 이익대립을 조정하는 것이기에 실질적 공정성을 더욱 중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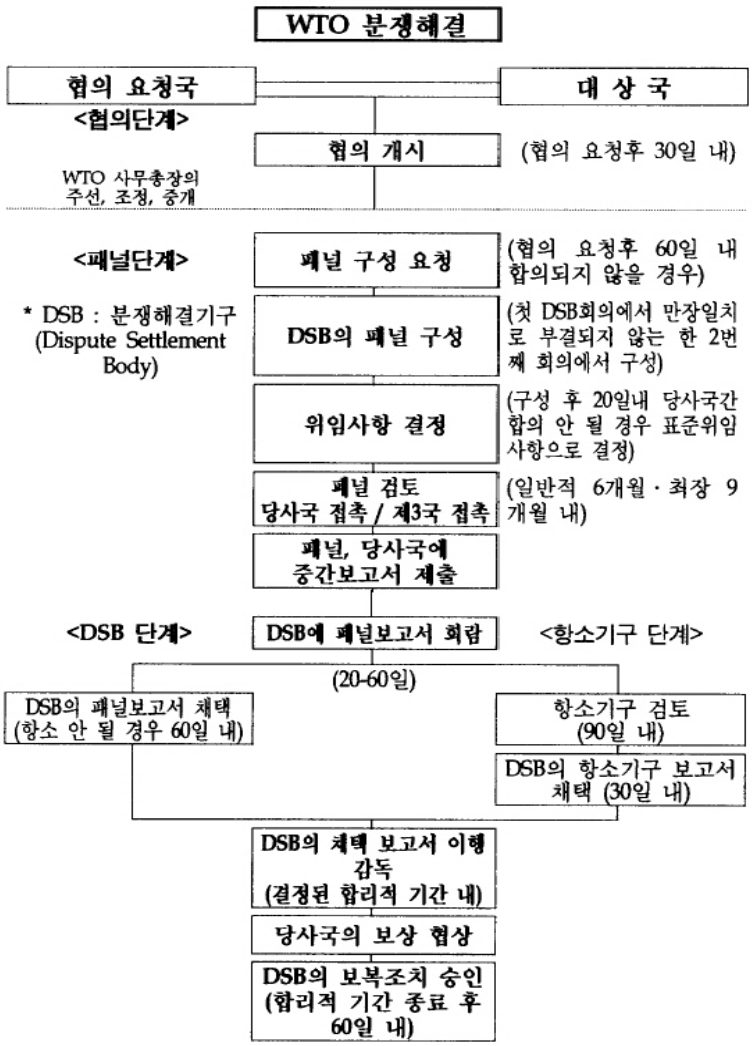
다섯째, WTO 분쟁해결제도는 WTO의 자주성 확립 및 강화에 달려 있다. 반면 CEPA의 분쟁해결제도는 WTO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여섯째, WTO 분쟁해결제도는 최후의 집행수단으로써 무역보복을 사용한다. 이러한 교차보복은 판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실력적 행사로서 강제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CEPA의 경우 이러한 상호보복 수단을 이용하여 양 지역의 무역형평을 도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33]

---

232) 李春艷, 앞의 논문, 26면
233) 慕亞平·李伯僑, 앞의 책, 130면

그림 2. WTO 분쟁해결절차 흐름도[234]



234) 박덕영, 앞의 글, 204면.

3. 지역경제단일화협정의 분쟁해결제도[235]

앞에서는 세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국제무역체계인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개략적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CEPA와 성격이 유사한 지역무역협정들 예컨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공동체(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분쟁해결제도를 보기로 한다.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제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분쟁해결제도는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일방 당사자인 양자간 투자조약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NAFTA의 분쟁해결제도는 협정이 적용되는 각종 유형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여러 분쟁해결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이한 분쟁에 대해 다른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다. ① 투자분쟁해결제도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제11장 B부분(제1115조~제1139조)에서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 사이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② 반덤핑 및 반보조금·반보장조치와 관련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다(제1901조~제1911조). ③ 노동방면의 분쟁해결제도로서 '북미노동협력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for Labor Cooperation; NAALC)' 제27조~제41조 부분이다. ④ 북미자유무역협정 상의 분쟁해결제도로서 NAFTA 제20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분쟁유형별로 다른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한

235) 杜玉璟, 앞의 논문, 149-155면

보장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이한 분쟁을 해결할 때 각각에 상응하는 전문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 기구는 거의 대부분이 각 회원국에서 파견한 대표가 참가한다. NAFTA 제20장에는 과학심의회(scientific review boards)[236]와 자유무역위원(free trade commission)회 및 실무그룹(working group)[237]이 규정되어 있고, 제19장에는 특별사무국(special secretariat)[238]과 양국 전문가집단(binational panels)[239] 및 Extraordinary Challenge Committee (ECC)[240]가 규정되어 있다.

나. 유럽공동체의 분쟁해결제도[241]

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공동체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일명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동 조약은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U는 분쟁해결에 대해 사법적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유럽공동체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를 두어 역내(域內)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재판소는 각 회원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일부 주권을 양허하여 창설한 초(超)국가적인 사법기구이다. 이는 국제법상 의미의 국제법원의 역할과 국내법상 의미에서의 헌법법원 · 행정법원 · 일반법원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유럽공동체 재판소의 기본 직책은 유럽공동체의 법률이 회원국 간

236) NAFTA Article 2015.
237) NAFTA Annex 2001.2.
238) NAFTA Article 1908.
239) NAFTA Annex 1901.2.
240) NAFTA Annex 1904.13.
241) 李春艷, 앞의 논문, 31-33면

에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유럽공동체 재판소 관할권의 법적 근거는 유럽공동체의 3개 기본조약에서 부여한 것이다. 이들 기본조약이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을 말한다. 즉 유럽공동체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이 우럽공동체 재판소의 관할로 되는 것은 아니며, 동 법원의 관할권은 조약에서 규정한 범위에 국한되고 이들 범위를 넘어선 사안은 유럽공동체의 법률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회원국의 국내 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유럽공동체 재판소의 관할권은 직접관할권과 간접관할권으로 구분된다.

직접관할권은 동 재판소에서 심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소송의 관할권이다. 이러한 사건은 크게 유럽공동체의 기구(機構)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대한 관할권 및 회원국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대한 관할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기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주로 위원회나 장관급이사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회원국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은 모두 피고 회원국이 유럽공동체법에 위반한 경우로서, 유럽공동체 위원회 또는 기타 회원국이 원고가 된다.

간접관할권의 경우는 주로 기본 재결절차를 말한다. 즉 회원국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회원국 법원에서 소송이 종결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국내법원 소송절차의 중간 단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절차에서 소송은 회원국 법원에 제기되었지만, 분쟁은 유럽공동체 법률에 관계되므로 관련 회원국의 법원은 유럽공동체 재판소에 자문을 구하고, 유럽공동체 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본적인 재결을 내린다. 이로써 당해 사안에 대해 간접관할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유럽공동체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은, ⅰ) 분쟁해결을 다루는 전문 사법기관으로서 초국가적 성격의 상설법원을 창설하였다는 점 ⅱ) 국내법원의 관할권이 상당량 유럽공동체 재판소로 이전된다는 점 ⅲ) 유럽공동체 조약을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 ⅳ) 유럽공동체 재판소의 판결은 회원국에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며, 관련 회원국의 승인여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분쟁해결제도[242]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경제일체화에 있어서 입법위주의 방식에서 집행과정의 다자간 협상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정상회의와 분쟁해결제도 등을 포함한 16개의 기구를 설립하였다. 분쟁해결제도는 1996년의 「분쟁해결기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총 12개 조문에 2개의 부속문서를 두고 있다.

분쟁 당사자 일방이 협상을 요청한 경우 회원국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응답을 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후 30일 내에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의정서 제2조 제3항). 제3조에서는 주선 · 중개 ·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분쟁의 당사자는 언제라도 주선 · 중개 · 조정에 동의할 수 있다. 그 절차의 개시와 종료 모두 수시로 가능한데, 이들 절차가 일단 종료되면 제소 당사자는 당해 문제를 고위 경제관료회의(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SEOM)에 제기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SEOM과 관련한 절차를 보면, 협상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분쟁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분쟁은 SEOM에 제출된다.

---

242) 楊麗艷, “區域經濟一體化法律制度研究”, 法律出版社, 2004년, 324-328면

그러면 SEOM은 패널을 설치하거나, 고려할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규칙·절차를 담당하는 특별 기구에 당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2항).

SEOM은 분쟁이 자신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패널을 설치하여야 하며, 패널의 규모·구성·위탁권한(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제5조 제2, 3항).

패널은 구성된 후 60일 내에 결과(findings)를 SEOM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분쟁당사자들에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SEOM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패널보고서를 고려하여야 하며, 패널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에 관한 판정(ruling)을 하여야 한다(제7조). 이러한 SEOM의 판정에 대해 분쟁당사자는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ASEAN 경제장관모임(ASEAN Economic Ministers, AEM)에 상소할 수 있다. AEM은 30일 내에 결정(decision)을 내려야 하는데, 분쟁당사국의 경제장관은 심의에는 출석할 수 있지만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상소에 대한 AEM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분쟁 당사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SEOM의 판정이나 AEM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합리적 기간은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기간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SEOM의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또는 SEOM의 판정에 상소한 경우에는 AEM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8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ASEAN의 분쟁해결절차는 협상, 주선·조정·중개, 고위경제관료회의의 판정, ASEAN 경제장관모임의 결정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방법 모두

국제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평화적인 분쟁해결방식이다.

둘째, ASEAN의 지역적 협정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예컨대 패널을 임명할 때 회원국의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부속문서 2 제1부분 제1조),[243] 판정 · 결정을 내릴 때 ASEAN의 매 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고위경제관료회의와 ASEAN 경제장관모임에서만이 판정 ·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이며, 전문적인 사법기관에서 분쟁을 처리하지는 않는다.

셋째, 상소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고위경제관료회의로 구성되는데 공무로도 바쁜 각국의 경제부장관들이 상소심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 지역경제단일화협정들의 분쟁해결제도 비교[244]

유럽공동체는 EU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이고 사법적인 성격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서면신청-조사-구두절차-판결로 이어진다. 또한 초국가적 성격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회원국간의 분쟁에 관여하므로 신속하게 피해 당사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 특색이라 할 것이다.

---

243) APPENDIX 2. WORKING PROCEDURES OF THE PANEL
I. Composition of Panels
1. Panels shall be composed of well-qualified governmental and/or non-governmental individuals, including persons who have served on or presented a case to a panel, served in the Secretariat, taught or published on international trade law or policy, or served as a senior trade policy official of a Member State. In the nomination to the panels, preference shall be given to individuals who are nationals of ASEAN Member States.

244) 李春艷,, 앞의 논문, 35-39면

NAFTA의 경우는 중재패널 및 상소심심리를 중심으로 한 준사법적 성격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자율협상-주선·중개·조정-중재패널의 중재로 이어진다. 다른 지역경제단일화 협정이나 WTO의 관련 제도들과 비교할 때 패널-상소심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중재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 NAFTA의 특색이라 할 것이다. NAFTA의 경우는 관련 회원의 수는 많지 않으나 협력분야가 광범위하여 관련 법률규칙도 복잡하다. 따라서 분쟁해결방식도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협상과 조정 및 중재를 기본적인 틀로 사용한다. 따라서 발생문제에 대한 분쟁해결제도의 적확성(的確性)이 높으며 분쟁형태별로 적합한 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응용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경우에는 협상-주선중개-패널-상소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WTO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적 협정으로서의 색채가 강하고 정치적인 해결방식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ASEAN은 협상-패널-상소심의 절차구조를 취하고 있다. ASEAN의 경우는 비록 WTO에서 취하고 있는 탈(脫)정치·탈(脫)국력의 방식을 좇고, 규칙이 지배하는 분쟁해결의 방식을 따르고는 있으나, 실제운용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인 다자간 협상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할 것이다.

4. CEPA의 분쟁해결제도 보완

가. 참조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식

CEPA의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경우 CEPA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것은 WTO와 같이 사법화된 전문가집단에서 판단하는 방식과 지역

경제기구에서 중재하는 방식이다. 이중 후자의 방식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WTO의 분쟁해결방식은 패널을 통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인 분쟁해결방식이다. 이는 국제무역이 힘에 의해 지배되어 왜곡되는 것을 규칙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방식이다. 분쟁이 당사자들의 정치적 · 경제적 힘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요구하며, 이러한 투명성 제고는 상소심을 통한 해결절차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고 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여한다.

또한 분쟁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널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분쟁당사자를 배제하고 제3자측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패널구성원의 전문능력과 소양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다 철두철미한 법률 적용 · 해석이 가능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단일화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쟁해결방식에 비해 직접적이고 효율성이 높으며 투명성의 강화와 전문화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중재방식은 크게 협상, 자유무역위원회 회의, 중재패널의 3단계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30일 내에 당사자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은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방식에는 기술고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주선 · 조정 · 중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자유무역위원회는 일방의 청구에 따라 중재패널(arbitral panel)을 설립을 청구할 수 있다.[245] 다만 이러한 중재패널

245) NAFTA Article 2008.

의 최종보고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보고서를 받은 후 중재판정 및 제안에 부합하는 분쟁해결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 협의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손해를 발생시킨 일방은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거나 또는 손해를 입은 일방은 동일한 이익과 관련한 의무집행을 잠시 중지할 수 있다.

CEPA의 분쟁해결방식을 구축함에 있어서 NAFTA의 방식을 참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은 CEPA와 마찬가지로 지역무역단일화 협정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분쟁해결방식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자유무역위원회는 GATT의 체약단과 비슷하다. 정책결정에 관한 최고기관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실행과 감독을 책임진다. CEPA의 경우 연합지도위원회를 설립하여 CEPA의 집행 및 해석 그리고 CEPA 집행과정 중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구의 직능이 일부 유사하므로 북미자유무역협정상의 자유무역위원회의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246]

나. CEPA의 분쟁해결제도 보완 시 고려할 점

(1) 협상우선원칙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직접 CEPA 당사자인 중국과 홍콩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중국과 홍콩 간의 무역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246) 杜玉璟, 앞의 논문, 158-159면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WTO의 관련 제도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 의의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협상우선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협상해결에 대해서도 시간적 제한을 두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협상을 제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협상이 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상을 개시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패널을 구성하여 그 해결을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협상이 어느 일방의 고의적 또는 불성실한 응대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⑵ 전문가(패널)을 이용한 해결방법 모색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제3의 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에도 이들 전문가그룹을 구성하는 방법과 절차, 활동하는 기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그룹의 구성에 대해서도 분쟁당사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때에는 제3의 자(또는 기관)에게 그 선임 및 구성의 결정권을 주는 방법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i) 패널구성을 신청하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분쟁

사항에 관한 권리청구를 분명히 하여 패널의 관할범위와 권한을 명료하게 범위 지워야 한다.

(ii) 패널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연한 사항이지만 패널을 구성할 때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인데, 이들 패널의 수 및 자격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패널은 개인의 전문적 능력에 따라 선임되는 것이며 정부나 어떠한 기구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정부나 기구도 이들 패널에 대해 지시를 내리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확보하여야 한다.

(iii) WTO와 마찬가지로 이들 패널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가능한 명확히 하고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패널의 자료조사기간, 심의기간 및 예비보고서 작성 등 각 단계 별로 기한을 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iv) 입증책임을 분명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우 제소하는 자가 상대방의 규정위반과 '기본사실(prima facie)'을 입증하여야만 패널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EU 대(對) 미국·캐나다 간의 호르몬을 포함한 소고기와 관련한 분쟁사안인 일명 호르몬 안건[247]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EU가 호르몬이 함유된 소고기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실시한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SPS)」 제2조, 제3조,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보고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EU가

247) WT/DS26/R/USA; WT/DS48/R/CAN.

당해 협의를 위반하였다는 기본사실을 제출할 부담을 지며, 그 후 (자신들이) 취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할 입증책임은 EU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248] 이어 전문가그룹은 기본사실을 창설하는 표준을 세분화하여 "일단 제소자 측에서 기본사실을 창설하면 즉 ① 분쟁을 야기한 조치가 국제표준에 존재하고 ② 분쟁을 야기한 조치가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입증책임은 제소상대방에게 이전한다."고 하였다.[249] 이점이 문제되는 것은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영미법과 대륙법계에서 이해하는 바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미법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사실인정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배심원단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the burden of persuasion). 이점에

---

248) Panel Report
8.58
We thus find that, for the purposes of this dispute, Canada bears the burden of presenting a prima facie case of inconsistency with the SPS Agreement, after which the burden of proof shifts to the European Communities to demonstrate that its measures in dispute meet the requirements imposed by the SPS Agreement.

249) 8.87
We recall the findings made above on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SPS Agreement391, in particular that for the obligations imposed by the SPS Agreement that are relevant to this case, the party contesting a sanitary measure (in casu Canada) bears the initial burden of proof in that it has to present a prima facie case of inconsistency with the SPS Agreement, after which the burden of proof shifts to the party imposing the measure (in casu the European Communities).
8.90
We find, therefore, that once the complaining party provides a prima facie case (i) that there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with respect to the measure in dispute, and (ii) that the measure in dispute is not based on this standard, the burden of proof under Article 3.3 shifts to the defending party.

있어서는 영미법이나 대륙법 모두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두 번째 의미인데, 즉 당사자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사건의 기본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법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또한 당해 사안을 배심원단에 보내 사실심리를 진행시킨다는 다는 것이다. 이는 영미법상 배심원단과 법관의 업무가 분화되어 있는 데에서 유래하며 “the burden of going forward” 또는 “the duty of passing the judge”라고도 한다. 두 번째 의미에서의 입증책임 문제는 법관과 배심원단으로 구분하지 않는 대륙법계에는 없는 의미이다.[250]

한편 WTO의 분쟁해결제도에서는 배심원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심리와 법률심리를 엄격히 구분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라는 대륙법계 국가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따르면 제소자는 피(被)제소자의 행위가 WTO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예외조항이나 항변을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s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Disputes, DSU)」에서도 ‘기본사실’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주된 초점이 위에서 말한 입증상의 부담 관련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DSU 제3조 제8항에서는 “관련 협의 소정의 부담할 의무에 위반한 경우, 당해 행위는 사실상 이익상실 또는 손해를 입은 사안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이들 규칙에 위반한 것은 관련 협의의 기타 회원 당사자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

250) 符望, “世貿組織爭端解決機制中的擧證責任分析”, 國際貿易問題, 2000.04, 37면

한다."[251] 즉 동 조항에서는 일단 협의에 위반했으면 이익을 상실했다거나 손해를 보았다는 '일응의 추정(prima facie)'을 받고 사안은 분쟁해결시스템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전문가그룹(패널)이 안건을 수리하는 기준은 이익의 손해나 상실이 관련 협의상의 의무위반으로 일응 추정되는가라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바로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상기한 두 가지 표준(즉 ① 분쟁을 야기한 조치가 국제표준에 존재하고 ② 분쟁을 야기한 조치가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음)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 상실이나 손해를 관련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단일한 국가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법적 체계와 전통은 각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CEPA에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경우 입증책임에 대해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분쟁당사자는 전문가그룹에 안건과 관련 있는 지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불이익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전문가그룹(패널)는 업무기간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정부기구(NGO) 등이 제출한 자료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들 기구들은

---

251) Article 3 (General Provisions)

8. In cases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is means that there is normally a presumption that a breach of the rules has an adverse impact on other Members parties to that covered agreement, and in such cases, it shall be up to the Member against whom the complaint has been brought to rebut the charge.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분쟁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정장한 절차에 다라 진행되는 패널의 사안처리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료 제공자·수령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

(vi) 사실심사를 우선하여야 한다. 상술한 WTO의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7조와 제11조는 각각 패널(전문가그룹)의 범위와 직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패널기구는 분쟁사안의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심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분쟁해결기구의 의견제출이나 판정에 협조한다. 그리고 제6조와 제17조는 상소기구의 심사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상소는 전문가그룹의 보고에 관련한 법률문제와 전문가그룹이 내린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이들 조항은 전문가그룹과 상소기구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상소기구의 권한은 법률문제에 제한되며, 따라서 사실문제의 인정은 전문가그룹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다. 전문가그룹은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1조의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밖에 전문가그룹의 사실인정을 보조하는 절차로서 잠정검토(interim review)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실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잠정검토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WTO의 「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관련 규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 동 양해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진술부분(comment)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은 불필요하다.[252] 따라서

252) *Article 15 (Interim Review Stage)*

제1항을 없앰으로서 전문가그룹의 잠정검토기간을 줄여 절차를 더욱 간결하게 하고 전문가그룹의 보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정검토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잠정검토와 상소절차는 법률문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전문가그룹이 잠정검토를 거쳐 법률적 결론을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잠정검토의 범위 중 법률부분의 보고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면 전문가그룹은 사실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분쟁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상소기구는 전문가그룹의 법률조사결과 및 결론을 유지(uphold) · 변경(modify) · 파기(reverse)할지만을 검토하면 될 것이다.[253]

이렇게 한다면 전문가그룹과 상소기구 간 각자의 분업이 보다 분명해 진다. 잠정검토는 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하고, 사실문제가 더욱 분명해 졌을 때 비로소 상소기구에서 법률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

1. Following the consideration of rebuttal submissions and oral arguments, the panel shall issue the descriptive (factual and argument) sections of its draft report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in a period of time set by the panel, the parties shall submit their comments in writing.
2.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set period of time for receipt of comments from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panel shall issue an interim report to the parties, including both the descriptive sections and the panel's findings and conclusions. Within a period of time set by the panel, a party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the panel to review precise aspects of the interim report prior to circulation of the final report to the Members. At the request of a party, the panel shall hold a further meeting with the parties on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written comments. If no comments are received from any party within the comment period, the interim report shall be considered the final panel report and circulated promptly to the Members.

253) *Article 17 (Appellate Review)*

13. The Appellate Body may uphold, modify or reverse the legal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panel.

⑶ 상소기구절차 관련 유의점

① 상소기구의 절차는 간결, 신속성 확보.

상소기구는 법률문제 심사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명하게 하고, 분쟁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상소기구는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곳이므로 법률·무역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CEPA에 상소기구를 둘 때는 상설기구로 하고 그 구성 역시 중국이나 홍콩의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이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용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WTO의 경우 상소기구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254] CEPA의 경우 중국-홍콩 또는 중국-마카오간의 양 지역간의 분쟁일 뿐이므로 WTO 분쟁해결기구처럼 규모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적당히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상소심에 파기환송여부를 허용할지 문제

상소심절차에서 패널보고서를 파기(reverse)할 경우 파기자판(破棄

254) *Article 17 (Appellate Review)*

1. A standing Appellate Body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SB. The Appellate Body shall hear appeals from panel cases. It shall be composed of seven persons, three of whom shall serve on any one case.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serve in rotation. Such rotation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ing procedures of the Appellate Body.

自判) 외에 파기환송(破棄還送)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분쟁해결기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제17조 제6항과 제13항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이다. 제6항에서는 상소절차의 경우 패널보고서에서 다룬 법적 문제와 법적 해석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255] 제13항에서는 상소심의 권한으로서 패널의 법적 판단과 결론에 대해 유지 · 변경 ·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패널절차의 경우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법적인 문제를 모두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상소절차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법적 판단과 결론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상소기구는 패널의 사실인정에 대해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시 파기환송할 권한도 없다면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EU, 홍콩, 캐나다, 요르단 등 많은 국가들이 상소기구에 파기환송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WTO의 분쟁해결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증대할 우려가 있고,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경우 패널기구의 상설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256] 만약 패널기구의 판단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상소심절차의 판단대상은 패널기구의 법적 문제 · 해석에 한정되므로 상소심기구에서 사실인정까지 한다면 명문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판단할 때 패널의 사실인정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이를 해당 패널기구에 돌려보내 재차 판단하

255) 6. An appeal shall be limited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256) 김인숙,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논의와 법적 쟁점", 서울국제법연구 10권 제2호(2003), 79면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기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법률심인 상소기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오류 있는 판단을 내릴 경우 회복할 수 없게 되며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57]

따라서 CEPA에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CEPA가 중국과 홍콩에 끼친 영향[258]

1. 개 관

CEPA가 시행된 지 약 6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각종 전염성 질병의 창궐 등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소들로 인해 홍콩 경제는 1990년대 말을 전후하여 침체에 처했다. 그런데 최근 홍콩경제는 다시금 발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2004년 홍콩의 GDP 성장률은 7.5%에 달했고, 실업률도 2003년의 8.7%에서 2005년에는 6.4%로 떨어졌으며, 중국에서 홍콩으로의 개인여행을 개방한 이후 홍콩경제에 약 120억 홍콩달러의 소비효과가 진작되었다.

이러한 홍콩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경제성장에는 CEPA가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CEPA 시행 후 몇 년간 홍콩경제

257) 김인숙, 위의 글, 80-82면.

258)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對香港經濟的影響", 立法會 工商事務委員會 資料文件, 立法會 CB(1)1849/06-07(04)號 文件; 華曉紅·楊立强, "中國內地與香港CEPA效益評價". 國際貿易(2008年 第11期); 陣建·王博, "論CEPA實施後的香港經濟", 教學與研究, 2007年 第1期 정리

의 회복에 끼친 영향을 말한다면 홍콩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홍콩경제의 구조변화를 촉진하였으며, 상해 · 광동 · 홍콩의 경제협력을 촉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CEPA 실시 이후 홍콩은 3가지 유형의 제조업 및 제조공정에서 발전전망이 밝아졌다. 첫째 유형은 시계산업 같이 현재에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홍콩 현지의 브랜드 산업인데, 이들은 무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은 홍콩 · 마카오지구의 원산지 상품이 전면 개방된 이후 국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서 방직산업이 그 한 예이다. 유럽 · 미국 등이 중국의 점점 많아지는 방직품수출에 대해서 특별보장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부 홍콩 기업들은 생산공정과 가공제조 절차를 다시 홍콩으로 되돌려서 홍콩원산지증명을 취득함으로써 일종의 무역마찰을 피하는 수단이 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CEPA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홍콩기업들은 중국이나 제3의 다국적기업과의 합작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정보 · 과학기술 등의 신(新)산업이 그 예이다.

한편 CEPA는 홍콩경제의 변형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산업이 그 중심에 있다. 우선 중국과 국제시장에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홍콩의 경제발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금융 · 물류자문 · 전문직 서비스이다. 둘째는 홍콩에서의 소비를 위주로 하면서 홍콩의 산업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업종으로서 예컨대 부동산 · 요식숙박 · 오락 · 건축 등이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 약간의 제조 · 가공공정이 수반되는 산업이다. 끝으로 전통제조업이나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서비스업과 같은 경우는 홍콩 현지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점차 위축되어가는 산업이다.

정리한다면 CEPA 시행으로 인해 홍콩은 횡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의 광범위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창의적 문화산업과 금융재무회계와 관련 있는 국제서비스 외주업 등의 방면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형성하였다.[259]

이하에서는 CEPA가 중국과 홍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화물무역방면

홍콩은 이미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에 홍콩산 제품의 수출과 제조업의 중요성은 하락하여 왔다. 현재 홍콩산 제품의 수출은 홍콩 총수출액의 5.5%를 차지하는데 불과할 뿐이고, 제조업은 현지 총 생산액의 3.4%를 점유하며 총취업자수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산 제품 수출의 약 30%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 약 반 이상이 외국으로 보내는 가공(加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CEPA가 화물무역 방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가. 홍콩경제의 비약적 활성화

CEPA 체결 후 약 2년 동안의 관세인하가 있은 후 2006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완전 홍콩원산의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해관과 홍콩의 공업무역서는 매년 2차례 화물원

259) 陣建·王博, "論CEPA實施後的香港經濟", 앞의 글, 63-64면

산지표준과 관련하여 협상을 하여 보완을 해 오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서로가 중요한 무역상대자의 하나이므로 양 지역의 관련 무역액은 줄곧 각자의 대외무역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간의 무역이 중국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홍콩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 양방면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양 지역의 무역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원산지수출입이고 다른 하나는 중계무역(원어: 轉口)인데, 이중 중계무역액이 약 50%에 이른다. 두 지역 간의 원산지수출입의 경우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두 지역 간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에는 93%, 2003년에는 95%, 2007년에는 97%를 초과하는 등 증가하고 있다. 두 지역 간의 무역 중 홍콩 생산품의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고, 중국의 수입상품 중에서 홍콩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6년에는 6% 정도였으나 CEPA가 체결된 2003년에는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홍콩 생산품이 홍콩의 수출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결국 홍콩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커지고 무역상대방도 홍콩 이외에 다양화되는 것과 반비례하여 중국의 수입상품에서 홍콩산(産)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한다고 할 것이다.

홍콩의 중계무역금액 중 90%가 중국과 관련이 있으며, 두 지역 간의 중계무역은 홍콩이 무역이익을 취하는 주요한 원천이다. 또한 가공무역도 두 지역 간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홍콩의 통계에 의하면 홍콩 생산품의 중국으로의 수출 중에서 가공무역 비율은 50%를 초과한다고 한다. 다만 이 역시 하강의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중국과 홍콩 간의 무역통계를 CEPA의 시행 전후로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발전추세를 보면 두 지역 간의 무역에 대해 홍콩의 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의존도는 하강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을 본다면, 중국의 경우 홍콩 이외의 상대방과의 무역 증가속도가 홍콩과의 무역의 증가속도를 앞서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바뀌기는 어려울 듯하다. CEPA가 시행되면서 홍콩산 제품의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홍콩 대외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중국의 대외무역에서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CEPA의 시행으로 중국이 얻는 무역이익보다는 홍콩이 누리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나타난다.

둘째, 중국의 관세손실은 제한적이며, 홍콩 상품이 중국에 주는 충격도 또한 극히 미미하다. 두 지역의 무역 중 약 3% 정도가 관세와 관련이 있다. 홍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양은 비교적 적고 그 비중도 크지 않다. CEPA가 체결되기 전인 2002년을 보면, 홍콩 원산 상품의 중국 수출 액수는 414억 홍콩 달러(미화 약 53억 달러)로서 홍콩 상품 수출의 26.5%를 점하였고, 중국 총수입의 1.8%를 차지하였다. 이중 가공무역이 69.8%인데 기본적으로 관세와 관련이 없으므로, 수입관세와 관련이 있는 홍콩 상품의 중국 수출은 2002년의 경우 약 125억 홍콩 달러(미화 약 16억 달러)이다. 당해 연도의 중국 평균 관세율을 12% 로 계산할 경우 약 2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있었다.

CEPA가 시행된 후 2년째인 2004년의 경우 홍콩 상품의 중국 수출이 관세혜택으로 인해 눈에 띄게 증가되지는 않았다. 중국 수출액

은 379억 홍콩 달러로서 당해 연도 홍콩 총수출액의 30.1%를 차지하였다. 그중 67.5%가 가공무역수출이었으므로 즉 약 130억 홍콩 달러의 상품이 일반무역이 되는데, 2002년 대비 5억 홍콩 달러가 증가한 데 불과하다.

2006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유예 받은 과도기가 끝나게 되는데, 평균관세율은 10% 이하로 인하되었으며 CEPA의 경우는 무관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 상품의 중국 수출은 가공무역부분을 제외하고서도 213억 홍콩 달러(약 28억 달러)로 상승하였으나 영향을 받은 관세액은 3억 달러가 되지 못했다.

2008년 4월말 현재, 홍콩 공업무역서 및 홍콩정부가 비준한 기타 기구에서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는 33,403건이고 신청대비 발급율은 97%에 이른다. 하지만 무관세 대우를 향유하는 홍콩화물의 누계 가치는 16억 달러에 불과했다.

셋째, CEPA 시행 후 홍콩상품의 중국 수출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중국과 홍콩 간의 무역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CEPA 체결 시 고려한 사항 중의 하나는 바로 관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원가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CEPA를 체결한 주요 이유는 되지 못하는데, 즉 무관세를 이용해 홍콩 상품의 중국 수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CEPA 시행 이후 5년 동안 홍콩 상품의 중국 수출은 38억 홍콩 달러(5억 달러)만 증가하여 연평균 2.78% 증가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200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CEPA 하에서 원산지증서에 따른 수출은 계속 상승하였고 2005년에는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아래 표 참조). 다만 아래의 표를 보건대 CEPA 하에서 원산지증서를 통한 수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에는 그

상승폭이 매우 컸다. 성장세가 감소하는 부분은 원산지증서의 신청이 없는 수출분야로서 주로 가공무역분야이다.

표4. CEPA하의 화물무역통계[260]

단위 : US 억 달러

연도	CEPA 원산지증서 관련 화물수출		홍콩생산품의 중국 수출			홍콩생산품의 수출총액		
	총액	연간 증가율 (%)	총액	연간 증가율 (%)	CEPA 하의 화물수출 비중 (%)	총액	CEPA 하의 화물수출비중 (%)	홍콩생산품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3	-	-	47.12	-	-	156.03	-	30.2
2004	1.47	-	48.59	3.1	3.0	161.54	0.9	30.1
2005	3.03	105.7	57.23	17.8	5.3	174.36	1.7	32.8
2006	4.17	37.5	51.63	-9.8	8.1	172.44	2.4	29.9
2007	5.68	36.3	52.06	0.8	10.9	139.87	4.1	37.2

CEPA로 인해 홍콩에 유입된 자본 중 무역상이나 제조상을 위한 투자자본을 보면 2005년은 1억 3백만 홍콩달러였으며, 2006년은 2억 2백만 홍콩달러, 2007년은 2억 4천만 홍콩달러이다. 이 중에서 약용(藥用) 및 간병용품의 생산·수출에 종사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2007년의 경우 CEPA가 포괄하는 모든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

260) "CEPA 원산지증서 관련 화물수출" 부분의 수치는 홍콩공업무역서 출처로서, 단위는 억 홍콩달러임. 기타 수치는 홍콩정부통계처(香港政府統計處)의 출처이며 단위는 억 홍콩달러임. 미화 달러로의 환산 비율은 $1 = 7.8 홍콩 달러로 함. - 華曉紅·楊立强, 앞의 글, 93면 재인용

표5. CEPA로 인해 홍콩에 유입된 자본 중 무역상이나 제조상을 위한 투자자본

단위 : 백만 홍콩달러

상품유형	2005년	2006년	2007년
약용 및 간병용품	36.3	188.2	159.4
음 · 식품	26.8	23.4	64.5
CEPA가 포괄하는 모든 상품	103.3	202.2	238.9

주(註) : CEPA 원산지증서를 사용했거나, 2006년 제2단계 CEPA 원산지규칙 협상에 들어간 상품을 신청하였거나, 2005년과 2006년 8월 까지 내에 CEPA가 포괄하는 화물을 수출한 적이 있는 무역상제조상 만을 포함함.

나. 홍콩산 소비재의 중국 수출 증대

위 표4를 보건대 홍콩생산품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홍콩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홍콩생산품의 중국으로의 수출 중 CEPA와 관련한 수출비중은 줄곧 10%대를 밑돌다가 2007년에야 10%를 갓 넘어섰다. 따라서 홍콩 수출 중 CEPA와 관련된 화물무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홍콩생산품의 중국 수출 증가율이 정체성을 띠는 것과 비교할 때, CEPA 원산지증서 관련 화물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공무역을 위주로 한 중국-홍콩 간의 화물무역방식이 중국의 시장(市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하고 홍콩에서 판매'(원어: 前店後廠)[261] 한다는 양 지역 간의 협력방식이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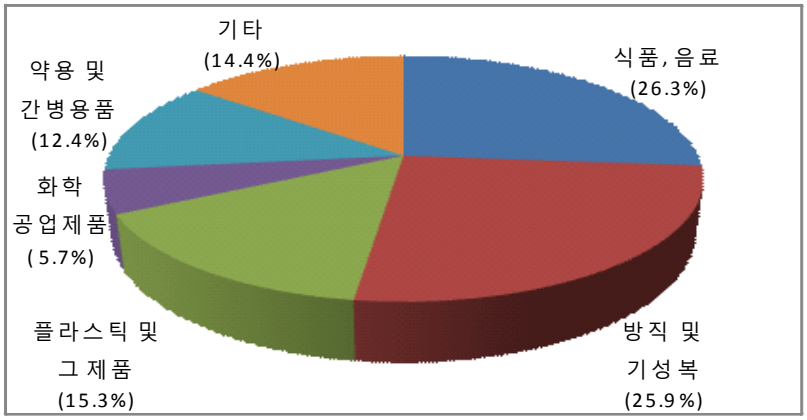
261) "前店後廠"은 직역하면 '뒤는 공장, 앞은 점포'라는 의미인데, 중국의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지역과 홍콩 · 마카오 지역의 경제협력 중 지역적 분업과 협력을 하는 독특한 형식을 말한다. '前店'은 홍콩 · 마카오 지역을, '後廠'은 주강삼각주 지역을 말한다. 주강삼각주 지역은 중국 남쪽의 광동성(廣東省) 동남부 지역으로서 주강(珠江) 하류지역이다. 주강삼각주 지역은 홍콩특별행정구 ·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인접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과도 가까워 중국의 '남대문'이라고 불린다.

하기 시작하였으며 두 지역 간의 일반무역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관세율이 10% 수준 대를 유지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CEPA의 기능은 향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기한 표1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승인건수 관련 통계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화물유형 중 상위 3개 분야를 보면, 승인된 전체 48,351건에서 식품·음료업이 12,739 건으로 26.3 %, 방직 및 기성복이 12,527 건으로 25.9%, 약용 및 간병 용품이 6,018 건으로 12.4 %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소비재 상품이다. (아래 그림 참조)

그림3. 업종별 원산지증서 획득 통계

(2009년 9월 말 현재)



홍콩·마카오 지역은 해외무역창구로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해외주문을 받아 신상품의 제조·개발, 원재료·원부품의 공급, 상품품질 조정, 시장확대와 대외판매를 진행하면서 '점포(店)'의 역할을 맡고 있다. 주강삼각주 지역은 토지·자연자원·노동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상품의 가공·제조·조립을 담당하면서 '공장(廠)'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홍콩·마카오 지역이 앞에 위치하고 주강삼각주 지역이 후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前店後廠'이라고 부른다. - 百度百科 참조 (http://baike.baidu.com/view/182459)

이러한 무역구조는 중국과 홍콩 간의 산업협력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 홍콩산 중간상품 및 원료품의 중국 수출은 주로 가공무역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가공무역에는 관세의 영향이 적으므로 CEPA에서 무관세를 시행하는 효용이 이러한 가공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오히려 이 부분은 CEPA의 무관세 조치보다는 CEPA상의 간편화 조치에 더욱 관련이 있으며, 물류 · 상업무역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무역 영역이 개방되면서 소비재 상품만이 우대관세혜택을 향유하는 것이다.

홍콩은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상품의 품질 및 차별화에 대해 중국의 시장에서는 수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CEPA는 이들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이들 상품의 무역량과 비중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CEPA가 포괄하는 범위는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중국으로 보내는 홍콩산 제품의 수출액의 약 64%를 점유하였는데, 2006년에는 70%를 넘어섰다.(아래표 참조)

표6. 중국으로 가는 홍콩산 제품의 수출 및 CEPA의 포괄범위[262]

단위 : 백만 홍콩달러

	음료 및 식품	약용 및 간병용품	기타	총계
2001년	314	750	48,483	49,547
2002년	363	708	40,303	41,374
2003년	299	1,037	35,422	36,757
2004년	318 (0.1%)	863 (97.4%)	36,717 (64.2%)	37,898 (64.4%)
2005년	458 (47.9%)	1,124 (99.6%)	43,060 (64.7%)	44,643 (65.4%)
2006년	605 (48.6%)	1,222 (99.8%)	38,441 (69.6%)	40,268 (70.2 %)

주(註) : ( )안의 수치는 CEPA의 원산지규칙에 부합하는 생산품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관련 생산품이 무관세 우대 신청을 했는지 여부 즉 원산지증서를 획득하여 수출했는지 여부를 불문한 것이다.

262)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貨物貿易) - 附錄Ⅱ, 立法會工商事務委員會, 立法會CB(1)1849/06-07(04)號文件, 2면

2004년 CEPA 시행 이래 CEPA상의 원산지증서의 전체 사용률은 4.7%에서 11.5%로 증가하였다. 이는 관련 업계에서 점차 CEPA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CEPA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

표7. CEPA상의 원산지증서를 취득한 화물 및 CEPA 원산지증서의 사용률[263]

단위 : 백만 홍콩달러, %

	식·음료품	약용 및 간병 용품	기타	총계
2004년	0.3 (100%)	737 (87.7%)	413 (1.8%)	1,150 (4.7%)
2005년	188 (85.4%)	1,088 (97.2%)	1,091 (3.9%)	2,366 (8.1%)
2006년	293 (99.6%)	1,201 (98.5%)	1,760 (6.6%)	3,254 (11.5%)

주 : ( )안의 수치는 CEPA 원산지규칙합의를 충족한 홍콩화물의 수출 총액 중에서 CEPA상의 원산지증서를 취득한 화물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즉 CEPA 원산지증서의 사용률을 말함).
: CEPA상의 원산지증서를 획득한 화물이 최종적으로는 수출이 안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률 관련 수치는 참고로만 활용할 것.

3. 서비스무역방면

가. 개관[264]

CEPA는 중국과 홍콩이 서비스무역 방면에서 쌍방의 관계를 강화

263)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貨物貿易)-附錄 Ⅱ, 앞의 문건, 5면
264)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服務貿易)-附錄 Ⅰ, 앞의 문건, 1면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간의 경제적 연계 측면에서의 입지를 다시 정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무대를 만들어 내었다. 중국에서 개방한 서비스업종의 시장과 여기에 유입된 홍콩의 투자를 볼 때, 그리고 인재(人才) 및 전문지식이 보다 자유롭게 상호 간에 유통되는 것을 허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EPA를 시행함으로 인해 중국과 홍콩의 상업적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된다.

과거 20여 년간 중국의 경제는 급속히 발전을 이루었는데, 제2차 산업이 크게 번창하여 이미 제3차 산업의 발전을 초과하였다. 보다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고 경제발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갖춘 서비스업이 발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인식하였다. 국제 투자자들 또한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상업적 기회의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 현재의 중국 입장에서 본 다면 투자자금이 부족하지는 않다.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전체 경제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지식 · 기술 · 관리능력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자금을 도입하는 것을 빌어 보조적으로 기능과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중점이 있다. 중국의 최대 외부 투자자이며 주요 금융 중심지인 홍콩을 다시금 자리매김으로써 계속 변화하는 중국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CEPA에 의하면, 중국은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를 위해 이들이 중국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우대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양허한 것과 비교할 때 개방시기가 더욱 빠르며 그 범위도 더 크다. 따라서 홍콩의 회사로서는 중국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홍콩은 CEPA로 인해 부여된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우량한 자금이 중국의 서비스업에 투자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중국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었을 때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서비스무역 방면에 대해 CEPA가 취한 조치가 홍콩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홍콩의 투자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 개방된 22개 서비스업종의 통계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다만 '전문자격서비스(원어: 專業資格服務)'의 경우 여러 업종에 걸쳐 있는 것이어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 업종별로 분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개인자영업자(원어: 個體工商戶)의 경우 점포를 가지고 있을 개인의 범위를 추출해 내기가 어려워 조사결과에서는 제외되었다.[265]

2004년부터 CEPA는 22개 서비스업종별 회사에 91억 홍콩달러의 서비스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이들 회사가 같은 시기동안 중국 시장에서 얻은 전체 서비스 수익의 4.4%에 상당한다. 과거 수년 간 CEPA 실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수익은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의 경우 CEPA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 대해 행해진 서비스무역의 총 가치는 42억 홍콩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2004년 대비 2.6배 성장한 것이다.

22개 업종 중 CEPA로 인해 유발된 서비스수출의 가치로 환산하여 구분하면, 2004년과 2005년 및 2006년 모두 소매서비스가 각각 11억 홍콩달러, 20억 홍콩달러, 25억 홍콩달러를 달성하여 최대점유율

265) 홍콩 입법회의 본 자료조사에 있어서 '개인자영업자'가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의 정부 측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홍콩 주민들이 '개인자영업자'에게 개방된 조치를 잘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12월 현재, 홍콩 주민이 중국의 32개 성(省)·직할시·자치구 중에서 24개 지역에 2,485개의 개인자영업을 개설하였으며, 관계된 등록자본액수는 인민폐 1.39억 위안이었다. 이 중 광동성(廣東省)에 개설된 개인자영업이 2,082개이고 등록자본액수는 1.06 억 위안이다. 업무범위는 주로 소매업, 요식업 등이다.

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CEPA의 영향을 받은 서비스 수출 총액의 60% 이상에 해당한다.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업종인데, 지난 3년 동안 CEPA 시행에 따라 수출된 서비스의 총 가치는 22억 홍콩달러이다.(아래 표 참조)

표8. 중국으로부터 획득한 서비스 수익 금액[266]

단위 : 백만 홍콩달러

서비스 업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액	CEPA 로 인한 수익	총액	CEPA 로 인한 수익	총액	CEPA 로 인한 수익	총액	CEPA 로 인한 수익
소매	38,288	1,120	50,506	1,967	55,596	2,522	53,657	2,507
화물운송· 물류	11,183	129	11,260	880	12,829	1,164	22,814	1,918
부가가치 전신	911	2	529	3	645	1	791	1
시청	73	0	66	4	87	8	258	23
기타*	9,440	332	7,967	469	8,808	484	10,187	883
22개 서비스업 전체 +	59,894	1,582	70,328	3,323	77,965	4,179	87,707	5,332

주(註) : (*) - 상기 표에 열거되지 않은 18개 서비스업종을 말함.
(+) - 사사오입으로 인해 총액과 각 항목별 수치를 합산한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서비스무역의 수출입구조 변화

홍콩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홍콩 간의 서비스무역의 경우 홍콩의 서비스 수입 중 약 30%가 중국에서 온 것이며, 서비스 수출 중 약 25%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2005년 홍콩의 서비스무역 5대 수출지

266)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服務貿易)-附錄 Ⅰ, 앞의 문건, 8면

역을 보면 1위가 중국으로서 26.3 %이며, 미국이 20.6 %로 2위, 대만이 7.3 %, 일본이 7.2 %, 영국이 6.9 %로 뒤를 이었다. 홍콩이 서비스를 수입한 5대 상대지역을 보면 중국이 27.0 %로 1위, 이어 미국이 15.0 %, 일본이 8.6 %, 영국이 7.7 %, 오스트레일리아 6.1 % 순이었다.

WTO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은 크게 4가지 방면에 관련 되는데, 첫째가 한 회원의 영토로부터 기타 회원의 영토를 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둘째는 한 회원의 영토 내에서 기타 회원의 소비자를 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셋째는 한 회원의 서비스제공자가 기타 회원 영토 내의 상업존재(commercial presence)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넷째는 한 회원의 서비스제공자가 기타 회원 영토 내의 자연인 존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67] 두 지역 간의 서비스무역구조 통계에 의하면 중국과 홍콩 간의 서비스무역 형태는 한 회원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의 영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는 상업무역서비스·보험서비스 등이 진행되고 있고, 상업존재를 통한 서비스무역으로는 홍콩자본으로 이루어진 대량의 서비스기업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며, 다른 회원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여행업이 성행중이고, 끝으로 다른 회원의 자연인 존재를 통한 서비스제공 방식으로는 회계사·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의 상대방 지역에서의 개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EPA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형식의 서비스는 많지 않았다.

아래의 표를 보면, 2006년 중국에 대한 홍콩의 서비스수출 4대 항목으로는 여행서비스가 55.7 %, 상업무역서비스가 26.3 %, 보험서비

267) 「서비스무역총협정(GATS)」 제1조

스가 26.0 %, 운수서비스가 14.7 %이다.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서비스로는 상업무역서비스가 44.7 %, 여행서비스가 30.8 %, 운수서비스가 25.1 %, 보험서비스가 12.3 %이다.

표9. 중국과 홍콩의 서비스무역 구조[268]

연도	여행서비스		상업무역 서비스		보험서비스		운수서비스		금융서비스		기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2	50.4	33.8	30.4	51.9	21.7	4.7	19.7	26.3	-	-	24.6	24.5
2003	62.1	30.5	28.4	50.8	21.6	8.7	17.1	25.8	-	-6.0	29.9	25.3
2004	57.6	30.6	28.6	45.3	14.6	10.5	15.9	25.7	2.8	27.5	30.0	21.1
2005	55.5	30.9	27.6	46.4	16.6	13.6	16.0	25.4	2.5	54.7	27.4	19.5
2006	55.7	30.8	26.3	44.7	26.0	12.3	14.7	25.1	3.5	115.3	23.9	19.9

주(註) : 표 내부의 수치는 중국에 대한 홍콩의 서비스무역 수출 및 수입액이 홍콩의 서비스무역 수출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 업종 별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수치의 합계는 100을 초과할 수 있다.

CEPA는 중국에서 홍콩에 대해 서비스무역시장을 개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CEPA하에서 중국 시장의 개방은 홍콩 서비스업에 미치는 작용은 분야별로 차이가 크다.

중국-홍콩 간의 전통적인 상업무역분야의 수출입비중은 CEPA로 인한 특별한 변화가 없다. 도리어 매년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CEPA 시행 후 2년째인 2004년의 경우 중국에 대한 홍콩의 상업무역수출은 13%의 높은 성장을 하였지만 무역구조상의 지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홍콩의 상업무역서비스 수출은 이미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기에 중국-홍콩 간의 무

268) 華曉紅 · 楊立强, 앞의 글, 4면

역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운송서비스의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다. CEPA 체결 후 2년 동안에는 수출입에서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수입의 증가폭이 수출의 증가폭보다 컸다.

보험서비스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2005년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6년에는 전년 대비 57%의 성장을 하여 중국에 대한 홍콩의 서비스수출에서 2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입 면에서는 CEPA가 체결된 2003년에 전년 대비 8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후 2004년과 2005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CEPA 시행 이전 홍콩의 여행서비스업의 중국 수출은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을 보여 2003년에는 중국에 대한 홍콩의 서비스수출에서 62%를 점유하였으나,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점유율 역시 답보상태를 나타낸다. 즉 여행업 역시 CEPA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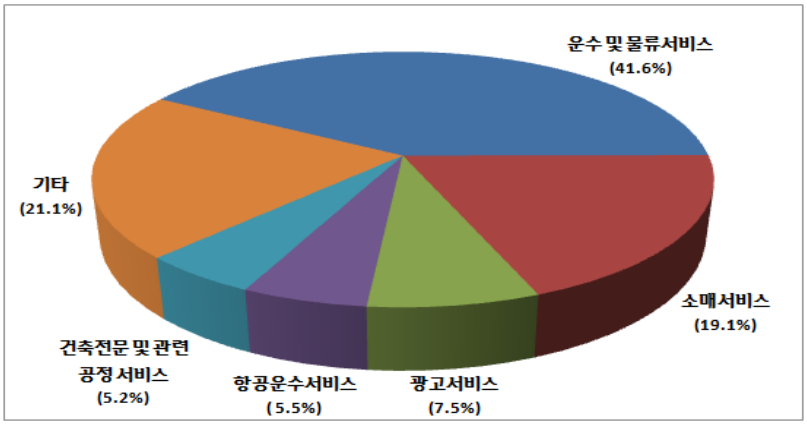
보험·금융서비스의 경우 중국-홍콩 간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 할 것이다. CEPA에서도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의 장벽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중국 수출에 관한 성장 잠재력은 무척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5 %, 2006년에는 3.5 %에 불과하여 다른 서비스분야와 비교하여도 무척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달리 해석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아직 미약하지만 여건이 성숙된다면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무척 밝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에 대한 홍콩의 서비스무역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CEPA의 경우 중국-홍콩 간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영향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CEPA는 이들 두 지역 간의 서비스무역을 촉진하고자 하였지만, 중국-홍콩 간 서비스무역이 홍콩의 서비스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눈에 띄는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CEPA가 의도하고 기획한 바대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다. 중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방향

상기한 홍콩의 서비스제공자 증명서 신청 현황을 보면, CEPA에 의거하여 중국에 진입한 홍콩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주요 분야는 운수 및 물류 서비스, 소매(원어: 分銷) 서비스 분야로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1.6 % 와 비중이 19.1 %로서 둘의 합계가 전체 승인 건수의 60.7 %에 이른다. 이는 중국과 홍콩의 산업협력구조가 아직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홍콩에서 판매'하는 소위 '전점후창(前店後廠)'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 참조)

그림4. 2009년 9월 말 현재 주요 서비스업종 별
'홍콩서비스제공자증명서' 발급 현황



반면 홍콩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이는 분야 즉 광고서비스 분야는 7.5 %, 항공운수 서비스 분야는 5.5 %, 관리자문 및 관련 서비스 분야는 2.2 %, 직업소개기구 서비스 및 인력중개기구 서비스 분야는 4.2 %, 건축전문서비스 및 관련 공정 서비스 분야는 5.2 %, 부가가치 전신(電信) 서비스 분야는 2.5 %, 법률서비스 분야는 1.2 %,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는 0.6 %, 증권·선물 서비스는 0.5 %에 불과하다.

그 이유를 본다면 첫째, 금융·은행·증권업 등과 같은 중국의 관련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시장개방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서비스 분야와 같이 중국의 시장상황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셋째, 전신(電信) 서비스 분야와 같이 시장에 과점상태가 이루어져 있어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여행업과 같이 지역적 분업이나 업종 특성 상 중국에 직접 진입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이다. CEPA가 관련하고 있는 서비

스영역은 많지만 CEPA로 인한 효과를 내는 분야는 주로 전통적인 서비스무역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광동성을 예로 들어 CEPA가 중국의 산업구조에 주는 영향을 짐작해 보기로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중국의 광동성(廣東省)과 홍콩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간 홍콩은 광동성에 투자된 자본의 최대 경외(境外) 공급처였으며, 최대 무역동반자였다. 중국에 대한 홍콩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광동성이다. 수많은 홍콩 제조기업들이 광동성에서 다년간 경영을 해오고 있다. 과거 광동성과 홍콩의 경제무역협력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앞서 기술한 전점후창(前店後廠)의 분업방식을 형성하였다. 광동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대량의 홍콩 자본에 기반을 둔 가공생산기업은 고효율 ·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다. 상당수의 홍콩 서비스기업은 본래 홍콩에서 제조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이었는데 CEPA를 통하여 광동지역에 진입한 이후에는 현지에 있는 이들 제조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CEPA 시행 후 여러 해가 흘렀고 중국-홍콩 간의 경제협력도 더욱 밀접해 지고 있다. 이에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업 분야가 거론되는데, 특히 금융협력 분야는 홍콩의 경쟁우위를 감안할 때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홍콩은행들이 인민폐(人民幣)의 수신(원어: 存款) · 태환(兌換) · 은행카드 · 환송금(원어: 匯款)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 2월 25일부터 홍콩의 은행들은 인민폐에 대한 이들 업무를 전면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4월 말 현재 홍콩에는 모두 37개 은행이 개인 인민폐 업무를 개

설하였는데, 홍콩의 인민폐 수신액은 766억 위안이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443개이며 시가 총액은 110,517억 홍콩달러로서 홍콩 주식시장 총가치의 58.6 %를 점하고 있고, 거래금액은 홍콩 증권시장 총거래액의 74.2%를 점하고 있다.[269]

CEPA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중국은 홍콩 금융업에 대해 중국 시장에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즉 중국의 금융관리감독기관은 외자은행이 중국에 지점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최저 요구조건을 종전의 "신청 전 1년 연말 총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이던 것에서 미화 60억 달러로 낮추었다. 또한 인민폐 업무처리 신청자격 기간도 단축하였고, 영리성 관련 자격을 심사할 경우, 과거에는 중국의 단일 지점을 심의・승인하였는데 이를 다수의 지점 전체를 고려하여 심의・승인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홍콩의 중소금융기관들이 중국의 금융업에 진입하는 어려움을 한층 완화시킴으로써 홍콩 금융기관들이 보다 쉽게 중국에 지점과 법인기관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동성에는 홍콩자본의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홍콩의 중소금융기관들은 광동을 중국 진입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2004년 3월 29일 홍콩 Wing Lung Bank(永隆銀行)의 선전(深圳)지점이 정식 문을 열어 CEPA의 우대조건을 이용하여 중국에 진입한 첫 중소은행이 되었다. 곧이어 상하이 상업은행(上海商業銀行)과 대신은행(大新銀行)이 중국에 첫 개설한 지점들도 모두 선전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광동지역에 있는 수많은 홍콩자본의 기업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홍콩의 중소은행들이 중국에 진입한 이후 경영망의 확대를 도모함에 있어서 주로 광동지역에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광동지역에 있는 점포망이

269) 華曉紅・楊立强, 앞의 글, 24면

중국 전체 점포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 HSBC 은행(匯豊銀行), Hang Seng Bank(恒生銀行), Bank of East Asia(東亞銀行)등 대형은행들도 CEPA 시행 전에 이미 중국에 들어와 지점들을 개설하였는데, 중국 전역에 점포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광동지역에 개설한 지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1/4 이상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표10. 홍콩의 중소은행들이 중국과 광동에 개설한 지점 및 사무소 분포[270]

은행	중국의 지점 및 사무소 총 수	광동의 지점 및 사무소 총 수
永隆銀行	4	3
大新銀行	2	2
創興銀行	3	2
星展銀行	7	2
南洋商業銀行	6	3
永亨銀行	5	3
中信嘉華銀行	3	1
上海商業銀行	2	1

자료출처 : 2007년 12월 현재 각 은행 웹사이트 수치를 정리한 것임.

270) 歐江波 · 伍慶, “CEPA實施以來粵港服務業合作狀況與改進策略”, 앞의 글, 54면

표11. 홍콩 주요은행들이 중국 각 성(省)·시(市)에 설립한 지점 현황[271]

	HSBC 은행		恒生銀行		東亞銀行	
성구(省區)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베이징(北京)	6	10.7%	2	8.7%	2	4.7%
상하이(上海)	18	14.3%	9	39.1%	8	18.6%
광동(廣東)	14	25.0%	8	34.8%	13	30.2%
리아오닝(遼寧)	4	7.1%			4	9.3%
텐진(天津)	5	8.9%				
산동(山東)	4	7.1%			1	2.3%
저쟝(浙江)	1	1.8%	2	8.7%	2	4.7%
푸젠(福建)	4	7.1%	1	4.3%	4	9.3%
후베이(湖北)	3	5.4%			1	2.3%
쓰추안(四川)	2	3.6%			2	4.7%
총칭(重慶)	3	5.4%			2	4.7%
산시(山西)	1	1.8%			3	7.0%
후난(湖南)	1	1.8%				
쟝쑤(江蘇)			1	4.3%	1	2.3%
합계	56	100%	23	100%	43	100%

자료출처 : 2007년 12월 현재 각 은행 웹사이트 수치를 정리한 것임.

이렇듯 중국 시장에의 진입 승인을 받은 홍콩은행들은 일반적 의미에서 모두 CEPA의 수혜자라고 할 것이다. 종전에도 이들은 중국의 은행들과 각종 업무왕래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모두 일종의 금융협력일뿐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CEPA의 시행과 더불어 중국에 진입한 후에는 기존에 독립적으로 맡아 처리를 할 수 없었던 업무분야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각 지역 간에 서로 CEPA를 이용하여 홍콩 서비스업을 끌어들이는 경쟁을 벌이게 됨으로써, 광동지역과 홍콩의 합작도

271) 상동

중국의 기타 지역들의 도전을 받게 되고 경쟁 또한 치열해졌다. CEPA는 중국 전체가 홍콩에 대해 개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CEPA의 효능은 이미 전국 범위로 확산되었고 각각의 지역들은 홍콩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실제로 주강삼각주 지역(珠三角地區)의 경영비용은 꾸준히 상승하여 이미 상당수의 생산기업들이 보다 내륙으로 옮겼다. 특히 저쟝성(浙江省) 동북부와 쟝쑤성(江蘇省) 동남부, 그리고 상하이를 포괄하는 지역인 장강삼각주 지역(長江三角地區)이 고속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쟁력과 홍콩 자본의 흡인력도 하락하고 있다.

광동지역에서 이루어진 외상직접투자금액(FDI)의 경우 여전히 주로 홍콩으로부터 투자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다른 성(省)·구(區)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홍콩의 투자액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홍콩으로부터 광동지역에 투자된 금액은 2000년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고 있는 반면, 쟝쑤성의 경우 2006년에 실제 이용한 FDI는 200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홍콩과 합의한 FDI는 이미 2005년에 광동지역을 초월하였다. 따라서 실제 투자된 금액 면에서도 머지않아 광동지역을 앞설 것이다.

그밖에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군도와 케이먼 군도로부터 유입되는 FDI를 보면 2000년의 경우 쟝쑤성은 광동성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광동성을 초월하였다. 이는 홍콩의 투자를 받기가 수월하다는 지리적 이점에 기인하였던 광동성의 발전이 점점 퇴색하여 단순한 지리적 편리함만으로는 외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승기(勝機)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272]

쟝쑤(江蘇), 산동(山東), 저쟝(浙江)등 다른 경제발달 성(省)들의 경

272) 歐江波 · 伍慶, "CEPA實施以來粵港服務業合作狀況與改進策略", 앞의 글, 56면

우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과 달리 광동성의 서비스업은 발전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쟝쑤성 등이 제종업의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비스업의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예컨대 쿤산(昆山)처럼 제조업의 기반이 풍부했던 도시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273] 광동, 쟝쑤, 저쟝, 산동지역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총액과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전통적으로 홍콩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였던 광동성이 여전히 부가가치액면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그 성장속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아래 표 참조).

즉 중국의 경우 연해지구의 경제발달지역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발전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의 발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CEPA의 영향으로 촉진되는 홍콩 서비스업의 중국 투자와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존의 인기 투자지역뿐 아니라 동남부 연해지역의 경제발달지역들을 위주로 비교적 여러 지역에 고루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

273) 쿤산시는 쟝쑤성(江蘇省) 수조우시(蘇州市)에 속한다. 2008년 현재, 총생산액은 1500.2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하였다. 제1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12.3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2% 성장하였고, 제2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978.81억 위안으로 14.1% 성장했으며, 제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509.08억 위안으로 17.2% 성장하였다. GDP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9%로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다. 상주인구 1인당 총생산은 120,882 위안으로 미화로 환산하면 약 17,687 달러이다. - 百度百科 참조 (http://baike.baidu.com/view/24619.htm)

표12 廣東, 江蘇, 浙江, 山東 지역의 제3차 산업 부가가치 및 성장속도 비교[274]

단위: 인민폐 억 위안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전년 대비 증가	서비스업 부가가치	전년 대비 증가	서비스업 부가가치	전년 대비 증가	서비스업 부가가치	전년 대비 증가
廣東	8,335	10.4 %	9,598	13.7 %	11,196	13.4 %	12,989	13.0 %
江蘇	5,198	13.7 %	6,489	14.9 %	7,849	15.5 %	9,548	15.9 %
浙江	4,584	13.9 %	5,379	15.2 %	6,308	15.2 %	7,521	15.1 %
山東	4,733	12.3 %	5,925	14.4 %	7,187	14.5 %	8,605	14.5 %

자료출처 : 각 성(省)의 통계연감과 통계공보.
부가가치는 현재가격으로 계산하고, 증가속도는 불변가치(원어: 可比價)로 계산함.

라. CEPA가 홍콩산업구조 조정에 미친 효과의 분석

CEPA가 시행 이후 홍콩의 경제는 크게 회복되었다. 경제성장률도 크게 높아졌고, 수년간 계속되던 통화긴축기조도 바뀌었으며, 실업률과 재정적자도 다소 하락하였다. 이러한 효과 모두가 CEPA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첫째 공업생산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 중 비생산성 분야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현재 홍콩의 산업은 다원화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의 성장은 주로 비생산성 서비스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274) 歐江波 · 伍慶, "CEPA實施以來粵港服務業合作狀況與改進策略", 앞의 글, 56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홍콩경제는 줄곧 커다란 조정을 겪었지만 이 역시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금융·무역·부동산·여행 등 전통적으로 근간이 되었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이루어 갔기 때문이다.

홍콩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계속해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홍콩경제에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혹자는 이러한 산업구조는 외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반면, 혹자는 단일 도시경제인 홍콩의 입장에서 산업구조의 평형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다만 CEPA의 틀 속에서 가능한 한 중국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주강삼각지역과의 상업적 장애를 배제하고, 서비스업의 운용범위를 중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이 우세한 중국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동력을 찾으면 된다고 한다.

홍콩 제조업의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CEPA는 거의 모든 제조산업에 대해 무관세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다만 홍콩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가 그리 많지 않고 기술집약형 제조업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전면개방이 홍콩 제조업 발전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CEPA가 서비스업에 대해 개방을 한 것 역시 홍콩 서비스업의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이전은 제조업의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제조업의 이전은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함으로써 일종의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이라 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의 이전은 네트워크 창설을 통한 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경영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CEPA로 인해 홍콩 현지의 상업, 무역, 여행 등 산업에 자극을 주어 긍정적 작용을 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홍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홍콩 주민들의 취업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되는 등 선순환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된다.

4. 무역투자편리화방면

가. 홍콩자본의 중국투자 활성화

FTA는 직접투자에 대해서 경영권의 개방과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홍콩은 가장 중요한 해외투자자이며,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주강(珠江) 삼각주, 장강(長江) 삼각주, 환발해(環渤海) 지역의 3대 경제지대 및 경제적으로 주요한 성(省)·시(市)·도(都)를 보면 모두 홍콩이 제1의 투자자금 유입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홍콩의 투자를 보면, 2002년 홍콩의 대외투자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넘어 섰으며, 당해 연도 유입량의 95%를 점하였다. 2006년의 경우 중국에 대한 홍콩의 투자 확보액(원어: 投資存量) 비율은 40%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 유입량의 48%로 하락하였다.

2002년에서 2006년 동안에 홍콩의 대외투자는 커다란 기복을 겪었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는 부침이 크지 않았다. 홍콩의 대외투자는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아 왔는데, CEPA

시행 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천정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13. 홍콩이 대외 직접 투자한 주요 국가/지구[275]

단위 : 10억 홍콩달러

주요 직접 투자대상 국가/지구	연도 말의 대외직접투자 (Position of outward Direct Investment at end of year)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영령 버진아일랜드 군도	1270.3	1402.1	1609.3	2467.6	3773.7
중국	931.2	1211.6	1477.4	2117.2	3423.7
버뮤다 군도	88.4	129.7	126.1	137.8	133.0
영국	47.3	55.3	59.6	62.1	73.5
싱가포르	30.0	34.2	40.0	33.1	56.9
케이먼 군도	10.3	7.1	25.1	41.1	50.1
리베리아(Liberia)	*	*	22.3	23.3	41.0
태국	21.6	24.8	23.0	34.7	38.3
말레이시아	24.2	22.2	21.6	25.6	34.7
미국	20.4	22.6	26.3	29.1	30.6
기타 국가/지구	192.9	224.1	223.2	292.9	233.6
모든 국가/지구	2636.7	3133.6	3653.9	5264.5	7889.0

275) 香港 政府統計處 > 國民收入及國際收支平衡 > 表50 (http://www.censtatd.gov.hk).

주요 직접 투자대상 국가/지구	당해 연도의 직접투자유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영령 버진아일랜드 군도	24.8	136.8	18.1	78.0	103.9
중국	59.9	144.8	130.3	166.6	283.9
버뮤다 군도	-2.8	26.7	12.5	-5.0	16.2
영국	4.6	4.9	4.9	-0.2	12.1
싱가포르	2.1	4.5	6.0	2.1	18.4
케이먼 군도	-23.1	-1.3	14.8	7.9	29.4
리베리아(Liberia)	*	*	-1.1	2.5	5.3
태국	-0.7	3.2	2.6	6.4	-0.2
말레이시아	-2.8	1.5	#	3.9	4.0
미국	-9.4	3.1	0.9	3.1	4.1
기타 국가/지구	-9.8	32.0	22.5	84.1	-0.7
모든 국가/지구	42.9	356.1	211.5	349.4	476.5

주(註): (1) 반올림으로 인해 개별 수치의 합과 그 총계가 다를 수 있음.
(2) 국가/지구란 첫 목적지 경제체계를 말함. 동 분류상으로는 자금이 최종 사용된 국가/지구는 반영이 안 됨.
(3) 마이너스로 표시된 곳이 반드시 자금이 회수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경외(境外)의 계열회사가 빌린 자금을 반환한 것일 수 있음.
(4) * 는 2005년부터 대외직접투자 통계수치 편집으로써 상세한 국가/지구 분류를 채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는 당해 국가에 관한 수치가 없음.
(5) # 은 ± 오천만 홍콩달러 이내를 말함.

나. 중국에 대한 홍콩의 투자구조 개선

아래의 표14는 홍콩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의 비율을 두 시기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중대한 변화가 있을 알 수 있는데, 즉 제조업은 20% 감소하였고, 부동산업은 13% 증가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업종도 비율이 증가하였다. 다만 전통적인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비율은 하락한 반면, 생산성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그리고 홍콩의 신흥 서비스업의 우세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통계를 보면 CEPA가 시행된 2004년에서 2006년 동안 CEPA를 통한 홍콩의 중국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93억 홍콩 달러 증가하였다. CEPA가 일정 정도 홍콩의 중국에 대한 투자량의 구조를 변화시켰다고 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투자수준도 상승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홍콩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CEPA가 당초 의도한 바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일례로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투기요소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CEPA와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또한 금융업 등 생산성 서비스업의 점유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중국 시장의 개방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 환경 또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CEPA의 기능발휘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홍콩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중국의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CEPA가 그러한 장벽을 해소하는 동력으로 기능하여 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표14. 홍콩으로부터 실질 직접투자를 받은 중국의 업종별 비율[276]

업 종	1979-2005.4	2004-2008.9
농, 임, 목축, 어업	1.31	1.25
채광업(採鑛業)	0.54	0.67
제조업	73.51	53.52
전력 · 가스 · 물의 생산 및 공급업	2.40	2.59
건축업	1.89	1.46
교통운수, 창고저장, 우정(郵政)업	2.06	3.51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산업	0.59	1.87
도 · 소매업	0.59	3.07
숙박, 요식업	2.06	1.6
금융업	0.16	0.33
부동산업	10.75	23.33
임대, 상업무역서비스업	2.15	4.28
과학연구 · 기술서비스, 지질답사업	0.24	1.25
수리(水利), 환경, 공공시설관리업	0.18	0.41
주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	0.25	0.54
교육	0.06	0.06
위생, 사회보장 및 사회복리업	0.03	0.02
문화, 체육, 오락업	1.22	0.55
합계	100.00	100.00

* 자료출처 : 中國 商務部 外資分行業統計

기업투자 외에도 CEPA는 홍콩의 자영업자들이 중국에서 개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중국에 등록한 홍콩의 자영업자는 2,698호이고, 종사자는 7,272인이며, 등록자본은 인민폐 1.73억 위안으로서 매 항목당 평균 6.4만 위안이다. 중국에 온 홍콩의자영업자 수는 제한이 있어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대한 위협적인 경쟁요

276) 華曉紅 · 楊立强, 앞의 글, 34면

소가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것으로서 홍콩 시장은 중국의 자영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 간에 대등한 조건은 아니다.

홍콩 입법회 공상사무위원회의 "홍콩경제에 대한 CEPA의 영향(CEPA對香港經濟的影響)" 연구보고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CEPA로 인해 유발된 홍콩의 초과 자본투자액은 1.03억 홍콩달러이며, 2006년에는 2.02억 홍콩달러, 2007년에는 2.39억 홍콩달러로 증가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 및 그 후의 실제 투자자본과 투자계획자본의 총계에 따르면, 약용 및 간병용품의 생산·수출에 종사하는 회사의 투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CEPA상의 관세혜택은 해당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투자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5. CEPA로 인해 유발된 홍콩의 자본투자 개요[277]

단위 : 백만 홍콩달러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총계
2004년*	부적용	1,012	부적용
2005년	103	2,094	2,197
2006년	202	1,733	1,935
2007년 및 그 이후	239	2,406	2,645

주(註) : * - 사사오입함으로써 수치의 합계는 실제와 총합과 다를 수 있음.

과거 수년 동안은 CEPA로 인해 유발된 초과투자는 주로 공업장비 및 기계방면에 투자되었다. CEPA에서 개방한 22개 서비스무역에

277)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附載報告1, 立法會工商事務委員會, 立法會CB(1)1849/06-07(04)號文件, 2면

대한 투자를 다시 홍콩서비스제공자 증명을 받은 상위 3대 주요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본다면 소매서비스,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가 전체 투자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10억 1천 2백만 홍콩달러, 2005년에는 20억 9천 4백만 홍콩달러, 2006년에는 17억 3천 3백만 홍콩달러, 2007년 이후에는 24억 6백만 홍콩달러가 CEPA를 기화로 하여 홍콩의 서비스업에 투자되었다.

2004년의 경우 전체 10억 1천 2백만 홍콩달러 중 화물운수 및 물류서비스에 4억 3천만 홍콩 달러가 투자되어 당해 연도 전체 투자액 중 42.9%가 투자되었고, 이어서 소매서비스에 1억 9천 2백만 홍콩달러가 투자되어 당해 연도 전체 투자액 중 약 19%를 점유하고 있다. 소매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5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반면 여행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할 점은 2004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투자액수를 나타내던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7년 이후에는 10억 홍콩달러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투자액 대비 점유비율도 42%를 넘어섰다. 여행 관련 서비스의 경우도 CEPA 시행 첫 해인 2004년에는 극히 미미한 수치를 보였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투자금액 면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의 경우 350만 홍콩달러이던 것이 2006년에는 약 5배를 넘는 증가를 보여 1억 8천 7백만 홍콩달러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다시 2배 증가한 3억 4천 6백만 홍콩달러를 기록하였다. 전체 투자대비 점유율도 2005년 1.7 %에서 2006년의 10.8 %, 2007년 이후에는 14.4 %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 참조)

표16. CEPA의 영향으로 홍콩 서비스업에 투자된 자본[278]

단위 : 백만 홍콩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소매서비스	192 (19%)	1,555 (74.3%)	912 (52.6%)	735 (30.5%)
화물운송 및 물류	434 (42.9%)	480 (23%)	558 (32.2%)	1,026 (42.6%)
여행 및 관련 서비스	1	35 (1.7%)	187 (10.8%)	346 (14.4%)
시청서비스	21 (2.1%)	0	61 (3.5%)	0
기타 *	364 (36%)	24 (1.1%)	16 (0.9%)	300 (12.5%)
22개 업종 전체 (+)	1,012	2,094	1,733	2,406

주(註) : (*) - 상기 표에 열거되지 않은 18개 서비스업종을 말함.
(+) - 사사오입으로 인해 총액과 각 항목별 수치를 합산한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중국에 투자된 자본은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CEPA로 인해 유발된 중국에 대한 자본투자액을 보면 2005년에는 42억 1천 8백만 홍콩달러이었으나 2006년에는 50% 이상 감소하였다. 다만 2007년에는 다시 2005년의 수준을 회복하여 46억 4천 1백만 홍콩달러가 중국 서비스업에 투자되었다.

중국의 경우 투자된 자본의 주요 투자업종을 보면 홍콩과 유사함을 보이는데, 즉 소매서비스와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분야에 최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서비스 분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2개 업종 전체 투자에 대한 서비스분야별 투자액과 투자점유

278)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附載報告1, 앞의 글, 7면

율을 보면, 소매서비스 분야는 2004년 이후 30% 대를 상회하다가 2007년 이후에는 20% 대로 낮아졌지만 투자액만 본다면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화물운송 및 물류 서비스 분야는 투자액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투자금액 수준은 비교적 많은 편이고 전체 투자액 대비 점유율도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4년과 2005년에는 전체 투자액 중에서 25~28%대의 점유율을 유지하였다가 2006년 이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고 투자금액도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2005년에는 10억 홍콩달러에 달하였으나 2007년에는 1억 2천만 홍콩달러로 거의 1/9로 하락하여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참조)

표17. CEPA의 영향으로 중국 서비스업에 투자된 자본[279]

단위 : 백만 홍콩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소매서비스	862 (30%)	1,575 (37.3%)	716 (34%)	1,143 (24.6%)
은행서비스	809 (28.2%)	1,080 (25.6%)	240 (11.4%)	120 (2.6%)
화물운송 및 물류 서비스	726 (25.3%)	1,095 (26%)	778 (37%)	1,454 (31.3%)
시청서비스	24 (0.8%)	6 (0.1%)	111 (5.3%)	80 (1.7%)
부가가치 전신	224 (7.8%)	300 (7.1%)	0	74 (1.6%)
기타 *	222 (7.7%)	163 (3.9%)	260 (12.3%)	1,769 (38.1%)
22개 업종 전체(+)	2,867	4,218	2,106	4,641

주(註) : (*) - 상기 표에 열거되지 않은 17개 서비스업종을 말함.
(+) - 사사오입으로 인해 총액과 각 항목별 수치를 합산한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79)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附載報告1, 앞의 글, 8면

다. 투자 증대로 인한 홍콩의 취업률 증가

투자의 확대는 취업의 증가로 이어진다. 앞서 말한 홍콩 입법회 공상사무위위원회의 "홍콩경제에 대한 CEPA의 영향(CEPA對香港經濟的影響)" 연구보고에 따르면 CEPA의 영향으로 홍콩은 취업자리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표18. CEPA의 영향으로 홍콩에서 창출된 취업기회/새일자리[280]

단위: 고용자 수

연도	화물무역 ^		서비스무역		개인관광 계획[281] ('個人遊' 計劃)		합계	
	고용자수 (+)	새일자리 수	고용자수 (+)	새일자리 수	고용자수 (+)	새일자리 수	총 고용자수 (+)	새일자리 수
2004	1,000*	1,000	1,415*	1,415	19,158 (#)	19,158	21,573	21,573
2005	1,736	736	4,295	2,880	17,815 (!)	-1,343 (!)	23,846	2,273
2006	3,319	1,583	5,877	1,582	25,742	7,927	34,938	11,092
2007 이후	4,881	1,562	7,957	2,080	-	-	-	-

주(註): (+) - 고용자 수는 매 단계 기간종결 시의 고용자 수를 가리킨다.

---

280)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附載報告1, 앞의 글, 2면.

281) '개인 관광 계획'이란 '홍콩·마카오 자유통행(港澳自由行)'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대륙의 주민이 개인 관광방식으로 홍콩·마카오를 관광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획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계획의 범위에 속한 도시여야만 간단한 비자수속을 거쳐 홍콩·마카오지구에 갈 수 있으며, 최장 거류기간은 1주일이다. 2003

(^) - 화물무역의 고용자 수는 당해 연도의 CEPA 시행으로 인해 초래된 고용자 수의 변동에 근거하여 평가함
(*) - 2004/2005년 진행된 제1차 CEPA 경제영향평가 조사결과에 근거함.
(#) - 최신 수치에 따라 정정한 평가수치
(!) - 개인 관광 계획의 시행에 따라 2005년 창출된 새로운 직위 수는 다소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노동생산력 상승과 홍콩에 입경하여 숙박을 하지 않는 개인 관광객 수가 숙박을 하는 관광객의 상승폭보다 컸기 때문이다.

CEPA 시행에 따라 홍콩에서 고용된 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이다. 위 표를 보면 2006년 말 현재 총 34,938명이 CEPA의 영향으로 취업하였는데 이는 총 취업자 수의 1%가 안 된다. 다만 CEPA로 인해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 수는 상당히 훌륭한데 2006년 실업인구 수의 약 1/4 을 차지하며, 2003년 중반부터 새로이 증가한 일자리 총 수의 약 12%를 차지한다.

또한 CEPA의 시행은 중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2006년 현재, 중국에서 CEPA와 관련 있는 서비스업종에서 새로 창출된 총 일자리 수는 약 16,700여 개이다. 그 중에서 1,000여 개의 새 일자리는 홍콩주민이 맡고 있으며, 나머지 15,700여 개는 비(非)홍콩주민 (대부분은 중국주민)이 담당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

년에 홍콩에서 발생한 '사스'의 영향으로 홍콩의 소매업과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자 다수의 중국인들로 하여금 홍콩을 관광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홍콩에 도움을 주고자 취한 조치이다.
2003년 7월 28일 광동성 내 4개 지정 도시의 주민들이 홍콩 · 마카오 개인 관광을 개시한 이래 2003년 9월 1일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이, 2004년 7월 1일에는 난징(南京), 항조우(杭州) 등이, 2007년 1월 1일 스지아쥬앙(石家庄), 쩡조우(鄭州), 창춘(長春) 등이 이 계획에 참가하여 총 49개 도시가 참여하였다. 2007년 이전에는 중국주민은 "방문(訪問)" 기재(원어: 簽注)를 신청하고 홍콩에 갈 수 있었으며 지역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방문" 기재를 취소하고, 지정된 도시에 적(籍)을 두고 있는 자만이 "개인 관광(個人旅遊)"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 Wikipedia 중문판 (http://www.wikipedia.org) '港澳個人遊' 항목 참조

한다면, CEPA로 인해 새로이 중국과 홍콩에서 창출된 일자리 중에서 홍콩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 일자리 수는 2006년 말 현재 약 36,000여 개(중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중 홍콩주민이 담당하는 것 1,000여 개와 CEPA 영향으로 홍콩에서 고용된 34,938개를 합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19. CEPA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창출된 취업기회 / 일자리[282]

	고용자 수	홍콩 주민 점유비율	비(非)홍콩 주민 점유비율	증가한 새 일자리 수	홍콩 주민 점유비율	비(非)홍콩 주민 점유비율
2004년 *	2,842	544 (19 %)	2,298 (81 %)	2,842	544 (19 %)	2,298 (81 %)
2005년	9,414	574 (6 %)	8,840 (94 %)	6,572	30 (0.5 %)	6,542 (99.5 %)
2006년	16,696	1,000 (6 %)	15,696 (94 %)	7,282	426 (6 %)	6,856 (94 %)
2007년 이후	30,178	2,438 (8 %)	27,740 (92 %)	13,482	1,438 (11 %)	12,044 (89 %)

주(註) : (*) - 2004년/2005년 진행된 조사결과 임. 당시 조사는 CEPA 시행 첫 해의 서비스업종·상품무역·개인 관광 계획만을 포함함.

한편 CEPA의 영향으로 홍콩에서 창출된 취업기회를 서비스무역 분야로 국한하여 볼 경우, 2005년에 약 4,300여개, 2006년에는 5,877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2007년 이후에는 약 8,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2개 업종 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면에서 CEPA 시행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분야는 소매서비스업 분야라고 할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소매서비스 분야는 2005년 새로 창출된 2,880개의

282)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 - 附載報告1, 앞의 글, 3면

일자리 중 2,830개를 차지하여 98.3 %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도 새로 창출된 전체 1,582개 일자리 중 1,114개의 일자리가 이 분야에서 창출됨으로써 70.4 %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07년 이후에는 급속한 증가세가 멈추고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산업구조의 영향인지 아니면 일시적 시장상황에 따른 것이지 추후 진행상황을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표20. CEPA의 영향으로 홍콩 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출된 취업기회[283]

단위 : 고용자 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소매서비스	386 (386)	3,216 (2,830)	4,330 (1,114)	4,354 (24)
화물운송 및 물류 서비스	765 (765)	491 (-274)	515 (24)	708 (193)
여행 및 관련 서비스	24 (24)	95 (71)	332 (237)	692 (360)
기타 (#)	240 (240)	493 (253)	700 (207)	2,203 (1,503)
22개 업종 전체	1,415 (1,415)	4,295 (2,880)	5,877 (1,582)	7,957 (2,080)

주(註) : ( ) 안의 수치는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임.
(#) - 기타는 상기 표에 나타나지 않은 19개 서비스업종을 가리킴.

한편 CEPA 시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중국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서비스분야로 국한하여 본다면, 역시 소매서비스 분야와 화물운송·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다만 이렇게 새로 창출된 일자리 역시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홍콩주민보다는 비홍콩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래 표 참조)

283)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附載報告1, 앞의 글, 8면

표21. CEPA의 영향으로 중국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취업기회[284]

단위 : 고용자 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홍콩 주민	비홍콩 주민	홍콩 주민	비홍콩 주민	홍콩 주민	비홍콩 주민	홍콩 주민	비홍콩 주민
소매 서비스	464	967	304 (-160)	3,344 (2,377)	682 (378)	7,552 (4,208)	1,025 (343)	10,826 (3,274)
화물운송·물류서비스	62	1,039	165 (103)	3,989 (2,950)	171 (6)	5,399 (1,410)	303 (132)	6,600 (1,201)
은행서비스	6	87	8 (2)	115 (28)	8 (0)	155 (40)	14 (6)	244 (89)
여행 및 관련서비스	0	0	0 (0)	6 (6)	1 (1)	25 (19)	8 (7)	93 (68)
시청서비스	3	83	2 (-1)	162 (79)	5 (3)	337 (175)	12 (7)	2,032 (1,695)
부가가치 전신 서비스	0	0	1 (1)	141 (141)	1 (0)	144 (3)	1 (0)	211 (67)
기타 (*)	9	122	94 (84)	1,083 (961)	132 (38)	2,084 (1,001)	1,075 (943)	7,734 (5,650)
전체 22개 업종	544	2,298	574 (30)	8,840 (6,542)	1,000 (426)	15,696 (6,856)	2,438 (1,438)	27,740 (12,044)

주(註) : ( ) 안의 수치는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치임.
: (*) - 상기 표에 나타나지 않은 16개 업종을 가리킴.

5. 여행협력 방면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의 관광객 수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다. 특히 '개인 관광 계획(個人遊計劃)'은 CEPA의 틀 속으로 들어와서 2003년 7월 28일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지정된 도시(원어: 城市)에 거주하는 주민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 2차

284)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附載報告1, 앞의 글, 9면

례 홍콩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매회 최대 체류기간은 7일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개인 관광'으로 홍콩을 방문한 여객은 크게 '대체효과(원어: 替代效應)'에 이끌려서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과 '수요창출효과(원어: 創造需求效應)'에 이끌려서 온 관광객으로 구분된다.

대체효과에 따라 방문한 관광객이라 함은 '개인 관광' 계획이 추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홍콩에 왔을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 관광' 계획의 주된 작용은 기타의 여행증명서를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수요창출효과에 이끌려서 온 관광객이라 함은 '개인 관광' 계획에 이끌려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을 말한다. 여기에는 동 계획의 영향을 받아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한 자와 동 계획의 편리성 · 융통성 때문에 홍콩 방문 횟수를 늘린 자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수요창출효과에 이끌려서 홍콩을 방문한 자들을 "초과 관광객(원어: 額外旅客)"이라고 하며, 이들이야말로 홍콩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점이 되는 사람들이다.

'개인 관광 계획'이 점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이 계획에 대한 중국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많은 중국 주민들이 '개인 관광 계획' 방식을 빌어 홍콩에 왔다. 다만 2007년부터는 동 계획에 참여하여 지정을 받은 도시에 적(籍)을 두고 있는 주민만이 '개인 관광'의 신청을 하고 홍콩에 올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홍콩 여행에 제한이 가하여진 듯 하지만, 지정을 받은 도시들이 49개에 이르러서 중국의 성(省) · 부성(副省) 급 도시 중에서는 하얼빈(哈尒濱), 칭다오(青島), 시안(西安), 타이유엔(太原), 란조우(蘭州), 시닝(西寧) 등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 도시 주민들의 수입 역시 중국에서는 높은 편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홍콩 여행에 대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 관광' 계획이 포괄하는 도시들을 인구와 국내생산총액, 1인당 국내총생산액으로 비교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2. 개인 관광 계획에 포함되는 도시[285]

효력발생 시기	새로 참여한 도시	등록 인구 (백만 명)	국내생산총액 (10억 인민폐)	1인당 국내생산총액 (인민폐)
2003.7.28.	東莞, 佛山, 中山, 江門	10.47	625.04	59,687.20
2003.8.20.	廣州, 深圳, 珠海, 惠州	13.20	1,154.35	87,474.74
2003.9.1.	上海, 北京	25.41	1,604.05	63,127.64
2004.1.1.	汕頭, 潮州, 梅州, 肇慶, 清遠, 雲浮	22.94	224.07	9,767.94
2004.5.1.	汕尾, 茂名, 湛江, 韶關, 揭陽, 河源, 陽江	32.39	293.80	9,071.03
2004.7.1.	南京, 蘇州, 無錫, 杭州, 寧波, 臺州, 福州, 厦門, 泉州	48.69	1,999.52	41,069.18
2005.3.1.	天津, 重慶	37.37	673.30	18,015.52
2005.11.1.	成都, 濟南, 大連, 瀋陽	29.43	848.16	28,816.63
2006.5.1.	南昌, 長沙, 南寧, 海口, 貴陽, 昆明	27.64	513.96	18,591.45
2007.1.1.	石家莊, 鄭州, 長春, 合肥, 武漢	36.24	812.86	22,427.60

주(註) : 등록 인구, 국내생산총액은 2005년 기준.

한편 '개인 관광' 계획 시행 이후 홍콩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와 이들이 소비한 금액을 보면, 2003년부터는 소비금액의 증가세가 그리 크지 않다. 이는 홍콩에는 왔지만 홍콩에서 숙박을 하지 않는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홍콩 현지에서 소비하는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등은 숙박을 하는 관광객에 비해서 적

285)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 - 附錄 IIIa.

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초과 관광객의 수와 홍콩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으로 인한 소비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23. '개인 관광 계획' 시행 이후 홍콩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286]

단위 : 연인원

	'개인 관광' 계획에 따라 홍콩에 간 경우			'개인 관광' 계획과 무관하게 홍콩에 간 경우		
	비숙박	숙박	합계	비숙박	숙박	합계
2003 (7~12월)	136,022	531,249	667,271	1,535,486	3,029,094	4,564,580
2004	1,176,537	3,083,064	4,259,601	3,275,443	4,710,818	7,986,261
2005	2,002,155	3,548,100	5,550,255	2,509,540	4,481,605	6,991,145
2006	2,509,947	4,163,336	6,673,283	2,647,117	4,270,942	6,918,059

	비숙박	숙박	총계
2003	1,671,508	3,560,343	5,231,851
2004	4,451,980	7,793,882	12,245,862
2005	4,511,695	8,029,705	12,541,400
2006	5,157,064	8,434,278	13,591,342

286)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 - 附載報告1, 앞의 글, 13면

표24. 홍콩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의 소비 금액[287]

	총계		입경 후 비숙박		입경 후 숙박	
	백만 홍콩달러	증가율(%)	백만 홍콩달러	증가율(%)	백만 홍콩달러	증가율(%)
2001년	17,432.16	20.6	1,609.5	32.0	15,822.7	19.5
2002년	28,052.03	60.9	1,996.1	24.0	26,056.0	64.7
2003년	33,377.82	19.0	3,578.1	79.3	29,799.7	14.4
2004년	38,582.55	15.6	4,641.5	29.7	33,941.0	13.9
2005년	42,196.38	9.4	5,626.7	21.2	36,569.7	7.7
2006년	47,605.37	12.8	7,926.0	40.9	39,679.3	8.5

'초과 관광객'이 전체 '개인 관광' 여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4년의 59%에서 2006년에는 49%로 감소하였다. 이는 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기타 여행증명서를 사용하는 대신에 '개인 관광' 증명서로 바꾸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 관광' 계획이 중국의 여행객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 관광' 계획은 점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중국 관광객의 홍콩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일부 관광객의 경우 홍콩에서의 체류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여행발전국 통계에 따르면 '개인 관광'으로 홍콩에 온 여행객 중 홍콩에서 숙박을 하지 않는 비율이 2004년의 27.6%에서 2006년에는 37.6%로 증가하였고, 홍콩에서 숙박을 하는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도 2006년에는 2.5일로서 2004년 대비 0.2일 단축되었다.

287)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個人遊"計劃) - 附錄 Ⅲ, 앞의 문건, 2면

표25. 개인 관광 계획의 영향[288]

	초과 관광객 (#) (인원수)	초과 관광객의 소비금액 (*) (백만 홍콩달러)	고용자 수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
2004	2,513,525	6,734	19,158	19,158
2005	2,721,388	6,644	17,815	-1,343
2006	3,272,029	9,278	25,742	7,927

주 : (#) - 초과 관광객이란 '개인 관광 계획'의 영향으로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을 말하는데, 이에는 동 계획에 끌려 처음으로 홍콩에 온 자, '개인 관광 계획'의 편리함과 융통성 때문에 홍콩방문 횟수가 증가한 자를 포함한다.

(*) - 지역경계를 넘는 교통 분야의 소비를 포함한다.

홍콩관광서비스의 수요는 2003년 '사스(SARS)' 질병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소매업 · 숙박업 · 요식업 · 운수업 등 여행 관련 업종의 수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관련 업종의 취업기회도 역시 완만하지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업의 노동생산성도 2003년의 저점을 벗어나 급상승하고 있다.

2005년도의 경우 '개인 관광 계획'의 영향으로 유발된 초과 관광객의 소비금액은 2004년도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이전효과(移轉效果)로 인해 2005년에는 훨씬 많은 관광객이 '개인 관광'의 형식을 빌려 홍콩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 관광'의 방식으로 홍콩에 온 관광객 중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부분을 차지함은 앞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관광객의 경우 홍콩을 방문하는 회수는 많을 수 있겠지만, 홍콩에서 숙박

288)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 - 附載報告1, 앞의 글, 14면

을 하는 관광객과 비교할 때 숙박·음식·현지 교통이용 등 면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2006년의 경우 초과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숙박을 하지 않는 관광객을 포함한 1인당 소비금액도 현저하게 상승하여서 40%의 성장을 보였다.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관계로 '개인 관광 계획'으로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 수도 2005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개인 관광 계획'의 형식을 빌어 홍콩을 방문하는 자의 수는 이미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에, 2006년의 경우 '개인 관광 계획'의 영향을 받은 초과관광객들의 소비금액도 다시 상승하였고 취업기회도 역시 증가하였다.

초과관광객들의 소비금액과 개개 여행관련 업종을 함께 고려하고, 개별 업종의 부가가치금액을 참고하여 추산한 순 부가가치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과거 수년 동안 여행과 관련한 업종의 전체 취업률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 관광' 형식으로 홍콩에 오는 관광객들의 소비 방식이 변화하였기에 CEPA가 각각의 업종에 미치는 효과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개인 관광'으로 홍콩에 온 관광객들의 상품구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 방면의 소비는 다소 하락하였다. 취업자 수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표26. '개인 관광' 계획이 개개 업종별로 직접적 영향을 미친 순부가 가치 금액[289] (^)

단위 : 초과소비와 부가가치금액 - 백만 홍콩달러,
취업기회 - 고용자 수

	전체 경제	호텔·여관업	소매업	음식업	기타 개인서비스(#)	지역경계를 넘는 서비스
초과소비(額外消費)						
2004년	6,480	413	4,736	900	431	254
2005년	6,443	138	5,374	667	264	201
2006년	8,907	340	7,689	670	207	372
부가가치금액(增值額)						
2004년	4,714	246	727	329	222	80
2005년	4,651	85	833	241	140	60
2006년	6,495	196	1,119	237	110	123
취업기회						
2004년	19,158	790	6,306	3,141	870	74
2005년	17,815	213	6,779	2,204	500	51
2006년	25,742	666	10,339	2,282	408	119

주(註) : (^) - 본 표상의 수치는 그 이후의 영향을 반영하지는 않기에, 상이한 업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의 총계는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 - 기타 개인서비스에는 관광 대행, 비행기표 대행, 현지 교통 서비스 등을 포함함.

289) "CEPA對香港經濟的影響的評估", CEPA對香港經濟的影響 - 附載報告1, 앞의 글, 14면

6. CEPA의 정치·사회적 영향

중국과 홍콩은 CEPA를 통해 국제적으로 GATT가 부과한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홍콩 CEPA가 홍콩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면서 중국과 홍콩 모두 경제적인 성공과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이 CEPA를 체결한 것은 단순히 GATT가 부과한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 공업무역서(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Principal Trade Officer인 Doris Chen은 중국과 홍콩이 CEPA를 체결한 2003년 무렵에는 홍콩과 중국에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창궐 등의 여파로 홍콩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홍콩 경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홍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국의 홍콩 통치에 대한 홍콩주민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중국 측에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CEPA의 체결로 중국과 홍콩은 진정한 경제공동체가 되었으며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홍콩 경제는 더 이상 중국 경제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까지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홍콩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까지 높아져 사회적·정치적 공동체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일국양제 구상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이라면 일국양제의 기치 아래 중국과 홍콩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중국-홍콩 CEPA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홍콩 CEPA는 정치·사회적으로는 일국양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하나의 중국' 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중국-마카오 CEPA

제1절 마카오의 경제상황

중국과 마카오는 중국-홍콩 간의 CEPA 체결 후 약 4개월 뒤인 2003년 10월 17일에 「중국과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 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마카오 CEPA'라 함)를 체결하였다. 중국-홍콩간의 CEPA 체결 후에 이렇듯 빨리 중국-마카오 간의 CEPA가 체결된 것은 이미 홍콩관의 CEPA 체결 논의가 제안된 2001년 당시부터 중국과 마카오 모두 중국-홍콩의 CEPA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논의를 지켜보았으며, 관련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후술하듯 중국 경제 발전의 한 주축을 담당하는 중국 남부의 대표적인 경제지역들인 양안 4개 지역(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심으로 한 화남경제권역이 기존의 협력관계를 넘어서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경제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의 일련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카오는 독립관세지역이며 자유항이다. 그 경제규모나 무역량은 크지 않지만 무역통로가 활짝 열려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유럽공동체(EU)는 마카오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 경제 · 기술 · 정보 · 인재육성 등에 있어 폭넓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2001년에 마카오는 EU의 '아시아투자계획(Asia-Invest Programme)'[290]의 승인을 받아

290) 아시아투자계획은 EU가 제의한 것으로서 1998년 말 EU는 마카오를 아시아투자계획의 수혜지구의 하나로 공식 비준하였다. 아시아투자계획은 유럽공동체와 아시아 쌍방의 경제무역협력에 유리하도록 촉진 및 지지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마카오 중소기업과 EU 회원국 중소기업 간에 동반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는 자금을 획득할 수 있었다. EU는 사실상 의식적으로 마카오를 중국 및 아시아지역을 연계하는 연결고리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양안 4개 지역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마카오는 주로 EU와의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한편 마카오의 대외무역량을 보면 2000년의 경우 수입화물액 약 180억 PATACA(미화 약 22억 5천만 달러), 수출화물액 약 200억 PATACA이었다. 화물수입액의 경우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430억 PATACA를 기록한 반면, 화물수출액은 200억 PATACA를 전후하여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에는 수출입의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져서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2배에 해당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경제단체 간의 연계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와 동시에 무역 및 대외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가리킨다.
- 澳門特別行政區政府入口網點
(http://www.gov.mo/egi/Portal/rkw/public/view/area.jsp?id=22) > 澳門便覽 > 澳門與歐盟關係 참조

표27. 수출입화물액[291]

단위 : 백만 PATACA[292]

연도	수입화물액	수출화물액
2000	18,097.56	20,380.42
2001	19,170.36	18,472.95
2002	20,323.39	18,925.41
2003	22,097.23	20,700.10
2004	27,904.02	22,561.08
2005	31,340.29	19,823.34
2006	36,527.30	20,461.27
2007	43,113.86	20,430.57
2008	43,034.22	16,025.40

마카오 상품이 수출되는 지역을 크게 유럽, 미주지역, 아시아로 구분하여 수출금액의 변화추이를 보기로 한다. 2000년의 경우 수출금액은 유럽이 57억 PATACA, 미주지역이 100억 PATACA, 아시아가 40억 PATACA를 차지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20억 PATACA에 달해 아시아 전체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하였고, 홍콩에 대한 수출이 13억 PATACA로 대(對) 아시아 수출총액 대비 약 30%를 점유하였다. 그런데 유럽과 미주지역에 대한 수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2008년의 경우 유럽에 대한 수출은

291) 澳門特別行政區政府入口網點 (http://www.gov.mo/egi/Portal/rkw/public/view/area.jsp?id=22) > 統計數字 > 澳門資料 > 對外商品貿易 > 進出口貨值及貿易餘額 정리.

292) 마카오의 화폐단위는 澳門幣(PATACA)라고 한다. 환율은 미화 1달러 ≒ 오문폐(澳門幣) 8 위안(元)이며, 홍콩 달러 100 ≒ 오문폐(澳門幣) 103 위안이다.
- 澳門特別行政區政府入口網點 (http://www.gov.mo/egi/Portal/rkw/public/view/area.jsp?id=22) > 일반자료 > 화폐 참조, 2009년 12월 10일 방문

2000년 대비 약 27% 수준으로 감소하여 약 16억 PATACA를 기록하였고, 미주 지역의 경우 2008년에는 약 67억 PATACA를 기록하여 2000년 대비 약 6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대 아시아 지역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에는 50억 PATACA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60억 PATACA대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약 60억 PATACA를 기록하여 2000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 중 다른 양안 3개 지역과의 수출액을 보면 중국에 대한 금액은 계속 조금씩 증가하여 2006년과 2007년에는 30억 PATACA 대를 기록하였다. 다만 2008년에는 약 19억 PATACA로 하락하였는데 그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대(對) 홍콩에 대한 수출은 2005년까지는 큰 변화세를 보이지 않다가 2006년 이후 16~18%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08년에는 31억 PATACA를 기록하였다. (아래 표 참조)

표28. 주요 시장 별 화물수출액[293]

단위 : 백만 PATACA

연도	유럽	미주(美洲)	아시아			
			총액	중국	홍콩	대만
2000	5,789.65	10,257.62	4,045.85	2,073.39	1,329.84	171.17
2001	4,915.99	9,362.34	3,961.30	2,154.96	1,177.56	147.55
2002	4,395.94	9,587.75	4,631.16	2,948.13	1,099.88	129.50
2003	4,724.56	10,726.74	4,869.69	2,844.19	1,361.72	152.56
2004	4,888.43	11,405.64	5,608.26	3,140.40	1,703.71	202.29
2005	3,387.79	9,913.51	5,626.60	2,946.07	1,943.33	182.29
2006	3,996.74	9,342.88	5,950.87	3,035.37	2,292.05	135.57
2007	3,721.97	8,637.77	6,700.86	3,034.07	2,674.44	254.86
2008	1,591.07	6,735.95	6,068.89	1,968.22	3,162.66	217.58

293) 澳門特別行政區政府入口網點
(http://www.gov.mo/egi/Portal/rkw/public/view/area.jsp?id=22) > 統計數字 > 澳門資料 > 對外商品貿易 > 按主要市場統計之出口貨值 정리

주요시장별 마카오의 수입금액을 보면 유럽공동체와 미주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17억 PATACA였던 것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40억 PATACA 대로 올라섰으며 다시 2007년에는 67억 PATACA, 2008년에는 71억 PATACA(약 미화 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주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2000년 10억 PATACA에서 2006년에는 20억 PATACA 대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29억 PATACA를 기록하였다.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는 149억 PATACA(미화 약 18억 달러)를 나타냈으나 2005년에는 240억 PATACA 대로 올라섰으며, 2007년에는 다시 317억 PATACA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302억 PATACA(미화 약 38억 달러)이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단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가장 큰데, 2008년의 경우를 본다면 아시아 전체로부터의 수입액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약 50%를 차지하여 절대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74억 PATACA였으며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 약 124억 PATACA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약 169억 PATACA를 나타냄으로써 2000년 대비(對比)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3년 말부터 중국과의 CEPA가 시행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나, 중국으로의 수출은 가시적인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수입액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래 표 참조)

표29. 주요 시장 별 화물수입액[294]

단위 : 백만 PATACA

연도	유럽	미주(美洲)	아시아				
			총액	중국	홍콩	대만	일본
2000	1,738.15	1,008.42	14,919.37	7,428.87	2,758.34	1,719.60	1,141.79
2001	2,411.95	875.10	15,475.98	8,164.70	2,660.20	1,278.18	1,041.24
2002	2,394.50	918.77	16,498.09	8,477.18	2,955.79	1,357.77	1,370.61
2003	2,643.27	1,002.33	17,804.75	9,489.93	2,794.39	1,281.95	1,986.77
2004	3,482.83	1,344.10	22,324.52	12,394.25	2,949.98	1,354.40	2,684.30
2005	4,116.58	1,461.24	24,842.78	13,515.26	3,126.27	1,260.72	3,412.29
2006	4,794.24	2,242.90	28,044.51	16,469.51	3,722.61	1,173.47	3,049.24
2007	6,762.28	2,749.86	31,722.06	18,378.42	4,358.56	1,499.50	3,874.79
2008	7,100.97	2,929.77	30,282.44	16,926.16	4,365.83	1,424.15	3,639.12

제2절 중국-마카오 CEPA의 내용

1. 화물무역

200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금지한 생산품 또는 특수생산품을 제외하고, 중국은 모든 마카오 원산의 화물에 대해 원산지표준을 정한 후에 무관세의 수입을 허락하였다. 여러 개방단계를 거쳐 1,156개 마카오 생산품에 대해 '마카오 CEPA'에서는 원산지표준을 정하여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294) 澳門特別行政區政府入口網點
(http://www.gov.mo/egi/Portal/rkw/public/view/area.jsp?id=22) > 統計數字 > 澳門資料 > 對外商品貿易 > 按主要市場統計之進口貨值 정리

2004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무관세화물의 누적수출금액은 89,945,893 PATACA(미화 약 11,243,236 달러)이다.[295]

가. 원산지규칙

마카오를 원산지로 정하는 원산지규칙의 경우, 마카오생산자는 무관세로서 화물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마카오 CEPA'에서 정한 마카오원산지 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원산지증서'를 취득하여 마카오제조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⑴ 완전획득표준

'마카오 CEPA'규정에 따르면, 화물이 마카오제조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카오에서 완전 획득되어야 한다. 마카오에서 완전 획득한 화물이 아닌 때에는 필히 마카오에서 실질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마카오원산의 화물로 구분된다.

여기서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이라 함은 다음을 가리킨다.

① 당해 일방에서 채취 또는 추출한 광산품
② 당해 일방에서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이나 식물상품
③ 당해 일방에서 출생하고 사양(飼養)한 동물
④ 당해 일방에서 본조 제③호 소정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⑤ 당해 일방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상품
⑥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중국의 선박인 경우)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구기(區旗)를(마카오특별행정구의 선박

295) 중국-마카오 CEPA 홈페이지 (www.cepa.gov.mo/cepaweb/front/chs/index_ch.htm) > 「安排」 現商機 > 「安排」 統計數据 참조

인 경우) 게양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어류 및 기타 해산품

⑦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중국의 선박인 경우)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구기(區旗)를(마카오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 게양한 선박상에서 본조 제(6)호 소정의 상품에 가공을 하여 획득한 상품

⑧ 당해 일방에서 수집한 것으로, 당해 일방의 소비과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물품(廢舊物品)

⑨ 당해 일방에서 가공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재료(廢碎料)

⑩ 위 ①부터 ⑨까지의 상품을 이용하여 당해 일방에서 가공하여 얻은 상품.

⑵ 실질가공표준

이러한 '완전 획득' 표준 이외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실질적 가공'의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 가공의 주요 표준으로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등이 있다.

첫째,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이란 일방의 경내(境內)에서 가공을 한 후 얻은 화물에 기본적 특징을 부여한 주요 제조공정 또는 가공공정을 가리킨다.

둘째, '세목번호 변경(원어: 稅號改變)'이란 일방의 원산이 아닌 재료가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가공을 거쳐 생산된 후에, 획득한 상품이 「상품명칭 및 코드번호 협조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중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고 또한 당해 일방 이외의 국가·지구에서 더 이상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를 변경하는 어떠한 생산·가공·제조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란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원료 · 조립부품 · 노동가치 · 상품개발지출가치의 합계가 완제품수출의 FOB 가격 대비 30% 이상이고, 또한 최후의 제조 · 가공공정이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나. 무관세향유를 위한 절차

(1) '마카오 CEPA' 첨부표 내에 기재된 마카오원산화물

이러한 화물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생산자는 먼저 '경제국 원산증서 발급처(經濟局産地來源證簽發處)'에 공업장소와 생산품의 상세자료가 기재된 '원산지증서신청표(申請來源証表格)'를 제출한다. 신청자는 마카오 경제국에 화물명칭 및 생산능력 또는 생산예측상황의 자료와 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심사비준 후 신청인은 마카오 경제국에 정식으로 '마카오 CEPA' 전용(專用)의 원산지증서를 신청하여 받는다. 신청인이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에는 '원산지증서신청표', '원산지증서 및 상업송장 정 · 부본'이 포함된다.

③ '경제국 원산증서 발급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부합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인은 원산지증서를 즉시 발급받는다.

④ '마카오 CEPA'상의 무관세를 향유하는 화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마카오 CEPA' 부속문서 3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 경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를 중국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카오 경제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9월 30일까지 821장의 원산지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중 730장의 증명서가 아미 사용

되었다. 수출화물금액은 87,901,821 PATACA로서, 약 7,449,325 PATACA의 관세가 절감되었다. 수출품의 종류는 시멘트, 방직기성복, 원사(원어: 紗線), 비닐봉지, 인쇄잉크, 신발, 설탕·원두 등의 식품이다.[296]

⑵ 기타 '마카오 CEPA' 첨부표 내에 기재되지 않은 화물

마카오 생산자는 2006년 1월 1일부터 매년 두 차례(각각 2월 15일과 8월 15일 이전) 경제국에 무관세향유화물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제국은 국가 상무부를 거쳐 관련 신청을 확인한 후에 해관총서(海關總署)와 함께 관련 화물의 원산지표준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쌍방은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전에 관련 원산지표준을 공포한다. 중국은 당해 연도 7월 1일 및 다음 해 1월 1일 전에 '마카오 CEPA'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련 화물에 대해 무관세수입을 승인한다.

⑶ 직접운수규칙(直接運輸規則)

'마카오 CEPA'에 의거하여 무관세를 시행하는 원산화물은 직접운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직접운수규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첫째, 화물이 일방으로부터 상대방 해안으로 직접 운수되는 경우이다.

둘째, 화물이 홍콩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이다. 다만, ⅰ) 지리적 원인 또는 운수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ⅱ) 홍콩에 반입되어 무역·소비가 되지 않아야 하며, ⅲ) 하역·보관화물을 양호한

296) 마카오 경제국(www.economia.gov.mo) > 對外經貿關係 > 更緊密經貿關係安排 > 概要 참조

상태로 두는데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홍콩에서 기타 어떠한 가공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홍콩을 경유하여 운수된 화물인 경우에는 다음의 증서를 신고지의 해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출자 측에서 발행한 복합운송 선하증권

② 수출자 측의 증서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서

③ 화물의 원 제조업자 송장(送狀)

④ 위 둘째 요건에 열거된 3가지 경우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2. 서비스무역

2003년 '마카오 CEPA'가 체결된 후 2009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에게 우대혜택을 부여한 서비스업종은 41개에 달한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는 법률, 회계, 건축 및 부동산, 치과의료, 광고, 관리자문, 회의전람, 전신서비스, 시청, 소매, 보험, 은행, 증권선물, 여행, 운수(도로운송, 해상운송), 화물대행, 창고저장, 물류, 정보기술, 직업소개, 개인자영업, 인력중개, 문화오락, 항공운수, 전문기술자 자격시험, 상표대리, 특허대리,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시장조사연구, 관리자문 관련 서비스, 공용사업, 건축물청소, 촬영, 인쇄, 통 · 번역, 환경서비스, 사회서비스, 체육서비스, 채광(採鑛) 관련 서비스, 과학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이다.

'마카오 CEPA' 본 협의에서 서비스무역개방과 관련하여 합의한 것은 크게 시장진입허용문제, 서비스제공자 문제, 금융협력 문제, 여행협력 문제, 전문직 자격의 상호승인문제이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본다.

가. 시장진입

일방은 '마카오 CEPA' 부속문서(附件) 4에 열거된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상대방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제한적 조치의 점진적 감소 또는 철폐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방이 요구하면 쌍방은 협상을 통해 쌍방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한층 더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 부속문서에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 부문이나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WTO 가입 의정서」 부속문서 9인 「서비스무역 구체적 승낙 양허표 제2조 최혜국대우 면제 명단(服務貿易具體承諾減讓表第2條最惠國待遇豁免淸單;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 on Services List of Article Ⅱ MFN Exemptions)」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취한 경우 그에 속하는 서비스영역에 대해서 쌍방은 어떠한 제한적 조치를 추가할 수 없다.

나. 서비스제공자

⑴ 자연인

'마카오 CEPA' 및 그 부속문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마카오 CEPA' 및 그 부속문서에서 말하는 '서비스제공자'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이 중에서 자연인이라 함은 중국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을 가리키며, 마카오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을 가리킨다.

⑵ 법인

서비스제공자 중 법인은 중국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상법전(商法典)」, 「상업등기법전(商業登記法典)」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조직 · 설립된 모든 법률실체를 가리킨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사유 또는 정부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회사 · 기금 · 조합기업 · 합자기업 · 독자기업 · 협회(상회) 등을 포함한다. 또한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등기되어야 하며, 영업허가증이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밖에 중국과 마카오를 제외한 WTO 기타 성원국의 어느 서비스 제공자가, 만약 일방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그 일방의 내(內)에서 '마카오 CEPA' 부속문서 5에 규정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마카오 CEPA' 당사자 중 해당 법인이 설립된 일방이 아닌 다른 일방이 '마카오 CEPA' 하에서 당해 일방에게 부여한 서비스제공자의 우대를 향유할 권한을 가진다. 즉 CEPA 상의 우대조치를 체결 당사자가 아닌 제3의 WTO 회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인의 경우도 법률 이외의 서비스 제공자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법률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첫째,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 및 범위는 중국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성질 및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이미 마카오에서 등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297] 그 중에서,

---

297) 「CEPA」 효력발생일로부터, 쌍방 이외의 서비스제공자가 매수 또는 합병 방식을 통하여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지 만 1년이 된 경우, 당해 피(被) 매수 · 합병된 서비스제공자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에 속한다.

①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이미 마카오에서 등기를 하고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연한에는 제한이 없다.

②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보험 및 증권 제외)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 즉 마카오의 은행이나 재무회사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금융체계법률제도(金融體系法律制度)』에 따른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5년 이상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보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 즉 마카오의 보험회사는 마카오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5년 이상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셋째,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한 기간 동안에는 적법하게 소득보충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넷째, 업무장소와 관련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할 업무장소를 마카오에서 보유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그 업무장소는 업무의 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해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선박의 총톤수의 50% 이상은 마카오에 등록되어야 한다.

다섯째,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고용한 직원 중 마카오에서의 거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민 및 마카오 관련 법규에 따라 마카오 정주(원어: 定居)의 비준을 얻은 자가 총 직원 수의 50% 이상을 점유하여야 한다.

(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첫째, 마카오특별행정구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립등기를 한 마카오 변호사사무소이어야 한다.

둘째, 관련 변호사사무소의 독자(獨資)경영자 및 모든 조합원은 마카오의 개업변호사이어야 한다.

셋째, 관련 변호사사무소의 주요 업무범위는 마카오에서 현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관련 변호사사무소, 독자(獨資)경영자 또는 조합원은 법에 따른 소득보충세 · 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련 변호사사무소는 마카오에서 3년 이상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였어야 한다.

여섯째, 관련 변호사사무소는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업무장소를 마카오에 보유 ·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다. 제출서류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 CEPA' 상의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마카오영주민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중국공민인 자는 홍콩 · 마카오주민 중국왕래통행증(回鄉證)이나 마카오특별행정구 여권을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마카오의 관련기관이나 관련인의 심의 · 검증을 거친 문서자료 · 성명(聲明) 그리고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⑴ 문서자료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 제출할 서류

① 마카오특별행정구 상업 및 동산등기국(商業及動産登記局)에서 발급한 상업 및 동산등기증명서 부본
② 마카오특별행정구 재정국에서 발급한 영업세 양식 신고서 부본
③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과거 3년(또는 5년) 동안의 마카오에 있는 회사의 연차보고서 또는 회계심사를 거친 재무보고서
④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업무장소를 보유·임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정본이나 부본[298]
⑤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과거 3년(또는 5년) 간의 소득보충세 신고서·납세증명서의 부본. 결손(缺損)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보충세 신고서와 납세증명 관련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마카오에 있는 종업원의 사회보장기금 납부액 증명서 부본, 그리고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고용한 직원 중 마카오거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민 및 마카오 관련 법규에 따라 마카오 정주의 비준을 얻은 자가 총 직원 수의 50% 이상을 점유하도록 한 것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 문서나 그 부본
⑦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마카오에서의 업무 성질·범위를 증명하는 기타 관련문서나 그 부본
⑧ 물류·화물대행서비스, 창고저장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종합운수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구비하였음에 대해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서 확인한 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298) 중국에서의 해운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마카오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적재량의 50% 이상이 마카오에서 등기되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성명(聲明)을 발표하여야 할 경우

‘마카오 CEPA’상의 우대혜택을 받기를 신청하는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와 그 책임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해 성명을 하여야 한다.[299]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 그림 참조)

299) 허위나 부실의 성명을 한 자는 마카오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그림5. 서비스제공자 성명서[300]

성 명

회사(법인)

본인 _____, 본사위치 _____, 이에 삼가 성명함 :

1. 본인은 _____(신청회사명칭)_____의 법정/수권대표로서, 해당 신청자의 업무성질, 운영상황, 조직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였음.

2. (신청회사명칭) 《중국과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중 (서비스업종 명칭)의 관련 자격을 취득하려고 신청하며,「마카오서비스제공자」신분으로 중국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함.

3. (신청회사명칭)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국에 제출한 마카오서비스 제공자 증명서 신청표 내에 신고한 자료, 첨부 문건 내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완전히 정확하고, 은닉이나 누락이 없으며, 법인형식으로써 제공하는 서비스의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 표준에 부합함.

본인은 진실, 성실하게 이 성명을 작성하였음을 정중히 밝히며, 진실되고 확실하며 거짓이 없음을 확신하며, 상술한 자료가 허위 또는 진실하지 않을 경우 마카오 법률에 의거하여 민사 및 형사책임을 부담함을 숙지하고 있음.

_____

(성명자 서명 및 회사인장 추가 날인)

본인은 년 월 일 마카오에서 이 성명을 함.

300) 중국-마카오 CEPA 홈페이지 (www.cepa.gov.mo/cepaweb/front/chs/index_ch.htm) >「安排」現商機 >「安排」申請事項及程序 > 申請澳門服務提供者證明書 참조

⑶ 증명서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상술한 문서자료와 성명서를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국(經濟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마카오 경제국은 필요한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 관련 정부부문 · 기구 또는 독립 전문기구(전문가)에게 사실확인의 증명을 위탁할 수 있다.[301]

경제국은 '마카오 CEPA' 부속문서 5에서 규정한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마카오 CEPA′ 시행된 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마카오 경제국은 총 367장의 '마카오 서비스제공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증명서를 취득한 기업은 주로 물류운수, 전람회의, 관리자문, 건축공정, 소매, 전신(電信), 법률, 광고, 항공운수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기업이었다.[302]

상술한 성명서, 자연인신분증명의 복사본, 경제국에서 사실확인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서자료들의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공증부문 또는 내지(內地)에서 인가한 공증인의 사실확인증명을 거쳐야 한다.

라. 여행협력 및 전문직 자격의 상호 승인

마카오 여행업 발전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은 북경시(北京市), 상해시(上海市), 광동성(廣東省)의 광주시(廣州市) · 심천시(深圳

301) 전신(電信)부문 중, 인터넷데이터센터업무, 저장 · 중계전송 유형의 업무, 호출센터업무, 정보서비스업무의 제공과 관련한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성질과 범위는 경제국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전신주관부문에 위탁하여 사실확인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302) 마카오 경제국 (www.economia.gov.mo) > 對外經貿關係 > 更緊密經貿關係安排 > 概要 참조

市)·주해시(珠海市)·동관시(東莞市)·중산시(中山市)·강문시(江門市)·불산시(佛山市)·혜주시(惠州市)의 주민 개인이 마카오로 가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며,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광동성의 전 범위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여행의 홍보·확충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에는 상호여행촉진 및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를 기초로 하는 대외확장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주장삼각주 지역을 기초로 한 것은 중국 내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수준이 높아 여행이 가능한 사회적 계층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며, 중국·홍콩·마카오·대만 등 대만해협 양안의 경제협력 주체들의 협력기반 중 가장 대표적이고 활기차며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핵심지역이 바로 주강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쌍방은 중국과 마카오 간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수반되는 인적교류의 활성화·실질화를 위한 조치로서 전문직 자격의 상호승인을 장려하고, 상호 간에 전문기술인재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문직 자격의 상호승인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상·제정하기로 하였다.

3. 무역투자편리화

중국과 마카오는 ① 무역투자촉진, ② 통관편리화, ③ 상품검역·동식물검사검역·식품안전·위생검역·인증인가 및 표준화 관리, ④ 전자상거래, ⑤ 법률법규 투명도, ⑥ 중소기업 협력, ⑦ 산업협력 등 7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마카오 CEPA」 보충협의 3』을 체결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무역투자편리화의 새로운 협

력분야로 넣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과 마카오 쌍방은 지적재산권보호가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두 지역 간 경제무역교류 · 협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마카오에 지적재산권보호 조정센터(원어: 保護知識産權協調中心)를 설립하여 두 지역의 지적재산권보호의 정보에 대한 교류 · 소통을 진행하고, 지적재산권보호의 법률 · 법규의 제정 및 집행방면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마카오 CEPA」 보충협의 4』에서는 마카오가 대형 국제회의 및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마카오의 산업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카오 CEPA」 보충협의 5』에서는 브랜드협력(원어: 品牌合作)을 추가함으로써 무역투자 간편화의 협조항목은 9개로 늘었다. 브랜드보호의 법률법규 제정 및 집행방면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훈련(교육), 현지시찰(원어: 考察), 간행물출판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카오 CEPA」 보충협의 6』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표분야와 관련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과 마카오의 경제국(經濟局)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3장 CEPA와 중화경제권

제1절 중화경제권

1. 중화경제권의 범위

중국은 해외에 거주하지만 현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화교(華僑)라 부르며 중국공민(中國公民)으로 간주하는 반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화인(華人)이라고 불러 이 둘을 구분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화교경제권이라 할 경우 중국국적을 보유한 해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권역이 되겠지만, 중국 화교(또는 화인)들의 놀라운 결속력과 경제적 네트워크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한정적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널리 아시아지역에 거주하는 화교・화인들의 경제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화교나 화인은 전 세계 약 130여 개국에 2,700여만 명이 있으며, 이중에서 85%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303] 특히 이들은 객가(客家)라는 역사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서 그 인적 유대감과 네트워크는 높은 결속력을 유지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

중화경제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견해가 나뉜다. 첫째 의견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한정한다. 중국을 제1 기반으로 하고, 홍콩・마카오・대만・싱가포르를 제2 기반으로 하며,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303) 中華社會科學出版社, 「華人經濟年鑒 1994」 - 남광규, "중화경제 : 지역화(Regionalization)를 통한 중국경제의 확대" 국제 지역연구 제2권 제3호, 82면

· 필리핀을 제3 기반으로 한다.

둘째 의견은 중화경제권의 지리적 범위를 태평양지구에까지 확대하여 북미지역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화인(華人)들까지 포함한다.

세 번째 견해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핵심으로 하고 유럽과 미국의 해외 화인을 포함한다.[304]

중화경제권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공통점은 바로 중화경제권을 해외에 있는 화인들을 기초로 하는 경제네트워크로 본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종합해보면, 중화경제권이란 지리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인들 사이에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을 지칭하며, 좁게는 중국 · 대만 · 홍콩 · 마카오 등의 지역을 말하고 넓게는 이들 외에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태국 ·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화교경제권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1993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하나의 전체로서 분석하였는데 이들 지역 전체를 통칭하여 중국경제지대(Chinese Economic Area, CEA)라고 불렀다. 다만 정부의 통일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고, EU 등과는 달리 통일적인 제도적 시스템이 없으며, 이들 4개 지역 간의 협력은 자유시장을 추진하고 기업을 위주로 하는 것 등이라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해외 화교(華僑) 총수의 85%를 차지하고, 해외 화교 총자본의 2/3가 집중되어 있다. 중화경제권의 형성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인 자본유치

---

304) 廖楊, "世界體系中的'華南經濟圈'及其參與中國-東盟自由貿易區的優勢問題", 廣西民族研究, 2005年 第1期(總第79期), 158면

와 대외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화경제권의 화교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만 중화경제권 국가들과 중국의 교역을 보면 투자나 무역 면에서 홍콩·대만이 85%를 전후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거주 국가에서 민족적으로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의 상당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중국계인 화인(화교)들의 비율은 태국이 3%, 필리핀 4%, 인도네시아 4%, 말레이시아 35%를 차지하는 반면, 해당 국가의 경제력에 있어서는 태국 경제의 90%, 인도네시아 민간기업의 75%가 화교자본이라고 한다.

이들 동남아지역의 화교자본은 산업자본(産業資本)이라기보다는 상업자본(商業資本)의 측면이 강하여 자금운용이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융통성이 크며 이는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중화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대(對) 중국 직접투자를 보면 홍콩이 전체 투자금액 중 70% 이상을 차지하여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대만과 싱가포르가 10% 대를 유지하면서 따르고 있다. 그 밖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아래 표 참조)

표30. 중화경제권 국가의 대(對) 중국 직접투자금액[305]

단위 : 미화 억 달러,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홍콩	206 (75.7)	206 (70.6)	185 (72.2)	163 (73.6)	154 (75.1)
대만	34 (12.7)	32 (11.3)	29 (11.4)	25 (11.7)	22 (11.1)
필리핀	0.55 (0.2)	1.55 (0.5)	1.79 (0.7)	1.17 (0.5)	1.11 (0.6)
태국	3.23 (1.2)	1.94 (0.7)	2.05 (0.8)	1.48 (0.7)	2.03 (1.0)
말레이시아	4.59 (1.7)	3.81 (1.3)	3.40 (1.3)	2.37 (1.1)	2.02 (1.0)
싱가포르	22 (8.2)	44 (15.3)	34 (13.3)	26 (11.9)	21 (10.5)
인도네시아	0.94 (0.3)	0.79 (0.3)	0.68 (0.3)	1.29 (0.5)	1.46 (0.7)

주(註) : ( )안은 중화경제권 내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을 %로 나타냄.
자료 출처 : 중국대외무역연감, 각 년도 판.

그러면 화교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대(對) 중국 교역은 어느 정도일까를 본다. 아래의 표를 보면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금액에서 홍콩이 2000년의 미화 539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69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대만은 같은 기간 305억 달러에서 44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100억 달러 내외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화경제권의 경제교류가 중국과 홍콩·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홍콩·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305) 허홍호, 앞의 글, 24면의 표를 재정리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간의 경제교류협력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 정책도 완화되면서 양안 4개 지역은 긴밀한 경제무역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홍콩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중국은 홍콩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해외투자에 소요되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대만 역시 노동임금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용증가 등으로 산업의 해외이전이 필요하였고, 그 대상지로서 중국이 적합하였기 때문이다.[306]

표31. 중화경제권 국가의 대(對) 중국 교역[307]

단위: 미화 억 달러

국가/지역	2000년			2001년			2002년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홍콩	94.3	445.2	539.5	94.2	465.5	559.7	107.4	584.7	692.1
대만	254.9	50.4	305.3	273.4	50.0	323.4	380.6	65.9	446.5
필리핀	16.8	14.6	31.4	19.5	16.2	35.7	32.2	20.4	52.6
태국	43.8	22.4	66.2	47.1	23.4	70.5	56.0	29.6	85.6
말레이시아	54.8	25.6	80.4	62.1	32.2	94.3	93.0	49.7	142.7
싱가포르	50.6	57.6	108.2	51.4	57.9	109.3	70.5	69.7	140.2
인도네시아	44.0	30.6	74.6	38.8	28.4	67.2	45.0	34.3	79.3

자료출처 : 중국해관통계, 각 년도 판.

306) 허홍호, "중화경제권의 현황과 발전 전망", 中蘇研究, 통권99호(2003), 17-27면.
307) 허홍호, 앞의 글, 24면의 표를 재정리

2. 중화경제권의 중심으로서의 화남경제권(華南經濟圈)

중화경제권의 외연(外延)을 이루는 기초는 해외의 화인들이다. 해외 화인의 대다수는 아시아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광동(廣東), 광시(廣西), 푸지엔(福建), 하이난(海南) 등 중국 남방의 각 성(省)에서 왔으며, 홍콩·마카오·대만 등지를 거쳐 해외로 나갔거나 아니면 동남아 각국에서 다시 유럽이나 미주로 이민간 자들이다. 광동·광시·푸지엔·하이난 등 지역과 홍콩·마카오·대만지구는 그 종족적 뿌리와 역사적 연원(淵源)이 같은 '백월족 문화권(百越族群文化圈)'으로서 그중에서도 핵심지역에 속한다. 세계 각지의 화상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중화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그 중심지역은 광동·홍콩·마카오·대만·푸지엔·광시·하이난 지역 등을 포괄하는 화남경제권이 그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

중화경제권의 핵심 지역경제권역으로 부상하는 화남경제권은 광동성, 푸지엔성, 하이난성, 주강삼각지역을 포괄하는 중국 남부지역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홍콩·대만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화남경제권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에 형성되었다. 홍콩은 화남지구에 경제특구가 창설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점차 제조업을 북부로 이전하였고 이로써 홍콩의 발전을 지속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하여 새로운 번영을 도모하였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의 연해개방전략은 외향적 경제를 향하여 확장되어 갔으며, 대만도 1997년부터 대륙지구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대만기업의 중국 진입 열기가 고조되었고 차츰 화남경제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3년부터 아시아금융위기가 발발할 때까지 대규모의 홍콩·마카오·대

만의 자금이 왕성하게 화남경제지역에 투입되었으며 화남경제권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기간에 양안 4개 지역 간의 경제적 연계는 더욱 밀접해져 갔고, 해외수출도 활발하여 화남경제권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홍콩·마카오·대만의 자금 이전규모나 속도는 완만해졌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증강되고 시장이 발전하면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왔으며 화남경제권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308]

화남경제권은 다른 지역과 달리 노동력, 물자, 자본의 교류확대와 일정한 분업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서 인적·물적 교류왕래가 용이하고,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공통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권역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었다. 물론 이러한 지리적·문화적 요인만으로는 경제권역이 형성될 수는 없으며,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이 합치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화남경제권의 운용방식과 성장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309]

첫째, 화남경제권 중에 형성된 지역경제일체화는 주로 종적(縱的)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역경제일체화를 이룬 직접적 목적은 지역간의 무역을 촉진하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지 시장을 점유하려는 투자행위는 많지 않았다. 대신 중국의 저렴한 토지·노동력을 이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생산기지를 재차 배치하면서 외향적 수출에 편중하였다.

둘째, 중국은 이미 양안 4개 지역(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간의

308) 林凌·憑蘇宝, "CEPA與華南經濟圈", 開放導報, 2003年 第9期. 10면
309) 林凌·憑蘇宝, 위의 글, 10-11면; 남광규, 앞의 글 79-82면

분업협력체계가 형성되었다.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자원의 상호보완이 가능한 토대 위에서 상호투자를 통하여 경제공간을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생산기지를 분배하여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방식으로 산업이전을 진행했다. 예컨대 홍콩 · 대만은 신흥 공업화 경제지역으로서 금융 · 서비스업이 발달하였고 자금 · 기술 · 관리경험이 많다는 점에 기초하여 화남경제권의 성장확대에 추진력을 제공하였다. 반면 화남지역은 홍콩 · 대만이 산업의 이전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토지와 노동력 방면에서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 제조업의 80%는 모두 내지(內地) 그중에서도 특히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생산비용이 저렴한 그곳을 생산기지로 삼음으로써 중국이 세계화 경제의 생산시스템에 편입되게 되었다.

셋째, 화남경제권의 지역적 협력을 추진한 것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서 시장(市場)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정부의 참여는 비교적 적었다. 또한 공식적인 제도통합보다는 이들 세 지역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각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 대만 정부의 대륙투자제한 정책의 완화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동력을 제공한 결정적 계기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화남경제권에서의 요소이동은 단방향적(單方向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 대만의 자금이나 기술이전이 화남지구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적유동에 있어서도 중국이 엄격한 출입경 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단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홍콩 · 대만의 노동력이 대량으로 대륙의 화남지구로 유입된 반면, 대륙의 화남지구에서 홍콩 · 대만으로 유입된 것은 매우 적다. 그 결과 대륙의 화남지구는

양안 4개 지역의 생산요소가 모이는 집결지가 되었다.

다섯째, 화남경제권의 형성과정에서 양안 4개 지역 각 당사자는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홍콩은 도시의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주강삼각주지역으로 제조업을 확산하여 생산비용이 낮은 생산기지를 건설하였다.

여섯째, 화남경제권 중에서 가장 활기찬 역량을 보이는 곳은 홍콩·마카오·대만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무역과 서로 연계를 맺고 다국적 기업의 외주발주에 대한 하청·재하청 등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기술과 상품시장에서 세계의 최신 수요공급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화남경제권 협력의 직접적 성과는 양안 4개 지역의 수출입무역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수출상품의 경우 대만·홍콩 및 광동·푸지엔성의 수출총액이 전세계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2.85%에서 1995년에는 6.6%, 1999년에는 8.3%로 증가하였다. 또한 화남경제권의 대미(對美) 무역액은 1987년 560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1,36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2,000억 달러, 2001년에는 2,500억 달러로 중가하였다. 중국, 홍콩,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얻는 무역흑자 대부분은 화남경제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홍콩과 중국의 무역교류는 줄곧 평온한 발전관계를 보였고 무역 총액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CEPA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3년 중국과 홍콩의 무역액은 미화 874억 달러로서, 중국의 수출입 총액의 10.3 %를 차지하였다. 홍콩은 중국의 제3대 무역상대방이자 제2대 수출시장이었고, 중국은 홍콩의 최대 무역상대방이 되었다.[310]

---

310) 中國統計年鑑 2004 - 張贊贇, "CEPA與中國經濟一體化", 南京理工大學 2004年 碩士論文, 8면 재인용

또한 중국은 홍콩 중계무역의 최대 공급지이자 목적지이기도 하다.

중국과 대만 간의 협력을 보면, 냉각기(冷却期)와 발전기(發展期) 등을 반복하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쌍방이 개방을 확대하면서, 양안 경제무역은 고속성장 추세를 보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년간 대륙에 대한 대만의 무역수지흑자는 2,475.8억 달러에 달하였다.

대만과 홍콩 세관(海關)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의 양안무역 총액은 881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15.4% 성장하였다. 그 중 대만이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는 6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고, 수입은 2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하였다. 만일 홍콩과의 무역 부분까지 합산한다면 2006년 대만과 중국대륙 및 홍콩과의 무역총액은 1,158.57억 달러이며, 수출 891.91억 달러, 수입 266.66억 달러이다.[311]

화남경제권의 운용과 양안 4개 지역의 협력에 기초한 성장 동력 및 경제적 활력은 홍콩·대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였고, 화남지구를 포함한 중국의 개방전략을 한 단계 높이고 경제발전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홍콩의 경우를 보면,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의 구조전환을 완성하여 제조업을 홍콩 외부로 이전하여 내보냈고, 국제화·전문화 정도가 더욱 높은 금융업·운수업·통신업 등의 서비스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대만은 중국과 경외(境外)생산기지 분업관계를 형성하여 대만 현지에서는 고부가가치의 기술밀집형 생산에 종사하여 연구개발능력을 높이고 서비스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는 경외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제조업의 이전에 따른

311) 臺灣 行政院 大陸委員會,「兩岸統計月報」No.169, 統計提要, 1쪽

대만 현지의 산업공백은 대만을 항공운수나 금융 중심지로 변모하여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화남지구는 기술도입, 상품생산기능, 인력・토지 등 자원개발을 통하여 커다란 발전효과를 산출했다. 외자도입을 예로 들면, 광동성의 경우 2002년 말까지 실제 이용된 외자누계는 약 1,576억 달러로서 전국의 35.2%를 점유하였으며 세계 500대 기업 중 254개 기업이 이미 광동성에 투자했거나 사무소를 설립했다.[312]

양안 4개 지역의 경제무역관계는 빠른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주로 민간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비교우위와 시장의 선택에 따라 산업을 배치한 결과이며, 이들 4개 지역 경제 전체의 정합성을 촉진하는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러한 경제협력방식은 4개 지역 전체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며, 각 경제실체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업종진입장벽,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불가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313]

첫째, 생산요소의 이동이 제한되었다.

홍콩과 마카오는 개방경제체제로서 자원의 유입・유출이 기본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중국의 경우 홍콩처럼 완전한 개방상태는 아니다. 화물무역과 제조업 영역의 투자에 있어서는 장려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장기간 제한 위주의 정책을 펴 왔다. 대만의 경우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대만 상인의 중국 왕래를 가능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는 주로 자원을 가공하는 것에

312) 林凌・憑蘇宝, 앞의 글, 11면
313) 張贊贇, “CEPA與中國經濟一體化”, 앞의 글, 15-18면

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홍콩이나 대만의 제조업의 중국 지역으로의 이전이 기본적으로 완성된 이후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되면서 이들 간의 경제협력 공간도 차츰 축소되어 갔다. 홍콩과 중국의 협력과정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홍콩의 경우 1980년대 제조업의 이전을 마무리 한 후 줄곧 서비스업을 중점 발전시킴으로써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러한 공백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이 노동밀집형 산업으로부터 전자, 컴퓨터, 생물 등 과학기술 산업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대체해 갔다. 따라서 홍콩은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대부분을 점하는 산업구조를 보이는데, 특히 자본·기술·지식 밀집형 서비스업을 위주로 하면서 은행·보험·증권·물류 등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 반면 중국 서비스업은 중국 총생산의 34% 정도에 불과하였고, 자금부족과 기술낙후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과 홍콩 간의 서비스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홍콩 서비스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뿐 아니라 중국의 서비스업의 효율을 크게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둘째, 통일적인 협력계획이 없었다.

각 지역 정부 간의 공식적인 조치나 고위급의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양안 4개 지역의 협력은 불안정하였다. 주강삼각주 지역은 홍콩이 중국에 마련한 거점지대인데 주강삼각주 지역과 홍콩 간에는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자금유통이나 정보흐름 등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받았고, 주강삼각주 지역의 계획에 홍콩이 참여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들 지역 각 성시의 분업을 통일적으로 조치하지 못함으로써 홍콩은 광조우(廣州), 선전(深圳) 등과 산업구조가 겹치는 현상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홍콩의 '주변부화' 현상은 점점 심각해져 갔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보다 많은 외상이 직접 중국에 들어가 여러 상업적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기업도 직접 국제시장에 가서 무역과 투자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홍콩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무역・투자・금융 등의 중개창구로서의 지위와 기능이 계속 약화되어 갔다. 그밖에도 공항, 도로, 항만, 철도, 물류센터 등의 대형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상호 간의 경쟁을 유발한다.

셋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이다.

아시아금융위기와 중국・대만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경제는 중대한 변화기에 접어들었고, 이는 홍콩・마카오・대만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융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경제일체화 정도가 훨씬 높은 동아시아 경제에 융화되어 가고 있다. 방콕협의 및 ASEAN의 "10+1"[314] 자유무역협의에 서명하였고, 2001년 에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양안 4개 지역'이라는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일체화라는 보다 넓은 활동공간의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중국의 초(超)국민대우 문제가 불거졌다. 과거에는 홍콩・마카오・대만의 중국 투자를 장려

---

314) ASEAN "10+1"이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한・중・일 3개국 각각과의 협력시스템을 말한다. 즉 'ASEAN과 한국', 'ASEAN과 중국', 'ASEAN과 일본'의 3개의 '10+1'을 말한다.
1990년대 말 세계경제화라는 파고(波高) 속에서 ASEAN은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것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바로 "10+1"이다. "10+1"에서는 농업, 정보통신, 인력자원개발, 상호투자, 메콩강(Mekong river) 유역개발이라는 5개의 중점 협력영역을 확정하였다.

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각 지방 정부 모두 이들에 대한 일련의 우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예컨대 대만의 투자에 대해 「대만동포투자보호법(臺灣同胞投資保護法)」을 실시하였고 각종 초(超)국민대우의 우대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WTO 가입 시부터 중국은 WTO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3국 및 단독관세지역과의 모든 특수무역안배를 취소하거나 WTO 협정에 맞도록 하기로 양허하였다. 이는 홍콩 · 마카오 · 대만의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우위가 장차 감소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중국경제단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경제구조조정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양안 4개 지역의 분업형세는 더 이상 예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양안 4개 지역 간의 상호보완 및 분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역내 생산요소의 이동을 빠르게 하며,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정부간 협조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3. 화남경제권의 주요 경제구역[315]

가. 주강삼각경제구역(珠三角經濟區)

주강삼각주 경제구역은 광동성 중남부에 위치하면서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하고 있고, 하천의 연계가 촘촘하여 수상운송이 편리하다. 또한 인구가 조밀하고 충분한 노동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농업자원도 풍부하다. 이 경제구역은 지리적 요건과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광동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적으로도 개혁개방의 시험지로서 중요한

315) 廖楊, 앞의 글, 159-160면

의의를 가진다.

자연지리조건을 보면 주강삼각주 지역의 배후에는 화남의 중심도시인 광조우(廣州)가 있고, 앞으로는 주하이(珠海) 경제특구가 있고, 홍콩・마카오에 인접하면서 남해를 향하고 있다. 따라서 외향적 경제발전과 국제분업・협력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면 주강삼각주 지역은 해외 화교(인)와 홍콩・마카오 주민들의 주요한 원적지이어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 및 친속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향이라는 감정적 유대감과 언어, 인적관계 등은 이들이 투자지역을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그밖에도 주강삼각주 지역은 광동성에서 인구가 조밀하고 경제가 발달했으며 통상(通商) 항구가 비교적 많이 있는 지역이다.

주강삼각주 경제구역은 외향적 경제발전전략을 취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상품시장분야에서 대외무역은 주로 무역수출, '삼래일보(三來一補)'[316] 기업제품의 수출, 삼자기업(三資企業)[317] 수출 등 3가지 방면에 집중하고 있다. 1989년의 대외무역 수출총액은 인민폐 22.77억 위안으로서 농・공업 생산 총액의 22.87 %를 점유하였다. 이는 1980년 광동성 전체의 대외무역 수출총액보다도 높은 것

316) '삼래일보'란 원료를 들여와 가공하거나(원어: 來料加工), 견본을 들여와 가공하거나(원어: 來樣加工),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것(원어: 來件裝配) 및 보상무역(補償貿易)을 가리킨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시범적으로 창설한 일종의 무역형식으로서 1978년 동완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삼래일보 기업은 외상(外商)이 설비(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것 포함), 원재료, 견본을 제공하고 상품의 수출을 책임지며, 중국 기업은 토지, 공장, 노동력을 제공한다. - Wikipedia 중문판 참조 (http://zh.wikipedia.org/wiki/%E4%B8%89%E6%9D%A5%E4%B8%80%E8%A1%A5).

317) 삼자기업이란 외상투자기업의 3가지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외자기업(外資企業)의 3가지가 이에 속한다.

이다. 주강삼각주 경제구역의 외향적 경제는 외자의 이용에서도 나타난다.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광동성은 중국 전국에서 실제 이용한 외자액이 가장 많은 성(省)이다. 1980년부터 1991년까지의 광동성의 건설자금 중 약 1/3 이 외자인데 광동성에 투입된 외자 중 약 70% 정도가 주강삼각주 경제구역에 집중되었다.[318]

주강삼각주 경제구역의 또 다른 경제적 특징은 농촌기업(원어: 鄉鎭企業)이 일어나 경제구역의 이원적 경제구조를 바꾸었으며 향촌의 공업화·도시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경제구역의 발전에 중요한 추진체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1993년 동안 동 경제구역의 농촌기업의 총수익은 22.98억 위안에서 1589.35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8.53 %의 증가를 보였다. 1985~1993년 동안 동 경제구역의 총생산증가량 중 농촌기업이 59.15 %를 점유하였다. 주강삼각주 경제구역의 농촌기업의 발전은 주강 지역의 대도시의 발흥과 발전에 방사효과를 가져왔으며, 주강삼각주 경제구역의 중요한 중심지역이 되었다.[319]

한편, CEPA 체결 이후 CEPA 협정에 더하여 광동성·홍콩이 제휴하여 추진하는 "범주강삼각지역(泛珠三角區域) 9+2 협력"은 주강삼각지역으로 볼 때는 커다란 내수지역을 개척하고 자원이용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의 개별 성(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광동의 발달된 산업의 이전을 보다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홍콩·마카오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의 11개 성구(省區) 정부는 2004년 6월 3일 「범주강삼각지역

318) 廖楊, 앞의 글, 160면
319) 상동

틀 협의(泛珠三角區域框架協議)」를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푸지엔(福建)성, 쟝시(江西)성, 후난(湖南)성, 광동(廣東)성, 광시(廣西)성, 하이난(海南)성, 쓰추안(四川)성, 꾸이조우(貴州)성, 윈난(雲南)성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참여하였다. 전국토 면적의 1/5, 인구의 1/3, 전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홍콩, 마카오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한다.

본 협력의 취지는 '일국양제'의 방침에 따라 협력에 참가하는 중국의 성구(省區)는 홍콩·마카오와 협력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전국 통일의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국과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와 「중국과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의 틀 속에서 협력을 진행한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의 총체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각자의 비교우위와 특색을 충분히 발휘하며 상호존중하면서 시장원칙에 따라 지역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다.

협력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참여이다. 각 당사자는 발전이라는 공동의 희망 하에서 범주강삼각지역 협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시장주도(市場主導) 원칙이다. "시장이 운용하고, 정부가 추진한다(市場運作, 政府推動)"는 방식에 따라 지역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역내 경제발전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시스템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며, 기업은 협력의 주체로서 자율적인 투자결정에 따라 경영한다. 정부는 양호한 발전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역협력이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공평개방원칙이다. 비(非)배타적이고 비(非)차별적인 공평하

고 개방된 협력을 이루어 간다.

넷째, '우세호보(優勢互補)' 원칙이다. 각자의 비교우위와 협력의 적극성 ·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원 · 산업건설 · 과학기술과 문화교육 및 인재육성 등 방면에서 서로 간의 비교우위를 모으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능동적으로 협력환경을 개선하고 협력의 내용을 심화하여 효율을 높이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모두가 함께 번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참여당사자들이 협력을 하고자 하는 분야는 어느 것인가를 본다.

크게는 기초시설(infrastructure) 분야, 산업과 투자 분야, 상거래와 무역 분야, 관광 분야, 농업 분야, 노무 분야, 과학교육문화 분야, 정보화 건설 분야, 환경보호 분야, 위생방역 분야 이렇게 10가지이다.

① 기초시설부문은 다시 에너지, 교통, 수송관 부분으로 구분된다. 에너지의 경우 주강삼각주지역 내 에너지분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에너지가 충분치 않은 서부의 경제개발지역으로 보내는 "서전동송(西電東送)" 등 국가의 각종 에너지정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각 성(省) 간의 석탄 ·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 · 소비에 있어서 협력을 하는 것이다.

교통과 관련하여서는 각 성 간의 고속도로 등 도로망을 확충하고, 신속한 철도운송망을 건립하는 것이다. 윈난 국제철로(雲南國際鐵路), 동남연해철로(東南沿海鐵路) 등이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으며, 광쪼우(廣州)-선전(深圳)-홍콩(香港)을 잇는 고속철도(廣深港高速鐵路) 등도 한 예이다. 그 외에도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망을 확충하고 역

내의 공항, 항구 등을 연계하는 작업들도 포함된다. 수송관(원어: 管道)의 경우, 역내 석유와 가스를 수송하는 수송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② 산업과 투자 분야는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투명하고 간편한 투자시스템을 건설하는 일이다.

③ 상거래(원어: 商務) 및 무역분야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업적 신용도를 제고(提高)하고, 상품유통의 장애를 해소하며, 규범화되고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체결한 CEPA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주강삼각주지역 내에 공산품 및 농산품의 품질표준, 검역표준, 상호인증 등의 방면에서 협력을 이루어 가야 한다.

④ 관광분야의 경우 역내 여행정보망 건립, 역내 관광 이미지 구축 등의 협력이 요망된다.

⑤ 농업의 경우 농산품의 녹색 유통로(원어: 綠色通道)를 만들고,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품의 생산·가공·판매에서의 협력 및 식품안전과 관련한 협력이 필요하다.

⑥ 노무는 노동력의 수요공급 정보를 교류하고 노동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직업교육 및 자격인증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⑦ 과학교육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및 인재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구성과를 전이하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⑧ 정보화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규칙과 법규 등 방면에서 정보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⑨ 환경보호에서는 역내 생태환경, 자연환경 등에서의 협력을 이루고, 환경보호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⑩ 위생방역 분야에서는 전염병 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방역에 있어서 협력을 이루는 것이 포함된다.

나. 푸지엔-대만 경제구역(閩臺經濟區)

푸지엔-대만 경제구역은 주로 푸지엔 동남부와 대만 서부 연안에 형성된 경제협력구역이다. 푸지엔성은 산해자원(山海資源)이 비교적 풍부하고 어업, 농산물 및 그 부생산물 가공업, 광산업의 경제잠재력이 발전하였다. 지리적 위치도 해상교통이 편리하여 서태평양지역과 중국 북부에 있는 선박이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히 경유하여야 하는 지역이다. 또한 해안곡선의 변화가 많아 천혜의 양항(良港)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운업 및 대외경제교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푸지엔성 동남부의 샤먼(厦門), 장조우(漳州) 등은 대표적인 화교들의 고향이며 대만인들의 주요 원적지(原籍地)이다. 약 80%의 대만인들이 푸지엔성을 원적지로 하고 있는데, 이들 화교·화인들이 고향에 투자함으로써 푸지엔성의 발전에 일정부분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대만과 푸지엔(福建)은 바다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무역·금융 방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원인 등으로 인해 대만은 중국을 충분한 배후지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일체화되어 가면서 해협 양안의 경제협력 문제는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푸지엔성은 대만이 경제적으로 서진(西進) 전략을 취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푸지엔의 동남경제특구와 연해경제개발구는 대만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광동성의 주강삼각주지역과 같이 고도로 연관된 경제협력지역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해협 양안의 경제협력이 단기간 내에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는 푸지엔성을 활용하여 단계적·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동쪽은 아시아-태평양 경영중심을 지향하는 대만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은 푸지엔성을 중심으로 광동성 동쪽·장시성(江西省) 남쪽지역과 저장성(浙江省) 남부지구의 3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푸지엔성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푸조우(福州)와 샤먼(厦門)을 중심축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대만과 인적 왕래, 무역, 화폐·금융협력 등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 푸지엔 동남지구를 개방하여 대만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4. CEPA와 화남경제권[320]

상술하였듯이 화남경제권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닌 비공식적인 경제협력방식으로서 일종의 자연적인 경제구역이다. 이 점은 화남경제권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반면 일정한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우선 도움이 되는 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간의 정식협정이나 제도적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협력을 도모함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관세인하문제, 무역협조문제, 관련 무역규칙이나 법률제도 문제 등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다.

둘째, 화남경제권의 협력방식은 무역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투자에 기인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경제공간을 확

320) 林凌·憑蘇宝, 앞의 글, 11-12면

대하고 역내에 산업분업을 이루어 생산기지를 배치하였다. 이는 일종의 지역개방주의의 특징을 보이며 참여 각 당사자가 협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배타적이지 않다.

하지만 화남경제권의 협력방식은 동시에 제한성을 보이기도 한다.

우선 정부 간의 정식안배와 고위층의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협력의 성격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 내외(內外)의 무역 · 서비스 · 기초시설에 관계되는 협조계획과 투자 등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 조정할 때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두 번째로, 역내 당사자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자원 가공수출 부분이며 경제자원 전부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이에 지역협력의 경쟁우위를 전면적으로 발휘하기는 어렵다.

세번째로 역내의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을 이루는데 일정한 제한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화남경제권을 운용하거나 보다 깊이 있는 융화를 이루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화남경제권의 발전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중국과 대만이 각각 'WTO'에 가입한 후 화남경제권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일방면으로는 중국은 세계경제에 전면적으로 융화되고 있다. 특히 더욱 광활하고 일체화 정도도 높은 동남아시아 경제와 '10+1'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0+3'의 경제협력을 탐색함으로써 지역경제일체화 방향으로 중요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양안 4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면적인 개방을 취하며, 경제적 요소들도 전면적으로 유동(流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더 이상 단순한 가공수출 위주가 아니라 산업 및 기술구조의 개조를 통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한 단계 도약한

국제경쟁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대만의 노동밀집형 가공수출업 중국 대륙에의 이전(移轉)이 이미 완료되었고, 기술밀집·자본집약형 산업이 대륙으로 이전되는 새로운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에 중국 대륙은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가 되었고, 홍콩·대만의 경제구조도 재조정 중에 있어서 화남경제권은 새로운 분업체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양안 4개 지역 간에 이미 형성된 산업의 상호보완 및 분업체계를 어떻게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간의 생산요소 이동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또한 4개 지역 간에 정부간 협조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 전략에 따라 보다 많은 경제적 자원이 협력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화남경제권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CEPA의 출현은 이러한 형세변화에 다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남경제권에는 중요한 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CEPA의 경우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무역편리화 방면에서 홍콩·마카오에 우대혜택을 줌으로써 중국-홍콩 간에 자원의 전면적 유동과 경제무역의 한 단계 진전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홍콩경제를 진작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의는 바로 장차 화남경제권의 기존 운용방식과 발전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운용방식 면에서 기존에는 비교우위에 따라 시장(市場)이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조합이 이루어지는 '시장 주도, 기업 주체' 방식에 따라 지역협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CEPA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정부 간의 제도적 안배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관례 및 WTO 규칙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체제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통합조

정과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CEPA에서 건립한 정부 간의 대화통로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협력관계 · 산업배치 · 기초시설구축 등에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조정을 할 것이다. 제도적 조치와 정부개입은 지역 간의 협력이 순서에 따라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전방식 면에서는, CEPA는 중국과 홍콩의 발전방향을 단순한 가공수출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외의 무역, 서비스업 협력, 투자무역 영역에까지 폭넓게 관련됨으로써 지역 간의 경제가 전면적으로 융합되고 자원이 광범위하게 이용됨으로써 경쟁우위가 충분히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CEPA하에서는 기존의 '전점후창(前店後廠)' 방식의 종적 생산일체화 구조, 외향적 생산시장 방식, 생산요소의 일방향적 유동, 지역분업관계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CEPA는 중국과 홍콩(또는 마카오)간에 시행되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양안 4개 지역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은 분명하며, 이들 양안 4개 지역에서 홍콩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CEPA의 운용은 장차 역내(域內) 생산에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의 모범이 되며 또한 모방효과를 낳았다. 마카오가 한 예이다. 중국과 마카오가 2001년 CEPA 구상을 제안했을 때 당시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마카오특별행정구를 특별 참가자 명단에 추가하였다.[321] 중국과 홍콩이 CEPA를 체결한 후에 중국과 마카오 간에도 긴밀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약 4개월 후인 2003년 10월 17일에 중국-마카오 간의 CEPA가 체결되었다.

---

321) 林凌 · 憑蘇宝, 앞의 글, 12면

제2절 대만의 중화경제권 편입 문제[322]

1. 지역경제단일화 과정에서의 대만의 고립

세계 경제가 지구촌경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NAFTA)과 유럽공동체지역(EU)은 대표적인 양대 지역이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일본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싱가포르는 1999년 말부터 시작하여 뉴질랜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싱가포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과도 협상 중에 있다. 한국도 이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남미지역에의 교두보를 확보했고, 미국, EU, 인도 등과도 협상을 체결했으며, 중국·일본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 역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세계경제가 일체화되어 가는 와중에서 지역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조급한 마음에 놓여있던 중국은 홍콩 경제계 및 여론이 중국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2003년 6월과 9월에 급작스럽게 CEPA를 체결하였다. 이는 홍콩과 마카오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최근 경제성장추세가 완만해진 중국의 주강삼각지역(珠江三角洲)에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대만은 수출주도형의 섬(島) 경제로서, 대외무역이 경제발전에서

322) 傅崐成,, 위의 글, 133-137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만 역시 세계 경제가 도하라운드 협상이 순조로운 진행이 안되면서 WTO를 위주로 한 다자간 무역에서 EU, NAFTA, AFTA(Asean Free Trade Area) 등의 지역 자유무역협정으로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지역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대만수출의 88.7 %를 차지하는 아시아 · 유럽 · 북미 등의 시장을 위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대만 수출 총액의 0.187 %를 차지하는 파나마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뿐이다.[323] 대만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도 대만과의 경제협력협정의 체결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WTO 틀 속에서 '1국가 4개 의석(一國四席)'의 지위를 가지는 지역 중에서 중국과 홍콩 · 마카오만이 CEPA를 체결함에 따라 대만은 홀로 중화경제권의 밖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천슈이벤(陳水扁) 총통 시절 대만 독립을 주장하면서 중국과 정치적 · 경제적으로 냉각상태에 빠지면서 중화경제권으로의 편입에 대해 전혀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만은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 · 지역들과도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만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만은 2003년 10월 9일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를 개정하여 '양안 직항', '대륙자본의 대만진입 개방', '인민폐의 대만지구유통 개방', '대륙 노동자의 대만지구에서의 노동 개방' 등의 조치

323)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構想及推動重點, 立法院第7屆第3會期 經濟委員會第8次 全體委員會議, 2009년 4월 13일 經濟部報告書, 2면

를 취하였다. 이는 당시를 즈음하여 대륙지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만지구가 취한 가장 큰 입장변화 중의 하나인데, 대만 정부의 초조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안 간의 대만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대만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대만의 대외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투자된 금액, 이렇게 중국에 투자된 금액은 주로 중국 어느 지역에 투자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만 당국과 홍콩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중국과 대만의 무역 총액은 미화 1,053.69 억 달러인데, 그 중 대만이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는 739.78 억 달러이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313.91 억 달러였다. 만일 홍콩과의 무역 부분까지 합산한다면 2008년 대만과 중국·홍콩과의 무역총액은 1,324.89 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995.79 억 달러, 수입은 329.10 억 달러이다.

대만의 대외무역 전체에서 중국대륙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도 대만의 대외무역 전체에서 대(對) 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5 %로서 전년도 말의 20.04 %와 비교할 때 0.61 % 증가하였다. 그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대만의 총 수출에서 28.27 %를 차지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만의 총 수입에서 12.23 %를 차지한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의 무역도 포함하여 합산한다면, 2006년도의 경우 중국 및 홍콩과의 무역은 대만 대외무역 총액의 27.15 %를 차지하며, 그 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39.82 %, 수입은 전체 수입의 13.15 %를 차지한다.

2008년도를 보면 중국과의 무역이 대만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2 %로 올라섰고, 그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대만의

총 수출에서 28.94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만의 수입 총액에서 13.04 %를 차지하였다. 홍콩과의 무역도 합산한 경우에는 대만 대외무역 총액의 26.69 %를 차지하였고, 그 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38.95 %, 수입은 전체 수입의 13.67 %를 차지하였다.

이상을 보면 대만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교역이 약 20 % 대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24]

이에 반하여 양안무역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는 1~2 % 내외를 차지하다가 1990년대 이후 점점 증가하여 90년 대 중반에는 8 %대로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대만의 대(對) 중국 경제무역정책이 바뀌고, 중국의 대외개방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만 이외의 다른 국가(또는 지역)와의 교역도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9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감소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 5 % 내외의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대(對) 대만무역은 정비례하여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만의 해외 투자 역시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199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만이 중국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보면 총 476억 달러이다. 2005년 이전에는 30억 달러대를 유지하였으나 2005년 이후 20억 달러대로 하락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18억 대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

324)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兩岸統計月報」 No.193, 統計提要, 1면

표32. 대만의 대(對) 중국대륙 실질투자금액[325]

단위: 미화 백만 달러

연도	계약금액	실질투자금액	실질투자비율(%)
1995	5,849	3,161.55	54.05
1996	5,141	3,474.84	67.59
1997	2,815	3,289.39	116.87
1998	2,982	2,915.21	97.77
1999	3,374	2,598.70	77.01
2000	4,042	2,296.28	56.81
2001	6,914	2,979.94	43.10
2002	6,741	3,970.64	58.90
2003	8,558	3,377.24	39.46
2004	9,306	3,117.49	33.50
2005	10,358	2,151.71	20.77
2006		2,135.83	
2007		1,868.45	
2008		1,898.68	
합 계		47,659.68	

자료 출처: 중국 상무부의 외상직접투자금액 통계
주(註) : 원 표상의 실제투자금액 수치 중 소수자리 이하는 반올림함.

앞서 본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2008년 말 현재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476억 달러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만의 대외 투자금액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것인지를 보자. 대만의 대외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구(地區)에 대한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누적 통계치에 따르면 투자 대상 중 1위를 차지한 곳은 중국으로 총 미화 약 756억 달러가

325)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兩岸經濟統計月報」 No.199, 表10 (臺商對中國大陸投資金額統計) 재정리

투자되었고, 그 뒤를 이어 영국령 중앙아메리카, 미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파나마, 일본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이 총 투자금액 대비 57.13 %를 점유하여 거의 절반이상의 투자가 중국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표 33. 대만의 대외투자 통계 - 국가(지구)별[326]

(단위: 미화 백만 달러)

대상 지역	1991 - 2008년	
	금액	비중(%)
중국 대륙	75,560.46	57.13
영국령 중앙아메리카(British Central America)	21,714.79	16.42
미국	9,375.09	7.09
싱가포르	5,369.14	4.06
홍콩	3,010.29	2.28
베트남	2,101.69	1.59
파나마	1,188.54	0.90
일본	1,173.10	0.89
태국	1,713.26	1.30
필리핀	514.92	0.39
한국	485.98	0.37
독일	154.36	0.12
기타	9,890.35	7.46
합 계	132,251.97	100.00

자료 출처: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326)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兩岸經濟統計月報」 No.199, 表13 (我國對外投資統計 - 國家(地區)別) 재정리

또한 중국에 대한 투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느 지역에 투자되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대만의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의 지역별 통계[327]

단위: 미화 백만 달러

	1991 - 2008년		
지역	투자 건수	금액	비중(%)
江蘇省	5,776	25,133.86	33.26
廣東省	12,025	18,140.92	24.01
上海市	5,147	11,228.57	14.86
福建省	5,281	5,599.75	7.41
浙江省	1,934	5,119.21	6.77
天津市	874	1,394.23	1.85
北京市	1,122	1,316.95	1.74
山東省	918	1,379.32	1.83
湖北省	517	865.34	1.15
重慶市	183	667.28	0.88
기타	3,404	4,715.05	6.24
합 계	37,181	75,560.46	100.00

자료 출처: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위 표를 보면 장쑤성(江蘇省), 광동성(廣東省), 상하이시(上海市), 푸지엔성(福建省), 저장성(浙江省)이 상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액의 86.31 %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중국의 동남 연해 부근의 경제개발들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장쑤성, 광동성, 상하이시 3곳에 72.13 %가 투자되어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27)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兩岸經濟統計月報」No.199, 表11 (臺商對中國大陸投資統計-地區別) 정리

따라서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경제권에서 형식상으로는 제외되는 형태를 보이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중국, 홍콩, 대만의 경제적 교류는 상당하여 이미 중화경제권에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제적으로 대만은 하루빨리 대륙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중국이나 홍콩과는 오래 전부터 상당 규모의 교역을 진행해 온 만큼 대만해협양안 4개 지역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대만의 지리적 입지나 중국의 경제발전 등을 고려할 때 대만, 홍콩, 마카오, 푸지엔성(福建省), 광동성(廣東省), 하이난 성(海南省) 등을 묶은 '남중국 6개 지역'이 결합하여 모종의 특수경제권을 형성한다면 그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328]

2. 양안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가. 배경

대만은 2008년에 국민당의 마잉지우(馬英九) 주석이 총통(總統)에 당선된 이후 중국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왔던 양안 간의 왕래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항공기의 양안 직항통로를 허용하였고, 우정(郵政)분야나 인적 왕래 분야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여 대륙주민의 대만여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즉 사실상 양안 간에는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쌍방의 '3통'이 실현되고 있으며, 양안 간에는 대교류, 대협력의 새로운

328) 傅崐成,, 위의 글, 137면

시기를 맞고 있다.

그밖에 최근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안경제협력 기본협정(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를 체결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양안 당국자들 특히 대만 측의 경우 2010년에는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협정(원어: 架構協議)이란 공식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초안을 작성한 요강(要綱)을 가리킨다. 공식협의를 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먼저 요강형식의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대만 쌍방이 가장 급하다고 공동으로 인식한 공업품 항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 국가와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아세안이나 한국, 일본 등이 지역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대만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예컨대 대만 경제부는 2008년 10월30일 ECFA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한국이 ASEAN 및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채결한 결과 대만이 해당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FTA를 체결한 전후를 비교하면서 대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아시아 각국들이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가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만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과의 경우를 보면, 한국이 ASEAN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 ASEAN 10개국 시장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16.6%인 반면 대만은 20.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ASEAN FTA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해당 시장에서의 한국의 성장률은 24.6%로 증대한 반면 대만은 절반 수준인 11.7%로 낮아졌다. 칠레의 경우도 한-칠레 FTA 효력발생을 전후한 결과를 보면 대만은 -5.2%에서 10.9%로 성장하여 나름 높은 성장을 하였으나 한국은-3.4%에서 무려 46.4%로 성장하여 칠레시장에서의 성장에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싱가포르가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대만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9.9%를 성장했으나 일-싱가포르 FTA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15.8% 성장하였다. 반면 일본은 각각 2.5%와 11.2%를 기록해 성장속도에 있어서는 대만을 앞섰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일본-말레이시아 FTA 효력발생 전후에 대만의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성장률은 각각 16.6%와 5.7%로서 약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이 기간에 일본은 7.8%에서 22.5%로 약 3배의 성장을 나타내어 대비를 이룬다. (아래 표 참조)

표35. 한국과의 FTA 효력발생 전후 해당 시장에서의 한국·대만의 성장률 변화 추이[329]

단위 : %

		기간	대만	한국
ASEAN 10개국 시장	한-ASEAN FTA 효력발생 전	2004-2006년	20.1	16.6
	한-ASEAN FTA 효력발생 후	2007-2008년	11.8	24.0
칠레 시장	한-칠레 FTA 효력발생 전	2001-2003년	-5.2	-3.4
	한-칠레 FTA 효력발생 후	2004-2008년	10.9	46.4
싱가포르 시장	한-싱가포르 FTA 효력발생 전	2003-2005년	20.4	20.9
	한-싱가포르 FTA 효력발생 후	2006-2008년	13.2	30.1

※ 자료출처 : 대만 무역국 Intra 자료 및 각국 해관 CD

표36. 일본과의 FTA 효력발생 전후 해당 시장에서의 일본·대만의 성장률 변화 추이[330]

단위 : %

		기간	대만	일본
싱가포르 시장	일본-싱가포르 FTA 효력발생 전	2000-2002년	9.9	2.5
	일본-싱가포르 FTA 효력발생 후	2003-2008년	15.8	11.2
말레이시아 시장	일본-말레이시아 FTA 효력발생 전	2004-2006년	16.6	7.8
	일본-말레이시아 FTA 효력발생 후	2007-2008년	5.7	22.5
태국 시장	일본-태국 FTA 효력발생 전	2005-2007	16.2	8.2
	일본-태국 FTA 효력발생 후	2008	-5.6	15.2

※ 자료출처 : 대만 무역국 Intra 자료 및 각국 해관 CD

329) "爲何需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 대만 경제부 자료(2009년 10월 30일), 7면

330) 상동

이밖에도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37. 대만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이미 체결한 FTA / RTAs [331]

자유무역지구	발효일자	예약달성일정
ASEAN+일본 EPA	2008년 12월	2018년 91%의 상품의 관세가 0% 로 됨
ASEAN+ 호주 · 뉴질랜드 FTA	2010년 초 예약	2020년 96%의 상품의 관세가 0% 로 됨
ASEAN+인도 FTA	2009년 8월 상품자유무역협정 체결(2010.1. 발효 예약)	2013-2016년 동안 80% 화물의 수입관세를 상호 내리기로 함
일본+베트남 EPA	2009년 10월	2019년 쌍방 무역총액의 92% 상품의 관세가 0% 로 될 것이라 예상
한미 FTA	2007년 6월 체결 (쌍방 의회 통과 후 시행)	한미간 95%의 공산품 및 소비품이 FTA 실시 후 3년 내에 관세면제
한국-EU FTA	2009년 10월 초안체결	
한국-인도 FTA	2009년 8월 체결 (2010년 1월 발효 예상)	-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85% 상품에 대해 관세 인하 · 면제를 승낙 - 한국은 인도로부터의 수입되는 93% 상품에 대해 관세 인하 · 면제를 승낙

이러한 기본협정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번에 FTA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본목표를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차후에 재협상할 수 있고, 이러한 점진적 개방의 협정은 FTA의 전면적인 개방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31) "爲何需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 앞의 자료, 12면

둘째, 현재 국제경쟁에서 어려움에 처한 대만의 산업에 관세장벽을 즉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항을 기본협정에 넣음으로써 생존의 기로에 놓인 산업에 대해서 먼저 관세감면 또는 시장개방 우대조건의 협상을 하고, 협상이 마무리된 것을 먼저 집행할 수 있다. 일명 조기수확계획(早期收穫計畫)이라 한다.

셋째, 이와 같이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협정에 넣는 방식이 현재의 양안의 경제무역관계에서도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나. 기본협정의 목적

대만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협정의 경우 홍콩마카오의 방식과는 다르며, 일반적인 FTA와도 다른 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양안간의 특수한 성격의 경제협력협의'로 정립하고자 한다. 물론 WTO 정신에 위반하지 않으며, 대만지구의 통일이나 독립 그리고 정치문제는 관련을 두지 않기로 하고 있다.

첫째, 양안경제무역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현재 양안은 모두 WTO의 회원이지만 서로 간의 경제무역은 여전히 제한이 많다. 대만은 대륙지구의 2,194개 항목의 농·공산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륙자본의 대만에 대한 투자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대만 자본의 대륙투자에도 제한이 있다.

둘째, 대만지구 경제가 '주변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경제의 통합조정은 세계적인 추세여서 현재 약 230여 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체약당사국들은 상호간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만약 주요 무역상대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대만은

주변 경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중국은 대만의 주요 수출지구인데,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대만이 타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만경제의 주변화를 피할 수 있다.

셋째, 대만 경제무역 관련 투자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중국 및 기타 국가(지구)와 협정 혹은 합의를 체결하면 대만이 세계경제에 융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이 동아시아에 진입하는 무대로서 대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다.

다. 기본협정에 담고자 하는 내용

대만정부가 기본협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기타 경제협력, 행정적 · 제도적 안배이다.

(가) 상품무역

상품무역분야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크게는 조기수확계획과 시장진입문제이다. 조기수확계획(早期收穫計畫)과 관련하여서는 쌍방이 조기에 관세를 인할 수 있는 상품목록과 관세인하 시간표를 명시하는 것이다. 시장진입과 관련해서는 첫째, 향후 상품무역시장진입에 대해 협상을 하고 그 일정을 정한다는데 동의하며 둘째, 상품은 일반상품과 민감상품으로 나누어 민감 정도에 따라 관세인하 시간표를 다르게 정하며 셋째, 양안 상품무역정상화 문제와 유보항목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원산지규칙, 무역구제조치, 비관세조치 등도 반영하고자 한다.

(나) 서비스무역

향후 서비스무역시장진입 문제를 논의하고 그 일정을 정하기로 하며, 양안 서비스무역정상화 문제와 비개방항목을 고려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서비스무역의 조기수확계획(早期收穫計畫) 체결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 투자

첫째, 협상을 통하여 투자시스템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둘째, 투자영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투자 규정과 법규의 투명성을 높인다.

셋째, 투자보호 시스템을 건립한다.

(라) 기타 경제협력 분야

지적재산권보호, 분쟁해결제도, 관세업무협력, 전자상거래, 무역간소화, 이중과세방지 등이 포함된다.

(마) 행정적·제도적 안배

협정의 효력발생 및 집행관리 문제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기본협정의 협상을 함에 있어서 대만은 3가지 불가방침을 원칙으로 하였다. 첫째가 대만이 위축되어(矮化)서는 아니 되며 둘째 대륙 노동자가 대만에 오는 것을 개방하지 않으며 셋째, 농산품 개방항목이 새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4편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한 CEPA

제1장 남북한 경제적 거래의 법적 고찰

제1절 개관

1988. 7. 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추진되어 온 남한과 북한의 교류는 1990. 8.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점차 법제도적 토대를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 사이에는 인적왕래, 교역, 협력사업 등의 교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 남북한 사이의 교역은 상당한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한 간 교역은 초기에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중개무역 내지 간접교역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2005. 10.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자 그 동안 중국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교역상담도 점차 개성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임가공(위탁가공)과 농수산물 반입을 중심으로 북한측과 직접 상담하고 계약하는 직접교역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332]

남북한 교역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초창기인 1989년 1,872만 달러에 불과하던 남북교역액은 2004년 6억9천700만 달러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는 폭발적인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는데 2005년에는 연간 교역규모가 10억 달

332)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09. 96-97면

러를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17억9천만 달러, 2008년에는 18억2천만 달러, 2009. 10. 현재 12억7천5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333] 남북한 사이의 교역이 개시된 이후 2009. 10. 현재까지 총 교역실적은 122억 9,139만1,000 달러이며 그 중 반입이 59억1,460만6,000 달러, 반출이 63억7678만5,000달러로 명목상 남한이 흑자를 보이고 있다. 총 교역량 중 90% 이상이 상업적 거래부분의 교역량이며, 그 중 위탁가공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탁가공 교역은 생산공정의 일부를 북한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형태의 교역으로 이 중 초보적인 형태가 임가공 교역인데 이는 우리업체가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업체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노임을 취하고 제품을 만들어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봉제품이며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도 위탁가공으로 생산되어 남한으로 반입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남북교역이 남북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남과 북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남북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북한의 경우 총 무역규모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면 남한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의 교역상대가 된다.[334] 앞서 살펴 본 교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9. 10. 현재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된 건수는 총 334건이며 그 중 279건이 개성공단 관련 경제협력사업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교역 또는 경제협력은 여러 정치적인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333) 2009. 10. 기준 남북교역액의 자세한 통계는 『남북교류협력동향』2009. 10.호 참조
334)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09. 98면

한편, 남북의 교역과 협력사업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 체제 하에서 국제적으로도 남북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라는 주장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북한 간의 무역 등 경제적 거래는 WTO 체제상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서의 최혜국 대우 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과 남한과 북한이 상호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민족내부거래로”라고 규정한 남북한 사이의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WTO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335] 그러나 제3국이나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한은 각각 독립된 국가공동체로서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므로 남북한의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는 제3국과의 경제적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 체제에서는 위와 같은 남북한 경제교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통상규범에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336]

현재 남북한을 제외한 제3국들이 남북한 경제적 거래를 국가 간의 무역거래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남북한 경제적 거래의 민족내부거래

335)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65면

336)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332면

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입장을 알 수가 없다.[337] 다만 1991. 3. 우리나라의 천지무역상사가 북한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와의 거래에서 남한쌀 5,000톤을 북한으로 반출하고 북한산 시멘트를 물물교환방식으로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였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남북한 무역거래에 대한 GATT 규정 적용을 문제삼은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곡가제의 지원을 받은 남한쌀을 북한에 반출하는 것은 GATT 협정상의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북한산 물품에만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GATT 규정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더욱이 남북한이 각자 유엔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관계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먼저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남북한 간 거래의 법적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37) 그러나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입장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 거래규모가 남한의 전체 교역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3국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적어 그런 것일 뿐 향후 남북한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북한이 남한에 반입하는 물품과 유사한 농수산물 등을 수출하는 중국 등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제2절 남북한 특수관계론

1. 개념과 특성

남북한은 각자가 헌법상의 영토조항 등을 근거로 유일합법의 국가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상호 상대방을 반국가단체 내지 괴뢰정부로 보고 국가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각자가 유엔에 가입하고 독자적 외교관계 수립하는 등으로 독립된 2개의 국가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남북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범이론으로 남북한 특수관계이론이 대두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남북한특수관계이론은 남북한 관계는 현실적으로 분단된 국가인 남한과 북한의 관계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이며 남북한간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내법 또는 국제법 원칙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관계라고 설명되어 왔다. 남북한 특수관계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상황과 발전 양상에 따라서 가변적이며 구체적인 법규범 적용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338] 한편, 1991. 12. 13. 남북 사이에 체결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그 서문에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

338) 이효원,「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7면

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선언하여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하였다.[339]

국제무대에서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각자 국가로서 활동하는 있는 현실과 헌법규범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남북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원적 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남북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2개 국가, 대내적으로는 1개 국가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이 남북한 관계가 이중적 성격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법상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지향의 분단관계를 의미할 뿐이다.

남북한의 특수관계는 통일에 도달하기까지 과도기간 동안 상호 관계의 척도로서 작용하지만 통일로 말미암아 소멸될 잠정적・한시적

339)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1991. 12. 13.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되어 1992. 2. 19. 발효되었는데, 남북은 화해와 불가침 및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합의하였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문과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①상호 체제인정과 존중 ②내부문제 불간섭 ③비방・중상중지 및 파괴・전복행위의 금지 ④현 정전체제의 존중 ⑤평화체제로의 전환 ⑥국제무대에서의 협력 ⑦무력행사금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 ⑧불가침의 경계선과 관할구역 존중 ⑨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 ⑩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⑪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 교류협력 ⑫자유왕래・접촉 실현 및 이산가족문제 해결 ⑬기본합의에 배치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개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특수관계는 정태적 관계가 아니라 동태적 관계로서 분단국에서 통일국가까지 발전하면서 그 내용이 점차 성숙화되는 발전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특수관계는 그 이면에 개방성과 민족자결성, 상호성과 대등성, 통일지향의 잠정성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의 이중적 법적 지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국제연합의 회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되고 있음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한편,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남북한 관계의 변화·발전에 따라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력과 더불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거나 반국가단체 내지 불법 단체성을 부인하게 된다[340]. 그러나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북한을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식함과 아울러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340) 자세한 내용은 양영희, 「북한의 법적 지위」, 통일사법정책연구(1) 2006. 법원행정처 9-12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341]고 판시하여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이후에도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국회회담과 총리회담을 병행하고 정상회담을 도모하며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등 한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없다.”[342]라고 판시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1991. 9. 18.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1991. 12. 13. 남북사이에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343]고 판시하여 기존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

341)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2형상48
34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가 없었다. 그런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북한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임과 아울러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추가하였는데,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344]고 판시하여 비로소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헌법재판소도 "현 단계에 있어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345]이라고 판시하여 대법원과 동일한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

34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
34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345) 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48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는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발전이 거듭됨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도 부여하는 등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고찰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북한과 북한 주민 등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나아가 남북한 사이에 1992. 2. 19. 체결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 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관계의 내용과 의미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다만 북한정권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미수복지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방적 사실상 정권인 북한정권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지역과의 사실상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평화통일조항이라 할 것인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이상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거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다면 특별한 법률 규정 등이 없는

이상 북한을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법인격체를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거나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러한 헌법해석하에서도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성격상 개별 법률의 적용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 내용이 앞서 본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조항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346]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입장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입장에서 남북한은 국제법상 두 개의 국제법 주체로서 대외적인 측면은 국제관계이지만 남북한의 관계는 분단된 국가의 내부관계이며 이러한 특수관계는 통일을 향한 발전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347] 북한이 국내법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평화통일을 대화와 협력의 과정에서는 분명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국제법적 영역에서는 외국에 준하여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346)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347) 유병화, 「남북한 UN가입과 한국통일의 법적 문제」, 통일문제연구, 1991 49-50면

3.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법적 함의[348]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법규범적 의미는 남북한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남북한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규범은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의하여 확정된다.

가. 국내법적 영역

먼저 남북한 관계가 국내법적 규범영역에서 적용될 경우 그 의미는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규범적으로는 남북한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국가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할 뿐 남북한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남북한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남북한 관계에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에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여 이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는 것도 남북합의서의 성격과 효력에 비추어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제로 국제법 원칙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남북합의서도 있다.[349]

남북한관계가 국내법적 규범 영역에서 적용될 경우 북한의 이중적 지위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만이 적용될 뿐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348) 이효원,『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152-153면을 요약정리한 것임
349) '남북해운합의서' 등 참조

국제법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리고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바라보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각종 국내법령과 남북한간의 합의서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응하여 남북교류협력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 영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규범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에서 국제법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남북한의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대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법 원칙을 유추적용하거나 남북한 관계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국제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영역에서는 국제법 원칙뿐만 아니라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인정하는 전제에서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령과 각종 남북합의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국제법적 영역

남북한 관계가 국제법적 규범영역에서 적용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각각 국제법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과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제법원칙을 고려하여 남북한 일방 또는 쌍방이 각각 특정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국제법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남북한 관계가 국내법적 규범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는 그런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 관계에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헌법이 천명하는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기본목표에 부합하도록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법 원칙을 변용 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남북한 경제적 거래의 법적 성격 검토

1. 분단국가 간 거래와 민족내부거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 관계는 분단국가의 특성에서 기인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다. 한때 남북한과 함께 지구상의 대표적인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의 경우 동서독간의 무역을 '단일경제단위원칙'에 따른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1951. GATT에 가입할 당시 서독가입의정서 제1조에 "서독의 GATT 가입으로 인하여 독일에서 생산된 상품의 독일 내 무역에 관한 지위나 조치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없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동서독간 거래에 대하여는 민족의 내부거래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350] 또한 종교적 이유로 분단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교역도 "양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온 사실을 고려하여 GATT의 제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GATT 협정 제24조 제11항에 따라서 특별대우를 인정받았다.[351] 우리나라의 경

350)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의 의의와 가능성」, 2007. 8.
351)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35면
다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역에 대한 특혜는 "상호무역관계가 확고하게 수립

우 GATT에 가입할 당시 아무런 특례규정을 확보한 바 없고 국제적으로 명확히 남북간의 경제적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도 아니다.

남북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은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명시하고 있는데, 민족내부거래란 결국 분단국간의 특유한 거래개념으로 남북간의 거래를 국가간의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실제하는 정치 경제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거래를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간의 거래로서 민족내부거래에 대하여는 국내거래도 아니고 국제거래도 아닌 중간자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단국에 특유한 거래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352] 이에 우선적으로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민조내부거래성에 관한 남북한 경제적 거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남북합의서의 관점

남북한 간 경제적 거래에 대하여 민족내부거래성을 천명한 대표적 남북합의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이다. 1991. 12. 13. 체결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

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인정되는 특별대우조치로서 "GATT상의 일정한 조항으로부터 일탈할 수 있으나 협정의 목적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부가되어 있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352)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76면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한양법학 23집 2008. 6. 291면

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그 서문에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선언하여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제15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남북간의 교역 등 경제교류가 민족내부교류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1992. 9. 17. 체결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3장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도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제15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가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라는 전제하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조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조 제7항에서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제1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남과 북 사이

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특히 제1조 제10항에서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 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고 명시하여 남북한 간의 관계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민족내부거래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1조 제12항 및 제13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라고 합의하여 민족내부거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위 합의서의 제반 규정만으로 민족내부거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에 관하여는 조약성 인정설, 조약성 부정설, 잠정협정 인정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353]라고 판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있는데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 제반 규정만으로는 곧바로 남북한의 경제적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로서 규범적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2000. 6. 15. "6·15 공동선언" 이후 체결된 4대 경협합의서는 북한과 상호간의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상대방의 과세권을 인정하며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소득에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등을 말한다. 투장보장에관한합의서, 이중과세방지에관한합의서, 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경우에는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와 달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 및 국회의 동의[354] 등 조약에 준한 발효절

35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354) 국회는 2003. 6. 30. 우리 정부와 북한의 위 각 합의서 체결동의안을 가결하였다.

차를 거친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4대 경협합의서를 통해 남북간의 거래를 명확히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였는지 다른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에 관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는 남한이 북한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사회주의 체제 등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투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대북투자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남북한 사이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는 남한의 대북한 투자에 있어 투자원본과 이익의 보호, 과실송금의 보장, 국유화 및 수용 등에 대한 보상, 분쟁해결 등을 북한법에만 의존하는 일방적인 약속의 차원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355]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서문은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적시하여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에 따른 남북한 간의 투자는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제3조는 “ 남과 북은 자

355) 문준조,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38-39면

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은 WTO 협정상의 최혜국 대우조항과 동일한 것이다.[356]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라면 남한과 북한사이의 투자보장은 최혜국 대우가 아니라 "내국인 대우" 수준이어야 하지 옳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당초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당시 "내국민 대우 조항"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북측은 이를 수용할 경우 북측의 계획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최혜국 대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 대우는 외국투자가들에 대해 내국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 최소한의 법률적 보장과 이를 보다 확대하여 외국투자자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국민 대우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특혜나 제한을 투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미국 등 서방선진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서 외국투자가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356) 다만 위 규정 중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부분으로 인해 최혜국 대우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투자자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북한법 자체에 일임되어 있어 북한법에 따라 얼마든지 외국인 보다는 유리하나 북한주민 보다는 불리하게 규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북한 내부 투자와 동일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으로 인해 민족내부거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적 정책이나 조장적 정책을 취하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볼 때 외국투자가는 법률적용과 경영활동에 있어서 내국인에 비해 실질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합영법 등에서 투자분야의 제한, 차별적인 과세, 상품구매 및 판매 등 시장접근의 제한,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항을 둠으로써 내국민 대우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57]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제3조의 위와 같은 최혜국대우조항은 남한과 북한사이의 경제적 거래를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선언한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서문과 상호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합의서의 문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도 남한의 투자를 북한 내부의 투자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외국인의 투자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제2조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남북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국제법에 의한 보호 또는 합의서에 의한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

357) 문준조,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41-42면

급이 없는데 이는 북한이 국내법을 개정한다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위반하는 경우에도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에 근거하여 국제적인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과 아울러 남북간의 경제적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인지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제8조는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제8조가 결정적으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이 민족내부거래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358]가 있다.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국제협정이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 견해가 일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사이의소득에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3장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제1조 제12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남북한 사이의 투자 및 경제협력 과정에서 남북한의 고유한 조세제도로 인하여 일정 소득에 대해 남북한이 모두 이중과세하거나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체계상의 모순과 흠결을 방지하고 남과 북의 상호이익이 조정된 경제관계를 적절히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체결하게 된 것이다.

---

358)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78면

남북사이의소득에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남북 양측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쪽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세금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이며,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된다.

남북사이의소득에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역시 그 서문에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남북한 경제적 거래가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남북사이의소득에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대해 "민족내부거래성"에 입각한 조세면에서의 상대방 주민에 대한 우대초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359] 그러나, 남북사이의소득에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3조가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359) 문준조,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55면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북한에 투자한 남한주민을 북한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주도록 명시하여 민족내부거래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역시 서문에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규정하여 남북한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전제로 청산결제에 관한 세부적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산결제의 그 대상은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이며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청산결제의 방법은 남과 북이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하되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며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의 경우 서문에서 민족내부거래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 세부 조항에서는 남북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을 찾기 어

렵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남북한 기업 간에 계약불이행, 투자 관련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새로 설치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분쟁의 해결은 중재에 앞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역시 서문에는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다시 한번 남북간의 거래가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고 있다.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에서 남북간의 분쟁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아닌 남북한의 합의로 구성되는 독자적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관점에서는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의 규정 자체가 민족내부거래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민족내부거래성은 상사분쟁해결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타방 교역상대방에게 우대조치를 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360]

나아가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제12조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

360) 문준조,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56면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가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민족내부거래성의 표현이라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뒤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3. 국내법적 관점

먼저 남북간의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민족내부거래성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관련 법제 중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남북한 왕래, 교역, 협력사업 등 제반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규율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남북간의 물품 등의 거래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관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원산지가 북한산인 물품에 대하여는 무관세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규정들은 남북경제교역에 대하여 민족내부거래성을 인정하고 이를 국제무역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361]

반면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가 교역에 관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을 준용하도록 한 것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가 물품등의 반출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보되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만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남북한의 경제교류를 순수한 내국거래가 아니라 외국과의 경제교류의 특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위 견해는 남북간에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있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외국과의 교역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특혜를 향유한다는 측면에서만 민족내부거래라는 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362] 즉 위 견해에 따른다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도 남북간의 경제적 거래에 대해 민족내부거래성을 명확히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

361)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338면
362) 문준조,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19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있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를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7조에서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그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통치행위의 영역에서 추진되던 남북회담 등 남북한 관계에 대한 규율을 법률적인 영역으로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이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남북합의서에 법규적 효

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를 관장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사무는 수출입은행에 위탁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관리 등 실제적 운용 방향, 기본정책 등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363] 한편,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다양한 기금활용제도 중 손실보전제도, 자금대출제도, 채무보증제도, 금융기관 지원제도 등이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64]

---

363)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364) 문준조,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20면. 남북협력기금법의 손실보전제도는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액을 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은 제도인데, 현재 경협 또는 교역보험의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은 WTO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365]하면서 제5조에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남북한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WTO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등 다양한 국내법률이 남북간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는 전제하에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포함하여 남북한 거래 및 경협 관련 자금융자, 지원 등의 분야에서 국제무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금대출제도는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으로서 교역이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제도이다. 채무보증제도는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이 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금융기관 지원제도는 금융기관이 남북한주민의 왕래·교역·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북한 화폐에 대한 환전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365)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2조

과 다른 취급을 하는 등 다양한 대북거래의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남북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국제거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국제법적 관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교역은 현재 국내법적으로 규율되는 국내법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소위 4대 경협합의서 등을 통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금지 등 외국 간 교역과는 다른 특례가 인정되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여러 국내법령도 이러한 특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교역이 1차적으로는 남북한의 내부교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별도의 유엔회원국으로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목표로 체결된 WTO 협정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국제법적 규범영역에서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WTO 체제에서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등은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거래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366]

WTO 체제에서 남북한 경제적 거래의 국제법적 문제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GATT 제1조[367]가 남북한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지 여

366)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32-333면

367) GATT 제1조는 WTO회원국이 다른 국가(WTO회원국인 여부에 관계없이)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회원국에게 무조건적으로 즉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GATT 1조의 최혜국에서 '최혜'(most-favoured)의 의미는 특별히 유리한(specially favourable) 대우를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다른 당사국과 똑같은 대우'(equal treatment to that other party which is most favoured)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최혜국대우의무란 어느 특정 국가 또는 그 국가 국민을 최소한(at least as favourable as) 다른 어느 국가를 대우하는 만큼 대우하는 의무를 말한다. 특히, GATT의 최혜국대우 의무란 각 WTO회원국(any contracting party)이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 어느 다른 국가에게(any other country), WTO회원국이든 아니든, 그 나라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모든 WTO회원국(all other contracting parties)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남북한 무역거래의 경우 WTO회원국인 남한은 WTO회원국이 아닌 북한에게 부여한 무관세 대우 등 특혜를 미국과 같은 다른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서로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남한은 관련 국내법규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WTO회원국인 남한은 GATT 제1조에 따라, 예컨대, 북한에서 반입된 무연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WTO회원국에서 반입된 무연탄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

---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과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GATT 제1조에서 규정된 최혜국 대우는 GATT는 물론이고 WTO체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결국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적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GATT 제1조가 남북한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368]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가 GATT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가 남북관계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무관세, 이중과세방지 및 청산결제방식을 채택한 사실과 이에 부합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유엔 헌장 제2조 제7항[369] 소정의 한국의 국내적 관할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WTO 내지 GATT의 관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족내부거래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는 유엔 헌장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민족자결권에 근거한 것으로 WTO 등 국제경제규범도 이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정 제31조에 의하면 국제간 협정의 해석은 "각 당사국의 관계에 적용될 국제법상의 관련 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GATT 규범도 국제법상의 관련 원칙인 유엔 헌장에 합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유엔 헌장 제103조에 의하면 회원국 의무에 관하여 헌장과 다른 국제협정이 충돌하면 헌장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GATT 협정 규정보다 유엔 헌장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 헌장 제1조, 제5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자결

368) 박노형,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 법조 통권 530호, 2000. 10. 35-57면

369)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

권에는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고 남북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 관한 자결권도 당연히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의 한국민의 자결권에 대한 존중의무는 WTO 회원국에게도 인정되어 내부거래로 보려는 한국민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GATT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한다. 또한 GATT는 자결권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그 국가의 헌법이나 통상법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GATT 제1조의 다른 국가가 아니며 남한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GATT 가입당시 실무작업반 보고서, GATT 협정 제33조에 의한 체약국단의 한국가입에 대한 결정에는 한국의 주권범위에 북한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로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이것은 독일의 GATT 가입에 관한 1951년 결정에서 GATT 체약국단이 서독의 GATT 가입으로 독일산 물품의 내독간 교역에 관하여 현행 규정이나 현재의 교역상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승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GATT의 이러한 관행은 남북한이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를 내국거래로 합의하고 운영하는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남한이 WTO회원국이라는 전제사실로부터 GATT가 남북한간의 경제적 거래에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는 남한이 WTO회원국인 이상 남북한 무역거래에는 GATT 제1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남북한 경제적 거래가 남북한이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고 규명하고 또한 그 명칭을 민족내부거래라고 부르더라도 GATT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370] 남북한 거

370) 이하의 내용은 박노형,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 법조 통권

래관계와 유사한 GATT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의 무역거래에 관하여 GATT 체약국단이 내린 다음 3가지 결정을 예로 들면서 남북한 거래에는 당연히 GATT 제1조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먼저 예로 든 것은 GATT 체약국단이 미국의 남태평양 군도에 대한 무관세특혜 부여를 승인한 결정이다. 국제연맹체제에서 일본의 위임통치를 받고 있던 Marshall, Caroline 및 Marianas군도가 유엔 체제에서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고 이들 군도의 경제적 발전과 이들 군도가 과거 일본통치 아래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에 특혜대우를 받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미국은 이들 군도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관세대우를 부여하고자 하였는데 결국, 체약국단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관하여 GATT 제1조상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과 이들 군도의 신탁통치라는 특별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GATT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이들 군도와 별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 군도가 GATT 제1조의 적용에서 외국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GATT 제1조의 외국은 WTO 회원국은 물론 GATT의 목적상 대내외적으로 국제경제적 독립성을 보유하는 국제법상 실체이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예로 든 것은 GATT 체약국단이 이탈리아의 리비아에 대한 특별관세대우 부여를 승인한 결정이다. 이탈리아는 제2차대전 전부터 리비아에게 특별관세대우를 부여하고 있었고 리비아가 독립하고 리비아에 대한 이러한 특별대우를 중지할 경우 리비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탈리아는 그 특별대우를 존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탈리아가 리비아와의 관계에서 다른 회원국들에게 대하여 GATT 제1조의 최

530호, 2000. 10. 35-57면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GATT 체약국단은 리비아에 대한 특별관세대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1952년 9월 30일까지 이탈리아의 GATT 제1조상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를 든 것은 서독과 동독간의 거래에 관한 GATT의 결정이다. 동통일 전 서독은 일관되게 동서독 무역거래에 대한 국제법상 특별한 지위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GATT 체약국단은 GATT 제1조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GATT 가입으로 독일에서 생산된 상품의 독일내무역의 지위가 수정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고 서독은 동독에서 반입되는 동독산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또한, 남북한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와 GATT와의 관계도 아울러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GATT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무역에 관한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GATT에서는 GATT 체제 밖에서의 회원국 사이의 협상의 권리와 회원국의 비회원국과의 조약체결 권리도 인정되고 있지만 그러한 조약은 GATT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GATT와 다른 양자조약과의 관계에 관하여 체약국단이 “GATT 체약국단은 양자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은 체약국단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다만 문제의 양자조약에 따른 조치가 GATT에 일치하는 여부의 결정은 체약국단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힌 점을 예로 들면서 만일 GATT 체약국단, 즉 현재의 WTO각료회의가 문제의 양자조약이 GATT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에는 양자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에게 그 양자조약상의 의무를 GATT상의 의무와 일치되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반대로 양자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WTO각료회의에게 양자조약에 따른 GATT의 의무위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

무면제(waiver)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 두 가지 경우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WTO각료회의는 GATT 규정에 기초하여 발동된 절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문제의 양자조약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회원국의 양허와 의무의 이행을 정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GATT 제1조의 해석과 GATT의 관행을 고려할 때, WTO회원국인 남한이 관련된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가 당연히 적용되며, 남한의 북한산 상품에 대한 무관세 대우 등 특혜의 부여는 GATT 제1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적 거래, 특히 무관세 거래는 비록 북한이 WTO회원국이 아닐지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즉 남북한 경제협력 과정에서 남한이 북한에 부여한 무관세대우에 대해 WTO회원국들이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5. 종합적 검토

1991. 12. 13. 체결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남북한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이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어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만으로 남북한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라고 국제사회에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4대 경협합의서의 경우 민족내부거래성에 기초한 우대조치를 명확히 찾기 힘들고 최혜국 대우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4대 경협합의서에 나타난 민족내부거래성은 각종 우대조치의 표현이 아니라 남북한의 교류

와 경제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남북한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합의서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한 것은, 현실에서 민족내부거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고 남북이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가까운 장래에 국내거래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371]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의 합의서 자체만으로는 남북한간의 경제적 거래를 법규범적으로 WTO 협정상의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서 확고히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등이 남북 간의 경제적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고 북한산 물품에 대한 무관세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여 남북간의 거래가 국제거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산 물품의 남한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를 면제하면서도 남한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관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어 다른 외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와 동일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라고

371)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 23집 2008. 6. 294면

인정하고 있는 기본입장과 모순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372] 또한 현행 우리법령에서 민족내부거래성의 표현하기 위하여 대북투자와 무역 등에 대하여 관세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들 역시 우리만의 법제도 구축에 불과하며 오히려 WTO 협정상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남북합의서와 국내법령이 남북한 경제적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논리가 국제법적으로도 곧바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GATT 제1조가 남북한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373]해 보면 남・북한간의 거래가 GATT 제1조가 적용되는 "국가(country)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조가 북한은 한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라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등에도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들은 국내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닐 뿐이어서 GATT 최혜국대우 의무라는 국제법규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도 "협약당사국은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WTO협정은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규정 및 행정절차를 WTO협정규정과 합치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남북합의서' 내의 민족내부거래 조

372)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38면
373) 이하의 내용은 법무부.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2003 35-38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항을 '조약(treaty)'이라 보더라도 양자조약의 효력은 당사자인 남·북한간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한국은 제3국의 다자조약(GATT)에 기한 의무위반 주장을 양자조약의 규정을 원용하여 막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이 북한에 부여한 특혜는 GATT 제1조에 규정된 "다른 국가(any other country)"에 대한 특혜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상의 국가승인제도에 근거한 것이어서 상기 국내법에 기한 주장보다는 진일보한 입장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이미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에 동시에 가입한 상태이고, 130여개 국가와 동시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을 정식으로 국가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적 관계가 아닌 국제법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러한 논리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WTO 협정은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374]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WTO 협정상 가장 기본적인 조항인 GATT 제1조가 상호 국가승인 절차를 밟은 국가 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하게 된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관세영역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반론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GATT 제1조는 남·북한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엔헌장상의 민족자결권을 원용하는 주장 즉,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민족자결권"(self-determination of people) 행사의 일환이며, 유엔헌장상 이러한 민족자결권이 유엔회원국의 기본적 권리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374) WTO협정 제12조 제1항

GATT 제1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용되는 민족자결권 개념이 남·북한간 특혜의 교환을 합리화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최혜국대우 위반과 민족자결의 실현간의 상관관계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심스럽다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특혜의 교환이 민족자결권의 행사로 합리화된다면, 세계 각국이 자국과 민족이 같은 타국과 특혜를 교환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셈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WTO체제를 회원국 단위가 아닌 민족단위로 재편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족자결권에 기한 주장이 성립되려면 유엔헌장 규정이 GATT규정보다 상위규정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비록 유엔헌장 제103조가 유엔헌장의 최고성을 선언하고 있기는 하나, WTO의 유엔에 대한 독립성을 고려해 볼 때 유엔헌장의 민족자결권에 관한 규정이 GATT 제1조에 우선한다는 해석은 적어도 WTO분쟁해결절차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에 대한 GATT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염두해 두어야 하는 점은 거래당사자인 남북한 중 최소한 남한이 WTO회원국이라는 사실이다. GATT의 적용에 관하여 북한은 WTO회원국이 아니지만 남한은 엄연한 회원국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WTO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당연히 GATT 제1조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회원국인 남한은 GATT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의 GATT법상 지위는 그 동안 WTO 내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적 거래의 규모가

다른 WTO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WTO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375]

향후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무관세 대우 이외에도 각종 특혜의 교환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동안 남북한 특혜교역의 정당성은 국제적으로 묵인되어 왔으나, 남북한 경협의 확대와 북한의 경제개방에 따라 남북한과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밀접하게 갖는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등 국가들이 남북한 무관세교역 및 위탁가공무역상의 각종 특례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376]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 점은 여러 가지 국제법적 논리를 들어 남북간의 경제적 거래를 민족내부거래 또는 비국가간의 거래로 관념화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가 WTO 회원국인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국은 WTO 및 GATT에 따라서 제소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제3국의 이의제기로 인해 관련 분쟁은 WTO의 분쟁해결절차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

375) 박노형,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 법조 통권 530호, 2000. 10. 35-57면

376)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34.면

제2장 민족내부거래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제1절 개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 간의 경제적 거래, 특히 무관세 거래는 비록 북한이 WTO회원국이 아닐지라도 남한은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개발도상국 허용조항(Enabling Clause) 원용, WTO협정상의 의무로부터의 면제(waiver) 획득, GATT 가입의정서 개정 또는 특별의정서 개정,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남북한 특수관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제2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

1 .개발도상국 허용조항(Enabling Clause) 원용[377]

1979. 11. 28. 제정된 "개발도상국의 참여, 호혜 및 차별적, 우호적 취급에 관한 결정" 제1조는 GATT 협정 제1조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이 부여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우호적인 취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진국이 개도국 상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체제(GSP)에 입각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북한이 개발도상국임은 분명하므로

377) 법무부,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는 이 방안이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논거라고 한다.

선진국인 남한이 상기 규정에 입각하여 북한상품에 대해 무관세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WTO사무국에 통보해야 하고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차적 통제가 따르며 또한 제3국이 이의를 제기할 때, 이들 국가와 즉시 협의를 하여 적절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한다.[378]

이에 대하여는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남북간 거래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경제지원으로 행하여진다는 논리는 북한이 용인하기 어렵고 남북한 사이의 정서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북한만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곤란하여 이런 경우에는 다른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한 의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379] 나아가 이 방안은 북한이 개도국의 지위에 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무관세대우(GSP) 이외의 다른 형태의 북한에 대한 특혜부여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적용범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어 허용조항을 이용하는 방법은 남·북한 특혜교역에 대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정당화 밖에는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380]

한편, “개발도상국의 참여, 호혜 및 차별적, 우호적 취급에 관한 결정” 제2조의 C는 개발도상국 상호간 관세면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소득에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

---

378) 법무부,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2003. 35-38면
379)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43면
380) 법무부,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2003. 35-38면

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를 관세면제협정으로 보아 GATT로부터 의무면제를 보장받은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 조항은 회원국 상호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회원국인 북한과의 협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381]

2. WTO협정상의 의무로부터의 면제(waiver) 획득

WTO협정은 '의무면제제도(waiver)'를 인정하고 있다. 즉, WTO각료회의에서 WTO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WTO협정상의 특정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최혜국대우 의무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대한 특별관세 혜택 부여를 의무면제제도를 통해 승인 받았다. 이 밖에도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쿠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유고, 우루과이,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네덜란드, 말라위, 자메이카, 프랑스, 헝가리,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들이 각종 의무면제를 받은 바가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거래에 관해 GATT 제1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의무면제제도(waiver)'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WTO 전체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면제의 부여에는 기한 및 조건 등의 제한이 있고, 추후에도 매년 면제제도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각료회의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적 요건에 더해, 의무면제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하에서만 부여된다는 실체적 요건을

381)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43면

충족해야만 한다.[382][383]

그렇다면 남북한간의 경제적 거래에 관하여 WTO 의무면제 획득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면제를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면제부여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GATT 체제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회원국의 3분의 2 및 GATT 전회원국의 과반수였으나, WTO체제로 이행하면서 전체회원국의 4분의 3으로 강화되었는데 전회원국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WTO 협정은 '의무면제에관한양해'를 신설했는바, 이에 의하면 면제신청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적시하고 이러한 목표가 WTO 협정에 합치하는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의무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제제도의 엄격화 경향은 국제통상체제가 '규범중심적'(rule-oriented)으로 발전했음을 반영한 것이고 그에 따라 국제통상법의 기본 의무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여진다. 이는 면제 심사시 "예외적 상황"에 관한 실체적 요건의 해석도 이전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이 남·북한교역에 대한 WTO의무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한국 스스로 민족내부거래 논리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한 교역의 WTO 협정 위반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382) 실제로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제 부여가 부인된 예도 있다. 즉, 1969년 'EEC의 이스라엘 및 스페인산 감귤류 관세감축을 위한 면제 요청 및 '1970년 그리스의 소련산 제품에 대한 특혜부여 요청' 등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383) 법무부,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2003. 25면

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신청된 면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남·북한특혜조치를 대상으로 한 제3국으로부터의 본격적인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이 WTO 회원국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상대국에 적지 않은 유형·무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걸림돌이다. 그리고 면제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각종 기한 및 조건이 부과되고 회원국에 의한 연례적 심사가 진행되게 된는데 이는 비록 간접적이나마 남·북한 문제의 자주적 해결의 가능성을 그만큼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는 의무면제 신청국이 면제를 부여받는 경우에도 이에 의해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된 제3국의 비위반청구(non-violation claim)에 기한 보상청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면제를 획득하더라도 제3국의 예기치 않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하므로 이는 의무면제 제도의 실효성을 그만큼 감소시키게 된다. 물론, 의무면제 획득 방식은 한국의 일방적 의사로 진행 가능하다는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봄이 상당하다.[384]

3. GATT 가입의정서 개정 또는 특별의정서 개정

남북한 경제적 거래에 관하여 GATT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남한의 GATT 가입의정서를 개정하거나 남북한에 대한 특별의정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남북한이 기본적으로 단일한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 하에 분단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단

384) 법무부,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2003. 41-46면

일 경제체제가 중단된 상태에 있을 뿐 그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남북한은 냉전시대의 이념과 체제대립을 극복하고 민족자결권에 바탕을 두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단일의 경제공동체를 복원하고 있으므로 GATT 가입의정서를 개정하여 남북한의 민족내부거래성을 반영하거나 이에 대한 특별의정서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남북한이 남북합의서를 통해 단일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통하여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 의 GATT 가입당시 실무작업반 보고서, GATT 협정 제33조에 의한 체약국단의 한국가입에 대한 결정에는 한국의 주권범위에 북한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로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이것은 독일의 GATT 가입에 관한 1951년 결정에서 GATT 체약단이 서독의 GATT 가입으로 독일산 물품의 내독간 교역에 관하여 현행 규정이나 현재의 교역상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승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385]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의 경우는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 이러한 의무면제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서독이 GATT에 가입할 당시인 1951년 체약국단의 결정으로 동서독의 거래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아 두었기 때문이었다. 즉, GATT 체약국단은 "GATT 제1조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GATT가입으로 인해 독일에서 생산된 상품의 독일내 무역의 현지위나 조치들이 수정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동서독간의 무역거래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1967년

385)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45-346면

한국의 GATT가입시의 체약국단의 결정문에는 남·북한 관계를 염두에 둔 언급이 전혀 없다. 한국은 훨씬 나중에 GATT에 가입했기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가능했고 또한 이미 서독의 선례가 있었기에 이를 원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물론 1951년 당시의 독일은 동·서베를린 통항문제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1967년의 한국은 세계적 냉전체제와 국내적으로는 군사정권하에서 반공의 기치를 높여가고 있던 때라는 시대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독은 GATT 가입 후 마음놓고 동독과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남북한은 여전히 경제협력 등 경제적 거래에서 국제법적인 난제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추가로 짚고 넘어갈 것은 GATT 자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간 무역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ATT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양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온 사실을 고려하여, GATT상의 제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386] 이 조항은 1947년 8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된 직후 시점인 1947년 9월에 개최된 '제네바회의'(Geneva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에서 GATT문안으로 추가된 것이며, 그 후 1954-1955년의 GATT개정 심사회의(Review Session)시 인도와 파키스탄 대표의 주장에 따라 그대로 존속되게 되었다. 한국과 같은 분단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간 특혜적 경제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GATT 자체에 규정하는데 성공했고,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또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387] 어찌되었든지 GATT 가입

386) GATT 제24조 11항.

387) 법무부,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2003. 41-46면
위와 같이 남·북한 교역에 관한 특별규정의 부재의 요인으로는 GATT체결

의정서를 개정하거나 이에 대한 특별의정서를 채택하여 남북한의 민족내부거래성을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GATT 협정에는 가입의정서에 대한 개정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남한의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것이 새로운 가입의정서를 채택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며 남북한의 경제교역에 대한 특혜교환을 인정하는 특별의정서를 채택하는 것도 사실상 남한의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GATT와 추가양허수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국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실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88]

4.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남북한 특수관계를 반영하는 방안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강화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체제이다. 한편 이와 관련

시점이 남·북한 분단 이전이었다는 점, 북한이 GATT 비회원국인 점 및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가 적대관계로 일관되어온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남·북한 관계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는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이의 국제법적 합치성에 대한 검토 및 고려가 결여되었고, 남·북한 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88)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346면

하여 한국과 여러 나라와의 지역무역협정에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둔 특별규정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들이 남·북한간의 특혜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약속을 미리 받아냄을 의미한다. 남한이 최초로 타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는 남북한 거래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는 북한 지역인 개성과 다른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후 남한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남북한 민족내부거래성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389]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은 양자적인 것이므로 양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조항들은 개성공단 내지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간주하여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수출할 때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것일 뿐, 남한이 무관세로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89)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49면

제3장 중국-홍콩 · 마카오 CEPA에 비추어 본 남북한 CEPA의 가능성

제1절 개 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적 거래에 관하여 GATT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남북한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간 배타적인 특혜의 상호교환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자유무역협정이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배되게 되나, WTO협정은 이를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어 두 나라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들이 WTO최혜국대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WTO협정은 '의무면제(waiver)'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면제(waiver)'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 전체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면제 부여에 대한 기한 및 조건 등의 제한, 매년 면제제도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각료회의의 심사 등 절차적 요건과 의무면제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하에서만 부여된다는 실체적 요건 등 까다로운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어야 한다. 반면,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번거로운 절차적 요건 충족 없이도 GATT 제24조의 요건들을 주로 갖추기만 하면 된다. 까다로운 의무면제 제도 보다는 지역협정 체결을 통해 관련국간 특혜를 교환하는 것이 당사국 입장에서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390]

---

390) 법무부,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2003. 39-41면을 정리 요약한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성공사례는 남북한 CEPA의 체결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국양제의 시행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홍콩, 마카오는 하나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독립관세구역으로서 각자가 WTO 회원이 되었고 모두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CEPA를 통해 국제적으로 GATT가 부과한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게 되었다. 물론 중국과 홍콩 또는 마카오가 CEPA를 체결한 것은 단순히 GATT가 부과한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중국과 홍콩이 CEPA를 체결한 것은 중국의 홍콩 통치에 대한 홍콩주민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CEPA를 체결한 이후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그야말로 진정한 경제공동체가 되었으며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까지 높아져 정서적인 유대감의 강화와 더불어 정치·사회적인 공동체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성공과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급격히 냉각된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 남북한 CEPA의 체결은 요원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관계를 토대로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성공은 적지 않은 자극이 될 수 밖에 없다.

제2절 남북한 CEPA의 제약요인

1. 우리 헌법 제3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제3조의 규범력에 따른다면 남북한 간에 CEPA를 체결하는 것이 헌법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고,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점은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남한과 북한이 CEPA를 체결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 또는 준국가적 지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문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에도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지만 남북한의 CEPA 체결은 남한이 북한을 협정(또는 약정)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WTO 체제라는 국제적인 영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EPA의 근거가 되는 WTO 체제는 그 회원 자격을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제1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자신의 대외무역관계 및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자적인 관세영역은 자신과 WTO 사이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WTO 설립 협정에 가입할 수 있고 이러한 가입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하여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CEPA 체결의 근거가 되는 GATT 제24조 및 GATS 제2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국가만이 아니라 자치권을 보유한 독립관세구역"도 WTO의 정식 회원이 되고 CEPA를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391] 따라서 남북한이 CEPA를 체결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다거나 국제적으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홍콩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이 CEPA를 체결한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결국 남북한이 CEP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합리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4조를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남북한 CEPA를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91) 결국 WTO의 회원국이나 CEPA의 당사자가 되는 자격은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성'(material economic independenc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을 보유한 '어떠한 조직'(any organism)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직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북한 역시 실제상 독립관세구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WTO 체제와 GATT 제24조

GATT 제24조는 GATT 제1조의 예외로서 FTA 또는 CEPA에 대한 근거규정이지만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는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GATT 협정은 WTO 회원국 간에 체결된 지역(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만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9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을 독립관세영역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WTO 회원이 아니라는 점은 남북한 CEPA의 체결에 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WTO가 회원간 FTA만을 인정하지만 회원과 비회원간의 FTA도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준용가능하다[393]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EC와 모로코 간의 협정, 니카라과와 중앙아메리카 간의 자유무역협정, 남미자유무역연합, 유럽자유무역연합 등을 들고 있다. 한편, GATS는 서비스분야에서 WTO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최혜국대우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394]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북한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이 CEPA를 체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395]

다른 한편 GATT 제24조 제8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또는 체결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

392)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44면
393)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의 의의와 가능성」 2007. 8. 12면
394) GATS 제2조 제3항 “Member”가 아니라 ”adjacent countries”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95)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345면

질적인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을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간의 교역은 통일부장관의 반출·반입 승인 절차를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 오랜 독재로 인한 북한 경제의 붕괴 등 현재 남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걸림돌에 대하여는 GATT 제24 제5항의 잠정규정을 이용하여 우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FTA 당사자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까지 '합리적 기간' 동안 잠정협정 형태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조항에 대한 1994년 양해각서에 따르면 합리적 기간은 10년이며 WTO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면 10년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남북한이 잠정협정 형태의 CEPA를 체결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에 따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남북한 CEPA에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에는 GATS 제5조 제1항을 통해서도 회피가능하다고 한다.[396]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남북한 CEPA의 체결은 현재 WTO 체제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의 국격과 외교역량에 비추어 능히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북한

남북한 CEPA 체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북한이 CEPA 체결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남북한 CEPA 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헌법이나 WTO 체제가 아니라 북한 그 자체일 것이다.

---

396) 삼성경제연구소「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의 의의와 가능성」2007. 8. 13면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의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난과 체제위협, 3대 권력세습을 앞둔 북한이 당장 남북한의 CEPA에 동의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CEPA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CEPA 체결과 지속적은 이행은 남북간의 벽을 무수고 북한 경제의 남한 경제에 대한 의존성과 남한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북한이 CEPA 체결에 동의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의 취약성도 CEPA 체결의 중대한 제약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비록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나 중국-홍콩·마카오 CEPA는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체제 전환하여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진입한 이후인 2003년경 체결되었고 이는 CEPA 체결 이후 중국이 홍콩 경제를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중국과 홍콩이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서적으로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결국 남북한 CEPA도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시행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제3절 남북한 CEPA 체결의 기반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핵심내용은 중국 또는 홍콩·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교역의 무관세,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자유화,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한은 이미 CEPA 체결의 기본적인 토대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 그 동안 남북간에 체결해 온 남북간의 합의서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합의서가 민족내부거래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남북합의서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한 것은 현실에서 민족내부거래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남북이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가까운 장래에 완전한 국내거래의 성격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남북한 간 경제적 거래에 대하여 민족내부거래성을 최초로 천명한 남북합의서이다. 더욱이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제15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에 이는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서문[397]과 그 취지가 거의 동일하다.

CEPA의 가장 기본이 상품 무역에서의 무관세라면 1992. 9. 17. 체결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3장남

397) 중국-홍콩 CEPA 서문은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이하 “쌍방”이라 함)의 경제적 공동번영 및 발전을 촉진하고 쌍방과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쌍방은 「중국과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 부속합의서도 제1조 제7항에서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라고 선언한 다음 제1조 제10항에서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 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고 명시하여 남북한간의 상품 무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천명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기반이 될수있다. 특히 상품무역의 무관세에 관한 기본 전제가 되는 원산지 문제에 관하여도 2003. 7. 31. 남북사이에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를 체결하여 원산지의 확인 절차와 방법, 원산지 확인의 기준 등을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국-홍콩·마카오 CEPA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제도적 기틀을 다져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제1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조 제12항 및 제13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여 남북한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뼈태를 갖추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위와 같은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3장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소득에관한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등 이른 바 4대 경협합의서를 남북간에 체결하였고 이미 발효된 상태이다.[398]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4대 경협합의서는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 조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합의서는 비록 현재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홍콩·마카오 CEPA에서도 온전하게 구비하지 못한 분쟁해결 절차까지 구현해 놓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4절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정립과 한반도경제공동체의 실현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은 주지하다시피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쳐 제2차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억류사건까지 겹쳐 남북관계는 경색될 때로 경색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상생과 공영을 통해 종국적으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

398) 물론 4대 경협합의서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중국-홍콩·마카오 CEP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랜기간 분리되어 있던 나라가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빠른 방법은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1991. 12. 13. 남북 사이에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남북간에 화해와 긴장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교류만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서는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체제와 이념을 떠나 경제적 이익은 남북간에 서로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가능성도 정치적 영역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CEPA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정서적으로도 동질성을 회복하여 명실공히 하나의 중국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물론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CEPA 사례를 남북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CEPA를 체결하고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 실질적인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만은 남북관계에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경제의 대중국의존도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중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의 입지와 역할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도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 CEPA의 체결은 북한의 경제협력 중심축을 한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포석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399]

아울러 남북한 CEPA의 체결은 북한에게 해외투자 유치의 활성화

399) 삼성경제연구소「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의 의의와 가능성」2007. 8. 23-25면

하는 또다른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산 물품이 무관세로 남한으로 반입될 경우 남한과 FTA를 체결하지 아니한 외국의 기업에게는 북한은 매력적인 제조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과 홍콩의 CEPA로 홍콩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향후 남북한 CEPA의 체결이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이 상생와 공영을 통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이 형식적인 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의 주민이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실질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통합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남과 북을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가능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통일의 전단계로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표일 수 밖에 없다.

남북한 CEPA의 체결은 비록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정립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WTO로 상징되는 국제거래질서에서 남북한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라는 점을 인정받아 남북통일의 국제적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남북한이 CEPA를 체결하고 남북한의 주민이 진정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남북통일이라는 염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늘품플러스, 2009.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양동문화사, 2009.
통일연구원,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체계와 추진전략」, 늘품플러스, 2008.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성민기업, 2008.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법제」, 도서출판 창신사, 1995.
문준조 외, 「중국의 일국양제론과 1997년 이후 홍콩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2.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문준조,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문준조, 「중국경제권의 FTA 체결현황과 전망」, 2005.
류동원, 「중국의 통일과 일국양제」,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년.
유병화, 「남북한 UN가입과 한국통일의 법적 문제」, 통일문제연구, 1991.
법무부, 「통일법무기본자료」, 성민기업 2008.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정책연구 Ⅰ·Ⅱ」, 중앙 D&P 2006.
법무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문중인쇄 2003.
사법연수원, 「WTO 통상법」, 1999.
법무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문중인쇄, 2002.
법무부,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문중인쇄. 2003.

우밍, 「시진평 평전」, 송삼현 옮김, 도서출판 넥서스 2009.

董立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박덕영 · 이재형 공편, 「WTO 통상조약집」, 박영사, 2006.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의 의의와 가능성」, 2007. 8.

김여선, "중국 CEPA의 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2006.

박노형,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 법조 통권 530호, 2000. 10.

최원목, "남북한 경제협력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2002.

오동윤, "중국 · 홍콩 경제 파트너쉽 강화협정", KIEP 세계경제 제6권 제8호, 2003.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중국 · 홍콩 경제협력강화협정", KITA 지역경제연구 통권 제5호 2003.

강효백, "중국-홍콩 CEPA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법적 이중성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22집, 2006.

박승권, "CEPA와 홍콩경제의 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학논총 제22집, 2006.

박지현, "WTO 내 지역무역협정(RTA) 논의 현황과 과제", KIEP 세계경제 제6권 제4호, 2003.

김진경, "심천 · 홍콩과 인천 · 개성의 전략적 역할 비교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5.

안석교 · 허흥호,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인식과 동북아경제통합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이장규 외,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박덕영,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2003.
허흥호, “중화경제권의 현황과 발전 전망”, 中蘇硏究, 통권99호(2003).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 23집 2008. 6.
남광규, “중화경제 : 지역화(Regionalization)를 통한 중국경제의 확대”, 국제지역연구, 제2권 제3호, 1998.
이재형,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2집.

〈國外文獻〉

鄧少平,「鄧少平文選 第3卷」, 人民出版社 1993.
王叔文,「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導論」,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0.
慕亞平 · 李伯僑, 「區域經濟一體化與CEPA的法律問題硏究」, 法律出版社, 2005.
楊麗艷,「區域經濟一體化法律制度硏究」, 法律出版社, 2004.
傅崐成, “從南中國的區域經濟一體化走向大中華經濟圈”, 王貴國 主編,「區域安排法律問題硏究」, 北京大學出版社, 2004.
索光擧,「CEPA 條件下內地與香港法律適用問題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歐江波 · 伍慶, “CEPA實施以來粵港服務業合作狀況與改進策略”, SOUTH CHINA REVIEW(September, 2008).
慕亞平 · 林昊, “對CEPA中香港公司定義問題的探析”,「區域經濟一體化與CEPA的法律問題硏究」, 法律出版社, 2005.
左志堅 · 陳中小路, “臺灣船王超百億造船計劃直指內地”, 「21世紀經濟報道」, 2003.

李春艷, “論CEPA爭端解決機制的重構”, 中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杜玉璟, “CEPA 法律問題研究”, 西南政法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對香港經濟的影響”, 立法會 工商事務委員會 資料文件, 立法會 CB(1)1849/06-07(04)號 文件.

華曉紅・楊立强, “中國內地與香港CEPA效益評價”. 國際貿易, 2008年 第11期.

陣建・王博, “論CEPA實施後的香港經濟”, 教學與研究, 2007年 第1期.

廖楊, “世界體系中的'華南經濟圈'及其參與中國-東盟自由貿易區的優勢問題”, 廣西民族研究, 2005年 第1期(總第79期).

林凌・憑蘇宝, “CEPA與華南經濟圈”, 開放導報, 2003年 第9期.

張贇贇, “CEPA與中國經濟一體化”, 南京理工大學, 2004年 碩士論文.

符望, “世貿組織爭端解決機制中的擧證責任分析”, 國際貿易問題, 2000.04,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構想及推動重點, 立法院第7屆第3會期 經濟委員會 第8次 全體委員會議, 2009년 4월 13일 經濟部報告書.

臺灣 行政院 大陸委員會,「兩岸統計月報」No. 193, No. 199.

"爲何需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 臺灣 經濟部 資料(2009년 10월 30일).

Hung-Gay Fung & Jian Zhang, “An Assessment of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Between China and Hong Kong”, The Chinese Economy Vol. 40. No 2, 2007.

Adrian Emch, “Services Regionalism in the WTO : China's Trade Agreements with Hong Kong and Macao in the light of Article V(6) GATS”,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No 4, 2006.

Henry S Gao,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Between China and Hong Kong -Legal and Economic Analyses”, Trading Arrangements in the Pacific Rim, 2004.

Jiang-Yu Wang, “China's Regional Trade Agreement(RTA) Approach : The Law, The Geopolitics and The Impact o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ingapore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 2004.

인터넷 사이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http://www.gwytb.gov.cn)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공업무역서 (http://www.tid.gov.hk)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통계처 (http://www.censtatd.gov.hk)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http://www.gov.mo)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http://www.mac.gov.tw)
내지와 마카오 간 CEPA 홈페이지 (http://www.cepa.gov.mo)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국 (http://www.economia.gov.mo)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24619.htm)
위키페디아 중문판 (http://zh.wikipedia.org)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대한민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부 록

- 내지와 홍콩 간의 CEPA 협정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이하 "쌍방"이라 함)의 경제적 공동번영 및 발전을 촉진하고 쌍방과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쌍방은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표

다음의 조치의 채택을 통하여,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함) 간의 무역 및 투자합작을 강화하고, 쌍방의 공동발전을 촉진한다.

1. 쌍방 간의 모든 화물무역의 실질적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감소 또는 철폐
2.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점진적 실현, 쌍방 간 모든 실질적인 차별성 조치의 점진적 감소 또는 철폐
3. 무역투자 간편화 촉진

제2조 원칙

「안배」의 목적달성과 실시 및 개정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국양제” 방침을 따름
2. WTO 규칙에의 부합
3. 쌍방 산업구조정 및 산업구조발전의 수요 순응, 안정 및 지속적 발전을 촉진
4. 호혜호리·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서로 보완(원어: 優勢互補)·공동번영 실현
5. 쉬운 것부터 먼저하고(원어: 先易後難), 점진적으로 나아감

제3조 건립 및 발전

1. 쌍방은 2004년 1월 1일부터 「안배」하에서 화물무역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시행한다는데 구체적적으로 승낙 함
2. 쌍방은 상호 간의 개방을 부단히 확대하고, 「안배」의 내용을 증가하고 충실히 한다.

제4조 중국이 WTO에 가입 당시 적용 유보한 조항

쌍방은 내지가 개혁개방을 한지 20여년이 경과하여 시장경제체재를 부단히 정비하고 있고, 내지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은 이미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쌍방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中國加入世界貿易組織議定書)」 제15조 및 제16조,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실무반 보고서(中國加入世界貿易組織工作組報告書)」 제242단의 내용은 더 이상 내지와 홍콩 간의 무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제2장 화물무역

제5조 관세

1. 홍콩은 내지가 원산지인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영(零)관세를 실행한다.
2. 2004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첨부문서 1의 표 1에 열거된 홍콩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영(零)관세를 실행한다.
3.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 내지는 첨부문서 1의 표 1 이외의 홍콩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영(零)관세를 실행한다. 구체적인 실시절차는 첨부문서 1에 기재되어 있다.
4. 본조 제3호에 근거하여 수입관세를 취소한 모든 화물은 첨부문서 1에 보충하여 넣어야 한다.

제6조 관세할당액 및 비관세조치

1. 일방은 원산지가 상대방인 수입화물에 대해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비관세조치를 채택하지 않는다.
2. 내지는 홍콩이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할당액을 실행하지 않는다.

제7조 반(反)덤핑조치

쌍방은 일방이 상대방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8조 보조금 및 반(反)보조금조치

쌍방은 WTO의 「보조금 및 반보조금조치 협정」과 「1994년 관세 및 무역 총협정」 제16조 규정을 준수함을 거듭 천명하고, 또한 일방은 상대방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반보조금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9조 보장조치

만일 「안배」의 실시로 인해 첨부문서 1에 열거된 상대방 원산인 모종 상품의 수입 격증을 조성하고, 또한 당해 일방이 생산하는 동류 혹은 직접 경쟁하는 상품의 산업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하거나 엄중한 손해의 위험을 조성한 경우에는, 당해 일방은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 통지한 후 당해 상품의 수입우대를 잠정중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구에 가능한 빨리 응하여 「안배」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협상을 시작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제3장 원산지

제10조 원산지규칙

1. 「안배」가 적용되는 화물무역 우대조치의 원산지 규칙은 첨부문서 2에 기재되어 있다.
2. 화물무역우대조치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쌍방은 행정상의 상호협조 내용과 범위를 강화·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에는 엄격한 원산지증서 발급절차의 제정 및 시행, 검사감독·관리시스템의 건립, 쌍방의 증명서 발행 및 감독·관리 기관의 네트워크·전자데이터 교환 등 조치의 실행 등을 포괄하며, 구체적 내용은 첨부문서 3에 기재되어 있다.

제4장 서비스무역

제11조 시장진입비준

1. 일방은 첨부문서 4에 열거된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상대방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제한적 조치의 점진적 감소 또는 철폐를 실행한다.

2. 일방의 요구에 응하여 쌍방은 협상을 통해 쌍방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한층 더 추진한다.
3. 본조 제2호에 근거해 실행하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모든 조치는 첨부문서 4에 보충하여 넣어야 한다.

제12조 서비스제공자

1. 「안배」중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은 첨부문서 5에 기재되어 있다.
2. WTO 기타 성원국의 어느 서비스제공자가, 만약 일방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그 일방의 내에서 첨부문서 5에 규정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안배」하에서 당해 일방에게 부여한 서비스제공자의 우대를 향유할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금융합작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 은행·증권 및 보험영역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1. 내지는 국유독자상업은행 및 부분 주식제 상업은행이 국제자금 외환거래센터를 홍콩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2. 내지의 은행이 홍콩에서 구매의 방식으로써 네트워크 및 업무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3. 내지는 금융 개혁·구조조정·발전 중 홍콩의 금융중개기구의 기능을 충분히 이용·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
4. 쌍방은 금융감독부문의 합작 및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5. 내지는 시장규율존중 및 감독관리효율제고의 원칙에 입각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내지 보험업 및 민영기업을 포함하는 기타 기업이 홍콩에 상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14조 여행합작

1. 홍콩 여행업 발전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내지는 광동성 내의 주민개인이 홍콩으로 가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조치는 우선 동완(東莞), 중산(中山), 강문(江門)의 3개 시에서 시행하고,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광동성의 전 범위에서 실시한다.
2. 쌍방은 여행의 홍보 및 확충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에는 상호여행촉진 및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를 기초로 하는 대외확대활동 전개를 포함한다.
3. 협력을 통하여 쌍방 여행업의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여행객의 합법권익을 보장한다.

제15조 전문직 자격의 상호 승인

1. 쌍방은 전문직 자격의 상호승인을 장려하고, 상호 간에 전문기술인재의 교류를 추진한다.
2. 쌍방의 주무부서 또는 업종기구는 전문직 자격의 상호승인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연구·협상·제정한다.

제5장 무역투자 간편화

제16조 조치

쌍방은 투명성제고, 표준일치화, 정보교류강화 등의 조치와 협력을 통하여 무역투자 간편화를 추진한다.

제17조 합작영역

1. 쌍방은 다음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1) 무역투자촉진
   2) 통관 간이화

3) 상품검사검역, 식품안전, 품질표준
4) 전자상거래
5) 법률・법규 투명도
6) 중소기업협력
7) 중의약산업 협력.

2. 본 조 제1호에 열거된 영역의 구체적 합작내용은 첨부문서 6에 기재되어 있다.
3. 일방의 요구에 응하여 쌍방은 협상을 통해 무역투자 간편화의 합작영역 및 내용을 증가한다.
4. 본조 제3호에 근거하여 증가된 영역이나 내용은 첨부문서 6에 보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조항

제18조 예외

「안배」 및 그 첨부문서에 기재된 규정은 내지나 홍콩이 WTO 규칙과 서로 일치하는 예외조치를 유지・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9조 기관 안배

1. 쌍방은 연합지도위원회(聯合指導委員會, 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쌍방의 고위층대표 또는 지정된 관리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연락판공실(聯絡辦公室)을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 실무반(工作組)을 설립한다. 연락판공실은 중앙인민정부 상무부 및 홍콩특별행정구 상공과학기술국(工商及科技局)에 각기 설치한다.

3. 위원회 직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ⅰ)「안배」 집행의 감독
   ⅱ)「안배」 규정의 해석
   ⅲ)「안배」 집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해결
   ⅳ)「안배」 내용의 증보 및 개정 초안작성
   ⅴ) 실무반(工作組)의 업무지도
   ⅵ)「안배」 실시와 관련한 기타 모든 사무의 처리
4.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일방이 요구사항을 제출한 이후 30일 이내에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쌍방은 우호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안배」의 해석·집행 중에 출현한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한다. 위원회는 협상일치의 방식으로써 결정을 내린다.

제20조 잡항(雜項)

1. 「안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안배」에 근거하여 취한 어떠한 행동이 일방이 체약당사자로서 기타 협의상 향유하는 권리 및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폐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쌍방은「안배」의 제한적 조치의 시행에 따른 영향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첨부문서

「안배」의 첨부문서는「안배」의 구성부분이 된다.

제22조 개정

필요에 따라 쌍방은 서면형식으로「안배」 또는 첨부문서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개정도 쌍방이 수권한 대표가 서명한 후에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효력발생

「안배」는 쌍방의 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안배」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안배」는 2003년 6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부속문서1]

화물무역 영(零)관세 실시에 관하여 (關於貨物貿易零關稅的實施)

1. 「내지와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근거하여,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는 화물무역의 영관세 실시에 대하여 본 부속문서를 제정함.
2. 홍콩은 내지 원산인 모든 수입화물에 대하여 계속하여 영관세를 시행한다.
3. 내지는 2004년 1월 1일부터 단계를 나누어 홍콩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영관세를 시행한다. "홍콩 원산의 수입화물"이라 함은 「안배」의 부속문서 2에서 규정한 화물에 부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홍콩특별행정구 관련부문 및 증서발급의 수권을 받은 기구는 홍콩 법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배」상의 원산지증서를 발급한다. 「안배」상의 영관세를 향유하는 화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안배」 부속문서 3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관련부문 또는 증서발급의 수권을 받은 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를 내지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2004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본 부속문서 표1에 열거된 홍콩 원산의 수입화물에 대해 영관세를 시행한다. 표1은 본 부속문서의 구성부분이다. 내지에서 세칙세목(稅則稅目)을 조정할 경우는 표1의 세칙 번호는 이에 상응하게 전환한다. 홍콩의 생산기업은 영관세를 향유를 요구하는 화물신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내지 세칙번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내지는 본 부속문서 표1 이외의 홍콩 원산의 수입화물에 대해 영관세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 및 조사

(1) 2004년 1월 1일부터 홍콩의 생산기업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홍콩공업무역서(香港工業貿易署)에 영관세 향유를 요구하는 화물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 신청기업은 홍콩공업무역서에 화물명칭 및 생산능력 또는 생산예측상황의 자료와 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홍콩공업무역서 및 홍콩해관은 신청기업이 제공한 자료 및 수치에 대해 조사·인정(認定)을 진행하고, 현재의 생산화물 및 생산예정화물 별로 나누어 수집한다.

(나) 확인 및 협상

(1) 매년 6월 1일 이전에 홍콩공업무역서는 별도로 모은 화물명칭·생산능력·생산예상상황의 자료 및 수치를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무부는 홍콩공업무역서가 제출한 상술한 자료를 받은 후, 내지 관련부문 및 홍콩공업무역서와 함께 같은 해 8월 1일 이전에 화물명단을 공동으로 심의확정·확인하여야 한다.

(3) 화물명단을 확인 한 후 해관총서는 홍콩공업무역서와 함께 관련화물의 원산지표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 쌍방은 당해 10월 1일 이전에 원산지표준의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공포 및 실시

(1) 현재 홍콩에서 생산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치된 의견에 근거하여, 내지는 화물명단 및 상응하는 원산지표준을

각각 본 부속문서의 표1 및 부속문서 2의 표1에 보충 기재한다. 협상을 완료한 후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내지는 홍콩의 증서발급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에 의거하여 「안배」에 따른 관련화물의 영관세수입을 허가한다.

(2) 생산예정인 화물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치된 의견에 근거하여, 내지는 관련화물의 원산지표준을 부속문서 2의 표1에 보충하여 기재한다. 신청기업이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간 후 홍콩공업무역서 및 홍콩해관의 조사를 거쳐 홍콩공업무역서가 상무부에 통지하며, 쌍방이 공동 확인한 후 내지는 관련화물의 명단을 본 부속문서의 표1에 보충하여 기재한다.

쌍방이 확인 한 후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내지는 홍콩의 증서발급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에 의거하여 「안배」에 따른 관련화물의 영관세수입을 허가한다.

(3) 쌍방은 매년 12월 1일 이전에 협상에서 확인한 화물명단 및 원산지표준을 공포하여야 한다.

(라) 홍콩공업무역서가 매년 6월 1일 이후에 「안배」상의 영관세 향유를 요청하는 화물 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하는 경우는 세금감면은 1년 순연(順延)한다.

6. 본 부속문서의 집행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무역 및 관련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조성한 경우, 일방이 요구하면 쌍방은 본 부속문서의 관련규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7. 본 부속문서는 쌍방의 대표가 공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9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商務部副部長)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부속문서2]

화물무역의 원산지 규칙에 관하여 (關於貨物貿易的原産地規則)

1. 「내지와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근거하여,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는 화물무역의 원산지규칙에 대해 본 부속문서를 제정함.
2. 일방이 직접 다른 일방으로부터 수입한 「안배」에 따라 영관세를 실시하는 화물은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 원산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은 그 일방이 원산지이다.
   (2)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이 아닌 경우는 당해 일방에서 실질적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원산지로 인정한다.
3. 본 부속문서 제2조 제(1)호에서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이라 함은 다음을 가리킨다.
   (1) 당해 일방에서 채취 또는 추출한 광산품
   (2) 당해 일방에서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이나 식물상품
   (3) 당해 일방에서 출생하고 사양(飼養)한 동물
   (4) 당해 일방에서 본조 제(3)호 소정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5) 당해 일방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상품
   (6)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내지의 선박인 경우)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를(홍콩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 게양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어류 및 기타 해산품
   (7)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내지의 선박인 경우)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를(홍콩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 게양한 선박상에서 본조 제(6)호 소정의 상품에 가공을 하여 획득한 상품

(8) 당해 일방에서 수집한 것으로, 당해 일방의 소비과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물품(원어: 廢舊物品)

(9) 당해 일방에서 가공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재료(원어: 廢碎料)

(10) 본조 제(1)호 내지 (9)호의 상품을 이용하여 당해 일방에서 가공하여 얻은 상품

4. 다음에 열거한 가공 또는 처리는, 단독으로 완성한 것인지 아니면 상호결합하여 완성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아래에서 규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은 모두 미세가공처리를 한 것으로 보며, 화물이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화물의 운수・저장을 위해 진행한 가공이나 처리

(2) 화물적재운송의 편의를 위해 진행한 가공이나 처리

(3) 화물판매를 위해 진행한 포장・전시 등의 가공이나 처리

5. 본 부속문서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실질적 가공”의 인정기준으로는 쌍방이 동의한 다음의 실질적 가공표준을 채택한다.

(1) “실질적 가공”의 인정표준은 “제조 또는 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기타 표준” 또는 “혼합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2)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은 일방의 경내에서 가공을 한 후 얻은 화물에 기본적 특징을 부여한 주요 제조공정 또는 가공공정을 가리킨다.

(3) "세목번호 변경(원어: 稅號改變)"은 일방의 원산이 아닌 재료가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가공을 거쳐 생산된 후에, 획득한 상품이 「상품명칭 및 코드번호 협조제도(원어: 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중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고 또한 당해 일방 이외의 국가·지구에서 더 이상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를 변경하는 어떠한 생산·가공·제조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4)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란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원료·조립부품·노동가치·상품개발지출가치의 합계가 완제품수출의 FOB 가격 대비 30% 이상이고, 또한 최후의 제조·가공공정이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원료가치} + \text{조립부품가치} + \text{노동가치} + \text{상품개발지출가치}}{\text{완제품 수출의 FOB 가격}} \times 100\% \geqq 30\%$$

1) "상품개발"이란 일방 경내에서 완제품의 생산·가공과 관련하여 시행한 상품개발을 가리킨다. 개발비용의 지급은 반드시 당해 수출 완제품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생산가공자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또는 당해 일방 경내의 자연이이나 법인에게 개발을 위탁하면서, 그리고 당해 일방 경내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보유하는 설계·특허권·전유기술·상표권·저작권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비용을 포괄한다. 당해 비용의 지급금액은 반드시 공인된 회계준칙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 협

정)」[400]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400)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 협정)

가. 협상배경

○ 관세평가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체결된 9개 MTN협정중 하나로서 1981.1.1. 발효
- 우리나라는 1981.1.6. 가입

○ 기존의 관세평가협정은 일부 GATT 회원국만이 가입하고 있던 복수국간 협정으로서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던 바, 동 협정 적용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 대두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 전문, 24개조,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 관세평가규칙 (제1조 - 제6조)

-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함.
거래가격 :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자가 부담한 금액 등으로 조정한 가격

- 관세가격을 거래가격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아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ⅰ)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

ⅱ) 해당상품과 동일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 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

ⅲ) 해당상품의 수입시 또는 수입과 거의 동시에 상품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

ⅳ)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산정가격

- 상기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관세평가)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

○ 특정 관세가격 결정방법의 금지 (제7조)

- 수입국 생산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
- 최저 관세가격 등

2) 상술한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의 계산은 공인된 회계준칙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5) "기타 표준"이란 상술한 "제조·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이외에 쌍방이 채택하기로 동의한 원산지확정방법을 가리킨다.

(6) "혼합 표준"이란 상술한 두 개 이상의 표준을 동시에 사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6. 간단한 희석·혼합·포장·병에 담는 포장(裝瓶)·건조·조립·분류·장식은 실질적인 가공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기업이 생산

○ 신고가격이 의심스러운 경우 (각료결정)
- 신고가격 자료나 서류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가능
- 응답이 없거나 추가 자료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거래가격에 의하여 관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정

○ 분쟁해결 (제19조)
-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 개발도상회원국 우대 (제20조)
- 현행 관세평가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 평가협정의 이행을 WTO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유예
- 또한 선진국 회원국으로 하여금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해주도록 명시

○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위원회 설치 (부속서 2)
-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 보장을 위해 관세협력이사회 후원하에 기술위원회 설치
- 회원국의 관세평가제도의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 조사, 해결 방안에 관한 자문의견 제공, 협정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및 배포 등의 임무 수행

- 외교통상부 사이트 참조 (http://www.mofat.go.kr/help/search/index.jsp).

하거나 가격을 정하는 조치의 목적이 본 부속문서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 경우도 역시 실질적 가공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7. 화물원산지를 확정할 때는 화물제조과정 중에 사용한 에너지·공장·설비·기기·공구의 산지(産地)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제조과정 중에 사용되었지만 화물의 성분 또는 구성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재료의 산지도 고려하지 않는다.
8.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다음의 정황은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는다.
   (1) 적재한 화물을 따라 함께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에서 당해 화물과 함께 분류한 포장·포장재료·용기
   (2) 화물과 함께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에서 당해 화물과 함께 분류한 부속품·예비품·공구·소개설명자료
9.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의 8자리 등급의 세목을 기초로 하고 본 부속문서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화물무역 우대조치를 향유하는 홍콩화물원산지 표준 표(享受貨物貿易優惠措施的香港貨物原産地標準表)」(본 부속문서 표1)를 제정한다.

   표1은 본 부속문서의 구성부분이다. 「안배」하에서 본 부속문서 표1에서 규정한 원산지표준을 만족시키는 화물은 이미 홍콩에서 실질적 가공을 한 것으로 본다.

   「안배」의 부속문서 1 제5조에 의거하여 영관세를 시행하는 모든 홍콩원산의 화물 및 홍콩에서 생산예정인 화물의 원산지표준은 본 부속문서 표1에 보충 기재하여야 한다.

10. 「안배」에 의거하여 영관세를 실시하는 원산화물은 일방으로부터 직접 상대방의 항구까지 운수하여야 한다.
11. 본 부속문서 실시 후에 만약 생산기술의 진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일방이 본 부속문서의 내용이나 본 부속문서 표1 내의 관련 화물의 원산지표준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협상을 요청하고 서면설명과 뒷받침하는 수치 및 자료를 제출하여 「안배」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연합지도위원회의 협상을 거쳐 해결한다.
12. 본 부속문서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9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부속문서3]

원산지증서의 발행 및 심의조사 절차 (關於原産地證書的簽發和核查程序)

1. 「내지와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의거하여,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는 원산지증서의 발급 및 심의조사절차 그리고 쌍방의 감독관리 협력강화에 대해 본 부속문서를 제정함.
2. 홍콩원산지증서의 발급기관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공업무역서(工業貿易署) 및 「원산지출처증서의 비정부 발급 보장조례(非政府簽發産地來源證保障條例)」(홍콩법례 제324장)에서 말하는 "인가기구(認可機構)"로 한다. 홍콩의 증서발급기관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해관총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홍콩원산지증서의 내용 및 서식은 양식1(表格1)을 볼 것. 양식1(表格1)은 본 부속문서의 구성부분이다. 원산지증서내용과 서식의 어떠한 변경은 쌍방의 협상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4. 홍콩 공업무역서(工業貿易署)는 원산지증서의 인장(印章) 양식을 해관총서에 보내 비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서 인장 양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즉시 해관총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안배」하에서 영관세를 시행하는 홍콩 원산의 화물은 내지에 수출하기 전에 수출자 또는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홍콩의 증서발급기관에 원산지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6. 홍콩 증서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는 다음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서 상에 유일한 일련번호를 갖출 것

(2) 1부의 원산지증서는 동시에 내지에 들여온 한 무리 화물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1부의 원산지증서는 5개 항목 8자리 세목(稅目)을 넘지 않는 화물을 포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목의 화물은 또한 「안배」 부속문서 1의 표 1에 열거된 화물에 속할 것

(3) 지정된 단일한 화물도착항구가 원산지증서 상에 나타날 것

(4) 원산지증서 상에 상품의 내지 협력제작 일련번호(産品內地協制編號)는 적용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의 8자리 등급의 세목번호에 따라 기재한다.

(5) 원산지증서의 계량단위는 적용되는 실제 거래가 성사된 계량단위에 따라 기재한다.

(6) 원산지증서는 지우고 고치거나 중복 날인(疊印)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7) 원산지증서의 유효기간은 증서발급일로부터 120일이다.

(8) 원산지증서는 양식1의 서식에 의거하여 A4지에 인쇄하며, 사용되는 문자는 중문(中文)으로 한다. 이러한 사용문자에 관한 요청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9) 원산지증서가 도난·유실·훼손된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기업은 원(原)증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홍콩의 증서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원증서의 부본(副本) 1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부본에는 "실증을 거친 진실한 부본"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원증서가 이미 사용되었다면 나중에 발급된 부본은 무효이다. 나중에 발급된 부본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원증서는 무효이다.

7. 쌍방은 네트워킹을 통한 조사방식을 통해서 영관세를 실행하는

홍콩화물의 원산지 신청에 대해 관리를 하고, 전용선을 통하여 전자데이터방식으로 다음의 정황을 해관총서에 전송한다.

(1) 2004년 1월 1일부터는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홍콩공업무역서는 전(前) 분기에 영관세를 향유한 홍콩화물의 생산 및 증서발급 자료를 해관총서에 전송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홍콩의 증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서를 발급한 후, 홍콩 공업무역서는 즉시 원산지증서의 기본상황(일련번호, 수출자 명칭, 공장등기번호, 도착항, 상품의 내지 협력제작 일련번호, 화물명칭, 계량단위 및 수량, 금액 및 화폐제도, 홍콩 증서발급기관 명칭 등) 정보를 전용선을 통해 해관총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3) 신고지의 해관은 홍콩 공업무역서에서 전송한 전자자료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서와 오류가 없음을 대조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기재(核注)하여 홍콩 공업무역서에 돌려보내야 한다.

(4) 쌍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정보.

8. 수입신고 시, 수입자는 화물의 영관세 향유와 관련하여 신고지의 해관에 주동적으로 표명하고 유효한 원산지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지 해관은 네트워크를 통해 오류가 없음을 대조확인한 후 수입화물의 영관세향유 대우를 허가한다. 사정이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대조확인을 할 수 없으면 수입자의 요청에 응하여 신고지 해관은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 및 화물통관을 처리할 수 있는데, 다만 당해 화물에 대해서는 「안배」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관세율에 따라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고지 해관은 당해 화물이 통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원산지증서의 상황을 대조확인하고 대조확인결과에 근거하여 보증금반환수속 또는 보증금의 수입관세로의 전환 수속을 즉각 처리하여야 한다.

9. 신고지 해관이 원산지증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해관총서 또는 기타 수권 받은 해관을 통하여 홍콩 해관에 심사협조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홍콩 해관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후 90일 내에 회답을 하여야 한다. 만약 홍콩 해관이 90일 내에 화물원산지 증서와 관련한 심사와 확인을 완성하지 못하면, 해관총서는 신고지 해관에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과 화물통관 처리를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화물에 대해서는 「안배」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관세율에 따라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홍콩 해관이 심사를 완성하기를 기다린 후 신고지 해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금반환수속 또는 보증금의 수입관세로의 전환 수속을 즉각 처리하여야 한다.
10. 쌍방은 「안배」 부속문서 2의 원산지규칙 집행과 본 부속문서에서 필요로 하는 상호 행정협조를 해관총서와 홍콩 해관이 서명한 「상호협조합작안배(合作互助安排)」에 넣을 수 있고, 관련 정보(홍콩에서 내지로 들어오는 화물의 원산지정보, 원산지증서 내용의 진위, 영관세 우대를 향유하는 홍콩 화물이 원산지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기타 본 부속문서의 정확한 실시에 대한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교환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쌍방 동의하에 상대방에 사람을 파견하여 현지 방문을 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1. 어느 일방의 조사를 거쳐 영관세를 시행하는 화물이 「안배」 부속문서 2의 표1 및 본 부속문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이 실증되면, 쌍방 해관은 즉각 상호통보하고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2. 쌍방은 수입화물의 원산지심사 교류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산지증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누설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법절차에서 제공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본 부속문서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9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부속문서4]

서비스무역 분야 개방의 구체적 승낙에 관하여 (關於開放服務貿易領域的具體承諾)

1. 「내지와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의거하여,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는 서비스무역 분야 개방의 구체적 승낙에 대해 본 부속문서를 제정한다.
2. 2004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홍콩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본 부속문서 표1에 기재된 구체적 승낙을 시행한다. 표1은 본 부속문서의 구성부분이다. 통신관련 서비스 중 부가가치 전신서비스(원어: 增值電信服務) 의 승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3. 본 부속문서에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 부문·일부 부문 또는 관련 조치에 대해서, 내지는 「중화인민공화국 WTO 가입 의정서」 부속문서 9인 「서비스무역 구체적승낙 양허표 제2조 최혜국대우 면제명단(服務貿易具體承諾減讓表第2條最惠國待遇豁免淸單;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 on Services List of Article Ⅱ MFN Exemptions)」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부속문서 표1에서 밝힌 구체적 승낙의 실시에 대해서는 본 부속문서의 규정을 집행하는 이외에 내지의 관련 법률법규 및 행정규장도 적용하여야 한다.
5. 2004년 1월 1일부터 본 부속문서에서 포괄하는 서비스영역에 대해서, 내지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홍콩은 어떠한 제한적 조치를 추가할 수 없다.

6. 쌍방은 협상을 통해 내지에 대한 홍콩의 진일보한 서비스업 개방의 내용을 입안·실시한다. 구체적 승낙과 관련한 것은 표2에 집어넣는다. 표2는 본 부속문서의 구성부분이다.
7. 쌍방은 협상을 통해 내지인의 홍콩 전문자격취득에 대한 구체적 승낙을 입안·실시한다.
8. 본 부속문서의 집행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무역 및 관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일방의 요청에 따라 쌍방은 본 부속문서의 관련 조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9. 본 부속문서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9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財政司司長)
_____	_____

<표 1>

홍콩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401]
(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A. 전문 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구체적 승낙	1. 내지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홍콩 변호사사무소와 내지 변호사사무소의 공동경영을 허가한다. 공동경영조직은 조합형식으로 운용할 수 없으며, 공동경영조직의 홍콩 변호사사무소는 내지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2. 내지 변호사사무소에서 홍콩법률사무 집행자[402]를 초빙하여 임용하는 것을 하가하고, 내지의 변호사사무소에 임용된 홍콩법률사무 집행자는 내지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이미 내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5명의 홍콩 변호사가 내지에서 실습 및 개업하고 비(非)소송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4. 홍콩영주민중 중국공민이 「국가사법고시실시판법(國家司法考試實施辦法)」에 따라 내지의 통일사법고시에 참가하여 내지 법률직업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허가한다. 5. 제4조에 기재된 자들이 내지의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律師法)」에 따라 내지 변호사사무소에서 비(非)소송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6. 홍콩법률사무소의 심천(深圳)・광주(廣州)에 설립한 대표처의 대표에 대해서는 최소거류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다. 홍콩법률사무소의 심천・광주 이외의 내지 대표처의 대표의 경우 매년 내지에서의 최소거류기간은 2개월이다.

401) 부문분류에는 WTO「서비스무역총협정」서비스부문분류 (GNS/W/120)를 사용하며, 부문의 내용은 상응하는 UN 중앙상품분류 (CPC, 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참고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A. 전문서비스
	b. 회계,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구체적 승낙	1. 이미 내지의 등록회계사자격을 보유하고 내지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홍콩 회계사(조합원 포함)의 매년 내지에서의 업무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은 내지 등록회계사에 비추어 실행한다. 2. 홍콩 회계사사무소가 내지에 임시로 회계감사업무를 전개하면서 신청한 「임시회계감사업무허가증(臨時審計業務許可證)」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A. 전문서비스
	d. 건축설계 서비스 (CPC 8671) e. 공정서비스 (CPC 8672) f. 집중공정 서비스 (CPC 8673) g. 도시기획 및 풍경조경림 설계 서비스 (도시 종합기획 서비스는 제외) (CPC 8674)
구체적 승낙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건축설계서비스·공정서비스·집중공정서비스·도시기획 및 풍경조경림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한다.[403]

402) 본 부속문서에서 홍콩법률사무 집행자라 함은 홍콩의 법정변호사(大律師, barrister)와 사무변호사(律師, solicitor)를 가리킨다.

40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내지에서 독자(獨資)의 공정고문회사(顧問工程公司)를 설립하여 상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A. 전문 서비스 h. 의료 및 치과서비스 (CPC 9312)
구체적 승낙	1. 홍콩이 내지와 합자(合資)·합작(合作)하여 설립한 의원 또는 진료소에 임용된 의료진들의 대다수를 홍콩영주민으로 할 수 있다. 2.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내지에서 단기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3년이다. 단기의 업무종사기간이 만료한 후 연기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이 단기업무종사를 수속할 수 있다. 3. 홍콩대학(香港大學) 및 홍콩중문대학(香港中文大學)의 의학(양의학) 전공을 졸업한 홍콩영주민이 홍콩에서 1년의 실습기간을 마치고 홍콩에서의 합법적 진료권한을 취득한 후에,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합격한 자에게는 내지의 “의사자격증서”를 발급한다. 4. 홍콩대학의 구강(치과) 전공을 졸업한 홍콩영주민이 홍콩에서의 합법적 진료권한과 의료면허를 취득한 지 1년 후에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합격한 자에게는 내지의 “의사자격증서”를 발급한다. 5. 내지 국무원 교육행정 주관부문에서 인가한 전일제 전문·대학교의 의학(양의학) 전공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홍콩영주민이 홍콩에서 업무종사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1년의 실습기간을 마치고 홍콩에서의 합법적인 진료권을 취득하였으면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합격한 자에게는 내지의 “의사자격증서”를 발급한다. 6. 내지 국무원 교육행정 주관부문에서 인가한 전일제 전문·대학교의 구강(치과) 전공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홍콩영주민이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홍콩에서의 합법적인 진료권한을 취득하고 의료행위에 종사한 지 1년 후에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합격한 자에게는 내지의 “의사자격증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승낙	7. 내지 국무원 교육행정 주관부문에서 인가한 전일제 전문·대학교의 의학(양의학) 및 구강(치과) 전공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홍콩영주민은 상술한 제5, 6조 규정에 따라 따로따로 내지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내지에서의 실습기간이 만 1년이 되고 심사에 합격한 후에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합격한 자에게는 내지의 "의사자격증서"를 발급한다. 8. 홍콩중문대학(香港中文大學) 및 홍콩침례대학(香港浸會大學)의 중의학 전공을 졸업하고 합법적인 진료권을 취득한 홍콩영주민이 내지의 3급 중의원에서 실습기간이 만 1년이고 심사에 합격한 후, 또는 홍콩에서 이미 면허를 가지고 의료행위에 종사한 지 1년 이상인 후에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합격한 자에게는 내지의 "의사자격증서"를 발급한다. 9. 내지 국무원 교육행정 주관부문에서 인가한 전일제 전문·대학교의 중의학 전공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홍콩영주민이 중의진료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홍콩에서의 합법적인 진료권한을 취득하고 의료행위에 종사한 지 1년 이상인 후에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내지에서의 실습기간이 만 1년이 되고 심사에 합격한 후에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합격한 자에게는 내지의 "의사자격증서"를 발급한다. 10. 홍콩영주민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의 유형은 임상(臨床), 중의(中醫), 구강(口腔)이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D. 부동산서비스
	a. 자가소유 또는 임대자산 관련 부동산서비스 (CPC 821) b. 비용수납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서비스 (CPC 822)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 형식으로 내지에서 고품질의 부동산항목(高標準房地産項目)[404]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 형식으로 내지에서 비용수납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F. 기타 상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구체적 승낙	홍콩의 서비스제공자[405]가 내지에서 독자(獨資)광고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404) 高標準房地産項目이란 단위 건설비용이 동일한 도시 평균 단위 건설비용의 2배보다 높은 부동산 항목을 가리킨다.

405) 본 부문 중,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광고업무를 경영하는(주된 경영이 아닌 경우 포함)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F. 기타 상업서비스
	c. 관리자문서비스 (CPC 86501, 86502, 86503, 86504, 86505, 86506, 86509)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관리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는 일반관리자문서비스, 재무관리자문서비스(영업세 제외), 경영판매관리자문서비스, 인력자원관리자문서비스, 생산관리자문서비스, 공공관계서비스 및 기타 관리자문서비스를 포함한다.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제공하는 관리자문서비스의 최저등록자본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公司法)」에 따라 처리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F. 기타 상업서비스
	회의서비스 및 전람서비스 (CPC 87909)
구체적 승낙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회의서비스 및 전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406]

406) 출국·출경 전람은 포함하지 않음.

부문 또는 일부 부문	2. 통신서비스
	C. 전신(電信)서비스
	부가가치 전신서비스
구체적 승낙	1. 2003년 10월 1일부터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다음 5개 항목의 부가가치 전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407] (1) 인터넷 데이터센터 업무 (2) 저장·중계전송 유형의 업무 (3) 호출센터 업무 (4) 인터넷접속(接入)서비스 업무 (5) 정보서비스 업무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제1조의 부가가치 전신서비스 업무를 합자경영하는 기업 중에서 보유하는 주식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와 합자경영하는 제1조의 부가가치 전신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없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2. 통신서비스
	D. 시청서비스
	비디오 배포서비스(CPC 83202), 녹음제품의 배포서비스 영화관 서비스 중국어영화 및 합작촬영 영화\

407) 내지의 「전신업무분류목록(電信業務分類目錄)」에 의거하여 집행

구체적 승낙	**- 비디오・녹음제품의 배포서비스**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합자형식으로 음성・영상제품의(뒤의 영화상품 포함) 배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408]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다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단 70%를 초과하지는 못한다.
	- 영화관서비스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합자・합작 형식으로 영화관을 건설・개조・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다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단 75%를 초과하지는 못한다. - 중국어영화 및 합작영화 1. 홍콩에서 촬영한 중국어영화가 내지 주관부문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내지에서의 발행에 있어서 수입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홍콩에서 촬영한 중국어영화라 함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건립한 제작단위에서 촬영한 것으로, 75% 이상의 영화저작권을 보유한 중국어영화를 말한다. 당해 영화의 주요 스태프 그룹[409] 중 홍콩주민은 그 그룹 전체 직원 수의 50%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3. 홍콩이 내지와 합작하여 촬영한 영화는 국산영화로 보고 내지에서 발행한다. 표준어를 표준으로 녹음(더빙)한 당해 영화의 기타 중국민족언어・방언의 판본은 내지에서 발행할 수 있다. 4. 홍콩이 내지와 합작하여 촬영한 영화에 있어, 홍콩 측의 주요 창작자[410]가 점하는 비율은 제한이 없다. 다만 내지의 주요 연기자의 비율은 영화 전체 주요 연기자 총수의 1/3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야기의 발생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이야기의 줄거리 또는 주요 인물은 내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408)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경영하는 음성・영상제품 배포서비스의 내용은 내지의 관련 법규 및 심사제도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09) 주요 스태프 그룹에는 감독, 시나리오작가, 남・여 주연 및 조연배우, 제작감독(監製), 촬영, 편집, 미술지도, 복장설계, 액션・무술지도, 원(原)창작음악이 포함된다.

410) 주요 창작자라 함은 감독, 시나리오작가, 촬영, 주요 연기자를 가리키며, 주요 연기자는 주연 및 주요한 조역을 가리킨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3.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
	CPC 511, 512, 513[411], 514, 515, 516, 517, 518[412]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건설회사를 설립할 경우, 홍콩 및 내지에서의 실적을 함께 해당 기업이 내지에 설립하려는 건설회사의 자격을 평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관리자 및 기술자 수는 그 내지에 설립하려는 건설회사의 실제 근무자를 자격평가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단독으로(全資) 내지의 건설회사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투자하여 설립한 건설회사가 중외합영(中外合營) 건설항목을 하청 받을 경우에는 건설항목의 중외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투자한 건설회사가 자격증을 신청함에는 내지의 관련법규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건설회사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합법적으로 전국범위의 공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11) 기반시설과 관련이 있는 준설서비스를 포함한다.
412) 포괄하는 범위는 외국건설회사가 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보유・사용하면서 배치한 조작자의 건축・철거 기기의 임대서비스에만 한정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4. 배포(원어: 分銷, distribution) 서비스 A. 수수료대리 서비스 (소금 및 담배 불포함) B. 도매서비스 (소금 및 담배 불포함)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방식으로 내지에서 수수료대리 및 도매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자(獨資)의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한다.[413]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독자・합자・합작의 도매상업기업의 설립을 신청함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ⅰ)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을 하기 이전 3년간의 연평균 판매액이 미화 3,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ⅱ) 전년도의 자산액이 미화 1,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ⅲ) 내지에서 설립한 기업의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5,000만원으로 한다. 중서부지구에[414] 도매상업기업을 설립하려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을 하기 이전 3년간의 연평균 판매액이 미화 2,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3,000만원으로 한다. 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합자・합작의 대외무역회사 설립을 신청함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ⅰ)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이전 3년간의 연평균 내지와의 무역액이 미화 1,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ⅱ) 중서부지구에[415] 대외무역기업을 설립하려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이전 3년간 내지와의 연평균 무역액이 미화 5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ⅲ) 내지에서 설립한 기업의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2,000만원으로 한다. ⅳ) 중서부지구에 대외무역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1,000만원으로 한다. 4.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수수료대리 및 도매업무를 독자(獨資)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없다.

41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도서・신문・잡지・약품・농약・농업용비닐・화학비료・완성유(成品油)・원유의 도매 및 대리수수료서비스를 경영하는 경우, WTO 성원에 대해 내지가 승낙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414) 본 부속문서에서, 중서부지구에는 중부지구 및 서부지구를 포함한다. 서부지구는 중경(重慶), 사천(四川), 귀주(貴州), 운남(雲南), 서장(西藏), 섬서(陝西), 감숙(甘肅), 청해(靑海), 영하(寧夏), 신강(新疆), 내몽고(內蒙古), 광서(廣西) 등 12개 성・자치구・직할시 그리고 호남상서토가족자치주(湖南湘西土家族自治州)・호북은시묘족자치주(湖北恩施苗族自治州)・길림연변조선족자치주(吉林延邊朝鮮族自治州)를 포함하고, 중부지구는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산서(山西), 하남(河南), 호북(湖北), 호남(湖南), 안휘(安徽), 강서(江西) 등 8개성을 포함한다.

415) 본 부속문서에서, 중서부지구에는 중부지구 및 서부지구를 포함한다. 서부지구는 중경(重慶), 사천(四川), 귀주(貴州), 운남(雲南), 서장(西藏), 섬서(陝西), 감

부문 또는 일부 부문	4. 배포 서비스 C. 소매(원어: 零售)서비스 (연초 불포함)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형식으로 내지에 소매상업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416]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합자・합작의 소매상업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ⅰ)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을 하기 이전 3년의 연평균 소매액이 미화 1억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ⅱ) 신청 전년도의 자산액이 미화 1,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ⅲ) 내지에서 설립하는 기업의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1,000만원이며, 중서부지구에 설립하는 소매상업기업의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600만원이다. 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설립하는 소매기업의 지역범위는 지급(地級) 시(市)까지 확대되며, 광동성에서는 현급(縣級) 시까지 확대한다. 4.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의 소매기업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417] 5. 홍콩 영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내지의 관련 법규 및 행정규정에 따라 광동성 경내에 개인자영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자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 영업범위는 소매상업으로 하되 특허경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영업면적은 300 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숙(甘肅), 청해(靑海), 영하(寧夏), 신강(新疆), 내몽고(內蒙古), 광서(廣西) 등 12개 성・자치구・직할시 그리고 호남상서토가족자치주(湖南湘西土家族自治州)・호북은시묘족자치주(湖北恩施苗族自治州)・길림연변조선족자치주(吉林延邊朝鮮族自治州)를 포함하고, 중부지구는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산서(山西), 하남(河南), 호북(湖北), 호남(湖南), 안휘(安徽), 강서(江西) 등 8개성을 포함한다.

416)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도서・신문・잡지・약품・농약・농업용비닐・화학비료・양식・식물성 기름・설탕・면화・완성유(成品油)의 소매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WTO 성원에 대해 내지가 승낙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417) 분점이 30곳이 넘는 체인점의 경우, WTO 성원에 대해 내지가 승낙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4. 대리 서비스 D. 특허경영
구체적 승낙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특허경영사무[418]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7. 금융서비스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 및 증권 불포함) a. 공중에 대한 예금 수납 및 기타 자금 대부 b. 소비신용대출·저당신용대출·상업거래의 대리 및 융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출 c. 금융임차(金融租賃) d. 신용카드·외상카드·대출기록카드·여행자수표·은행환어음 (수출입결산 포함)을 포함한 모든 지급 및 어음교환 수단 e. 담보 및 승낙 f. 자체 외환거래 또는 고객대행 외환거래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은행이 내지에 분점 또는 법인기구를 설립하려면, 신청을 제출하는 전년도 연말 총자산이 미화 60억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홍콩의 재무회사가 내지에 법인기구를 설립하려면 신청을 제출하는 전년도 연말 총자산이 미화 60억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2. 홍콩의 은행이 내지에 합자은행·합자재무회사를 설립하거나, 홍콩의 재무회사가 내지에 합자재무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지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3. 홍콩 은행의 내지 지점이 인민폐 경영업무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1) 내지에서 개업한 지 2년 이상이며, (2) 주관부문이 영리성 자격을 심사할 때는 내지의 단일 지점에 대한 심사를 여러 지점에 대한 전체 심사로 바꾸어 하여야 한다.

418) 관련 법규는 장차 별도로 공표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7. 금융서비스 A. 모든 보험 및 그 관련 서비스 a. 생명보험, 건강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 b. 비생명보험 c. 재보험 d. 보험부속서비스
구체적 승낙	1. 홍콩보험회사가 병합 또는 합병을 거쳐 구성한 집단이 내지의 시장진입요건(집단의 자산총액 미화 50억 달러 이상으로서 그 중 어느 한 홍콩보험회사의 경영역사가 30년 이상이고, 또한 그 중 어느 하나의 홍콩보험회사가 내지에 설립한 대표처가 2년 이상일 것)에 따라 내지의 보험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의 보험회사는 내지 보험회사의 주식을 24.9%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3. 홍콩영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내지에서 보험계리사(精算師) 자격을 취득 한 이후에는 사전비준을 받을 필요 없이 내지에서 개업할 수 있다. 4. 홍콩영주민이 내지에서 보험업에 종사할 자격을 얻고 내지 보험영업기구에 초빙·임용되어 관련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7. 금융서비스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증권서비스
구체적 승낙	1. 홍콩증권거래소(香港交易及決算所有限公司,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HKEx)가 북경에 대표처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의 전문인들이[419] 내지에서 증권·선물에 종사하는 자격을 신청하는 관련절차를 간이화한다. 홍콩의 전문인들이 내지에서 증권·선물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취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지 법률법규의 교육 및 시험만 통과하면 되고, 전문지식시험을 통과할 필요는 없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9. 여행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아파트 포함) 및 식당 (CPC 641-643) B. 여행사 및 관광 경영자 (CPC 7471) 기타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호텔·아파트·식당 시설을 건설·개조·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의 여행사와 내지가 합자로 설립한 합자여행사가 내지 측이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없다. 3. 북경시(北京市), 상해시(上海市), 광동성의 광주시(廣州市)·심천시(深圳市)·주해시(珠海市)·동완시(東莞市)·중산시(中山市)·강문시(江門市)·불산시(佛山市)·혜주시(惠州市)의 거주민 개인이 홍콩으로 여행가는 것을 허용하며, 2004년 7월 1일 전까지는 광동성 전체로 실시범위를 확대한다.

419) 본 부문에서 전문인이라 함은 홍콩 증권 및 선물사무 감독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의 영업허가증을 보유한 홍콩영주민을 가리킨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1. 운수서비스 A. 해운서비스 H. 보조서비스 - 국제운수(화물운송 및 여객운송) (CPC 7211, 7212; 연해 및 내수(內水) 운수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 컨테이너 야적장 서비스 - 기타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420]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 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창고, 국제해운컨테이너정거장·야적장, 그리고 선박임차운송인(無船承運人)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獨資)의 선박회사를 설립하여 그 보유·경영하는 선박을 위해 화물수집, 선하증권발행, 운임비용 결산, 서비스계약체결 등의 일상업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간선(幹線) 정기선박을 이용하여 내지의 항구에서 자신의 소유나 임차한 빈 컨테이너를 자유로이 조절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관련 세관수속은 처리하여야 한다.

부문 및 일부 부문	11. 운수서비스 H. 모든 운수방식의 보조서비스 - 창고저장 서비스 (CPC 742)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창고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투자·설립한 창고저장기업의 최저등록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내지기업의 최저등록자본을 참작하여 실행한다.

420) 본 부문 중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부문	11. 운수서비스
	F. 도로운수서비스
	도로를 이용한 트럭 및 차량 화물운수 (CPC 7123) 도로를 이용한 여객운송 (CPC 7121, 7122)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獨資)기업을 설립하여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부터 내지의 각 성·시급 자치구 사이에서 화물운송의 "직행차량(원어: 直通車)"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421] 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의 서부지구에 독자기업을 설립하여 도로를 이용한 여객운수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문 및 일부 부문	11. 운수서비스
	H. 모든 운수방식의 보조서비스
	- 화물대행서비스 (CPC 748, 749; 화물검사 서비스는 불포함)
구체적 승낙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422]가 독자형식으로 내지에서 화물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투자·설립한 화물대행기업(국제화물대행)의 최저등록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내지기업의 최저등록자본을 참작하여 실행한다.

421) "직행차량" 업무라 함은 내지와 홍콩 사이에 직접 도달하는 도로운수를 말한다. 본 부문 중에서 "직행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422) 본 부문 중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부문 및 일부 부문	서비스부문 분류 (GNS/W/120) 에 열거되지 않은 부문
	- 물류서비스
구체적 승낙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형식으로 내지에서 관련된 화물운송의 분할발송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는 도로를 이용한 보통화물의 운수·창고저장·하역·가공·포장·배송·관련 정보처리서비스·관련 자문업무, 국내화물운송대리업무,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관리 및 물류운행 업무를 포함한다.

[부속문서5]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 (關於 “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

1. 「내지와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의거하여,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는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대해 본 부속문서를 제정한다.
2. 「안배」 및 그 부속문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배」 및 그 부속문서중의 “서비스제공자”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

   (가) “사람(人)”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나) “자연인”이라 함은,

   (1) 내지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을 가리킨다.

   (2) 홍콩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을 가리킨다.

   (다) “법인”이라 함은 내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합당하게 조직·설립된 모든 법률실체를 가리킨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사유 또는 정부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회사·기금·조합기업·합자기업·독자기업·협회(상회)를 포함한다.
3. 법인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 표준 :

   (가) 법률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서 부속문서 4 중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을 함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의 「회사조례(公司條例)」 또는 기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등록등기를 하고[423], 유효한 상업등기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법례에 규정이 있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영업허가증이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성질 및 범위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 및 범위는 내지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성질 및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한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이미 홍콩에서 설립등록·등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3년 이상(3년 포함)의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424]

그 중에서,

ⅰ)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이미 홍콩에서 설립등록·등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5년 이상(5년 포함)의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에서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연한에는 제한이 없다.

---

423) 홍콩에 등기한 해외회사·사무소·연락처·연락회사(信箱公司) 그리고 모회사(母會社)에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특별 성립한 회사는 본 부속문서에서 말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에 속하지 않는다.

424) 「안배」 효력발생일로부터, 쌍방 이외의 서비스제공자가 구매 또는 합병 방식을 통하여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지 만 1년이 된 경우, 당해 피(被) 매수·합병된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에 속한다.

ii)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보험 및 증권 제외)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 즉 홍콩의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홍콩금융관리전문가가 「은행업조례」에 의거하여 발급한 관련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5년 이상(5년 포함)의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iii) 보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 즉 홍콩의 보험회사는 홍콩에서 설립등록·등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5년 이상(5년 포함)의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3) 소득세(利得稅)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한 기간 동안에는 법에 의거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4) 업무장소

i)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할 업무장소를 홍콩에서 보유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그 업무장소는 업무의 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여야 한다.

ii) 해운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선박의 총톤수의 50% 이상(50% 포함)은 홍콩에 등록되어야 한다.

5) 직원고용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에서 고용한 직원 중 홍콩거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민 및 편도증서를 소지하고 와서 홍콩에 거주하는 내지인의 비율이 전체 직원 수의 50% 이상을 점유하여야 한다.

(나) 법률서비스부문 중 홍콩변호사사무소가 부속문서 4에 있는 관련 서비스를 내지에서 제공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법례에 근거하여 설립등기를 한 홍콩 변호사사무소이고, 유효한 상업등기를 취득할 것.

(2) 관련 변호사사무소의 독자(獨資)경영자 및 모든 조합원은 홍콩에서 등록한 개업변호사이어야 한다.

(3) 관련 변호사사무소의 주요 업무범위는 홍콩에서 현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관련 변호사사무소 또는 그 독자(獨資)경영자, 또는 조합원은 법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관련 변호사사무소는 홍콩에서 3년 이상(3년 포함)의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였어야 한다.

(6) 관련 변호사사무소는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업무장소를 홍콩에 보유·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4. 「안배」 및 그 부속문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이어야 한다.
5. 내지의 서비스제공자는 본 부속문서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6.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안배」상의 대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홍콩의 관련기관이나 관련인이 심의·검증을 거친 문서자료·법정성명(法定聲

明)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서자료(적용되는 경우)

1) 홍콩특별행정구 회사등기소(원어: 公司註冊處)에서 발급한 회사등기증서 부본

2) 홍콩특별행정구 상업등기증과 등기부 내 자료의 발췌문 부본

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과거 3년(또는 5년) 동안의 홍콩에 있는 회사의 연차보고서 또는 회계심사를 거친 재무보고서

4)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홍콩에서 업무장소를 보유・임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정본이나 부본[425]

5)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과거 3년(또는 5년) 간의 소득세 신고서・세액산정(원어: 評稅)・납입통지서의 부본. 결손(缺損)이 발생한 경우,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결손상황에 관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유관부문에서 증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의 홍콩에서의 종업원급료 및 퇴・휴직금 신고서 부본, 그리고 당해 서비스 제공자가 본 부속문서 제3조. 가. (2). 5)에서 규정한 백분비율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 문서나 그 부본

7)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홍콩에서의 업무 성질・범위를 증명하는 기타 관련문서나 그 부본

(2) 법정성명(法定聲明)

「안배」상의 대우(待遇)의 취득을 신청하는 홍콩의 서비스제

425) 내지에서의 해운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홍콩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적재량의 50% 이상(50% 포함)이 홍콩에서 등기되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자와 그 책임자는 홍콩특별행정구 「선서 및 성명조례(宣誓及聲明條例)」의 절차·요청에 의거하여 법정성명을 하여야 한다.[426] 성명의 양식은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유관부문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3) 증명서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본 부속문서 제6조. (가). (1) 및 (2)에서 규정한 문서자료와 법정성명을 홍콩특별행정구 공업무역서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공업무역서는 필요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유관부문이나 법정기구·독립전문기구(전문가)에게 사실확인의 증명을 위탁한다.[427]

공업무역서는 본 부속문서에서 규정한 홍콩서비스제공자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증명서를 발행한다.

증명서의 내용 및 양식은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부문에서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홍콩영주민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중국공민인 자는 홍콩·마카오주민 내지왕래통행증(원어: 回鄉證)이나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부속문서의 제6조. (가). (1) 및 (2) 그리고 (나)에서 규정한 법정성명, 자연인신분증명의 복사본, 변호사의 사실확인증명이 필요하다고 공업무역서에서 판단한 문서자료들은 내지의 인가받은 공증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426) 고의로 허위나 부실의 성명을 한 자는 홍콩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427) 전신(電信)부문 중, 인터넷데이터센터업무·호출센터업무·정보서비스업무의 제공과 관련한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성질과 범위는 공업무역서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전신주관부문에 위탁하여 사실확인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7.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안배」상의 대우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을 내지의 심의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부속문서 4의 서비스를 내지에서 제공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내지의 심의기관에 본 부속문서 제6조에서 규정한 문서자료·법정성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심사권한에 의거하여 내지의 심의기관이 홍콩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을 심의하는 때에는 홍콩서비스제공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를 한다.
   (다) 홍콩서비스제공자의 자격에 대해 내지의 심의기관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규정된 시간 안에 홍콩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상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공업무역서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공업무역서를 통하여 상무부에 서면으로 이유를 제출하여 재차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규정된 시간 내에 공업무역서에 서면회신을 하여야 한다.
8. 이미 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가 「안배」상의 대우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본 부속문서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9. 본 부속문서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9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商務部副部長)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부속문서6]

무역투자 간편화에 관하여(關於貿易投資便利化)

1. 「내지와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의거하여,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는 무역투자 간편화 협력에 대해 본 부속문서를 제정한다.
2. 쌍방은 무역투자촉진, 통관간편화, 상품검사검역·식품안전·품질표준, 전자상거래, 법률법규의 투명도, 중소기업협력, 중의약(中醫藥)산업협력 등 7개 분야에서 무역투자 간편화 협력을 하기로 동의하였으며,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안배」 제19조에 의거하여 설립한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협조 하에 진행한다.
3. 무역투자촉진

   쌍방은 양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상호 간의 무역 및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투자발전에 대한 현실 및 수요증가에 기초하여 무역투자촉진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연합지도위원회 관련 업무 조직을 통하여 두 지역의 무역투자촉진 협력의 지도·조정을 전개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의 이전 협력 경험에 의거하고, 두 지역의 무역교류 발전 상황에 따라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1) 각자의 대외무역 및 외자도입 관련 정책법규의 통보와 홍보

   (2) 쌍방 무역투자영역 중에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 교환, 협상진행

(3) 상호투자촉진 및 해외투자에 대한 긴밀한 협력 방면에서의 소통 및 협력 강화

(4) 전람회 개최, 해외전람회 조직·참가 방면의 협력강화

(5) 쌍방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무역투자촉진 관련 기타 문제에 대한 교류진행

(다) 기타 실체적 참여

쌍방은 무역투자촉진 방면에서의 반(半)관영 및 비(非)관영기구의 참여가 적극적인 영향과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쌍방은 각종 방식을 통하여 이들 기구가 무역투자촉진활동을 전개하는데 대해 지지 및 협조한다는데 동의한다.

4. 통관간편화

쌍방은 두 지역 해관사이의 장기간 밀접한 협력관계 및 통관간편화 시행이 쌍방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통관간편화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쌍방은 해관총서(海關總署) 및 홍콩해관의 고위급 지도자 사이의 업무연계 연례회의를 통하여 통관간편화 협력을 지도·협조하고, 해관 및 관련부문의 전문가 소그룹을 통하여 통관간편화 협력의 전개를 추진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의 서로 다른 통관제도 및 감독관리 방식의 필요성 및 협력경험에 의거하여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1) 상호 통보제도 건립, 통관 및 통관관리 간편화 관련 정책법규의 통보

(2) 쌍방 통관제도의 차이 및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교류

의 진행, 통관간편화 협력강화의 구체적 내용 모색

(3) 진일보한 협력확대의 내용 탐구, 해상운송・육상운송・복합운송・물류 등의 방식을 이용한 통관 중 감독관리 강화 및 통관효율제고 방면의 협력

(4) 항구에서의 돌발사건에 대한 응급시스템건립 방면에서의 협력강화, 유효한 조치의 채택, 쌍방의 순조로운 통관을 최대한도로 보호・유지

(5) 정기적 연락제도의 건립, 해관총서 광동지서와 홍콩해관 사이의 "광동성-홍콩 해관 항구통관효율업무 소그룹(粵港海關口岸通關效率業務小組)"의 기능발휘

(6) 쌍방 해관의 "데이터교환 및 육로・항구 통관전문가 소그룹"의 업무강화, 데이터 네트워킹 연구 및 항구 전자통관수속시스템의 실행가능성 발전, 기술적 수단을 통한 통관위험의 관리강화, 통관효율제고

5. 상품검사・검역, 식품안전, 품질표준

쌍방은 화물무역 및 인적왕래 중의 내지와 홍콩인민의 신체건강・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품의 검사검역・식품안전・위생검역・인증인가・표준화영역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쌍방 유관부문간 현재의 협력통로를 이용하고, 상호방문과 협상 그리고 각종 형식의 정보소통을 통하여 당해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1) 기계·전력설비상품의 검사감독

쌍방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쌍방은 기존에 건립된 소통경로를 통하여 정보의 상호교환·교류를 강화하고, 기계·전력설비상품의 안전에 관계된 정보교환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기계·전력설비상품에 나타난 안전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검사감독 담당자들의 교육촉진에 공동 협력한다.

쌍방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과 홍콩의 기계·전력설비공정서(機電工程署)가 2003년 2월 12일에 체결한 「기계·전력설비상품 안전협력 안배(機電産品安全合作安排)」의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데 진력한다.

(2) 동식물 검사·검역 및 식품안전

쌍방 간 현재의 검사검역협조시스템을 이용하고, 동식물검사검역 및 식품안전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여, 쌍방이 각자의 관련법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위생검역 감독관리

쌍방은 현재의 소통로를 이용하여 두 지역의 전염병발생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위생검역에 관한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을 강화한다.

광동·심천 각 항구를 왕복하는 소형선박의 위생·감독 문제를 탐구하고 토론한다.

열대전염병·매개생물의 조사와 예방, 특수물품·방사능물품의 감측(監測)·감독관리, 생물성 발병인자의 운수·검사·치료·통제 등 방면의 협력을 강화한다.

(4) 인증인가 및 표준화관리

쌍방 각자의 유관기구는 합격심사(테스트・인증・검사를 포괄), 인가, 표준화관리 방면의 협력을 추진한다.

6. 전자상거래

쌍방은 전자상거래의 응용・확대가 장차 쌍방의 무역 및 투자에 보다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인식한다. 쌍방은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협조 하에, 관련 업무 팀을 구성하고, 전자상거래 협력의 소통통로 및 협상・협조체계를 만들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쌍방 협력 및 공동발전을 추진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전개하는데 동의한다.

(1) 전자상거래 규칙・표준・법규의 연구 및 제정 방면에서 전문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우수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창조하며, 건강한 발전을 추진・확보한다.

(2) 기업에서의 응용・확대・교육 등 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두 지역 정부부문의 추진・조정기능을 발휘하고, 전자상거래의 홍보를 강화하며, 두 지역 기업 간의 상호교류를 추진하며, 시범항목의 정립을 통하여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한다.

(3) 전자정부추진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쌍방간 다양한 측면에서 전자정부발전계획의 교류・협력을 긴밀히 한다.

(4) 경제무역정보의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다.

7. 법률법규의 투명도

쌍방은 법률법규의 투명도를 제고하는 것이 두 지역의 경제무역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초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두 지역 상공기업의 서비스를 위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법률법규 투명도 영역의 협력을 더욱 제고한다는데 쌍방은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연합지도위원회에서 설립한 유관 업무팀 및 상호 설립한 대표기구를 통하여 협력작업을 전개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1) 투자·무역 및 기타 경제무역영역에서의 법률·법규·규장의 반포 및 개정상황에 대한 정보자료 교환

(2) 간행물, 웹사이트 등 다종 매체를 통해 정책·법규 정보를 적시에 발표

(3) 여러 형식의 경제무역관련 정책·법규의 설명회나 토론회의 개최 및 개최지원

(4) 내지의 WTO 자문처, 중국투자지침 웹사이트, 중국무역지침 웹사이트,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국 및 무역투자촉진국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상(工商)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

8. 중소기업협력

쌍방은 중소기업의 발전이 취업기회확대, 경제발전촉진, 사회 안정의 유지 및 보호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두 지역 중소기업의 교류·협력을 공동 촉진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쌍방 정부부문 사이에 두 지역 중소기업협력을 촉진하는 업

무체계를 세우고, 두 지역 중소기업의 협력 및 공동발전을 촉진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지지·촉진한다는데 동의한다.

(1) 시찰과 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전략 및 부양정책의 지원을 공동 탐구

(2)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쌍방 중개기관의 조직형식과 운용방식을 고찰·교류하고, 중개기관의 협력을 추진한다.

(3) 양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통로를 건립하고, 관련 출판간행물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쌍방 정보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결합 및 자료교환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4) 각종 형식을 통해 두 지역 중소기업의 직접교류·소통을 조직하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한다.

(다) 기타 실체적 참여

쌍방은 두 지역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있어서 반(半)정부기구·비(非)정부기구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에 협력한다.

9. 중의약(中醫藥)산업협력

쌍방은 중의약이 중화민족 우수한 문화의 구성부분으로서 커다란 시장응용전망과 경제적 효용을 갖추었음을 인식하였다. 쌍방은 중의약에 대한 산업화 발전과 중의약의 현대화·국제화 등 방면에서 우위를 갖도록 촉진하고, 이 분야의 협력전개는 쌍방의 경제·사회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가) 협력체계

두 지역 정부부문간의 연계협력체계를 보완·강화하고, 두 지

역 중의약산업협력의 발전을 추진한다.

(나) 협력내용

두 지역 간 중의약협력의 상황 및 발전추세에 근거하여,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동의한다.

(1) 중약(中藥) 관련 법규제정 및 중의약 관리방면에서의 상황을 상호 통보하여,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2) 중의약연구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약(中藥)발전전략 및 발전방향 등 방면의 정보자료를 교류·공유한다.

(3) 중약(中藥)의 등록관리방면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중약에 대한 규범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두 지역 간 중약 무역에 편의를 제공한다.

(4) 임상실험의 설비관리 및 법규요건 등 방면에서의 협력을 전개하여, 임상실험 데이터에 대한 쌍방간 상호승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5) 중약품질표준 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중약 품질표준 제고를 공동으로 촉진한다.

(6) 두 지역 중의약기업의 협력을 지지하고, 국제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한다.

(7) 중의약산업의 무역투자촉진 및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8) 중의약산업협력 중에 나타나는 문제의 교류 및 협상을 통한 해결

(다) 기타 실체적 참여

쌍방은 중의약산업의 협력분야에서 반(半)정부기구·비(非)정부기구가 참여하는 것을 지지·협조하며, 내지의 "중국중의약과학기술개발교류중심(中國中醫藥科技開發交流中心)"과 "홍콩

경마회중약연구원유한회사(香港賽馬會中藥研究院有限公司)" 사이에 이미 맺은 협력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안배」 제17조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쌍방이 증가하기로 동의한 무역투자간편화의 협력분야나 내용은 본 부속문서에 보충기재된다.
11. 본 부속문서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9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商務部副部長)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 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 補充協議)

내지[428]와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6월 29일 체결한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 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및 2003년 9월 29일 체결한 「안배」 부속문서 규정에 의거하여, 쌍방은 화물무역분야 및 서비스무역분야에 있어서 홍콩에 대해 개방을 확대하고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화물무역

(1) 2005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1에 기재된 홍콩원산의 수입화물에 대해 영관세를 시행한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1은 「안배」 부속문서1 표1 「홍콩원산의 수입화물에 대한 내지의 영관세 실행 상품명단(內地對香港的進口貨物實行零關稅的産品淸單)」을 보충한 것이다.

(2) 「안배」 부속문서2 「화물무역의 원산지규칙에 관하여(關於貨物貿易的原産地規則)」에 근거하여 제정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1 중에서 홍콩원산의 수입화물의 원산지표준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2에 기재되어 있다.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2는 「안배」 부속문서2의 표1 「화물무역 우대

428)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조치를 향유하는 홍콩화물의 원산지표준 표(享受貨物貿易優惠措施的香港貨物原産地標準表)」를 보충한 것이다.

2. 서비스무역

(1) 2005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부속문서4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에 관하여(關於開放服務貿易領域的具體承諾)」 토대 위에서 법률·회계·의료·시청·건축·분배(원어: 分銷)·은행·증권·운수·화물운송대리 등 분야에서 홍콩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시장진입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홍콩 영주민 중 중국공민이 내지에 개인자영업을 설립하는 지역 및 영업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에 기재되어 있다.

(2) 2005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특허대리·상표대리·공항서비스·문화오락·정보기술·직업소개·인력소개·전문자격고시 등 분야에서 홍콩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장진입요건을 개방·완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에 기재되어 있다.

(3)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의 건축분야승낙 및 분배 분야의 일부 승낙은 2004년 8월28일부터 실시한다. 구체적인 것은 본 보충협의3의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 및 분배서비스의 구체적 승낙을 볼 것.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의 홍콩은행 내지지점이 보험대리업무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4)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은 「안배」 부속문서4의 표1 「내지의 홍

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를 보충 · 개정한 것이다.

이 두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을 기준으로 한다.

(5)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안배」 부속문서5의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안배」 부속문서에 대한 보충 · 개정

(1) 「안배」 부속문서1 「화물무역 영관세 실시에 관하여(關於貨物貿易零關稅的實施)」 제5조 (다)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산예정인 화물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치된 의견에 근거하여, 내지는 관련화물의 명단을 「안배」 부속문서 1의 표1에 보충하여 기재하고, 관련 화물의 원산지표준은 「안배」 부속문서2 표1에 보충기재한다.

신청기업이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간 후 홍콩공업무역서 및 홍콩해관의 조사를 거쳐 홍콩공업무역서가 상무부에 통지하며, 쌍방이 공동 확인한 후 내지는 홍콩의 증서발급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에 의거하여 「안배」에 따른 관련화물의 영관세수입을 허가한다."

(2) 「안배」 부속문서5의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 제3조 (가) (2) 2)목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항공운수지상서비스(원어: 航空運輸地面服務) 업무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홍콩에서 항공운수지상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영업허가증을 이미 취득하고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5년 이상 종사하여야 한다."

4. 부속문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보충협의의 구성부분이다.

5. 효력발생

본 보충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보충협의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보충협의는 2004년 10월 27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商務部副部長)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補充協議二)

내지[429]와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6월 29일 체결한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및

2003년 9월 29일 체결한 「안배」 부속문서, 그리고

2004년 10월 27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에 의거하여,

쌍방은 화물무역분야 및 서비스무역분야에 있어서의 홍콩에 대한 내지의 개방 확대 그리고 쌍방의 금융협력에 대해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화물무역

(1) 2006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홍콩원산의 수입화물[430]에 대해 전면적으로 영관세를 시행한다. 영관세 수입화물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 원산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005년 쌍방이 이미 협상을 마친 홍콩원산화물의 원산지표준은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1에 기재되어 있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1은 「안배」 부속문서2의 표1 「화물무역 우대조치를 향유하는 홍콩화물의

429)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430) 수입화물에는 내지의 관련 법규·규장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및 국제공약의 이행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그리고 관련 국제협의에서 내지가 특별히 승낙한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산지표준 표(享受貨物貿易優惠措施的香港貨物原産地標準表)」를 보충한 것이다.

쌍방은 「안배」 부속문서1의 「화물무역 영관세 실시에 관하여(關於貨物貿易零關稅的實施)」 제5조의 구체적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출

(1) 2006년 1월 1일부터, 홍콩의 생산기업은 홍콩 공업무역서(工業貿易署)에 영관세를 향유하는 화물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2) 홍콩 공업무역서는 각각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 이전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확인을 한 이후의 화물명단을 상무부에 제출한다.

(나) 협상 및 공

상무부는 화물명단을 확인한 후에 해관총서에 이전한다. 해관총서와 홍콩 공업무역서는 관련 화물의 원산지표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 쌍방은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이전에 원산지표준의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화물의 원산지표준은 「안배」 부속문서2의 표1에 보충기재하고 대외에 공포한다.

(다) 실시

내지는 각각 금년 7월 1일 및 내년 1월 1일 이전에 홍콩의 증서발급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에 의거하여 「안배」에 따라 관련 화물의 영관세수입을 비준한다."

(2) 「안배」 부속문서2 「화물무역의 원산지규칙에 관하여(關於貨物貿易的原産地規則)」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본 부속문서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실질적 가공'의 인정기준으로는 쌍방이 동의한 다음의 표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가) '실질적 가공'의 인정표준으로는 '제조·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기타 표준' 또는 '혼합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1) '제조·가공 공정(製造或加工工序)'은 일방의 경내(境內)에서 가공을 한 후 얻은 화물에 기본적 특징을 부여한 주요 제조·가공 공정을 가리킨다.

(2) '세목번호 변경(稅號改變)'은 일방의 원산이 아닌 재료가 당해 일방의 경내(境內)에서 가공을 거쳐 생산된 후에, 획득한 상품이 「상품명칭 및 코드번호 조정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중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고 또한 당해 일방 이외의 국가·지구에서 더 이상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를 변경하는 어떠한 생산·가공·제조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3)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란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원료·조립부품·노동가치·상품개발지출가치의 합계가 완제품수출의 FOB 가격 대비 30% 이상이고, 또한 최후의 제조·가공공정이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원료가치} + \text{조립부품가치} + \text{노동가치} + \text{상품개발지출가치}}{\text{완제품 수출의 FOB 가격}} \times 100\% \geqq 30\%$$

1) '상품개발'이란 일방의 경내(境內)에서 수출완제품과 관련한 생산·가공을 위해 시행한 상품개발을 가리킨다. 개발비용의 지급은 반드시 당해 수출 완제품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데, 생산가공자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또는 당해 일방 경내의 자연이이나 법인에게 개발을 위탁한 것을 포함하며 그리고 당해 일방 경내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보유하는 설계·특허권·전유(專有)기술·상표권·저작권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비용을 포괄한다.

당해 비용의 지급금액은 반드시 공인된 회계준칙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2) 상술한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의 계산은 공인된 회계준칙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기타 표준'이란 상술한 '제조·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이외의 것으로, 쌍방이 채택하기로 동의한 '실질적 가공'을 확인하는 기타 방법을 가리킨다.

(5) '혼합 표준'이란 상술한 두 개 이상의 표준을 동시에 사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 기타 부가조건.

상술한 (가)의 '실질적 가공' 표준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쌍방의 동의를 거쳐 부가조건(ex. 상표 요건 등)을 채택할 수 있다."

2. 서비스무역

(1) 2006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및 『「안배」 보충협의』에서 서비스무역개방을 승낙한 토대 위에서, 법률·회계·시청(視聽)·

건축·분배·은행·여행·운수·개인자영업자 등 분야에서 시장진입 요건을 더욱 완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 2에 기재되어 있다.

(2)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2는「안배」부속문서 4의 표1「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및 『「안배」보충협의』부속문서 3「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을 보충·개정한 것이다.

이 두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2를 기준으로 한다.

(3)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 2에서 "서비스제공자"는「안배」부속문서5의「"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금융합작

(1) 내지는 요건에 부합하는 내지의 혁신적인 새로운 시범유형의 증권회사가 관련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홍콩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내지는 요건에 부합하는 내지의 선물회사가 홍콩에서 선물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에는 지점설립을 포함한다.

4. 부속문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보충협의의 구성부분이다.

5. 효력발생

본 보충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보충협의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보충협의는 2005년 10월 18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補充協議三)

내지[431]와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6월 29일 체결한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및

2003년 9월 29일 체결한 「안배」 부속문서, 그리고

2004년 10월 27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005년 10월 18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에 의거하여,

쌍방은 서비스무역분야에 있어서의 홍콩에 대한 내지의 개방 확대 그리고 쌍방의 무역투자 간편화 분야의 협력강화에 대해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서비스무역

(1) 2007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및 『「안배」보충협의』 그리고 『「안배」보충협의2』에서 서비스무역개방을 승낙한 토대 위에서, 법률·건축·정보기술·전람회(會展)·시청(視聽)·분배·여행·운수·개인자영업자 등 분야에서 시장진입요건을 더욱 완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2)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안배」 부속문서 4의 표1 「내지의

431)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 『「안배」 보충협의』 부속문서 3 「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 『「안배」 보충협의 2』 부속문서 2 「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2(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二」를 보충·개정한 것이다.

이들 세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3)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안배」 부속문서 5의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무역투자 간편화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 있어서 두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안배」 무역투자 간편화 분야에 보충 기재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안배」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쌍방은 다음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1) 무역투자촉진

2) 통관 간이화

3) 상품검사검역, 식품안전, 품질표준

4) 전자상거래

5) 법률·법규 투명도

6) 중소기업협력

7) 중의약산업 협력

8) 지적재산권보호."

(2)「안배」부속문서 6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쌍방은 무역투자촉진, 통관간편화, 상품검사검역·식품안전·품질표준, 전자상거래, 법률법규의 투명도, 중소기업협력, 중의약(中醫藥)산업협력, 지적재산권보호 등 8개 분야에서 무역투자 간편화 협력을 전개하기로 동의하였으며, 협력과 관련하여서는「안배」제19조에 의거하여 설립한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협조 하에 진행한다."

(3)「안배」부속문서6에 1개 조문을 증설하여 제10조로 하며, 그 다음의 조항의 순서는 차례대로 순연된다. 제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지적재산권보호

쌍방은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두 지역의 경제발전추진 및 두 지역 간 경제무역교류·협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쌍방은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하였다.

(가) 협력체계

두 지역 정부부문 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쌍방은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1) 홍콩에 설립한 지적재산권보호 협조센터를 통한 두 지역의 지적재산권보호의 정보에 대한 교류·소통 진행.

(2) 지적재산권보호의 법률·법규의 제정 및 집행 분야의 정보교환.
(3) 현지조사, 토론회개최, 관련 간행물 출판, 기타 방식을 통한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4) 지적재산권보호 중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협상진행."

3. 부속문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보충협의의 구성부분이다.

4. 효력발생

본 보충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보충협의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보충협의는 2006년 6월 27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 補充協議四)

내지[432]와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6월 29일 체결한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및

2003년 9월 29일 체결한 「안배」 부속문서, 그리고

2004년 10월 27일 체결한 『「안배」보충협의』,

2005년 10월 18일 체결한 『「안배」보충협의 2』,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안배」보충협의 3』에 의거하여,

쌍방은 서비스무역분야에 있어서의 홍콩에 대한 내지의 개방 확대, 금융협력강화, 무역투자 간편화 촉진, 전문자격 상호인정추진에 대해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서비스무역

(1) 2008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및 『「안배」 보충협의』 그리고 『「안배」 보충협의 2』, 『「안배」 보충협의 3』에서 서비스무역의 개방을 승낙한 토대 위에서, 법률·의료·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부동산·시장조사연구·관리자문 관련 서비스·공용사업·인력중개·건축물청결·촬영·인쇄·번역 및 통역·전람회(會展)·전신(電

432)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信)・시청(視聽)・분배・환경・보험・은행・증권・사회서비스・여행・문화오락・체육・해운・항공운수・도로운수・개인자영업자 등 28개 분야에서 시장진입요건을 더욱 완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2)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안배」부속문서 4의 표1「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안배」보충협의』부속문서 3「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안배」보충협의 2』부속문서 2「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2(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二」,「안배」보충협의 3』부속문서「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3(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三」을 보충・개정한 것이다.

이들 네 개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3)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에서 "서비스제공자"는「안배」부속문서 5의「"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1) 홍콩의 은행・재무회사가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한 연한(年限)의 요건을 완화한다.「안배」부속문서 5「"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제3조 (가) (2) 2)중 홍콩의 은행・재무회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보험 및 증권 제외)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 즉 홍콩의 은행이나 재무회사는 홍콩금융관리전문가가 「은행업조례(銀行業條例)」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의 상업경영에 종사하거나, 또는 지점형식으로써 2년을 경영하고 현지에서의 등록형식으로 3년 이상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2) 「안배」 부속문서5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 제3조 (가) (2) 2)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3자 국제 선박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는 이미 홍콩에서 등록하였거나 또는 설립등기 후 5년 이상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였어야 한다."

2. 금융협력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 금융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다.

(1) 내지의 은행이 홍콩에서 지점기구를 개설하여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2) 홍콩의 은행이 내지의 중서부 및 동북 지구, 광동성에 개설한 지점을 위하여 green line(원어: 綠色通道)을 설립한다.

(3) 홍콩의 은행이 내지의 농촌에 시골·소도시 은행(원어: 村鎭銀行)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3. 무역투자 간편화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 전람회업종의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 내지는 홍콩이 대형국제회의 및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4. 전문가 자격의 상호인정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 전문자격의 상호인정을 더욱 추진한다.

(1) 쌍방의 주관부문 또는 업종단체는 등록한 전기공정사(註冊電氣工程師)의 설계조사와 등록한 공용설비공정사(註冊公用設備工程師)의 설계조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교류업무를 개시하고, 등록한 토목공정사(註冊土木工程師)의 설계조사 및 즉량업무의 기술교류를 전개한다.

(2) 쌍방은 업무 전담조(組)를 구성하여 건축분야 전문자격의 상호인정 이후의 등록 및 개업에 관한 작업을 연구・추진한다.

5. 부속문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보충협의의 구성부분이다.

6. 효력발생

본 보충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보충협의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보충협의는 2007년 6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商務部副部長)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財政司司長)
_____	_____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補充協議五)

내지[433]와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6월 29일 체결한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및

2003년 9월 29일 체결한 「안배」 부속문서, 그리고

2004년 10월 27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005년 10월 18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3』,

2007년 6월 29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4』에 의거하여,

쌍방은 서비스무역분야에 있어서의 홍콩에 대한 내지의 개방 확대 및 무역투자 간편화 촉진, 전문자격 상호인정추진에 대해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서비스무역

(가) 2009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안배」 보충협의』, 『「안배」 보충협의2』, 『「안배」 보충협의 3』, 『「안배」 보충협의 4』에서 서비스무역의 개방을 승낙한 토대 위에서, 회계·건축·의료·채광관련서비스·인력제공 및 배치·과학기술관련 자문서비스·인쇄·회의전람·분

433)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배·환경·은행·사회서비스·여행·해운·항공운수·도로운수·개인자영업자 등 17개 분야에서 시장진입요건을 더욱 완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안배」부속문서 4의 표1「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안배」보충협의』부속문서3「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안배」보충협의 2』부속문서2「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 2(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二)」,『「안배」보충협의 3』부속문서「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 3(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三)」및『「안배」보충협의 4』부속문서「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 4(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四)」를 보충·개정한 것이다.

상술한 5개의 규정과 저촉이 되는 때에는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에서 "서비스제공자"는「안배」부속문서 5의「'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무역투자 간편화

(가)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전자상거래 영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

광동성과 홍콩 양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서명증서 상호인정 시범시행 응용을 추진한다. 실무반(원어: 工作組)을 설립하여 양 지역 증서의 상호승인에 관한 원론적 의견을 연내에 제출한다.

(나)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지적재산권보호 영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

상표영역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총국과 홍콩 지적재산권부서(知識産權署)는 상표업무협조 소조(小組)를 구성하여 쌍방의 고정적인 연락 체계로 하고, 상표등록업무 및 상표보호업무 등 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다) 브랜드 영역에서의 양 지역 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쌍방은 브랜드 협력을 「안배」 무역투자편리화 부분에 보충하여 넣기로 합의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안배」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쌍방은 다음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1) 무역투자촉진;
2) 통관편리화;
3) 상품검사·검역, 식품안전, 품질표준;
4) 전자상거래;
5) 법률법규투명도;
6) 중소기업협력;
7) 중의약산업협력;

8) 지적재산권보호;

9) 브랜드협력."

2.「안배」부속문서 6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쌍방은 무역투자촉진, 통관편리화, 상품검사검역·식품안전·품질표준, 전자상거래, 법률법규투명도, 중소기업협력, 중의약산업협력, 지적재산권보호, 브랜드 협력 9개 영역에서 무역투자편리화협력을 전개하며, 관련 협력은「안배」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 및 협조 하에 진행한다."

3.「안배」부속문서 6중에 1개의 조문을 증보하여 제11조로 하고, 그 후의 조문순서는 순차적으로 순연한다. 제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브랜드협력(원어: 品牌合作)

쌍방은 브랜드협력이 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두 지역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쌍방은 브랜드영역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 및 협조 하에 관련 실무반을 조직하고 쌍방의 브랜드영역의 협력을 강화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1) 브랜드영역에서의 양 지역의 교류와 소통 강화.

(2) 브랜드보호의 법률법규 제정 및 집행방면의 정보교환

(3) 육성, 고찰, 간행물출판 등 방면의 협력 강화

(4) 홈페이지 홍보, 전람회 추천소개(원어: 推介),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식을 통하여 양 지역 브랜드의 활동촉진확대."

3. 전문직 자격의 상호승인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 전문자격의 상호인정을 더욱 추진한다.

(가) 회계영역

쌍방의 주관부문 또는 업종단체는 회계 전문기술자격고시 과목의 상호면제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

(나) 건축영역

쌍방의 주관부문 또는 업종단체는 기(旣) 서명한 상호인정협의와 여건이 성숙된 영역에서 계속하여 전문기술자격의 상호 인정 업무를 전개한다.

4. 부속문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보충협의의 구성부분이다.

5. 효력발생

본 보충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보충협의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보충협의는 2008년 7월 2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財政司司長)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補充協議 6)

내지[434]와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03년 6월 29일 체결한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및 2003년 9월 29일 체결한 「안배」 부속문서;

2004년 10월 27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005년 10월 18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3』;

2007년 6월 29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4』;

2008년 7월 29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5』에 의거하여,

쌍방은 서비스무역분야에 있어서 홍콩에 대한 내지의 개방 확대, 금융협력강화, 전문자격 상호인정추진에 대해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서비스무역

(가) 2009년 10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및 『「안배」 보충협의』, 『「안배」 보충협의 2』, 『「안배」 보충협의 3』, 『「안배」 보충협의 4』, 『「안배」 보충협의 5』에서 서비스무역의 개방을 승낙한 토대 위에서, 법률·건축·의료·연구 및 개발·부동산·인력제공 및 배치·인쇄·전람회·공용사업·전신·시청·분배·은행

434)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증권・여행・레크리에이션・해운・항공운수・철도운수・개인자영업자 등 20개 영역에서 시장진입요건을 더욱 완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안배」부속문서 4의 표1「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안배」보충협의』부속문서 3「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안배」보충협의 2』 부속문서 2「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 2(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二)」,『「안배」보충협의 3』부속문서「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3(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三)」,『「안배」보충협의 4』부속문서「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 4(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四)」,『「안배」보충협의 5』부속문서「내지의 홍콩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 5(內地向香港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五)」를 보충・개정한 것이다.

전술한 6개의 규정과 저촉되는 때에는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에서 “서비스제공자”는「안배」부속문서 5의「‘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금융협력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 금융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다.

(가) 내지는 요건을 갖추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내지 증권회사가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 내지에 홍콩증권조합(원어: 港股組合) ETF(교역형 개방식 지수기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연구한다.

3. 전문인력 자격의 상호승인

(가) 세수영역

2009년 3월 31일 및 그 이전에 홍콩회계사 협회의 정식회원이 된 홍콩 주민이 내지의 등록 세무사 자격고시에 참가할 경우 '재무와 회계'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나) 건축영역

(1) 쌍방은 내지의 감리공정사(監理工程師)와 홍콩의 건조공정사(建造工程師)의 전문자격 상호승인 업무를 전개하는데 동의한다. 홍콩 건축사의 내지 감리공정사 자격 취득인가 업무를 전개한다.

(2) 쌍방 주관부문 또는 업종 기구는 양 지역의 풍경원림(風景園林) 전문기술 교류업무를 전개하기로 한다.

(다) 부동산영역

(1) 쌍방은 내지의 부동산 중개인(원어: 房地産經紀人)과 홍콩의 부동산 대리(원어: 地産代理) 전문자격의 상호승인 업무를 전개하기로 동의한다.

(2) 쌍방 주관부문 또는 업종기구는 내지 주택관리사(원어: 物

業管理師)와 홍콩 건물경리학회(원어: 房屋經理學會) 회원의 상호 승인된 기술교류업무를 전개하기로 한다.

(라) 인쇄영역

쌍방 주관부문 또는 업종기구는 양 지역 인쇄기능인의 기술교류업무를 전개하기로 한다.

4. 부속문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보충협의의 구성부분이다.

5. 효력발생

본 보충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보충협의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보충협의는 2009년 5월 9일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財政司司長)
_____	_____

- 내지와 마카오 간의 CEPA 협정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

전언(前言)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쌍방"이라 함)의 경제적 공동번영 및 발전을 촉진하고 쌍방과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무역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쌍방은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표

다음의 조치의 채택을 통하여,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함) 간의 무역 및 투자합작을 강화하고, 쌍방의 공동발전을 촉진한다.

1. 쌍방 간의 모든 화물무역의 실질적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감소 또는 철폐
2.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점진적 실현, 쌍방 간 모든 실질적인 차별성 조치의 점진적 감소 또는 철폐
3. 무역투자 간편화 촉진

제2조 원칙

「안배」의 목적달성과 실시 및 개정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국양제” 방침을 따름
2. WTO 규칙에의 부합
3. 쌍방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구조발전의 필요성에 따르며, 안정 및 지속적 발전을 촉진
4. 호혜호리·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서로 보완(優勢互補)·공동 번영 실현
5. 쉬운 것부터 먼저하고(先易後難), 점진적으로 나아감

제3조 건립 및 발전

1. 쌍방은 2004년 1월 1일부터 「안배」하에서 화물무역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시행한다는데 구체적적으로 승낙 함
2. 쌍방은 상호 간의 개방을 부단히 확대하고, 「안배」의 내용을 증가하고 충실히 한다.

제4조 중국이 WTO에 가입 당시 적용 유보한 조항

쌍방은 내지가 개혁개방을 한지 20여년이 경과하여 시장경제체재를 부단히 정비하고 있고, 내지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은 이미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쌍방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中國加入世界貿易組織議定書)」 제15조 및 제16조,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실무반 보고서(中國加入世界貿易組織工作組報告書)」 제242단의 내용은 더 이상 내지와 마카오 간의 무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제2장 화물무역

제5조 관세

1. 마카오는 내지가 원산지인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영(零)관세를 실행한다.
2. 2004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부속문서 1의 표 1에 열거된 마카오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영(零)관세를 실행한다.
3.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 내지는 부속문서 1의 표 1 이외의 마카오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영(零)관세를 실행한다. 구체적인 실시절차는 부속문서 1에 기재되어 있다.
4. 본조 제3호에 근거하여 수입관세를 취소한 모든 화물은 부속문서 1에 보충하여 넣어야 한다.

제6조 관세할당액 및 비관세조치

1. 일방은 원산지가 상대방인 수입화물에 대해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비관세조치를 채택하지 않는다.
2. 내지는 마카오가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할당액을 실행하지 않는다.

제7조 반(反)덤핑조치

쌍방은 일방이 상대방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8조 보조금 및 반(反)보조금조치

쌍방은 WTO의 「보조금 및 반보조금조치 협정」과 「1994년 관세 및 무역총협정」 제16조 규정을 준수함을 거듭 천명하고, 또한 일방은 상대방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반보조금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9조 보장조치

만일 「안배」의 실시로 인해 일방에게 부속문서 1에 열거된 상대방 원산인 모종 상품의 수입격증을 조성하고, 또한 당해 일방이 생산하는 동류(同類) 혹은 직접 경쟁하는 상품의 산업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하거나 엄중한 손해의 위험을 조성한 경우에는, 당해 일방은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 통지한 후 당해 상품의 수입우대를 잠정중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구에 가능한 빨리 응하여 「안배」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협상을 시작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제3장 원산지

제10조 원산지규칙

1. 「안배」가 적용되는 화물무역 우대조치의 원산지 규칙은 부속문서 2에 기재되어 있다.
2. 화물무역우대조치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쌍방은 행정상의 상호협조체계를 건립·강화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에는 엄격한 원산지증서 발급절차의 제정 및 시행, 검사감독·관리시스템의 건립, 쌍방의 증명서 발행 및 감독·관리 기관의 네트워크·전자데이터 교환 등의 조치를 실행하며, 구체적 내용은 부속문서 3에 기재되어 있다.

제4장 서비스무역

제11조 시장진입비준

1. 일방은 부속문서 4에 열거된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상대방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제한적 조치의 점진적 감소 또는 철폐를 실행한다.

2. 일방의 요구에 응하여 쌍방은 협상을 통해 쌍방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한층 더 추진한다.
3. 본조 제2호에 근거해 실행하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모든 조치는 부속문서 4에 보충하여 넣어야 한다.

제12조 서비스제공자

1. 「안배」중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은 부속문서 5에 기재되어 있다.
2. WTO 기타 성원국의 어느 서비스제공자가, 만약 일방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그 일방의 내에서 부속문서 5에 규정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안배」하에서 당해 일방에게 부여한 서비스제공자의 우대를 향유할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금융합작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 은행·증권 및 보험영역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1. 내지의 금융기관이 마카오에 와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2. 내지의 은행이 마카오에서 구매의 방식으로 네트워크 및 업무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3. 마카오와 내지은행·증권·보험기구 간의 업무교류를 장려·협조·지지한다.
4. 금융감독부문 간의 합작 및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제14조 여행합작

1. 마카오 여행업 발전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내지는 북경시(北京市), 상해시(上海市), 광동성(廣東省)의 광주시(廣州市)・심천시(深圳市)・주해시(珠海市)・동완시(東莞市)・중산시(中山市)・강문시(江門市)・불산시(佛山市)・혜주시(惠州市)의 주민 개인이 마카오로 가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며,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광동성의 전 범위에서 실시한다.
2. 쌍방은 여행의 홍보 및 확충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에는 상호여행촉진 및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를 기초로 하는 대외확충활동 전개를 포함한다.
3. 협력을 통하여 쌍방 여행업의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여행객의 합법권익을 보장한다.

제15조 전문직 자격의 상호 승인

1. 쌍방은 전문직 자격의 상호승인을 장려하고, 상호 간에 전문기술인재의 교류를 추진한다.
2. 쌍방의 주무부서 또는 업종기구는 전문직 자격의 상호승인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연구・협상・제정한다.

제5장 무역투자 간편화

제16조 조치

쌍방은 투명성제고, 표준일치화, 정보교류강화 등의 조치와 협력을 통하여 무역투자 간편화를 추진한다.

제17조 합작영역

1. 쌍방은 다음의 영역에서 합작을 강화한다.
   1) 무역투자촉진
   2) 통관 간이화
   3) 상품검사검역, 동식물검사검역, 식품안전, 위생검역, 인증인가, 표준화 관리
   4) 전자상거래
   5) 법률·법규 투명도
   6) 중소기업협력
   7) 산업협력.
2. 본 조 제1호에 열거된 영역의 구체적 합작내용은 부속문서 6에 기재되어 있다.
3. 일방의 요구에 응하여 쌍방은 협상을 통해 무역투자 간편화의 합작영역 또는 내용을 증가한다.
4. 본조 제3호에 근거하여 증가된 영역이나 내용은 부속문서 6에 보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조항

제18조 예외

「안배」 및 그 부속문서에 기재된 규정은 내지 또는 마카오가 WTO 규칙과 서로 일치하는 예외조치를 유지·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9조 기관 안배

1. 쌍방은 연합지도위원회(聯合指導委員會, 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쌍방의 고위층대표 또는 지정된 관리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연락판공실(聯絡辦公室)을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반(工作組)을 설립한다. 연락판공실은 중앙인민정부 상무부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판공실(經濟財政司 司長 辦公室)에 각기 설치한다.
3. 위원회 직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ⅰ)「안배」 집행의 감독
   ⅱ)「안배」 규정의 해석
   ⅲ)「안배」 집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해결
   ⅳ)「안배」 내용의 증보 및 개정 초안작성
   ⅴ) 연구반(工作組)의 업무지도
   ⅵ)「안배」 실시와 관련한 기타 모든 사무의 처리
4.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일방이 요구사항을 제출한 이후 30일 이내에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쌍방은 우호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안배」의 해석·집행 중에 출현한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한다. 위원회는 협상일치의 방식으로써 결정을 내린다.

제20조 잡항(雜項)

1.「안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안배」에 근거하여 취한 어떠한 행동이 일방이 체약당사자로서 기타 협의상 향유하는 권리 및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폐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쌍방은 「안배」의 제한적 조치의 시행에 따른 영향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속문서

「안배」의 부속문서는 「안배」의 구성부분이 된다.

제22조 개정

필요에 따라 쌍방은 서면형식으로 「안배」 또는 부속문서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개정도 쌍방이 수권한 대표가 서명한 후에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효력발생

「안배」는 쌍방의 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안배」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안배」는 2003년 10월 17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司長)
_____	_____

[부속문서1]

화물무역 영(零)관세 실시에 관하여(關於貨物貿易零關稅的實施)

1.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근거하여,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화물무역의 영관세 실시에 대하여 본 부속문서를 제정함.
2. 마카오는 내지가 원산(原産)인 모든 수입화물에 대하여 계속하여 영관세를 시행한다.
3. 내지는 2004년 1월 1일부터 단계를 나누어 마카오 원산인 수입화물에 대해 영관세를 시행한다. "마카오 원산의 수입화물"이라 함은 「안배」의 부속문서 2에서 규정한 화물에 부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마카오 경제국(經濟局)은 마카오 관련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배」상의 원산지증서를 발급한다. 「안배」상의 영관세를 향유하는 화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안배」 부속문서 3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 경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를 내지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2004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본 부속문서 표1에 열거된 마카오 원산의 수입화물에 대해 영관세를 시행한다. 표1은 본 부속문서의 구성부분이다. 내지에서 세칙세목(稅則稅目)을 조정할 경우는 표1의 세칙 번호는 이에 상응하게 전환한다. 마카오의 생산기업은 영관세 향유를 요구하는 화물신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내지 세칙번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내지는 본 부속문서 표1 이외의 마카오

원산의 수입화물에 대해 영관세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 및 조사

(1) 2004년 1월 1일부터 마카오의 생산기업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마카오 경제국에 영관세 향유를 요구하는 화물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 신청기업은 마카오 경제국에 화물명칭 및 생산능력 또는 생산예측상황의 자료와 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마카오 경제국은 신청기업이 제공한 자료 및 수치에 대해 조사·인정(認定)을 진행하고, 현재의 생산화물 및 생산예정화물 별로 나누어 수집한다.

(나) 확인 및 협상

(1) 매년 6월 1일 이전에 마카오 경제국은 별도로 수집한 화물명칭·생산능력·생산예상상황의 자료 및 수치를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무부는 마카오 경제국에서 제출한 상술한 자료를 받은 후, 내지 관련부문 및 마카오 경제국과 함께 같은 해 8월 1일 이전에 화물명단을 공동으로 심의확정·확인하여야 한다.

(3) 화물명단을 확인 한 후 해관총서는 마카오 경제국과 함께 관련화물의 원산지표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 쌍방은 같은 해 10월 1일 이전에 원산지표준의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공포 및 실시

(1) 현재 마카오에서 생산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치

된 의견에 근거하여, 내지는 화물명단 및 상응하는 원산지 표준을 각각 본 부속문서의 표1 및 부속문서 2의 표1에 보충 기재한다. 협상을 완료한 후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내지는 마카오 경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에 의거하여 「안배」에 따른 관련화물의 영관세수입을 허가한다.

(2) 생산예정인 화물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치된 의견에 근거하여, 내지는 관련화물의 원산지표준을 부속문서 2의 표1에 보충하여 기재한다. 신청기업이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간 후에 마카오 경제국의 조사를 거친 다음 마카오 경제국에서 상무부에 통지하며, 쌍방이 공동 확인한 후 내지는 관련화물의 명단을 본 부속문서의 표1에 보충하여 기재한다. 쌍방이 확인 한 후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내지는 마카오 경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서에 의거하여 「안배」에 따른 관련화물의 영관세수입을 허가한다.

(3) 쌍방은 매년 12월 1일 이전에 협상에서 확인한 화물명단 및 원산지표준을 공포하여야 한다.

(라) 마카오 경제국이 매년 6월 1일 이후에 「안배」상의 영관세 향유를 요청하는 화물 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하는 경우는 세금감면 조치는 1년 순연(順延)한다.

6. 본 부속문서의 집행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무역 및 관련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조성한 경우, 일방이 요구하면 쌍방은 본 부속문서의 관련규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7. 본 부속문서는 쌍방의 대표가 공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10월 17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商務部副部長)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經濟財政司司長)
_____	_____

[부속문서2]

화물무역의 원산지 규칙에 관하여(關於貨物貿易的原産地規則)

1.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근거하여,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화물무역의 원산지규칙에 대해 본 부속문서를 제정함.
2. 일방이 직접 다른 일방으로부터 수입한 「안배」에 따라 영관세를 실시하는 화물은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 원산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은 그 일방이 원산지이다.
   (2)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이 아닌 경우는 당해 일방에서 실질적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원산지로 인정한다.
3. 본 부속문서 제2조 제(1)호에서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화물"이라 함은 다음을 가리킨다.
   (1) 당해 일방에서 채취 또는 추출한 광산품
   (2) 당해 일방에서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이나 식물상품
   (3) 당해 일방에서 출생하고 사양(飼養)한 동물
   (4) 당해 일방에서 본조 제(3)호 소정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5) 당해 일방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상품
   (6)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내지의 선박인 경우)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구기(區旗)를(마카오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 게양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어류 및 기타 해산품
   (7) 당해 일방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기(내지의 선박인 경우)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구기(區旗)를(마카오특별행정구의 선박인 경우) 게양한 선박상에서 본조 제(6)호 소정의 상품에 가공을 하여 획득한 상품

(8) 당해 일방에서 수집한 것으로, 당해 일방의 소비과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물품(廢舊物品)

(9) 당해 일방에서 가공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원재료회수에 적합한 폐기재료(廢碎料)

(10) 본조 제(1)호 내지 (9)호의 상품을 이용하여 당해 일방에서 가공하여 얻은 상품

4. 다음에 열거한 가공 또는 처리는, 단독으로 완성한 것인지 아니면 상호결합하여 완성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아래에서 규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은 모두 미세가공처리를 한 것으로 보며, 화물이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화물의 운수·저장을 위해 진행한 가공이나 처리

(2) 화물적재운송의 편의를 위해 진행한 가공이나 처리

(3) 화물판매를 위해 진행한 포장·전시 등의 가공이나 처리

5. 본 부속문서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실질적 가공"의 인정기준으로는 쌍방이 동의한 다음의 실질적 가공표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1) "실질적 가공"의 인정표준은 "제조 또는 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기타 표준" 또는 "혼합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2)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은 일방의 경내에서 가공을 한 후 얻은 화물에 기본적 특징을 부여한 주요 제조공정 또는 가공공정을 가리킨다.

(3) “세목번호 변경(稅號改變)”은 일방의 원산이 아닌 재료가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가공을 거쳐 생산된 후에, 획득한 상품이 「상품명칭 및 코드번호 협조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중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고 또한 당해 일방 이외의 국가·지구에서 더 이상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를 변경하는 어떠한 생산·가공·제조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4)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란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원료·조립부품·노동가치·상품개발지출가치의 합계가 완제품수출의 FOB 가격 대비 30% 이상이고, 또한 최후의 제조·가공공정이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원료가치} + \text{조립부품가치} + \text{노동가치} + \text{상품개발지출가치}}{\text{완제품 수출의 FOB 가격}} \times 100\% \geqq 30\%$$

1) “상품개발”이란 일방 경내에서 완제품의 생산·가공과 관련하여 시행한 상품개발을 가리킨다. 개발비용의 지급은 반드시 당해 수출 완제품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생산가공자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또는 당해 일방 경내의 자연이이나 법인에게 개발을 위탁하면서, 그리고 당해 일방 경내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보유하는 설계·특허권·전유기술·상표권·저작권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비용을 포괄한다. 당해 비용의 지급금액은 반드시 공인된 회계준칙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2) 상술한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의 계산은 공인된 회계준칙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5) "기타 표준"이란 상술한 "제조·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이외에 쌍방이 채택하기로 동의한 원산지확정방법을 가리킨다.

(6) "혼합 표준"이란 상술한 두 개 이상의 표준을 동시에 사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6. 간단한 희석·혼합·포장·병에 담는 포장(裝瓶)·건조·조립·분류·장식은 실질적인 가공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기업이 생산하거나 가격을 정하는 조치의 목적이 본 부속문서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 경우도 역시 실질적 가공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7. 화물원산지를 확정할 때는 화물제조과정 중에 사용한 에너지·공장·설비·기기·공구의 산지(産地)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제조과정 중에 사용되었지만 화물의 성분 또는 구성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재료의 산지도 고려하지 않는다.

8.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다음의 정황은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는다.

(1) 적재한 화물을 따라 함께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에서 당해 화물과 함께 분류한 포장·포장재료·용기

(2) 화물과 함께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에서 당해 화물과 함께 분류한 부속품·예비품·공구·소개설명자료

9.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의 8자리 등급의 세목을 기초로 하고 본 부속문서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화물무역 우대조치를 향유하는 마카오화물 원산지 표준 표(享受貨物貿易優惠措施的澳門貨物原産地標準表)」(본 부속문서 표1)를 제정한다.

   표1은 본 부속문서의 구성부분이다. 「안배」하에서 본 부속문서 표1에서 규정한 원산지표준을 만족시키는 화물은 이미 마카오에서 실질적 가공을 한 것으로 본다.

   「안배」의 부속문서1 제5조에 의거하여 영관세를 시행하는 모든 마카오원산의 화물 및 마카오에서 생산예정인 화물의 원산지표준은 본 부속문서 표1에 보충기재하여야 한다.

10. 「안배」에 의거하여 영관세를 실시하는 원산화물은 직접운수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음의 상황 하에서는 직접운수규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화물이 일방으로부터 상대방 해안으로 직접 운수되는 경우

    (2) 화물이 홍콩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다만,

        ⅰ) 지리적 원인 또는 운수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함

        ⅱ) 홍콩에 반입되어 무역·소비가 되지 않을 것

        ⅲ) 하역·보관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두는데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홍콩에서 기타 어떠한 가공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3) 홍콩을 경유하여 운수된 화물은 신고지의 해관에 다음의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ⅰ) 수출자 측에서 발행한 복합운송 선하증권

        ⅱ) 수출자 측의 증서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서

ⅲ) 화물의 원 제조업자 송장(送狀)

ⅳ) 본 조 제(2)호에 열거된 3개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11. 본 부속문서 실시 후에 만약 생산기술의 진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일방이 본 부속문서의 내용이나 본 부속문서 표1 내의 관련 화물의 원산지표준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협상을 요청하고 서면설명과 뒷받침하는 수치 및 자료를 제출하여 「안배」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연합지도위원회의 협상을 거쳐 해결한다.
12. 본 부속문서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10월 17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司長)

[부속문서4]

서비스무역 분야 개방의 구체적 승낙에 관하여
(關于開放服務貿易領域的具体承諾)

1.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의거하여,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서비스무역 분야 개방의 구체적 승낙에 대해 본 부속문서를 제정한다.
2. 2004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마카오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본 부속문서 표1에 기재된 구체적 승낙을 시행한다. 표1은 본 부속문서의 구성부분이다. 통신관련 서비스 중 부가가치 전신(電信) 서비스의 승낙은 「안배」 서명 후 다음 날부터 실시한다.
3. 본 부속문서에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 부문·일부 부문 또는 관련 조치에 대해서, 내지는 「중화인민공화국 WTO 가입 의정서」 부속문서 9인 「서비스무역 구체적 승낙 양허표 제2조 최혜국대우 면제 명단(服務貿易具體承諾減讓表第2條最惠國待遇豁免淸單;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 on Services List of Article Ⅱ MFN Exemptions)」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부속문서 표1에서 밝힌 구체적 승낙의 실시에 대해서는 본 부속문서의 규정을 집행하는 이외에 내지의 관련 법률법규 및 행정규장도 적용하여야 한다.
5. 2004년 1월 1일부터 본 부속문서에서 포괄하는 서비스영역에 대해서, 내지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마카오는 어떠한 제한적 조치를 추가할 수 없다.

6. 쌍방은 협상을 통해 내지에 대한 마카오의 진일보한 서비스업 개방의 내용을 입안·실시한다. 구체적 승낙과 관련한 것은 표2에 집어넣는다. 표2는 본 부속문서의 구성부분이다.
7. 쌍방은 협상을 통해 내지인의 마카오 전문자격취득에 대한 마카오의 구체적 승낙을 입안·실시한다.
8. 본 부속문서의 집행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무역 및 관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일방의 요청에 따라 쌍방은 본 부속문서의 관련 조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9. 본 부속문서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9월 29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 司長)
_____	_____

〈표 1〉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435]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A. 전문 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구체적 승낙	1. 내지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마카오 변호사사무소와 내지 변호사사무소의 공동경영을 허가한다. 공동경영조직은 조합형식으로 운용할 수 없으며, 공동경영조직의 마카오 변호사사무소는 내지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2. 내지 변호사사무소에서 마카오의 개업변호사를 초빙하여 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내지의 변호사사무소에 임용된 마카오의 개업변호사는 내지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이미 내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마카오 변호사 중의 중국공민이 내지에서 실습 및 개업하고 비(非)소송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4. 마카오 영주민중 중국공민이 「국가사법고시실시판법(國家司法考試實施辦法)」에 따라 내지의 통일사법고시에 참가하여 내지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 5. 제4조에 기재된 자들이 내지의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律師法)」에 따라 내지의 변호사사무소에서 비(非)소송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6. 마카오법률사무소가 심천(深圳)·광주(廣州)에 설립한 대표처의 대표에 대해서는 최소거류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다. 마카오법률사무소의 심천·광주 이외의 내지에 있는 대표처의 대표의 경우 매년 내지에서의 최소거류기간은 2개월이다. 7. 교육을 거쳐 합격한 마카오 변호사에게는 내지에서 인가한 공증인자격을 수여한다. 8. 마카오변호사 중에서 마카오영주민이 내지의 관련 법률·법규·규장 규정에 의거하여 마카오법률사무 및 당해 변호사가 변호사업무 종사의 비준을 이미 취득한 기타 국가·지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435) 부문분류에는 WTO「서비스무역총협정」서비스부문분류 (GNS/W/120)를 사용하며, 부문의 내용은 상응하는 UN 중앙상품분류 (CPC, 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참고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A. 전문서비스
	b. 회계,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구체적 승낙	1. 이미 내지의 등록회계사자격을 보유하고 내지에서 개업하고 있는 마카오의 회계감리사(核數師), 회계사(조합원 포함)에 대한 매년 내지에서의 업무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은 내지 등록회계사에 비추어 실행한다. 2. 마카오 회계감리회사 및 회계감리사가 내지에서 임시로 회계감사업무를 전개하면서 신청한 「임시회계감사업무허가증(臨時審計業務許可證)」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A. 전문서비스
	d. 건축설계 서비스 (CPC 8671) e. 공정서비스 (CPC 8672) f. 집중공정 서비스 (CPC 8673) g. 도시기획 및 풍경조경림(風景園林) 설계 서비스 (도시 종합기획 서비스는 제외) (CPC 8674)
구체적 승낙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건축설계서비스·공정서비스·집중공정서비스·도시기획 및 풍경조경림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A. 전문 서비스
	h. 의료 및 치과서비스 (CPC 9312)
구체적 승낙	1. 마카오가 내지와 합자(合資)·합작(合作)하여 설립한 의원 또는 진료소에 임용된 의료진들의 대다수를 마카오 영주민으로 할 수 있다. 2.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내지에서 단기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3년이다. 단기의 업무종사기간이 만료한 후 연기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이 단기업무종사를 수속할 수 있다. 3. 국무원 교육행정 주관부문에서 인가한 내지의 전일제 전문·대학교의 의학·중의학·구강(치과) 전공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갖춘 마카오영주민이, 마카오에서 합법적인 진료권을 취득하고 의료행위면허증을 받고 의료행위에 종사한 지 만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내지에서의 실습기간이 만 1년이고 심사에 합격한 후에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합격한 자에게는 내지의 “의사자격증서”를 발급한다. 4. 마카오과학기술대학(澳門科技大學) 중의(中醫) 전공을 졸업하고 마카오에서의 합법적인 진료권을 취득한 마카오영주민이, 내지의 3급 중의원에서 실습한 기간이 만 1년이고 심사에 합격한 후 또는 마카오에서 의료행위면허증을 받고 의료행위에 종사한 지 만 1년 이상인 후에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합격한 자에게는 내지의 “의사자격증서”를 발급한다. 5. 마카오영주민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내지의 의사자격시험의 유형은 임상(臨床), 중의(中醫), 구강(口腔)이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D. 부동산서비스
	a. 자가소유 또는 임대자산 관련 부동산서비스 (CPC 821) b. 비용수납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서비스 (CPC 822)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 형식으로 내지에서 고품질의 부동산항목(高標準房地産項目)[436]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 형식으로 내지에서 비용수납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3.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 형식으로 내지에서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F. 기타 상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구체적 승낙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437]가 내지에서 독자(獨資)광고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436) 高標準房地産項目이란 단위 건설비용이 동일한 도시 평균 단위 건설비용의 2배보다 높은 부동산 항목을 가리킨다.

437) 본 부문 중,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광고업무를 경영하는(주된 경영이 아닌 경우 포함)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F. 기타 상업서비스
	c. 관리자문서비스 (CPC 86501, 86502, 86503, 86504, 86505, 86506, 86509)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관리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는 일반관리자문서비스, 재무관리자문서비스(영업세 제외), 경영판매관리자문서비스, 인력자원관리자문서비스, 생산관리자문서비스, 공공관계서비스 및 기타 관리자문서비스를 포함한다.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제공하는 관리자문서비스의 최저등록자본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公司法)」에 따라 처리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 상업서비스
	F. 기타 상업서비스
	회의서비스 및 전람서비스 (CPC 87909)
구체적 승낙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회의서비스 및 전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438]

438) 출국·출경(出境) 전람은 포함하지 않음.

부문 또는 일부 부문	2. 통신서비스
	C. 전신(電信)서비스
	부가가치 전신서비스
구체적 승낙	1.「안배」가 서명된 그 다음 날부터,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다음 5개 항목의 부가가치 전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439] (1) 인터넷 데이터센터 업무 (2) 저장·중계전송 유형의 업무 (3) 호출센터 업무 (4) 인터넷 접속(接入)서비스 업무 (5) 정보서비스 업무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제1조의 부가가치 전신서비스 업무를 합자경영하는 기업 중에서 보유하는 주식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와 합자경영하는 제1조의 부가가치 전신업무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없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2. 통신서비스
	D. 시청서비스
	- 비디오 배포서비스(CPC 83202), 녹음제품의 배포서비스 - 영화관 서비스 - 중국어영화 및 합작촬영 영화

439) 내지의「전신업무분류목록(電信業務分類目錄)」에 의거하여 집행

구체적 승낙	- 비디오・녹음제품의 배포서비스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합자형식으로 음성・영상제품의 (뒤의 영화상품 포함) 배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440]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70 %를 초과하지는 못한다.
	- 영화관서비스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합자・합작 형식으로 영화관을 건설・개조・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75 %를 초과하지는 못한다.
	- 중국어영화 및 합작영화 1. 마카오에서 촬영한 중국어영화가 내지(內地) 주관부문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내지에서의 발행에 있어서 수입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마카오에서 촬영한 중국어영화라 함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설립・건립한 제작단위에서 촬영한 것으로, 75% 이상의 영화저작권을 보유한 중국어영화를 말한다. 당해 영화의 주요 스태프 그룹[441] 중 마카오주민은 그 그룹 전체 직원 수의 50%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3. 마카오가 내지와 합작하여 촬영한 영화는 국산영화로 보고 내지에서 발행한다. 표준어를 표준으로 녹음(더빙)한 당해 영화의 기타 중국민족언어・방언의 판본은 내지에서 발행할 수 있다. 4. 마카오가 내지와 합작하여 촬영한 영화에 있어, 마카오 측의 주요 창작자가[442] 점하는 비율은 제한이 없다. 다만 내지의 주요 연기자의 비율은 영화 전체 주요 연기자 총수의 1/3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야기의 발생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이야기의 줄거리 또는 주요 인물은 내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440)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경영하는 음성・영상제품 배포서비스의 내용은 내지의 관련 법규 및 심사제도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41) 주요 스태프 그룹에는 감독, 시나리오작가, 남・여 주연 및 조연배우, 제작감독(監製), 촬영, 편집, 미술지도, 복장설계, 액션・무술지도, 원(原)창작음악이 포함된다.

442) 주요 창작자라 함은 감독, 시나리오작가, 촬영, 주요 연기자를 가리키며, 주요

부문 또는 일부 부문	3.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
	CPC 511, 512, 513 [443], 514, 515, 516, 517, 518 [444]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건설회사를 설립할 경우, 마카오 및 내지에서의 실적을 함께 해당 기업이 내지에 설립하려는 건설회사의 자격을 평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관리자 및 기술자 수는 그 내지에 설립하려는 건설회사의 실제 근무자를 자격평가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단독으로(全資) 내지의 건설회사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3.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투자하여 설립한 건설회사가 중외합영(中外合營) 건설항목을 하청 받을 경우에는 건설항목의 중외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투자한 건설회사가 자격증을 신청함에는 내지의 관련법규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건설회사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합법적으로 전국범위의 공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연기자는 주연 및 주요한 조역을 가리킨다.

443) 기반시설과 관련이 있는 준설서비스를 포함한다.

444) 포괄하는 범위는 외국건설회사가 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보유・사용하면서 배치한 조작자의 건축・철거 기기의 임대서비스에만 한정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4. 분배(分銷, distribution) 서비스 A. 수수료대리(佣金代理) 서비스 (소금 및 담배 불포함) B. 도매(批發)서비스 (소금 및 담배 불포함)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 형식으로써 내지에서 수수료 대리 및 도매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자(獨資)의 해외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445]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합자·합작의 도매회사설립을 신청함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ⅰ)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을 하기 이전 3년간의 연평균 판매액이 미화 3,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ⅱ) 전년도의 자산액이 미화 1,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ⅲ) 내지에서 설립한 기업의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5,000만원으로 한다. 중서부지구에[446] 도매상업기업을 설립하려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을 하기 이전 3년간의 연평균 판매액이 미화 2,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3,000만원으로 한다. 3.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합자·합작의 대외무역회사설립을 신청함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ⅰ)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이전 3년간의 연평균 내지와의 무역액이 미화 1,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ⅱ) 중서부지구에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하려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이전 3년간 내지와의 연평균 무역액이 미화 5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ⅲ) 내지에서 설립한 기업의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2,000만원으로 한다. ⅳ) 중서부지구에 대외무역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1,000만원으로 한다. 4.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수수료대리 및 도매업무를 독자(獨資)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없다.

445)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완성유(成品油), 원유의 도매 및 수수료대리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WTO 성원국에 대해 내지가 승낙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446) 본 부속문서에서, 중서부지구에는 중부지구 및 서부지구를 포함한다. 서부지구는 중경(重慶), 사천(四川), 귀주(貴州), 운남(雲南), 서장(西藏), 섬서(陝西), 감숙

부문 또는 일부 부문	4. 분배 서비스 C. 소매서비스 (연초 불포함)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형식으로 내지에 소매상업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447)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합자・합작의 소매상업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ⅰ)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을 하기 이전 3년의 연평균 소매액이 미화 1억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ⅱ) 신청 전년도의 자산액이 미화 1,0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ⅲ) 내지에서 설립하는 기업의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1,000만 원이며, 중서부지구에 설립하는 소매상업기업의 최저등록자본액은 인민폐 600만원이다. 3.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설립하는 소매기업의 지역범위는 지급(地級) 시(市)까지 확대되며, 광동성에서는 현급(縣級) 시까지 확대한다. 4.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의 소매기업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448) 5. 마카오 영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내지의 관련 법규 및 행정규정에 따라 광동성 경내에 개인자영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자심사・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 영업범위는 소매상업으로 하되 특허경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영업면적은 300 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甘肅), 청해(靑海), 영하(寧夏), 신강(新疆), 내몽고(內蒙古), 광서(廣西) 등 12개 성・자치구・직할시 그리고 호남상서토가족자치주(湖南湘西土家族自治州)・호북은시묘족자치주(湖北恩施苗族自治州)・길림연변조선족자치주(吉林延邊朝鮮族自治州)를 포함하고, 중부지구는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산서(山西), 하남(河南), 호북(湖北), 호남(湖南), 안휘(安徽), 강서(江西) 등 8개성을 포함한다.

447)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도서・신문・잡지・약품・농약・농업용비닐・화학비료・양식・식물성 기름・설탕・면화・완성유(成品油)의 소매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WTO 성원에 대해 내지가 승낙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448) 분점이 30곳이 넘는 체인점의 경우, WTO 성원에 대해 내지가 승낙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4. 대리 서비스
	D. 특허경영
구체적 승낙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특허경영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449]

부문 또는 일부 부문	7. 금융서비스
	A. 모든 보험 및 그 관련 서비스
	a. 생명보험, 건강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 b. 비생명보험 c. 재보험 d. 보험부속서비스
구체적 승낙	1. 마카오보험회사가 병합 또는 합병을 거쳐 구성한 집단이 내지의 시장진입요건(집단의 자산총액이 미화 50억 달러 이상으로서 그 중 어느 한 마카오보험회사의 경영역사가 30년 이상이고, 또한 그 중 어느 하나의 마카오보험회사가 내지에 설립한 대표처가 2년 이상일 것)에 따라 내지의 보험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마카오의 보험회사는 내지 보험회사의 주식을 24.9%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3. 마카오영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내지에서 보험계리사(精算師) 자격을 취득 한 이후에는 사전비준을 받을 필요 없이 내지에서 개업할 수 있다. 4. 마카오영주민이 내지에서 보험업에 종사할 자격을 얻고 내지 보험영업기구에 초빙·임용되어 관련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449) 관련 법규는 장차 별도로 공표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7. 금융서비스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 및 증권 불포함) a. 공중에 대한 예금 수납 및 기타 자금 대부 b. 소비신용대출·저당신용대출·상업거래의 대리 및 융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출 c. 금융임차(金融租賃) d. 신용카드·외상카드·대출기록카드·여행자수표·은행환어음 (수출입결산 포함)을 포함한 모든 지급 및 어음교환 수단 e. 담보 및 승낙 f. 자체 외환거래 또는 고객대행 외환거래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은행이 내지에 분점 또는 법인기구를 설립하려면, 신청을 제출하는 전년도 연말 총자산이 미화 60억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마카오의 재무회사가 내지에 법인기구를 설립하려면 신청을 제출하는 전년도 연말 총자산이 미화 60억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2. 마카오의 은행이 내지에 합자은행·합자재무회사를 설립하거나, 마카오의 재무회사가 내지에 합자재무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지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3. 마카오 은행의 내지 지점이 인민폐 경영업무를 신청하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내지에서 개업한 지 2년 이상이며, (2) 주관부문이 영리성 자격을 심사할 때는 내지의 단일 지점에 대한 심사를 여러 지점에 대한 전체 심사로 바꾸어 하여야 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7. 금융서비스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증권서비스
구체적 승낙	마카오의 증권·선물 전문가 중 마카오영주민은 내지에서 관련 절차에 의거하여 업무종사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9. 여행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아파트 포함) 및 식당 (CPC 641-643) B. 여행사 및 관광 경영자 (CPC 7471) 기타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호텔·아파트·식당 시설을 건설·개조·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마카오의 여행사와 내지가 합자로 설립한 합자여행사가 내지 측이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없다. 3. 북경시(北京市), 상해시(上海市), 광동성의 광주시(廣州市)·심천시(深圳市)·주해시(珠海市)·동완시(東莞市)·중산시(中山市)·강문시(江門市)·불산시(佛山市)·혜주시(惠州市)의 거주민 개인이 마카오로 여행가는 것을 허용하며, 2004년 7월 1일 전까지는 광동성 전체로 실시범위를 확대한다.

부문 또는 일부 부문	11. 운수서비스
	A. 해운서비스 H. 보조서비스
	- 국제운수(화물운송 및 여객운송) (CPC 7211, 7212; 연해 및 내수(內水) 운수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 컨테이너 야적장 서비스 - 기타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450]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 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창고, 국제해운컨테이너정거장·야적장, 그리고 선박임차운송인(원어: 無船承運人)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獨資)의 선박회사를 설립하여 그 보유·경영하는 선박을 위해 화물수집, 선하증권 발행, 운임비용 결산, 서비스계약체결 등 일상업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3.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간선(幹線) 정기선박을 이용하여 내지의 항구에서 자신의 소유나 임차한 빈 컨테이너를 자유로이 조절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관련 세관수속은 처리하여야 한다.

450) 본 부문 중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부문	11. 운수서비스
	F. 도로운수서비스
	도로를 이용한 트럭 및 차량 화물운수 (CPC 7123) 도로를 이용한 여객운송 (CPC 7121, 7122)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독자(獨資)기업을 설립하여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부터 내지의 각 성·시급(市級) 자치구 사이에서 화물운송의 "직행차량"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451] 3.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의 서부지구에 독자기업을 설립하여 도로를 이용한 여객운수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문 및 일부 부문	11. 운수서비스
	H. 모든 운수방식의 보조서비스
	- 창고저장 서비스 (CPC 742)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獨資)형식으로 내지에서 창고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투자·설립한 창고저장기업의 최저등록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내지기업의 최저등록자본을 참작하여 실행한다.

451) "직행차량" 업무라 함은 내지와 마카오 사이에 직접 도달하는 도로운수를 말한다. 본 부문 중에서 "직행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부문 및 일부 부문	11. 운수서비스
	H. 모든 운수방식의 보조서비스
	- 화물대행서비스 (CPC 748, 749; 화물검사 서비스는 불포함)
구체적 승낙	1.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452]가 독자형식으로 내지에서 화물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투자・설립한 화물대행기업 (국제화물대행)의 최저등록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내지기업의 최저등록자본을 참작하여 실행한다.

부문 및 일부 부문	서비스부문 분류 (GNS/W/120) 에 열거되지 않은 부문
	- 물류서비스
구체적 승낙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형식으로 내지에서 관련된 화물운송의 분할발송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는 도로를 이용한 보통화물의 운수・창고저장・하역・가공・포장・배송・관련 정보처리서비스・관련 자문업무, 국내화물운송대리업무,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관리 및 물류운행 업무를 포함한다.

452) 본 부문 중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부속문서5]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

1.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의거하여,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대해 본 부속문서를 제정한다.
2. 「안배」 및 그 부속문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배」 및 그 부속문서중의 "서비스제공자"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

   (가) "사람(人)"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나) "자연인"이라 함은,

   (1) 내지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을 가리킨다.

   (2) 마카오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을 가리킨다.

   (다) "법인"이라 함은 내지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합당하게 조직·설립된 모든 법률실체를 가리킨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사유 또는 정부 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회사·기금·조합기업·합자기업·독자기업·협회(상회)를 포함한다.
3. 법인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 표준 :

   (가) 법률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

에서 부속문서 4 중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을 함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상법전(商法典)」, 「상업등기법전(商業登記法典)」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등기하여야 한다.[453]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영업허가증이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마카오에서 실질적으로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성질 및 범위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 및 범위는 내지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성질 및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한(年限)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이미 마카오에서 등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3년 이상(3년 포함)의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454]

그 중에서,

ⅰ) 건축 및 관련 공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이미 마카오에서 등기를 하고 5년 이상(5년 포함) 실질적으로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

---

453) 마카오에 등기한 해외회사·사무소·연락처·연락회사(信箱公司) 그리고 모회사(母會社)에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특별 성립한 회사는 본 부속문서에서 말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에 속하지 않는다.

454) 「안배」 효력발생일로부터, 쌍방 이외의 서비스제공자가 매수 또는 합병 방식을 통하여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지 만 1년이 된 경우, 당해 피(被) 매수·합병된 서비스제공자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에 속한다.

서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연한에는 제한이 없다.

ii)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보험 및 증권 제외)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 즉 마카오의 은행이나 재무회사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금융체계법률제도(金融體系法律制度)」에 따른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5년 이상(5년 포함)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iii) 보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 즉 마카오의 보험회사는 마카오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5년 이상(5년 포함)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3) 소득보충세(所得補充稅)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한 기간 동안에는 법에 의거 소득보충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4) 업무장소

i)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할 업무장소를 마카오에서 보유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그 업무장소는 업무의 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여야 한다.

ii) 해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선박의 총톤수의 50% 이상(50% 포함)은 마카오에 등록되어야 한다.

5) 직원고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고용한 직원 중 마카오거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민 및 마카오 관련 법규에 따라 마카오 정주의 비준을 얻은 자가 총 직원 수의 50% 이상을 점유하여야 한다.

(나) 법률서비스부문 중 마카오 변호사사무소가 부속문서 4에 있는 관련 서비스를 내지에서 제공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마카오특별행정구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립등기를 한 마카오 변호사사무소이어야 한다.

(2) 관련 변호사사무소의 독자(獨資)경영자 및 모든 조합원은 마카오의 개업변호사이어야 한다.

(3) 관련 변호사사무소의 주요 업무범위는 마카오에서 현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관련 변호사사무소, 독자(獨資)경영자 또는 조합원은 법에 따른 소득보충세·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관련 변호사사무소는 마카오에서 3년 이상(3년 포함)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였어야 한다.

(6) 관련 변호사사무소는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업무장소를 마카오에 보유·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4. 「안배」 및 그 부속문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이어야 한다.

5. 내지의 서비스제공자는 본 부속문서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6.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안배」상의 대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마카오의 관련기관이나 관련인의 심의·검증을 거친 문서자료·성명(聲明) 그리고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서자료(적용되는 경우)

1) 마카오특별행정구 상업 및 동산등기국(商業及動産登記局)에서 발급한 상업 및 동산등기증명서 부본

2) 마카오특별행정구 재정국에서 발급한 영업세 M/1 양식 신고서 부본

3)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과거 3년(또는 5년) 동안의 마카오에 있는 회사의 연차보고서 또는 회계심사를 거친 재무보고서

4)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마카오에서 업무장소를 보유・임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정본이나 부본[455]

5)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과거 3년(또는 5년) 간의 소득보충세 신고서・납세증명서의 부본. 결손(缺損)이 발생한 경우,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소득보충세 신고서와 납세증명 관련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마카오에 있는 종업원의 사회보장기금 납부액 증명서 부본, 그리고 당해 서비스 제공자가 본 부속문서 제3조. 가. (2). 5)에서 규정한 백분비율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 문서나 그 부본

7)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마카오에서의 업무 성질・범위를 증명하는 기타 관련문서나 그 부본

8) 물류・화물대행서비스, 창고저장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종합운수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구비하였음에 대해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서 확인한 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

455) 내지에서의 해운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마카오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적재량의 50% 이상(50% 포함)이 마카오에서 등기되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명(聲明)

「안배」상의 대우(待遇)의 취득을 신청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와 그 책임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해 성명을 하여야 한다.[456] 성명의 양식은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3) 증명서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본 부속문서 제6조. (가). (1) 및 (2)에서 규정한 문서자료와 성명을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국(經濟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경제국은 필요한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 관련 정부부문・기구 또는 독립전문기구(전문가)에게 사실확인의 증명을 위탁한다.[457]

경제국은 본 부속문서에서 규정한 마카오서비스제공자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의 내용 및 양식은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마카오영주민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중국공민인 자는 홍콩・마카오주민 내지왕래통행증(回鄕證)이나 마카오특별행정구 여권을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부속문서의 제6조. (가)와 (나)에서 규정한 성명, 자연인 신분증명의 복사본, 경제국에서 사실확인증명이 필요하다고

456) 허위나 부실의 성명을 한 자는 마카오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457) 전신(電信)부문 중, 인터넷데이터센터업무, 저장・중계전송 유형의 업무, 호출센터업무, 정보서비스업무의 제공과 관련한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성질과 범위는 경제국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전신주관부문에 위탁하여 사실확인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판단한 문서자료들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 공증부문 또는 내지에서 인가한 공증인의 사실확인증명을 거쳐야 하며, 사실확인증명의 자격과 공증서사용의 검증절차 등은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7.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안배」상의 대우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을 내지의 심의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부속문서 4의 서비스를 내지에서 제공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내지의 심의기관에 본 부속문서 제6조에서 규정한 문서자료·성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심사권한에 의거하여 내지의 심의기관이 마카오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을 심의하는 때에는 마카오서비스제공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를 한다.

(다)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에 대해 내지의 심의기관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규정된 시간 안에 마카오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상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국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경제국을 통하여 상무부에 서면이유를 제출하여 재차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규정된 시간 내에 경제국에 서면회신을 하여야 한다.

8. 이미 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안배」상의 대우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본 부속문서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9. 본 부속문서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10월 17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司長)
_____	_____

[부속문서6]

무역투자 간편화에 관하여(關于貿易投資便利化)

1.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에 의거하여,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무역투자 간편화 협력에 대해 본 부속문서를 제정한다.
2. 쌍방은 무역투자촉진, 통관간편화, 상품검사·동식물검사검역·식품안전·위생검역·인증인가·표준화관리, 전자상거래, 법률법규의 투명도, 중소기업협력, 산업협력 등 7개 분야에서 무역투자 간편화 협력을 하기로 동의하였으며,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안배」 제19조에 의거하여 설립한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협조 하에 진행한다.
3. 무역투자촉진

   쌍방은 양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상호 간의 무역 및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투자발전에 대한 현실 및 수요 증가에 기초하여 무역투자촉진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연합지도위원회 관련 업무조직의 기능발휘를 통하여 두 지역의 무역투자촉진 협력의 지도·조정을 전개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의 이전 협력 경험에 의거하고, 두 지역의 무역교류 발전 상황에 따라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1) 각자의 대외무역 및 외자도입 관련 정책법규의 통보 및 홍보를 하여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2) 쌍방 무역투자영역 중에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 교환, 협상진행

(3) 상호투자촉진 및 해외투자협력촉진 방면에서의 소통 및 협력 강화

(4) 전람회 개최, 해외전람회 구성·참가 방면의 협력강화

(5) 경제무역촉진활동 공동전개, 쌍방과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추진

(6) 쌍방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무역투자촉진 관련 기타 문제에 대한 교류진행

(다) 기타 실체적 참여

쌍방은 무역투자촉진 방면에서의 반(半)관영 및 비(非)관영기구의 참여가 적극적인 영향과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쌍방은 각종 방식을 통하여 이들 기구가 무역투자촉진활동을 전개하는데 대해 지지 및 협조를 한다는데 동의한다.

4. 통관간편화

쌍방은 두 지역 해관사이의 장기간 밀접한 협력관계 및 통관간편화 시행이 쌍방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통관간편화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쌍방은 양 지역 해관부문을 통하여 통관간편화 협력을 연합지도 및 협조하고, 해관 및 관련부문의 전문가 소그룹을 통하여 통관간편화 협력의 전개를 추진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의 서로 다른 통관제도 및 감독관리 방식의 필요성 및 협력경험에 의거하여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1) 상호 통보제도 건립, 통관 및 통관관리 간편화 관련 정책법규의 통보

(2) 쌍방 통관제도의 차이 및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교류의 진행, 통관간편화 협력강화의 구체적 내용 모색

(3) 진일보한 협력확대의 내용 탐구, 해상운송·육상운송·복합운송·물류 등의 방식을 이용한 통관 중 감독관리 강화 및 통관효율제고 방면의 협력

(4) 항구에서의 돌발사건에 대한 응급시스템건립 방면에서의 협력강화, 유효한 조치의 채택, 쌍방의 순조로운 통관을 최대한도로 보호·유지

(5) 정기적 연락제도의 건립, 해관총서 광동지서와 마카오해관 사이의 “광동성-마카오 해관 항구통관효율업무 소그룹(粤澳海關口岸通關效率業務小組)” 설립가능성 탐구

(6) 쌍방 해관이 조직하는 “데이터교환 및 육로·항구 통관전문가 소그룹” 설립 연구, 데이터 네트워킹 및 항구 전자통관수속시스템의 실행가능성 연구, 기술적 수단을 통한 통관위험의 관리강화, 통관효율제고

5. 상품검사, 동식물검사·검역, 식품안전, 위생검역, 인증·인가, 표준화관리

쌍방은 화물무역 및 인적왕래 중의 내지와 마카오인민의 신체건강·안전에 대한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품검사·동식물검사·검역, 식품안전, 위생검역, 인증·인가, 표준화관리영역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쌍방 유관부문간 현재의 협력통로를 이용하고, 상호방문과 협상 그리고 각종 형식의 정보소통을 통하여 당해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1) 상품의 검사감독

쌍방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쌍방은 기존에 건립된 소통경로를 통하여 정보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상품안전정보의 교환에 특히 중시하고, 상품안전에 나타난 문제를 공동으로 방어하고, 검사·감독인원의 교육합작을 공동 촉진한다.

쌍방은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안배(食品安全合作安排)」의 체결을 연구하고, 관련 법률법규·안전표준·법규집행의 업무절차 및 불안전상품 사건의 소통로를 건립하며, 기술교류 및 훈련강화를 전개한다.

(2) 동식물 검사·검역

쌍방은 검사·검역의 협조시스템을 건립하고, 동식물의 검사·검역 및 식품안전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여, 쌍방이 각자의 관련법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위생검역 감독관리

쌍방은 현재의 소통로를 이용하여 두 지역의 전염병발생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위생검역에 관한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을 강화한다.

광동 각 항구를 왕복하는 소형선박의 위생·감독 문제를 탐구하고 토론한다.

열대전염병・매개생물의 조사 및 예방, 특수물품・방사능물품의 감측(監測)・감독관리, 생물성 발병인자의 운수・검사・치료・통제 등 방면의 협력을 강화한다.

(4) 인증인가 및 표준화관리

쌍방 각자의 유관기구는 합격심사(테스트・인증・검사를 포괄), 인가, 표준화관리 방면의 협력을 추진한다.

(5) 검사・검역의 효율제고

쌍방은 검사・검역 통관관리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화물검사보고의 자료를 상호 먼저 제공한다.

동시에, 쌍방은 검사・검역의 전자네트워크와 항구에서의 검사・검역에 대한 전자적 감독관리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화물과 사람의 검사・검역 전자정보교환시스템을 건립하고, 항구에서의 검사・검역 통관효율을 높인다.

6. 전자상거래

쌍방은 전자상거래의 응용・확대가 장차 쌍방의 무역 및 투자에 보다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인식한다. 쌍방은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협조 하에서 관련 업무 팀을 구성하고, 전자상거래 협력의 소통로 및 협상・협조체계를 만들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쌍방 협력 및 공동발전을 추진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전개하는데 동의한다.

(1) 전자상거래 규칙・표준・법규의 연구 및 제정 방면에서 전문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양 지역 간의 전자인증 방면에서의

상호인증 및 상호교환(互通)의 실행가능성 고려 등의 우수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한 발전을 추진·확보한다.

(2) 기업에서의 응용·확대·교육 등 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두 지역 정부부문의 추진·조정기능을 발휘하고, 전자상거래의 홍보를 강화하며, 두 지역 기업 간의 상호교류를 추진하며,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한다.

(3) 전자정부 추진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료 상호교환(互通)의 실행가능성 등 쌍방간 다양한 측면에서 전자정부 발전계획의 교류·협력을 긴밀히 한다.

(4) 경제무역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다.

7. 법률법규의 투명도

쌍방은 법률법규의 투명도를 제고하는 것이 두 지역의 경제무역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초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두 지역 상공기업들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법률법규 투명도 분야의 협력을 더욱 제고한다는데 쌍방은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연합지도위원회에서 설립한 유관 업무팀(小組) 및 상호 설립한 대표기구를 통하여 협력작업을 전개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1) 투자·무역 및 기타 경제무역영역에 대한 법률·법규의 반포 및 개정상황에 대한 정보자료 교환

(2) 간행물, 웹사이트 등 다종 매체를 통해 정책·법규 정보를 적시에 발표

(3) 여러 형식의 경제무역관련 정책·법규의 설명회나 토론회의 개최 및 개최지원

(4) 내지의 WTO 자문처, 중국투자지침 웹사이트, 중국무역지침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상(工商)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

8. 중소기업협력

쌍방은 중소기업의 발전이 취업기회확대, 경제발전촉진, 사회 안정의 유지 및 보호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두 지역 중소기업의 교류·협력을 공동 촉진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쌍방 정부부문 사이에 양 지역 중소기업협력을 촉진하는 업무체계를 세우고, 두 지역 중소기업의 협력 및 공동발전을 촉진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지지·촉진한다는데 동의한다.

(1) 시찰과 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전략 및 부양정책의 지원을 공동 탐구

(2)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쌍방 중개기관의 조직형식과 운용방식을 고찰·교류하고, 중개기관의 협력을 추진한다.

(3) 양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통로를 건립하고, 관련 출판간행물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쌍방 정보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결합 및 자료교환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4) 각종 형식을 통해 양 지역 중소기업의 직접교류·소통을 조직하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한다.

(다) 기타 실체적 참여

쌍방은 두 지역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있어서 반(半)정부기구·비(非)정부기구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에 협력한다.

9. 산업협력

쌍방은 두 지역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은 권장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보충한다(優勢互補)'는 원칙에 의거하여 산업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두 지역의 산업 및 사회전체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쌍방은 장차 중의약산업의 협력을 전개하면서, 적당한 시기를 고려하여 기타 산업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협력을 전개한다.

(가) 협력체계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협조 하에 적당한 때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업무팀(小組)을 설립하여 관련 산업의 협력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동의한다.

(1) 두 지역의 산업발전방향 및 현 위치를 근거로 하여 쌍방이 각자 비교우위를 가지는 특정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공동 진행한다.

(2) 쌍방은 관련 산업의 발전상황, 발전방향, 법률법규 정립 정황을 서로 통보한다.

(3) 쌍방은 관련 산업의 연구, 기술협력, 연구성과의 상품화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4) 관련 산업에 있어서 두 지역 기업들의 상호투자협력을 촉진한다.

(5) 두 지역 관련 산업의 협력을 지지하고, 양 지역 상품무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시장을 공동 개척한다.

10. 「안배」 제17조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쌍방이 증가하기로 동의한 무역투자간편화의 협력분야나 내용은 본 부속문서에 보충기재된다.

11. 본 부속문서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부속문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부속문서는 2003년 10월 17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司長)
_____	_____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門關于建立更緊密經貿關系的安排》補充協議)

내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함)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17일 체결한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및 부속문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쌍방은 내지의 마카오에 대한 화물무역 및 서비스무역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본 협의를 체결함.

1. 화물무역

(가) 2005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1에 기재된 마카오원산의 수입화물에 대해 영관세를 실행한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 1은 「안배」 부속문서1 표1 「마카오원산의 화물에 대한 내지의 영관세실시 상품명단(內地對原産澳門的進口貨物實施零關稅的産品淸單)」을 보충한 것이다.

(나) 「안배」 부속문서2 「화물무역의 원산지규칙에 관하여(關于貨物貿易的原産地規則)」에 의거하여 제정한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 1 중의 마카오원산 수입화물의 원산지표준은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2에 기재되어 있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2는 「안배」 부속문서2의 표1 「화물무역우대조치를 향유하는 마카오화물 원산지표준 표(享受貨物貿易優惠措施的澳門貨物原産地標準表)」를 보충한 것이다.

2. 서비스무역

(가) 2005년 1월 1일부터, 내지는「안배」부속문서4「서비스무역분야 개방의 구체적 승낙에 관하여(關于開放服務貿易領域的具體承諾)」의 토대 위에서 법률・회계・의료・시청(視聽)・건축・분배・은행・증권・운수・화물운송대리 등 분야에서 마카오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시장진입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마카오영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내지에서 자영업을 설립하는 지역 및 영업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3에 기재한다.

(나) 2005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특허대리・상표대리・공항서비스・문화오락・정보기술・직업소개・인력중개・전문자격시험 등 분야에서 마카오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장진입요건을 개방・완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3에 기재한다.

(다)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의 건축분야 승낙 및 분배분야의 부분승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구체적인 것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의 건축・관련 공정서비스 및 분배서비스의 구체적 승낙을 본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3 중에서, 마카오은행의 내지에 있는 지점이 보험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라)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3은「안배」부속문서4의 표1「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의 구체적 승낙(內地向澳門開放服務

貿易的具體承諾)」을 보충·개정한 것이다. 두 개의 조항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3을 기준으로 한다.

(마)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3 중의 "서비스제공자"는 「안배」 부속문서5의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于"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안배」 부속문서에 대한 보충 및 개정

(가) 「안배」 부속문서1의 「화물무역 영관세의 실시에 관하여(關于貨物貿易零關稅的實施)」 제5조 (다) (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산예정인 화물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치된 의견에 근거하여, 내지는 관련화물의 명단을 「안배」 부속문서1의 표1에 보충하여 기재하고, 관련 화물의 원산지표준은 「안배」 부속문서2의 표1에 보충하여 기재한다. 신청기업이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간 후에 마카오 경제국(經濟局)의 조사를 거친 다음 마카오 경제국에서 상무부에 통지하며, 쌍방이 공동 확인한 후 내지는 마카오 경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거하여 관련화물에 대해 「안배」에 따른 영관세수입을 허가한다."

(나) 「안배」 부속문서5의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于"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 제3조 (가) (2)호 2)목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항공운송의 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이미 마카오에서 항공운송 지상서비스 업무종사의 전문영업허가증을 획득하여야 하고, 실질적 상업경영에 5년 이상(5년 포함) 종사하여야 하며, 공항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만약 항공회사의 관련기업이라면 내지의 관련 법규·규장을 또한 적용하여야 한다."

4. 부속문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보충협의의 구성부분이다.

5. 효력발생

본 보충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보충협의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보충협의는 2004년 10월 29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商務部副部長)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經濟財政司司長)
_____	_____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補充協議二)

내지[458]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함)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2003년 10월 17일 체결한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및 그 부속문서, 2004년 10월 29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에 의거하여, 쌍방은 화물무역 및 서비스무역 분야에 있어서 마카오에 대해 내지의 개방을 확대하는 합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화물무역

(가) 2006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마카오원산인 수입화물[459]에 대해 전면적인 영(零)관세를 실시한다.

영관세 수입화물은 반드시 쌍방 협의로 확정한 원산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005년 쌍방이 이미 협의를 마친 마카오원산인 화물의 원산지표준은 부속문서1에 기재되어 있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1은 「안배」 부속문서2 표1 「화물무역 우대조치를 향유하는 마카오화물 원산지표준 표(享受貨物貿易優惠措施的澳門貨物原産地標準表)」의 보충이다.

---

458) 「안배」중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關稅)영토를 가리킨다.

459) 내지의 관련 법규·규장의 수입금지화물 및 국제조약의 이행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화물, 그리고 내지가 관련 국제협의에서 특별승낙한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쌍방은「안배」부속문서1「화물무역 영관세 실시에 관하여(關于貨物貿易零關稅的實施)」제5조의 구체적 실시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출

(1) 2006년 1월 1일부터, 마카오의 생산기업은 영관세를 향유하는 화물목록을 마카오경제국(經濟局)에 제출할 수 있다.

(2) 마카오경제국(經濟局)은 매년 각기 3월 1일과 9월 1일 이전에,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인정을 한 후에 화물목록을 상무부에 제출한다.

(나) 협상 및 공포

상무부는 화물목록에 대한 확인을 한 후에 해관총서(海關總署)에 이전한다. 해관총서는 관련 화물의 원산지표준에 대해서 마카오경제국과 협상을 진행한다. 쌍방은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이전에 원산지표준 협상을 완료하며, 관련 화물의 원산지표준은「안배」부속문서2 표1에 보충기입하고 대외에 공표한다.

(다) 실시

내지는 늦어도 각각 금년 7월 1일 및 내년 1월 1일 이전에 마카오경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거하여 관련 화물에「안배」에 따른 영관세수입을 허가한다."

(나)「안배」부속문서2「화물무역의 원산지규칙에 관하여(關于貨物貿易的原産地規則)」중의 제5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본 부속문서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실질적 가공'의 인정기준으로는 쌍방이 동의한 다음의 표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가) '실질적 가공'의 인정표준은 '제조·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기타 표준' 또는 '혼합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1) '제조·가공 공정'은 일방의 경내(境內)에서 가공을 한 후 얻은 화물에 기본적 특징을 부여한 주요 제조·가공 공정을 가리킨다.

(2) '세목번호 변경(稅號改變)'은 일방의 원산이 아닌 재료가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가공을 거쳐 생산된 후에, 획득한 상품이 「상품명칭 및 코드번호 조정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중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고 또한 당해 일방 이외의 국가·지구에서 더 이상 4자리 등급의 세목분류를 변경하는 어떠한 생산·가공·제조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3)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란 일방에서 완전히 획득한 원료·조립부품·노동가치·상품개발지출가치의 합계가 완제품수출의 FOB 가격 대비 30% 이상이고, 또한 최후의 제조·가공공정이 당해 일방의 경내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원료가치} + \text{조립부품가치} + \text{노동가치} + \text{상품개발지출가치}}{\text{완제품 수출의 FOB 가격}} \times 100\% \geqq 30\%$$

1) '상품개발'이란 일방의 경내(境內)에서 수출완제품과 관련한 생산·가공을 위해 시행한 상품개발을 가리킨다. 개발비용의 지급은 반드시 당해 수출 완제품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생산가공자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또는

당해 일방 경내의 자연이이나 법인에게 개발을 위탁한 것을 포함하며 그리고 당해 일방 경내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보유하는 설계・특허권・전유(專有)기술・상표권・저작권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비용을 포괄한다. 당해 비용의 지급금액은 반드시 공인된 회계준칙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2) 상술한 '종가백분비(從價百分比)'의 계산은 공인된 회계준칙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기타 표준'이란 상술한 '제조・가공 공정', '세목번호 변경', '종가백분비' 이외의 것으로, 쌍방이 채택하기로 동의한 '실질적 가공'을 확인하는 기타 방법을 가리킨다.

(5) '혼합 표준'이란 상술한 두 개 이상의 표준을 동시에 사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 기타 부가조건.

상술한 (가)의 '실질적 가공' 표준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쌍방의 동의를 거쳐 부가조건(ex. 상표요건 등)을 채택할 수 있다."

2. 서비스무역

(가) 2006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및 〈「안배」 보충협의〉에서 서비스무역을 개방하기로 승낙한 토대위에서, 법률・회계・건축・시청(視聽)・분배・은행・여행・운수・개인상공업 등 분야에서 시장진입요건을 보다 확대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2에 기재되어 있다.

(2)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2는 「안배」 부속문서4의 표1 「내지가 마카오에 대해 개방한 서비스무역의 구체적 승낙(內地向澳門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 및 〈「안배」 보충협의〉 부속문서3 「내지가 마카오에 대해 개방한 서비스무역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內地向澳門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을 보충·개정한 것이다. 앞의 2개와 본 조항이 서로 상충할 때는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2를 기준으로 한다.

(3)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2 중의 '서비스제공자'는 「안배」 부속문서5 「"서비스제공자"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부속문서

본 협의 중의 부속문서는 본 협의의 구성부분이다.

4. 효력발생

본 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의는 중문(中文)으로 작성하고, 2부를 작성한다.
본 협의는 2005년 10월 21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司長)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 補充協議三)

내지[460]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10월 17일 체결한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2004년 10월 29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005년 10월 21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에 의거하여,

쌍방은 서비스무역분야에 있어서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개방 확대 그리고 쌍방의 무역투자 간편화 분야의 협력강화에 대해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서비스무역

(가) 2007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및 『「안배」 보충협의』, 『「안배」 보충협의 2』에서 서비스무역개방을 승낙한 토대 위에서, 법률·건축·전람회(원어: 會展)·시청(視聽)·분배(원어: 分銷)·여행·운수·개인자영업자 등 분야에서 시장진입요건을 더욱 완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안배」 부속문서 4의 표1 「내지의 마카오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內地向澳門開放服務

460)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貿易的具體承諾)」, 『「안배」 보충협의』 부속문서 3 「내지의 마카오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內地向澳門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 『「안배」 보충협의 2』 부속문서 2 「내지의 마카오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 2(內地向澳門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二」를 보충·개정한 것이다.

전술한 3개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안배」 부속문서 5의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무역투자 간편화

(가) 마카오 산업구조의 다원화를 지지·호응하고 양 지역의 전람회 업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은 전람회 업종의 협력을 「안배」 무역투자 간편화 산업협력영역에 보충하여 넣는다는데 동의하며, 「안배」 부속문서 6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쌍방은 양 지역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은 권장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보충한다(優勢互補)'는 원칙에 의거하여 산업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양 지역 산업 및 사회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쌍방은 중의약산업 및 전람회업에서의 협력을 전개하며 적당한 때를 고려하여 다른 산업의 전문적인 협력을 전개한다."

(나)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 있어서 두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은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안배」 무역투자 간편화 분야에 보충하여 넣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안배」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쌍방은 다음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1) 무역투자촉진;

2) 통관 간이화;

3) 상품검사검역, 동·식물검사검역, 식품안전, 위생검역, 인증인가 및 표준화 관리;

4) 전자상거래;

5) 법률법규 투명도;

6) 중소기업협력;

7) 산업 협력

8) 지적재산권보호."

2.「안배」 부속문서6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쌍방은 무역투자촉진, 통관간편화, 상품검사검역, 동식물검사검역, 식품안전, 위생검역, 인증인가 및 표준화 관리, 품질표준, 전자상거래, 법률법규투명도, 중소기업협력, 산업협력, 지적재산권보호 등 8개 분야에서 무역투자 간편화 협력을 전개하기로 동의하였으며, 협력과 관련하여서는「안배」 제1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협조 하에 진행한다."

3.「안배」 부속문서 6에 1개 조문을 증설하여 제10조로 하며, 그 다음의 조항의 순서는 차례대로 순연된다. 제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지적재산권보호

쌍방은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두 지역의 경제발전추진 및 두 지역 간 경제무역교류·협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쌍방은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하였다.

(가) 협력체계

두 지역 정부부문 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쌍방은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1) 마카오에 설립한 지적재산권보호 협조센터를 통한 두 지역의 지적재산권보호의 정보에 대한 교류·소통 진행.

(2) 지적재산권보호의 법률·법규의 제정 및 집행방면의 정보교환.

(3) 현지조사, 토론회개최, 관련 간행물 출판, 기타 방식을 통한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4) 지적재산권보호 중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협상 진행."

3. 부속문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보충협의의 구성부분이다.

4. 효력발생

본 보충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보충협의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보충협의는 2006년 6월 26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司長)
_____	_____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 補充協議四)

내지[461]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10월 17일 체결한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2004년 10월 29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005년 10월 21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

2006년 6월 26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3』에 의거하여,

쌍방은 서비스무역분야에 있어서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개방 확대, 금융협력강화, 무역투자 간편화 촉진에 대해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서비스무역

(가) 2008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안배」 보충협의』, 『「안배」 보충협의 2』, 『「안배」 보충협의 3』에서 서비스무역의 개방을 승낙한 토대 위에서, 법률·의료·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부동산·시장조사연구·관리자문 관련 서비스·공용사업·인력중개·건축물청소·촬영·인쇄·번역 및 통역·전람회(會展)·전신(電信)·시청(視聽)·분배·환경·보험·은행·증권·사회서비스·여행·레크리에이션·

461)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체육・해운・항공운수・도로운수・개인자영업자 등 28개 분야에서 시장진입요건을 더욱 완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보충협의 부속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안배」부속문서 4의 표1「내지의 마카오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內地向澳門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안배」보충협의』부속문서 3「내지의 마카오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內地向澳門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안배」보충협의 2』부속문서 2「내지의 마카오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 2(內地向澳門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二)」,「안배」보충협의 3』부속문서「내지의 마카오에 대한 서비스무역 개방의 구체적 승낙의 보충・개정 3(內地向澳門開放服務貿易的具體承諾的補充和修正三)」을 보충・개정한 것이다.

이들 네 개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에서 "서비스제공자"는「안배」부속문서 5의「'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1) 마카오의 은행・재무회사가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한 연한(年限)의 요건을 완화한다.「안배」부속문서 5「"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제3조 제(一) 제(2)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보험 및 증권 제외)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 즉 마카오의 은행이나 재무회사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금융체계법률제도(金融體系法律制度)」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의 상업경영에 종사하거나, 또는 지점형식으로써 2년을 경영하고 현지에서의 등록형식으로 3년 이상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한다."

(2) 「안배」 부속문서 5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關於服務提供者定義及相關規定)」 제3조 (가) (2) 2) 호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3자 국제 선박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이미 마카오에서 등기설립 후 5년 이상 실질적 상업경영에 종사하였어야 한다."

2. 금융협력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 금융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다.

(가) 내지의 은행이 마카오에서 지점기구를 개설하여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나) 마카오의 은행이 내지의 중서부 및 동북 지구, 광동성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을 위하여 green line(綠色通道)을 설립한다.

(다) 마카오의 은행이 내지의 농촌에 시골·소도시 은행(원어: 村鎭銀行)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3. 무역투자 간편화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 전람회업종의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 내지는 마카오가 대형국제회의 및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4. 부속문서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보충협의의 구성부분이다.

5. 효력발생

본 보충협의는 쌍방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보충협의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한다.
본 보충협의는 2007년 7월 2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司長)
_____	_____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內地与澳門關于建立更緊密經貿關系的安排》補充協議五)

내지[462]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10월 17일 체결한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2004년 10월 29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005년 10월 21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

2006년 6월 26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3』,

2007년 7월 2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4』에 의거하여,

쌍방은 서비스무역 영역에서 내지가 마카오에 대해 개방을 확대하고 무역투자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서비스무역

(가) 2009년 10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안배」 보충협의』, 『「안배」 보충협의 2』, 『「안배」 보충협의 3』, 『「안배」 보충협의 4』에서 서비스무역 개방을 승낙한 기초 위에서, 회계·건축·의료·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채광 관련 서비스·인력제공 및 배치·과학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인쇄·전람회·분배·환경·은행·사회서비스·여행·해운·항공운수·도

462)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로운수・개인자영업자 등 18개 영역에서 시장진입조건을 보다 확대한다.

(나) 본 협의의 부속문서는 「안배」 부속문서 4 표1의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표」, 『「안배」 보충협의』 부속문서3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 『「안배」 보충협의 2』 부속문서2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 2」, 『「안배」 보충협의 3』 부속문서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 3」, 『「안배」 보충협의 4』 부속문서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 4」를 보충・개정한 것이다. 상술한 5개의 규정들과 저촉될 경우 본 보충협의의 부속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협의 중의 '서비스제공자'는 「안배」 부속문서 5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무역투자편리화

양 지역의 브랜드(원어: 品牌) 영역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은 브랜드협력을 「안배」 무역투자편리화 영역에 보충하여 넣는데 동의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안배」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쌍방은 다음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1) 무역투자촉진;

2) 통관편리화;

3) 상품검사, 동식물검사·검역, 식품안전, 위생검역, 인증인가 및 표준화관리;
4) 전자상거래;
5) 법률법규투명도;
6) 중소기업협력;
7) 산업협력;
8) 지적재산권보호;
9) 브랜드협력."

2.「안배」부속문서 6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쌍방은 무역투자촉진, 통관편리화, 상품검사, 동식물검사검역, 식품안전, 위생검역, 인증인가 및 표준화관리, 전자상거래, 법률법규투명도, 중소기업협력, 산업협력, 지적재산권보호, 브랜드협력의 9개 영역에서 무역투자편리화 협력을 전개하며, 관련 협력은「안배」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 및 협조 하에 진행한다는데 동의한다."

3.「안배」부속문서 6중에 1개의 조문을 증보하여 제11조로 하고, 그 후의 조문순서는 순차적으로 순연한다. 제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브랜드협력

쌍방은 브랜드협력이 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두 지역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쌍방은 브랜드영역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 및 협조 하에 관련 실무반을 조직하고

쌍방의 브랜드영역의 협력을 강화한다.

(나) 협력내용

쌍방은 다음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1) 브랜드영역에서의 양 지역의 교류와 소통 강화.
2) 브랜드보호의 법률법규 제정 및 집행방면의 정보교환
3) 육성, 고찰, 간행물출판 등 방면의 협력 강화
4) 홈페이지 홍보, 회의전람 추천소개(원어: 推介),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식을 통하여 양 지역 브랜드의 활동촉진 확대."

3. 부속문서

본 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협의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4. 효력발생

본 협의는 쌍방 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의는 중문(中文)으로 쓰고, 2부를 작성한다.

본 협의는 2008년 7월 30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司長)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門關于建立更緊密經貿關系的安排》補充協議六)

내지[463]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함)와의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10월 17일 체결한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内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이하 "안배"라 함);

2004년 10월 29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005년 10월 21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2』,

2006년 6월 26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3』,

2007년 7월 2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4』,

2008년 7월 30일 체결한 『「안배」 보충협의 5』에 의거하여,

쌍방은 서비스무역 영역에서 내지가 마카오에 대해 개방을 확대하고 무역투자편리화를 촉진하며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협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1. 서비스무역

(가) 2009년 10월 1일부터 내지는 「안배」, 『「안배」 보충협의』, 『「안배」 보충협의 2』, 『「안배」 보충협의 3』, 『「안배」 보충협의 4』, 『「안배」 보충협의 5』에서 서비스무역 개방을 승낙한 기초 위에, 법률, 건축, 의료, 연구 및 개발, 부동산, 인력제공 및 안배, 인쇄, 회의전람, 공용사업, 전신, 시청, 분배, 은행, 증권, 여행, 레크리에이션(원어: 文娛),

463) 「안배」에서 내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영토(關稅領土)를 가리킨다.

해상운수, 항공운수, 개인자영업자 등 19개 영역에서 시장진입조건을 보다 확대한다.

(나) 본 협의의 부속문서는 「안배」 부속문서4 표1의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표」, 『「안배」 보충협의』 부속문서3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 『「안배」 보충협의 2』 부속문서2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 2」, 『「안배」 보충협의 3』 부속문서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 3」, 『「안배」 보충협의 4』 부속문서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 4」, 『「안배」 보충협의 5』 부속문서 「마카오에 대한 내지의 서비스무역개방 구체적 승낙의 보충 및 개정 5」을 보충·개정한 것이다. 상술한 6개의 규정들과 저촉될 경우 본 협의 부속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협의 중의 '서비스제공자'는 「안배」 부속문서 5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무역투자편리화

양 지역의 지적재산권보호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쌍방은 다음의 조치에 의하여 상표영역의 교류·협력을 보다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가) 협력체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마카오 경제국과 연락체계를 건립하고 상표영역에서의 쌍방의 협력을 강화한다.

(나) 협력내용

(1) 상표영역에서의 양 지역의 정보교류 강화.

(2) 토론회, 교류회,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형식을 통하여 쌍방 상표등록제도에 대한 양 지역 기업의 인식을 제고한다.

(3) 양 지역 인력양성 방면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 자격의 상호 승인

쌍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전문직 자격의 상호승인을 더욱 추진한다.

(가) 회계영역

쌍방은 장차 양지역에서 중국 등록회계사와 마카오 계리사(원어: 核數師) 고시과목 상호면제 연구업무를 전개하기로 한다.

(나) 인쇄영역

쌍방의 주관부문 및 직종 기구는 장차 양 지역 인쇄기능인의 기구 교류업무를 전개한다.

4. 부속문서

본 협의의 부속문서는 본 협의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5. 효력발생

본 협의는 쌍방 대표가 정식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의는 중문(中文)으로 쓰고, 2부를 작성한다.

본 협의는 2009년 5월 11일 마카오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제재정사 사장
(商務部副部長)	(經濟財政司司長)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 회의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포, 시행을 공고함. 1988년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199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개정안”, 2004년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서 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인민들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이룩하고 있으며 훌륭한 혁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적인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적국가로 변화했다. 중국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용감무쌍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20세기에 들어와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손중산선생이 지도한 신해혁명은 봉건적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

국인민의 역사적 임무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모택동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이끌었던 중국의 여러 민족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곤란하고 곡절 많은 무장투쟁 및 그 밖의 형태의 투쟁을 거쳐 1949년에 드디어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는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해 나갔다.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달성되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소멸되었으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었다.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실질상의 무산계급독재가 강고해지고 발전되었다. 중국인민 및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파괴 및 무력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독립되었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가 거의 달성되었고 농업생산도 크게 향상되었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은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에서는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광범한 인민의 생활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모두가 중국공산당이 이끈 중국의 여러 민족인민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여 획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전력을 다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인민은 계속하여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받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지도아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 이론 및 <3個 대표>의 중요사상의 인도 아래 인민민주주의 독재 및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자력갱생하고 열심히 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과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지만 아직 일정한 범위에서 계급투쟁은 장기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와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분자에 의거하여 일체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장기에 걸친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각 민주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모든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통일전선은 계속하여 강고해지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해왔지만 금후에는 국가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우호활동에서 또 사회주의의 현대화의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 있어 더욱 그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여러 정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발전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 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및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계속하여 강화될 것이다. 민족의 단결을 지키는 투쟁 중에서 대(大)민족주의 특히 대(大) 한족주의(漢族主義)를 반대하고 또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력을 다하여 전국 각 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보전의 사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및 평화공존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여러 국가와의 외교관계 및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킨다.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반식민지주의를 견지하며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고 피억압민족과 개발도상국의 민족독립의 획득 유지 및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확보하여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헌법은 중국 각 민족인민의 분투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 및 임무를 정한 것이며 국가의 근본법인 동시에 최고 효력을 갖는다. 전국의 여러 민족인민 및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와 기업 사업체는 모두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제1장 총 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원어: 工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 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문화사무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실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조직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

중앙 및 지방국가기구의 직권구분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지방의 능동성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킨다는 원칙에 의거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원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는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며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소수민족의 특징 및 필요에 따라서 소수민족지구가 경제

적으로 더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각자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 습관을 보유 또는 개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제5조 국가는 사회주의 제도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둔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모둔 국가관계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 및 기업과 사업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둔 행위는 반드시 이를 추궁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단적 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농촌에서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 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여러 형태의 합작경제는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집단소유의 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류지(自留地), 자류산(自留山), 가정부업(家庭副业)을 경영하고 개인소유의 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있어서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근로대중의 집단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 광물자원, 수류(水流), 산지, 초원, 황무지, 모래사장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유 즉 모든 인민의 소유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소유에 속하는 삼림, 산지, 초원, 황무지 및 모래사장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농촌 및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에 속하는 이외에는 집단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류지 및 자류산도 집단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지용하고 보상을 줄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불법양도 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둔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非)공동소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동소유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인도하며 비공동소유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사회주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느 조직·개인이 일체의 수단으로 국가와 집체(集體)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하고 보상을 줄 수 있다.

제14조 국가는 노동자의 적극성 향상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기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하며 경제의 관리체제와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시하며 노동조직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효율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장려하며 낭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 집체 및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발전의 기초위에서 점차 인민의 물질생

활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며 거시적인 조정과 통제를 완벽하게 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주적인 경영권을 가진다.

제17조 집체경제조직은 상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하여 경제활동에 종사 할 자주권을 가진다.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원을 선출 또는 파면하고 경영과 관리상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인민의 과학,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성립하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하며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입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노동자, 농민, 공무원 및 기타 노동자에 대하여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며 독학에 의한 기능습득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및 국가의 기업, 사업체와 그 밖의 사회조직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널리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지식 및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의 성과와 개발 및 창조를 장려한다.

제21조 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의 집단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사업체, 및 거주지조직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를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강화한다.

제22조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문학, 예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 발행,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사업을 진흥시키고 대중적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귀중한 문화재와 기타 중요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층을 확대하며 여건을 조성하며 사회주의적 현대화 건설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게 한다.

제24조 국가는 이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과 기률 및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하여 또 도시 및 농촌 각 분야의 대중의 각종 수칙, 규약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조국, 인민,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고 인민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및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변증법적유물론과 역사적유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사상, 봉건주의사상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추진하여 인구의 증가와 경제, 사회발전 계획과 서로 조화되도록 한다.

제26조 국가는 생활환경 및 생태계 환경을 보호, 개선하여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방지 한다.

국가는 식수와 조림을 계획, 장려하고 임목을 보호한다.

제27조 모둔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과 업무책임제를 실시하여 업무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둔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하며 항상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칭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하며 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해치고 사회주의적 경제를 파괴하는 활동, 및 기타의 범죄활동을 제제하며 범죄자를 징벌 개조한다.

제2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역량은 인민에게 속한다. 그 임무는 국방을 강화하고 침략에 대항하며 조국을 보호하고 인민의 평화적 노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한 봉사에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역량의 혁명화 현대화 및 정규화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시킨다.

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을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자치현은 향(鄕), 민족향, 진(鎭)으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를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를 자치현, 시

로 나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중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 받을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시하고 보장한다.

어떠한 공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한 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다. 다만 법률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 출판, 집합,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공민의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친 후 공안기관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불법구금 및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민에 대하여 모욕, 비방 및 무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주택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공민의 주택에 대한 불법수색이나 불법침입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이나 형사범죄수사상의 필요로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에서 법률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 이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든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 독직행위에 대하여 관계, 국가기관에 청원,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 모함할 수 없다.

공민의 청원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하여 관계 국가기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자도 이를 억압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취업조건을 조성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또한 생산성향상의 기반 위에서 노동보수를 인상하고 복지와 대우를 향상시킨다.

노동은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광스러운 직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노동에 임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선진적인 활동가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할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 전 공민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원 노동자의 취업시간과 휴식제도를 확립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 사업체의 직원 노동자와 국가기관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년제를 실시한다. 정년퇴직자의 생

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의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및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잔폐(殘廢)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유족을 보조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매인 혹은 공민의 노동, 생활 및 교육을 배려하고 원조한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 문학과 예술의 창작 및 기타 문화생활을 할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문화, 예술 및 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의 인민에게 유익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한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부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정생활 등의 모든 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부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의 동일보수의 원칙을 실행하며 여성간부를 양성, 등용한다.

제49조 혼인, 가정, 어머니와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니며 성년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부녀·아동의 학대를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가의 비밀을 지키며 공공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노동규율을 지키며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5조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매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다.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常設)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특별 행

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조직지도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수와 대표선출 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전원의3분의2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제거되면 1년 내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主席團)을 선출하여 회의를 집행하게 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⑴ 헌법을 개정한다.

⑵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⑶ 형사, 민사, 국가기구, 기타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⑷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총리 인선(人選)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秘書長) 인선을 결정한다.

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⑺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⑻ 최고인민 검찰원(檢察院) 검찰장(檢察長)을 선거한다.

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⑽ 국가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⑾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⑿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⒀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⒁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⒂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직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전국인민대표개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소환 또는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⑵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⑶ 중앙군사위원회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⑷ 최고인민법원 원장;

⑸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檢察長).

제64조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한다.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전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제6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들로 구성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 명, 비서장(秘書長), 위원 약간 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을 선거하며 또는 그들을 소환 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 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이 상무위원회는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상무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 개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법률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집행과정에 제기되는 필요한 부분적 조절안을 심사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7) 헌법 법률에 어긋나는 국무원의 행정규정, 결정, 명령을 폐지한다.
(8) 헌법, 법률, 행정규정에 어긋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의 지방적 법규와 결의를 폐지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인선을 결정한다.
(11)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檢察員),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3)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폐기를 결정한다.
(15) 군사칭호, 외교직급 및 기타 부문별 직급 또는 칭호를 규정한다.
(16) 국가의 훈장과 명예 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7) 특사를 결정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하는 경

우 또는 침략을 공동으로 방지 할 데 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19)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부적 동원을 결정한다.

(20)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 돌입을 결정한다.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준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돕는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으로 위원장회의를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무를 처리한다.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문별위원회를 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부문별위원회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를 받는다.

부문별위원회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아래 관계의안을 연구, 심의 또는 작성한다.

제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결의를 지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할 때 관련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은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기간에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 안을 법률이 정한절차에 따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책임지고 해답하여야 한다.

제74조 전국인민대표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의 허가 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체포 또는 형사재판을 하지 못한다.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이러저러한 회의들에서 한 발언 또는 표결로 인하여서는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 비밀을 지키며 자기가 참가하고 있는 생산, 사업, 사회 활동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인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 및 반영하며 인민을 위하여 꾸준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본 단위에서 선출한 대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사업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 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령을 반포하여 비상사태 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반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 사절을 접수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 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자리가 궐위일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이어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가 궐위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자리가 궐위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되기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 직위를 임시 대행한다.

제3절 국무원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제86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 총리, 부총리 약간 명, 국무위원 약간 명, 각 부 장관,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와 각 위원회는 장관 책임제,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부총리, 국무원은 총리의 사업을 돕는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 및 국무원전원회의를 소집 진행한다.

제89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세우며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낸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영도한다.
(4)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며 중앙국가행정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구체적 직권범위를 규정한다.
(5)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6) 경제사업과 도시건설 및 농촌건설을 영도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및 감찰 등 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9)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다른 나라와 조약 및 협정을 맺는다.
(10) 국방건설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11) 민족사무를 영도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 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 각 위원회가 낸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5)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획을 비준하며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획을 비준한다.
(16) 법률이 정한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 돌입을 결정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상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준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90조 국무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자기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부무(部務)회의 또는 위원회회의, 위무(委務)회의를 소집집행하며 자기 부문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자기 부문의 권한범위 안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낸다.

제91조 국무원은 심계기관을 두고 국무원 각 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입지출 및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사업 조직의 재무수입지출에 대하여 심계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총리의 영도 아래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 명,

위원 약간 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95조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 구, 향, 민족 향, 진은 인민대표와 인민정부를 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은 자치기관을 둔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권력기관이다.

현 급(縣級)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둔다.

제97조 성, 직할시, 구를 둔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 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현, 구를 두지 않은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 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 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구역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

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채택 반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공공사업건설 계획을 심사 결정한다.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행정 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 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0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를 어기지 않는 전제하에 지방적 법규를 제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기 해당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 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 현장 구장과 부 구장, 향장(鄕長)과 부 향장, 진장(鎭長)과 부 진장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인민법원 원장과 해당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소환 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그를 경유하여 그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 성, 직할시 구를 둔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으며 현, 구를 두지 않은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 향, 진 인민대회대표는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단위 및 선거 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부 주임 약간 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부 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104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제반 사업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해당인민정부, 인민법원 및 인민 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며 해당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폐지하며 한 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의를 폐지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기관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한 급 높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별적 대표를 소환 또는 보선한다.

제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 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임기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사업; 도시건설, 농촌건설 사업;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계획출산 등 행정 사업을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내며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상벌 한다.

향, 민족 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해당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 향, 진의 설치와 구획을 결정한다.

제108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사업부문들과 하급인민정부의 사업을 영도하며 소속 사업부문들과 하급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권한을 가진다.

제109조 현 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기관을 둔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이 정한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해당 인민정부 및 한 급 높은 심계기관 앞에 책임진다.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직상급 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영도 아래에 있는 국가 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따라야 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의 주민거주지에 의하여 내온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시민적 자치 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 주임, 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와 기층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위생위원회 등을 두고 해당 거주지구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또한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 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 외에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의 대표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 주임을 맡아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제115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자치 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또한 헌법, 민족구역자치법,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해당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 집행한다.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방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 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 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 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 재정체제에 의하여 민족자치지방에 돌려지는 재정 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 사용하여야한다.

제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밑에 지방적 경제 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조직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건설 할 경우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돌보아야한다.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해당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 번영시킨다.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그 지역의 실지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사회치안 유지를 위한 해당 지방의 공안부대를 조직 할 수 있다.

제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 할 때 해당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말과 글을 사용한다.

제122조 국가는 각 소수민족들이 경제건설 및 문화건설 사업을 급속히 발전하도록 재정, 물자, 기술 등 면에서 도와준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그 지역의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노동자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도록 도와준다.

제7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 재판 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두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둔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하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25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6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27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 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28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인민법원을 내온 국가권력기관 앞에 책임진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이다.

제13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두며 군사 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둔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1조 인민검찰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2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제133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자신들에게

국가권력을 수권한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진다.

제134조 각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관계자에게 번역을 해 주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원어: 聚居)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구에서는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언어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에는 실지 수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글을 사용 하여야한다.

제135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누어 책임지며 상호 배합하고 상호 제약함으로서 법률이 정확히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제13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5성 붉은 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義勇軍進行曲)이다.

제137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복판에 5개의 별이 비춰주는 천안문이 있고 테두리에는 곡식이삭과 치륜(齒輪)이 있다.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북경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主席令 제26호 공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서 문(序文)

홍콩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나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의해 점령되었다. 1984년 12월 19일 중영(中英) 양국정부는 홍콩문제에 관한 연합성명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7년 7월 1일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중국인민의 홍콩을 회수하려는 공동의 염원을 실현하게 되었다.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홍콩의 역사와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였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였다. 홍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과 정책은 중국정부가 중·영연합성명에서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홍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과 정책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1장 總 則

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이다.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본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자치(高度自治)를 시행하고,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조임권(終審權)을 향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홍콩 영주민(永住民)이 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주민과 기타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내(境內)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사용·개발·임대하거나 또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사용 또는 개발을 허가해 주고, 그 수입은 전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지배에 귀속된다.

제8조 홍콩의 기존 법률, 즉 보통법·형평법·조례·부속입법과 관습법은 본법에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입법기관 및 사법기관은 중문(中文)을 사용하는 외에 영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영문도 공식언어이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국장(國章)을 게양 및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구기(區旗)

와 구장(區章)도 게양 및 사용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구기는 5성 꽃받침의 자형화(紫荊花)로 도안된 홍기(紅旗)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구장(區章)은 중간에 5성 꽃받침의 자형화가 있고, 테두리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와 영문 "HONG KONG"이 기재되어 있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사회·경제제도를 포함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보장에 관한 제도, 행정관리·입법과 사법방면의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은 모두 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어떠한 법률도 본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中央과 홍콩特別行政區의 關係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행정구역의 하나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계되는 외교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는 홍콩에 기구를 설치하여 외교사무를 처리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본법에 따라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방위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중앙인민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에 파견하여 방위사무를 책임지는 군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필요할 경우 중앙인민정부에 주둔군의 사회치안유지와 재해구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주둔군은 전국에 효력이 미치는 법률(원어: 全國性法律)을 준수하는 외에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도 준수하여야 한다.

주둔군의 비용은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제15조 중앙인민정부는 본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 등록은 해당 법률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만약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의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후 관련 법률을 반송할 수는 있으나 당해 법률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반송된 법률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해 법률의 효력상실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력이 없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본법 및 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홍콩 기존의 법률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전국성법률은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것 외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지역에 공포하거나 또는 입법화하여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 산하에 있는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부속서Ⅲ에 열거한 어떠한 법률도 국방·외교와 관련되는 법률 및 기타 본법의 규정에 따른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로 한정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정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내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관련 전국성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시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홍콩 기존의 법률제도 및 원칙의 계속적인 유지(維持)가 법원의 심판권에 가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와 관련된 사실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행정장관이 그 문제에 관하여 발급한 증명문건을 득하여야 하고, 상기 문건은 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장관은 증명문건을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문건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중앙인민정부가 수여하는 기타 권한을 향유한다.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 중 중국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한 대표의 수와 대표선출방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공민이 홍콩에서 선출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국가최고권력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 중앙인민정부 산하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홍콩특별행정구가 본법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중앙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홍콩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와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한 모든 기구 및 그 인원들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 기타 지역의 사람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출입할 때에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중 홍콩특별행정구에 들어와 定住할 인원의 수는 중앙인민정부 주관부문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 확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북경에 사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국가배반, 국가분열, 반란선동, 중앙인민정부의 전복 및 국가기밀 절취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

는 것을 금지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와 연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입법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住民)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2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 약칭하여 홍콩주민은 영주민(永住民)과 비영주민(非永住民)을 포함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은 다음과 같다.

(1)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공민

(2)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홍콩에서 통상 연속해서 7년 이상 거주한 중국공민

(3) 제(1), (2)항에 열거된 주민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4)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들어와 홍콩에서 통상 연속해서 7년 이상 거주하고 홍콩을 영주지로 하고 있는 중국국적이 아닌 사람

(5)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제(4)항에 열거한 주민이 홍콩에서 낳은 21세 미만의 자녀

(6) 제(1)항부터 제(5)항에 열거한 주민 이외에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에 단지 홍콩에서만 거류권을 가진 사람

이상의 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류권을 향유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그 거류권이 명기된 영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비영주민(非永住民)이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홍콩주민의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은 있으나 거류권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25조 홍콩주민은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제2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은 법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7조 홍콩주민은 언론·뉴스·출판의 자유와 결사·집회·시위행진·시위의 자유를 가지며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파업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28조 홍콩주민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홍콩주민은 임의 또는 불법으로 구속·체포 또는 감금당하지 않는다. 임의 또는 불법으로 주민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주민에 대하여 가혹한 형벌을 시행하거나 임의 또는 불법으로 주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9조 홍콩주민의 주택과 기타 가옥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임의 또는 불법으로 주민의 주택과 기타 가옥을 수색 또는 침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0조 홍콩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의 안전과 형사사건의 추적수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부문이나 개인도 그 어떤 이유로도 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홍콩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경내(境內)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국외 또는 기타 지구로의 이주의 자유를 가진다. 홍콩

주민은 여행 및 출입경의 자유를 가진다.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법적 제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홍콩특별행정구를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

제32조 홍콩주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홍콩주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공개적인 선교 및 종교활동을 거행하거나 또는 참가할 자유가 있다.

제33조 홍콩주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제34조 홍콩주민은 학술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의 자유가 있다.

제35조 홍콩주민은 비밀리에 법률자문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시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거나 또는 법정에서 자신을 대리하게 하거나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홍콩주민은 행정부문과 행정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36조 홍콩주민은 법에 의하여 사회복리를 향수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의 복리대우와 퇴직에 대한 보장은 법률의 보장을 받는다.

제37조 홍콩주민의 결혼의 자유 및 자녀를 자원하여 출산(自願出産)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38조 홍콩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이 보장하는 기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3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의 홍콩에 적용되는 규정은 계속 유효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통하여 시행한다.

홍콩주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는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제한은 본조 제1관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신계(新界) 원주민의 합법적인 전통권익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보호를 받는다.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내(境內)에 거주하는 홍콩주민 이외의 기타 사람들은 법에 의하여 본 장에 규정된 홍콩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42조 홍콩주민과 홍콩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타 사람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시행하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정치체제

제1절 행정장관(行政長官)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首長)으로서 홍콩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민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40세 이상의 자로 홍콩에서 통상 연속해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제45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거 또는 협상에 의하여 선출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상황과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되 최종적으로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는 추선위원회가 민주적 방법에 따라 추천한 후 보통선거로 선출한다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

행정장관선출의 구체적 방법은 부속서Ⅰ「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에서 규정한다.

제46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반드시 청렴결백하게 공무에 봉사하여야 하며, 충성을 다하여 직무에 임해야 한다.

행정장관은 취임할 때에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 수석법관에게 재산을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8조 홍콩특별구 행정장관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영도한다.

(2) 본법과 본법에 의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을 책임지고 집행한다.

(3) 입법회에서 통과된 法案에 서명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입법회를 통과한 재정예산안에 서명하고, 재정예산 및 결산을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4)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명령을 발한다.

(5)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하는 다음의 주요공무원을 추천하고, 해임을 건의한다. 각 사(司)의 사장(司長), 부사장(副司長), 각 국(局)의 국장(局長), 염정전원(廉政專員), 심계서서장(審計署署長), 경무처처장(警務處處長), 입경사무처처장(入境事務處處長), 해관관장(海關關長).

(6) 법정절차에 따라 각급 법원의 법관을 임면(任免)한다.

(7) 법정절차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8) 중앙인민정부가 본법이 규정한 관련 사무에 대하여 발하는 지시를 집행한다.

(9)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인민정부가 수권한 대외사무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10) 입법회에 제출하는 재정수입 또는 지출과 관련한 동의(動議)를 비준한다.

(11) 안전 및 중대한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정부 공무원 또는 기타 정부의 공무를 책임진 직원이 입법회 또는 그 산하 위원회에 증언을 하거나 또는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12) 형사범죄자의 형벌을 사면하거나 감경한다.

(13) 청원 또는 소원(申訴)사항을 처리한다.

제4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안을 입법회에 반송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입법회가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원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행정장관은 1개월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 만약 입법회가 재의결한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또는 입법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예산안 또는 기타 중요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고, 협상을 하였으나 여전히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때에는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행정장관은 매 임기내에 1차에 한하여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5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가 만약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부결할 경우 행정장관은 입법회에 임시 예산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입법회가 해산되어 임시 예산집행을 비준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장관은 새로운 입법회가 선출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전 재정연도의 지출기준에 따라 임시적인 단기 예산집행을 승인할 수 있다.

제52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하여야 한다.

(1) 중대한 질병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2) 입법회가 의결한 법률에 두 번 서명을 거부하여 입법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출된 입법회에서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 다수의 찬성을 얻어 문제의 원안(原案)을 다시 통과시켰으나 행정장관이 계속해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3) 입법회가 재정예산안 또는 기타 중요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여 입법회를 해산하였는데 다시 선출된 입법회에서 계속해서 문제의 원안의 통과를 거부할 경우

제5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 단기간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정무사장(政務司長), 재정사장(財政司長), 율정사장(律政司長)이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행정장관이 궐위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장관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이 궐위된 기간 동안의 직무대행은 제1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5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제55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회의의 구성원은 행정장관이 행정기관의 주요공무원·입법회 의원과 사회인사 가운데서 선임하며, 그 임면은 행정장관이 결정한다. 행정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인 행정장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 구성원은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행정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이 주재한다.

행정장관은 중요정책의 결정, 입법회에 대한 법안제출, 부속법규 제정 또는 입법회 해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인사의 임면·기율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긴급상황 하에서 취하는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장관이 행정회의의 다수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7조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한 염정공서(廉政公署)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8조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한 심계서(審計署)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절 행정기관

제5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이다.

제60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首長)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정무사(政務司), 재정사(財政司), 율정사(律政司)와 각 국(局), 처(處), 서(署)를 설치한다.

제6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요공무원은 홍콩에서 통상 연속해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永住民)인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2) 각종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3) 본법 규정의 중앙인민정부가 수권한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4) 재정예산과 결산을 편성하고 제출한다.

(5) 법안·의안(議案)·부속법규의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6) 공무원을 입법회에 파견하여 참석시키고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한다.

제6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율정사(律政司)는 형사검찰업무를 주관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64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입법회가 통과시켜 발효한 법률을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입법회에 시정보고를 하며, 입법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세금징수와 공공지출은 반드시 입법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기존의 행정기관이 설치한 자문조직제도는 계속해서 유지한다.

제3절 입법기관

제66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제67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

정구의 영주민인 중국공민으로 구성된다. 다만, 비(非)중국적의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과 외국에 거류권이 있는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도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고, 그 비율은 전체 의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입법회의 구성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상황과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의원 전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과 법안·의안의 표결절차는 부속서Ⅱ「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구성방법과 표결절차」의 규정에 의한다.

제69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제1기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외에 매기 임기를 4년으로 한다.

제70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만약 본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장관에 의하여 해산되었을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본법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선거를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7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주석(主席)은 입법회 의원들의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주석은 만 40세에 달하고, 홍콩에 통상 연속하여 20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제7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주석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의를 주재한다.

(2)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야 한다.

(3) 개회시간을 결정한다.

(4) 휴회기간 중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행정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6) 입법회의 의사규칙에 규정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제73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한다.
(2)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을 심의·통과시킨다.
(3) 세수와 공공지출을 비준한다.
(4) 행정장관의 시정보고를 청취하고 토론을 행한다.
(5) 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한다.
(6) 공공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토론한다.
(7) 종심법원 법관과 고등법원 수석법관의 임면에 동의한다.
(8) 홍콩주민의 소원(申訴)를 접수받아 수리한다.
(9) 입법회 전체의원 4분의 1 이상의 공동발의로 행정장관이 엄중한 위법행위 또는 독직행위가 있다고 고발하였는데도 그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입법회의 조사를 거쳐 입법회는 종심법원 수석법관에게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책임지고 구성하고, 종심법원 수석법관이 당해 위원회의 주석을 담임하라고 위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책임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입법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 조사위원회가 상술한 고발혐의를 구성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면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 찬성으로 탄핵안을 제출하여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0) 상기 각 항의 직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사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이 본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

라 제출한 법률안이 공공지출 또는 정치체제 또는 정치운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연명(聯名)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안은 제출하기 전에 행정장관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5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회의의 개회 정족수는 전체 의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입법회의 의사규칙은 입법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되 이 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가 의결한 법안은 행정장관이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제77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이 입법회에서 한 발언은 법적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제78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회의출석 시 및 회의에 출석하는 도중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제79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회 주석은 그 입법회 의원의 자격 상실을 선포한다.

(1) 중병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입법회 주석의 동의 없이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3)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을 경우

(4)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5) 파산하였거나 법원이 채무상환을 판결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홍콩특별행정구 구내(區內) 또는 구외(區外)에서 형사범죄를 범하여 1개월 이상의 감금형을 선고받고, 입법회 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무해제를 결의한 경우

(7) 품위손상 또는 선서를 위반하여 입법회 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견책을 의결한 경우

제4절 사법기관

제8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각 급(級)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 사법기관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81조 홍콩특별행정구에는 종심법원(終審法院), 거등법원(高等法院), 구역법원(區域法院), 재판서법정(裁判署法廷)과 각급 전문법정을 설립한다. 고등법원에는 상소법정(上訴法廷)과 우너송법정(原訟法廷)을 둔다.

홍콩에서 기존에 시행된 사법체계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종심법원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유지한다.

제8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종심권은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이 행사한다. 종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보통법 적용지역의 법관을 초청하여 재판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8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각 급 법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본법 제18조에 규정된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며, 기타 보통법 적용지역의 사법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제85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심판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는 법적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제86조 홍콩에서 기존에 시행되던 배심제도의 원칙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제8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기존에 홍콩에서 적용되었던 원칙과 당사자들이 향유한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어떤 사람이라도 합법적으로 체포, 구속된 후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두 무죄로 추정한다.

제88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현지 법관과 법조계 및 기타 방면의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제89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오로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품위손상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이 임명하는 3명 이상의 현지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審議廷)의 건의에 의하여 행정장관이 면직시킬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품위손상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5명 이상의 현지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審議廷)에서 심의하고, 그 건의에 의하여 본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제90조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은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본법 제88조와 제89조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의 법관과 고등법원 수석법관의 임명 또는 면직은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및 등록하여야 한다.

제9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관 이외의 사법 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임면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제9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관 및 기타 사법 종사자는 당사자의 사

법 및 전공에 대한 재능에 따라 임용하며, 기타 보통법 적용지구에서 초빙할 수 있다.

제93조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되기 전에 홍콩에서 재직하던 법관 및 기타 사법 종사자들은 모두 계속해서 유임하고, 근무연수도 그대로 유지되며, 급료·수당·복리혜택 및 근무조건은 기존의 표준보다 낮아지지 아니한다.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되기 전에 퇴직 또는 이직한 자를 포함하여, 퇴직하거나 규정에 따라 이직한 법관 및 기타 사법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소속 국적 및 거주지를 불문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기존의 표준보다 낮지 아니한 응분의 퇴직금·보수·수당 및 복지비를 지급한다.

제94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기존에 홍콩에서 시행되어온 방법을 참고하여 현지 또는 외래의 변호사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활동하거나 개업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전국의 다른 지역의 사법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방면의 연계 및 상호간의 협조를 제공한다.

제96조 중앙인민정부의 협조 또는 수권하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외국과의 사법공조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제5절 구역조직(區域組織)

제9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비정권성(非政權性)의 구역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구역조직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련 지역관리 및 기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문화·오락·환경위생 등 방면

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98조 지역조직의 권한 및 구성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6절 공무원

제9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이어야 한다. 본법 제101조가 규정한 외국국적을 보유한 공무원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어떤 직급 이하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0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전에 경찰부문을 포함한 정부 각 부문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계속해서 유임하고, 근무연수도 그대로 유지되며, 급료·수당·복리혜택 및 근무조건은 기존의 표준보다 낮아지지 아니한다.

제101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기존의 홍콩 공무원 중의 영국국적 또는 기타 외국국적의 인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영국국적 또는 기타 외국국적의 인사가 정부부문의 각 급 공무원을 담임하도록 임용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급 공무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하여야 한다. 각 사(司)의 사장(司長)과 부사장(副司長), 각 국(局)의 국장(局長), 염정전원(廉政專員), 심계서서장(審計署署長), 경무처처장(警務處處長), 입경사무처처장(入境事務處處長), 해관관장(海關關長).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영국국적 및 기타 외국국적을 보유한 자를 초빙하여 정부기관의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는 자격을 갖춘 적당한 인원을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에서 초빙하여 정부기관의 전문직 및 기술직을 담임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외국국적 인사는 개인 신분으로만 초빙되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2조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되기 전에 퇴직 또는 규정에 따라 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여 퇴직하거나 규정에 따라 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의 소속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기존의 표준보다 낮지 아니한 응분의 퇴직금·수당 및 복지비를 지급한다.

제103조 공무원은 본인의 자격, 경험 및 재능에 따라 임용 및 승진된다. 공무원의 임용·급여·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홍콩 공무원의 초빙·임용·근무평정·기율·양성 및 관리에 관한 기존의 제도는 외국국적 인원에게 부여되는 특권적 대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한다.

제104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주요공무원,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원의 법관과 기타 사법종사자는 취임 시에 법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제5장 경 제

제1절 재정, 금융, 무역 및 상공업

제10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 재산의 취득·사용·처분 및 상속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수용재산의 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용재산의 보상은 해당 재산의 당시 실제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자유로이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소유권과 외국투자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0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모두 자체수요에 충당하고,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예산은 수입에 맞추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지균형에 역점을 두어 적자를 피하여야 하며, 현지의 생산총액의 증가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0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저세율(低稅率) 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의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0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적절한 경제와 법률적 환경을 제공

하여 홍콩의 국제금융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11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화폐금융제도는 법으로 규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업 및 금융시장의 경영자유를 보장하며, 법에 따라 이를 관리·감독한다.

제111조 홍콩달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로서 계속해서 유통된다.

홍콩화폐의 발행권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있다. 홍콩화폐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100%의 준비금이 있어야 한다. 홍콩화폐의 발행제도와 준비금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화폐의 발행의 기초가 건전하고 발행계획이 홍콩화폐의 안정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숙지한다는 조건하에서 지정은행으로 하여금 법정권한에 따라 홍콩화폐를 발행하거나 또는 계속 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외환통제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홍콩화폐는 자유롭게 태환된다. 외환·황금·증권·선물시장(先物市場)을 계속해서 개방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금의 유동(流動)과 입출(入出)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1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외환기금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하고 지배하며, 주로 홍콩달러 환율을 조정하는데 사용한다.

제11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법률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며, 화물·무형재산과 자본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제11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된 관세지구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홍콩의 명의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 방직품에 관한 부속협정 등 특혜무역 관련협정을 포함한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가 취득하였거나 또는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해서 유효한 수출할당액·관세특혜와 체결된 기타 유사한 협정은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한다.

제1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당시의 원산지규칙에 근거하여 생산품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8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경제와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투자·기술발전 및 신흥 산업개발을 장려한다.

제11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제조업·상업·관광업·부동산업·운수업·공공사업·서비스업·농어업 등 각종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촉진 및 조정하고, 환경보호에 주의한다.

제2절 토지계약

제120조 홍콩특별행정구가 설치되기 전에 허가·결정 또는 기한이 연장된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토지계약 및 토지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계속하여 승인 및 보호된다.

제121조 1985년 5월 27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원래 기간을 연장할 권리가 없었으나 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고 2047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토지계약은 임차인이 1997년 7월 1일부터 지

가(地價)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다만 기간연장일로부터 매년 그 시점에서의 토지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지대(地代)를 지불한다. 그 이후에는 토지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지대를 조정한다.

제122조 기존의 허가를 받아 계약된 구역, 향촌의 대지나 정옥지(丁屋地) 및 이와 유사한 농촌토지는 만약 1984년 6월 30일자 임차인 또는 그 날 이후에 허가를 받은 정옥지(丁屋地)의 임차인의 부계(父系)가 1898년에 홍콩의 기존 향촌주민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차인이 여전히 본인이거나 또는 그의 합법적인 부계상속인이기만 하면 기존의 임차료는 변경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된다.

제123조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된 이후 기한이 도래되었으나 기한 연장권이 없는 토지계약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처리한다.

제3절 해 운

제12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선원과 관련된 관리제도(管理制度)를 포함한 기존 홍콩에서 시행되던 해운경영과 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해운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직능과 책임을 자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2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의 수권을 받아 선박등록을 계속 행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중국홍콩의 명의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6조 외국의 군용선박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입항할 때 중앙인민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선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그 항구를 출입할 수 있다.

제12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사영(私營)해운업 및 해운 관련 기업과 사영(私營) 컨테이너 부두는 계속해서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다.

제4절 민간항공

제128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의 국제적 또는 지역항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기존 홍콩에서 시행되어 온 민간항공 관리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중앙인민정부의 항공기 국적표지 및 등록표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콩 항공기 등록부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의 국영 항공기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할 때에는 중앙인민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비행장관리, 홍콩특별행정구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공중교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역적 운항계획절차에 규정된 기타 직책의 수행을 포함한 민간항공기의 일상적인 업무와 기술관리를 자체적으로 책임진다.

제131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협정을 체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되어 있고 홍콩을 주영업지로 하는 항공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항공사를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지역간의 왕복운항노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지역과 기타 국가 및 지역을 왕복하며 홍콩특별행정구를 경유하는 운항노선과 관련되고, 홍콩특별행정구와 기타 국가 및 지역을 왕복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지역을 경유하는 운항노선과 관련된 민간항공운송협정은 중앙인민정부가 체결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본조 제1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특수상황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인민정부가 외국정부와 본조 제1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운항노선의 개설에 관하여 협상을 할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133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앙인민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존의 민간항공운송협정 및 합의를 연장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主)영업지로 하는 항공사에게 항공노선, 국경통과 및 기술적 착륙의 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민간항공운송협정의 체결을 교섭할 수 있다.

(3) 민간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외국 및 지역과 협상하여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중국 내지를 왕복·경유하지 아니하고 홍콩을 왕복·경유하는 정기항공 노선은 모두 본조에서 규정한 민간항공운송협정 또는 잠정협정에서 규정한다.

제13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다음의 권한을 수권한다.

(1) 기타 당국과 본법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항공운송협정 및 잠정협정의 집행에 관한 각종 협정의 상담 및 체결.

(2)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영업지로 하는 항공사에 대한 영업허가증의 발급.

(3) 본법 제133조에 규정된 민간항공운송협정 및 잠정협정에 따른 항공사의 지정.

(4) 외국 항공사에 중국 내지를 왕복·경유하는 항공노선 이외의 기타 항공노선 허가증 발급

제135조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되기 전에 홍콩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영업지로 한 항공사 및 민간항공과 관련된 업종은 계속해서 경영할 수 있다.

제6장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종교, 노동 및 사회봉사

제136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기존의 교육제도를 기초로 하여 교육체제와 관리, 교수언어(教授言語), 경비분담, 시험제도, 학위제도, 학력승인 등의 정책을 포함한 교육의 발전 및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각종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7조 각종 학교는 그 자주성이 보장되고 학술의 자유를 가지며,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곳에서 교직원을 초빙하고 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는 종교과정의 개설을 포함한 종교교육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선택 및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한다.

제138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서의약(中·西醫藥)의 발전과 의료보건위생 서비스를 촉진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의료보건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법률로 과학기술의 연구성과, 특허 및 발명창조를 보호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에 적용되는 각종 과학기술 표준과 규격을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제140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문화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법률로 작가의 문학예술창작으로 얻은 성과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141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종교조직의 내부 사무에 간섭하지 않으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종교활동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재산의 취득·사용·처분 및 재정지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재산과 관련한 기존의 권익은 계속해서 유지 및 보호된다.

종교조직은 기존의 방법에 따라 종교학교 및 기타 학교, 병원과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기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종교조직과 신도들은 다른 지역의 종교조직 및 신도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제142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기존의 전문직 제도를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각종 전문직 직업의 개업자격의 평가 방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되기 전에 전문직 자격 및 개업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는 관련 규정과 전문직 직업규칙에 따라 기존의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특별행정구가 설립되기 전에 승인한 전문직과 전문직 단체를 계속해서 승인하며, 승인을 받은 전문직 단체는 독자적으로 전문직 직업자격을 심사하고 전문직 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사회발전의 수요와 유관 방면의 자문의견에 따라 새로운 전문직과 전문직 단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43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체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민간체육단체는 법에 따라 계속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제144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기존의 홍콩에서 시행하던 교육·의료보건위생·문화·예술·오락·체육·사회복지·사회활동 등과 관련한 민간단체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의 홍콩의 각종 재정지원기구에서 재직 중인 직원은 기존의 제도에 따라 계속해서 초빙될 수 있다.

제145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 위에서 경제조건과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이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제146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사회봉사에 종사하는 자원단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독자적으로 그 봉사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7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노동과 관련한 법률과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제14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전문직·의료보건위생·노동·사회복지·사회활동 등과 관련된 분야의 민간단체 및 종교조직과 중국 내지의 관련 단체 및 조직의 관계는 상호 예속되지 않고, 상호 간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그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14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전문직·의료위생·노동·사회복지·사회활동 등과 관련한 분야의 민간단체와 종교조직은 세계 각국, 각 지역 또는 관련 국제단체 및 조직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으며, 각 관련 단체와 조직은 필요한 경우 "중국홍콩" 명의로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장 대외사무(對外事務)

제150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구성원의 자격으로 중앙인민정부가 행하는 홍콩특별행정구와 직접 관계되는 외교회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5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무역·금융·해운·통신·관광·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중국홍콩"의 명의로 세계 각국, 각 지구 및 관련 국제조직과 단독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제152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국가를 단위로 하여 참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와 관계되는 적당한 분야의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파견한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의 구성원의 자격 또는 중앙인민정부와 상기 관련 국제조직 또는 국제회의가 허용하는 신분으로 참가하고, "중국홍콩"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홍콩"의 명의로 국가를 단위로 하지 않는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참가하고 있고 홍콩도 이미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적당한 형식으로 그 조직에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직 참가하지 않고 있으나 홍콩은 모종의 형식으로 이미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가 적당한 형식으로 그 조직에 계속 참가하도록 한다.

제153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협정(國際協定)은 중앙인민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 홍콩특별행정구에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참가하고 있지 않으나 홍콩에 이미 적용되어 온 국제조약은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다. 중앙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가 적절한 안배를 하도록 수권하거나 또는 협조하여 기타 관련 국제협정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도록 한다.

제15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법률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국공민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여권을 발급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기타 합법적인 거류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기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상술한 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각국과 각 지구로 갈 때 유효하고, 소지자가 홍콩특별행정구에 귀환할 수 있는 권리가 명기된다.

세계 각국 및 각 지구의 사람들이 입경(入境), 체류 및 출경(出境)하는 것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출입경(出入境)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5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각국 및 각 지구와 상호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도록 협조하거나 또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15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필요한 경우 관영 또는 반(半)관영의 경제 및 무역기구를 설립할 수 있고, 이를 중앙인민정부에 미리 보고하고 등록한다.

제157조 외국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영사기구 또는 기타 관영, 반(半)관영의 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이미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홍콩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관영기구는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직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아니한 국가가 홍콩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관영기구는 상황에 따라 유지하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반(半)관영기구로 변경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민간기구만을 설립할 수 있다.

제8장 본법(本法)의 해석과 개정

제158조 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본법의 홍콩 자치범위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을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본법의 기타 조항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는 종국판결을 내리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을 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당해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 그전에 이미 내린 판결은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법에 대하여 해석을 내리기 전에 그 산하의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159조 본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본법의 개정제안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개정안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분의 2 이상 및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 다수의 동의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동의를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홍콩특별행정구 대표단을 통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법의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가 이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본법의 어떠한 개정도 홍콩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존에 정한 기본방침정책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부칙

제160조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될 당시 홍콩에서 시행 되어온 기존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법과 저촉된다고 선언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로 채용하고, 만약 이후에 어떤 법률이 본법과 저촉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거나 효력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홍콩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문건, 증명서, 계약과 권리의무는 본법과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유효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승인과 보호를 받는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中華人民共和國 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主席令) 제3호 공포,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

서 문(序文)

마카오반도, 감자도(氹仔島) 및 노환도(路環島)를 포함한 마카오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나 16세기 중엽 이후 포르투갈에 의해 서서히 점령되었다. 1987년 4월 13일 중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는 마카오문제에 관한 연합성명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중국인민의 마카오를 회수하려는 공동염원을 실현하게 되었다.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마카오의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카오의 역사와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의 방침에 따라 마카오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카오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과 정책은 중국정부가 중·포연합성명에서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여 마카오특별행정

구에서 시행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마카오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과 정책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1장 總 則

제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이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본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시행하고,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終審權)을 향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3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주민(永住民)이 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주민과 기타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5조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경내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에 이미 법에 따라 사유토지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사용·개발·임대하거나 또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사용 또는 개발을 허가해 주고, 그 수입은 전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지배에 귀속된다.

제8조 마카오의 기존 법률·법령·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건은 이 법에 저촉되거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9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입법기관 및 사법기관은 중문을 사용하는 외에 포르투갈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포르투갈어도 공식 언어이다.

제1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장(國章)을 게양 및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카오특별행정구 구기(區旗)와 구장(區章)도 게양 및 사용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구기(區旗)는 오성(五星)·연꽃·대교(大橋)·해수(海水)의 도안으로 된 녹색 깃발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구장(區章)은 중간에 오성(五星)·연꽃·대교(大橋)·해수(海水)가 있고, 테두리에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포르투갈어로 "마카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1조에 따라 사회·경제제도를 포함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보장에 관한 제도, 행정관리·입법과 사법방면의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은 모두 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어떠한 법률·법령·행정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건도 본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12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행정구역의 하나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계되는 외교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마카오에 기구를 설치하여 외교사무를 처리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본법에 따라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방위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제15조 중앙인민정부는 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 주요공무원 및 검찰장(檢察長)을 임면한다.

제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제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등록은 해당 법률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만약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의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관련 법률을 반송할 수 있으나 당해 법률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반송된 법률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해 법률의 효력상실은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력이 없다.

제18조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본법 및 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마카오 기존의 법률과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다.

전국성 법률은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것 외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법률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이 지역에 공포하거나 또는 입법화하여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 산하의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 부속서Ⅲ에 열거한 어떠한 법률도 국방·외교와 관련되는 법률 및 기타 본법의 규정에 따른 마카오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로 한정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정하거나 마카오특별행정구내에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관련된 전국성 법률을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마카오 기존의 법률제도 및 원칙의 계속적인 유지가 법원의 심판권에 가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와 관련되는 사실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행정장관이 그 문제에 관하여 발급한 증명문건을 득하여야 하고,

상기 문건은 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장관은 증명문건을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문건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중앙인민정부가 수권하는 기타 권한을 향유한다.

제2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 중의 중국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확정한 대표의 수와 대표선출방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마카오에서 선출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국가최고권력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 중앙인민정부 산하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본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중앙의 각 부문, 자치구, 직할시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와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설립한 모든 기구 및 그 인원들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 기타 지역의 사람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출입할 때에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중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들어와 定住할 인원의 수는 중앙인민정부 주관부문에서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 확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북경에 사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국가배반, 국가분열, 반란선

동, 중앙인민정부의 전복 및 국가기밀 절취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마카오특별행정구 내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와 연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입법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24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주민, 약칭하여 마카오 주민은 영주민(永住民)과 비영주민(非永住民)을 포함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은 다음과 같다.

(1)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마카오에서 출생한 중국공민 및 그가 마카오 이외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2)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마카오에서 통상 연속해서 7년 이상 거주한 중국공민 및 그가 영주민이 된 이후 마카오 이외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3)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마카오에서 출생하고 마카오를 영주지로 하고 있는 포르투갈인

(4)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마카오에서 통상 연속하여 7년 이상 거주하고 마카오를 영주지로 하고 있는 포르투갈인

(5)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마카오에서 통상 연속해서 7년 이상 거주하고 마카오를 영주지로 하고 있는 기타 사람

(6) 제(5)항 소정의 영주민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 또는 이후 마카오에서 낳은 18세 미만의 자녀

이상의 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거류권을 향유하며, 마카오 특별행정구 영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비영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마카오 주민의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은 있으나 거류권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25조 마카오 주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고, 국적·혈통·종족·성별·언어·종교·정치 또는 사상과 신앙·문화정도·경제상황 또는 사회조건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7조 마카오 주민은 언론·뉴스·출판의 자유와 결사·집회·시위행진·시위의 자유를 가지며, 노동조합의 조직 및 참가·파업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28조 마카오 주민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마카오 주민은 임의 또는 불법으로 구속·체포·감금되지 않는다.

임의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주민은 법원에 인신보호령을 발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 또는 불법으로 주민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주민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주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거나 또는 주민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9조 마카오 주민은 그 행위가 행위시의 법률이 명문규정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받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벌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마카오 주민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소추되었을 경우에 되도록 빨리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법원이 유죄로 판결하기 전에는 모두 무죄로 추정한다.

제30조 마카오 주민의 인격의 존엄성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민을 모욕·비방 및 무고·모함하는 것은 금지된다.

마카오 주민은 개인의 명예권, 개인생활 또는 가정생활의 프라이버시권을 향유한다.

제31조 마카오 주민의 주택과 기타 가옥은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임의 또는 불법으로 주민의 주택과 기타 가옥의 수색 또는 침입은 금지된다.

제32조 마카오 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의 안전과 형사범죄의 추적수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부문이나 개인도 그 어떤 이유로도 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마카오 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 境內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국외 또는 기타 지구로의 이주의 자유를 가진다. 마카오주민은 여행 및 출입경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에 따라 각종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법적 제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

제34조 마카오 주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마카오 주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공개적인 선교 및 종교활동을 거행하거나 또는 참가할 자유가 있다.

제35조 마카오 주민은 직업과 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제36조 마카오 주민은 법률에 호소할 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권리 및 사법구제(司法救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마카오 주민은 행정부문과 행정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마카오 주민은 교육, 학술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의 자유가 있다.

제38조 마카오 주민의 혼인의 자유, 가정을 이루는 권리 및 자원에 의한 자녀출산의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여성의 합법적 권익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보호를 받는다.

미성년자, 노인 및 신체장애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배려와 보호를 받는다.

제39조 마카오 주민은 법에 의하여 사회복리를 향수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의 복리 대우와 퇴직에 대한 보장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의 마카오에 적용되는 규정은 계속 유효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을 통하여 시행한다.

마카오 주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는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제한은 본조 제1관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마카오 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이 보장하는 기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42조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는 포르투갈 후예(後裔)인 주민의 이익은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보호를 받고, 그들의 습속(習俗)

과 문화전통은 존중을 받는다.

제4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경내의 마카오 주민 이외의 기타 사람은 법에 따라 본 장에 규정된 마카오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44조 마카오 주민과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는 기타 사람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정치체제

제1절 행정장관

제4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수장(首長)으로서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인민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40세 이상인 자로 마카오에서 통상 연속해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제4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거 또는 협상에 의하여 선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부속서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에서 규정한다.

제4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재직시 외국의 거류권을 가져

서는 안 되며, 개인적인 영리활동에 종사하여서도 아니 된다. 행정장관은 취임할 때 마카오특별행정구 종심법원 원장에게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것은 공문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5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를 영도한다.

(2) 본법과 본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을 책임지고 집행한다.

(3)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입법회가 채택한 재정예산안에 서명하고 재정예산 및 결산을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4)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명령을 발한다.

(5)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그 집행을 반포한다.

(6)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하는 다음의 주요공무원을 추천하고, 해임을 건의한다. 각 사(司)의 사장(司長), 염정전원(廉政專員), 심계장(審計長), 경찰부문 주요책임자, 해관(海關) 주요책임자.

(7) 일부 입법회 의원을 임명한다.

(8) 행정회 위원을 임면(任免)한다.

(9) 법정절차에 따라 각급 법원 원장과 법관을 임면(任免)하며, 검찰관을 임면(任免)한다.

(10) 법정절차에 따라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하는 검찰장을 추천하고, 중앙인민정부에 검찰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11) 법정절차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12) 중앙인민정부가 본법이 규정한 관련 사무에 대하여 발한 지시를 집행한다.

(13)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이 권한을 부여한 대외사무와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14) 입법회에 제출하는 재정수입 또는 지출과 관련한 동의(動議)를 비준한다.

(15) 국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안전 또는 중대한 공공이익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 공무원 또는 정부의 공무를 책임진 기타 직원이 입법회 또는 그 산하의 위원회에 증언 및 증거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16)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휘장(徽章)과 영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법에 따라 형사범죄자의 형벌을 사면하거나 감경한다.

(18) 청원, 소원(申訴)사항을 처리한다.

제5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9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법안을 입법회에 반송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입법회가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원안(原案)을 다시 통과시켰을 경우 행정장관은 30일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1) 행정장관이 입법회에서 재차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2) 입법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 예산안 또는 행정장관이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체이익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고 협상을 통해서도 여전히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하기 전에 행정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입법회를 해산시킬 때에는 공중(公衆)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은 매 임기 내에 1회에 한하여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5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예산을 부결시킬 경우, 그 직전 재정년도의 지출을 표준으로 임시적인 단기 예산집행을 승인할 수 있다.

제5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직하여야 한다.

(1) 중대한 질병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2) 입법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을 재차 거부하여 입법회를 해산하였고, 다시 선출된 입법회가 다시 문제의 법안을 전체의원의 3분의 2 이상 다수의 찬성을 얻어 다시 통과시켰으나 행정장관이 30일 내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3) 입법회가 재정예산안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전체이익에 관계되는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여 입법회를 해산하였는데, 다시 선출된 입법회에서 계속해서 문제의 그 원안의 통과를 거부할 경우

제5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단기간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각 사(司)의 사장(司長)이 각 사의 서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각 사(司)의 서열순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장관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120일 내에 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장관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이 결원발생 기간의 직무대행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행정장관의 대리는 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는 행정장관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기구이다.

제5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 위원은 행정장관이 행정기관의 주요공무원·입법회 의원과 사회 인사들 가운데서 선임하며, 그 임면은 행정장관이 결정한다. 행정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인 행정장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새로운 행정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기존의 행정회 위원은 잠시 유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 위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행정회 위원의 인원수는 7 내지 11명으로 구성한다. 행정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행정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는 행정장관이 주재한다. 행정회의 회의는 한달에 적어도 1회 개최한다. 행정장관은 중요한 정책의 결정, 입법회에 대한 법안의 제출, 행정법규의 제정 또는 입법회의 해산 전에 행정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인사의 任免, 기율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긴급상황 하에서 취하는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행정장관이 행정회 다수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설립한 염정공서(廉政公署)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염정전원(廉政專員)은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60조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설립한 심계서(審計署)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심계장(審計長)은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절 행정기관

제6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이다.

제6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首長)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사(司), 국(局), 청(廳), 처(處)를 설치한다.

제6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주요공무원은 마카오에서 통상 연속해서 15년 이상 거주한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주요공무원은 취임할 때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종심법원 원장에게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것은 공문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6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에 열거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1)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2) 각종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3) 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인민정부가 수권한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4) 재정예산과 결산을 편성하고 제출한다.

(5) 법안·의안을 제출하고 행정법규 초안을 작성한다.

(6) 공무원을 입법회 회의에 파견하여 출석시키고 의견을 청취하게 하거나 또는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한다.

제6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입법회를 통과하고 효력이 발생한 법률을 집행하며, 정기적으로 입법회에 시정보고를 하고, 입법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6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3절 입법기관

제6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제6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이 담임한다.

입법회 다수의 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입법회의 구성방법은 부속서Ⅱ「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구성방법」이 규정한다.

입법회 의원은 취임할 때 법에 의하여 경제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제1기의 임기를 달리 규정하는 이외에 매기 임기를 4년으로 한다.

제7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가 만약 본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장관에 의하여 해산되었을 경우 90일 이내에 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재구성해야 한다.

제7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개정·일시 시행중지 및 폐지한다.

(2)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을 심사·통과시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집행 결과보고를 심의한다.

(3) 정부의 제안에 근거하여 세수를 결정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비준한다.

(4) 행정장관의 시정보고를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5) 공공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토론한다.

(6) 마카오 주민의 소원(申訴)을 접수받아 처리한다.

(7) 입법회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의 공동발의로 행정장관이 엄중한 위법행위 또는 독직행위가 있다고 고발하였는데도 그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입법회는 결의를 통과시켜 종심법원 원장에게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책임지고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만약 상술한 고발혐의를 구성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면 입법회는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탄핵안을 제출하여 중앙인민정부에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 상술한 각 항의 직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사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주석, 부주석을 각 1명씩 둔다.

주석, 부주석은 입법회 의원들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 부주석은 마카오에서 통상 연속해서 15년 이상 거주한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제7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주석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부주석이 대행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주석 또는 부주석이 결원일 경우 선거를 따로 실시한다.

제7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주석은 다음에 열거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의를 주재한다.

(2) 의사일정을 결정하며, 행정장관의 요구에 응하여 정부가 제출

한 의안을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한다.

(3) 개회시기를 결정한다.

(4) 휴회기간 중에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긴급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행정장관의 요구에 응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6) 입법회 의사규칙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7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본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다. 공공수지(公共收支), 정치체제 또는 정부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의안은 입법회 의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연명(聯名)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의안은 제출하기 전에 행정장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제7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회의의 개회 정족수는 전체의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입법회의 법안, 의안은 입법회 전체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입법회 의사규칙은 입법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되 본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의결한 법안은 행정장관이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7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이 입법회 회의에서 한 발언과 표결은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제8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입법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당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이 다음에 열거하는 상황의 하나

가 있으면 입법회의 결정을 거쳐 그 입법회 의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1) 중병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법률이 겸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직무를 담임한 경우

(3) 입법회 주석의 동의 없이 연속 5회 또는 통산 15회의 회의에 불참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4) 입법회 의원의 선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5) 마카오특별행정구 구내(區內) 또는 구외(區外)에서 형사범죄를 범하여 30일 이상의 감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4절 사법기관

제8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한다.

제8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독립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법률에만 복종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4조 마카오특별행정구에는 초급법원, 중급법원과 종심법원을 설립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종심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종심법원에 속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의 조직, 직권과 운용은 법률로 정한다.

제85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초급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약간의 전문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기존의 형사기소 법정제도(刑事起訴法廷制度)는 그대로 유지한다.

제8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법원을 설립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과 세무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행정법원의 재결(裁決)에 불복하는 자는 중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8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각급 법원의 법관은 현지 법관, 변호사와 지명도가 높은 인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법관은 그 전문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고, 표준에 부합되는 외국국적의 법관도 초빙할 수 있다.

법관이 그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 행위가 맡은 직무와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장관은 종심법원 원장이 임명한 3명 이상의 현지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審議廷)의 건의에 의하여 그를 면직할 수 있다.

종심법원 법관의 면직은 행정장관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결정한다.

종심법원 법관의 임명과 해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8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각급 법원의 원장은 행정장관이 법관 중에서 선임한다.

종심법원 원장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종심법원 원장의 임명과 면직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8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본법 제19조 제3관에 규정된 상황은 그렇지 아니하다.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법관은 재직기간에 기타 공직이나 개인적인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되며, 정치적 단체에서 어떠한 직책도 담임하지 못한다.

제9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원(檢察院)은 독립하여 법률이 부여한 검찰직능을 수행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장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하고, 행정장관이 중앙인민정부에 추천 및 보고하여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검찰관은 검찰장이 추천하고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검찰원의 조직, 직권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마카오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사법보조인원에 대한 임면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제92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마카오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방법을 참고하여 현지 및 외래의 변호사가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개업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전국 기타 지구의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법에 따라 사법방면에서의 연계 및 상호 협조제공을 할 수 있다.

제9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의 협조 또는 수권하에 외국과 사법공조관계를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다.

제5절 시정기구(市政機構)

제9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비정권성(非政權性)의 시정기구(市政機構)를 설립할 수 있다. 시정기구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주민들에게 문화, 오락, 환경위생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상기 사무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제96조 시정기구의 직권과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6절 공무원

제97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무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이어야 한다. 본법 제98조와 제99조가 규정한 공무원과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초빙하여 임용한 일부 전문기술원과 초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시 경찰 공무원과 사법보조공무원을 포함한 기존 마카오에서 재직하던 공무원은 계속해서 유임되고, 급여·수당·복리혜택은 기존의 표준보다 낮아지지 아니하고, 기존에 향유하던 근무연수도 계속 유지된다.

마카오의 기존 법률에 의하여 퇴직금과 부양비 대우를 향유하던 유임된 공무원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그의 소속 국적 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기존의 표준보다 낮지 아니한 응분의 퇴직금·수당 및 부양비를 지급한다.

제9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기존의 마카오 공무원 중의 포르투갈 국적자와 기타 외국국적인사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포르투갈 국적자와 기타 외국 국적자를 각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본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련 부문은 포르투갈 국적자 및 기타 외국 국적자를 초빙하여 고문과 전문기술직무를 담임하게 할 수 있다.

상술한 인원은 개인신분으로만 초빙되며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0조 공무원은 그의 자격 및 경험과 재능에 따라 임용 및 승진

시킨다. 공무원의 임용, 기율, 승진과 정상적 승급에 관한 마카오의 기존제도는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카오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제7절 충성선서(忠誠宣誓)

제10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주요공무원, 행정회 위원, 입법회 의원, 법관, 검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을 옹호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충성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10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주요공무원, 입법회 주석, 종심법원 원장, 검찰장은 취임할 때 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외에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제5장 경 제

제10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재산취득·사용·처분 및 상속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재산을 수용할 때는 수용재산의 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용재산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재산의 당시 실제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자유로이 환가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기업소유권과 외국인투자는 모두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제10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모두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지배하고,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않는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재정예산은 수입에 맞추어 지출하는 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에 역점을 두고, 적자를 피하며 현지의 총생산액의 성장률에 상응하여야 한다.

제10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마카오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저세율(低稅率) 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의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입법으로 규정한다. 전문경영세제(專門經營稅制)는 법률로 따로 규정한다.

제107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화폐금융제도는 법률로 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시장과 각종 금융기구의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며, 또한 법에 의하여 이를 관리·감독한다.

제108조 파타카(Pataca)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로서 계속해서 유통된다.

마카오 화폐의 발행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있다. 마카오 화폐의 발행은 100%의 준비금이 있어야 한다. 마카오 화폐의 발행제도와 준비금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지정 은행으로 하여금 마카오 화폐를 발행하는 직능을 대리 행사하거나 또는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외환통제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다. 파타카(Pataca)는 자유롭게 태환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외환비축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지배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금의 유동(流動)과 입출(入出)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1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자유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법률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1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며, 화물·무형재산과 자본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제112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된 관세지구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방직품에 관한 부속협정 등 특혜무역 관련협정을 포함한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취득하였거나 또는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유효한 수출할당액·관세특혜와 체결된 기타 유사한 조치는 모두 마카오특별행정구가 향유한다.

제11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당시의 원산지규칙에 근거하여 생산품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근거하여 상공기업의 자유경영을 보장하며, 상공업발전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여 상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와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신흥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개발한다.

제11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경제발전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법률을 완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정부, 고용주 단체, 피고용자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성 조정기구를 설립한다.

제1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마카오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해운경영과 관리체제를 유지 및 완비하며, 자체적으로 해운정책을 수립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로부터 수권을 받아 선박등록을 할 수 있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의 군용선박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입항할 때 중앙인민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선박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그 항구를 출입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영(私營) 해운업과 해운과 관련한 기업 및 부두는 계속해서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다.

제1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앙인민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수권을 받아 민간항공과 관련된 각종 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118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현지의 전체적인 이익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광오락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제11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환경보호를 시행한다.

제12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에 비준 또는 결정된 기한이 1999년 12월 19일을 초과하는 합법적인 토지계약 및 토지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승인하고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후에 새로 허가하였거나 또는 계속해서 기간연장을 허가한 토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토지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문화와 사회 사무

제12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교육체제와 관리, 교수용어(教授用語), 경비분담, 시험제도, 학력 및 학위인정 등의 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교육의 발전을 추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2조 마카오 기존 각종의 학교는 모두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각종 학교는 모두 학교운영의 자주성을 가지며, 법에 따라 교습의 자유와 학술의 자유를 향유한다.

각종의 학교는 계속해서 특별행정구 이외의 곳에서 교직원을 초빙하고 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자유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한다.

제12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의료보건위생서비스를 촉진하고 중서의약(中·西醫藥)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의료보건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며, 과학기술의 연구 성과, 특허권과 발명창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에 적용되는 각종 과학기술 표준과 규격을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제12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문학예술·라디오방송·영화·텔

레비전 방송 등을 포함한 문화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작가의 문학예술 및 기타 창작의 성과와 합법적인 권익을 법률로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명승고적과 기타 역사문화재를 보호하며, 문화재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12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뉴스·출판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제12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체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민간체육단체는 법에 따라 계속 존재 및 발전할 수 있다.

제12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 원칙에 따라 종교조직의 내부 사무에 간섭하지 않고, 종교조직 및 신도가 마카오 이외의 지구의 종교조직 및 신도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간섭하지 않으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종교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종교조직은 법에 의하여 종교학교, 기타 학교, 병원과 복리기구를 개설할 수 있으며, 기타 사회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종교조직이 개설한 학교는 종교과정을 포함한 종교교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사용·처분·승계할 권리 및 기부금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종교조직의 재산방면의 기존 권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2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전문직 제도를 자체적으로 확정하며, 공평 및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각종 전문직 자격 및 개업자격의 평가와 그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에 이미 전문직 자격과 개업자격을 취득한 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의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전에 승인한 전문직과 전문직 단체를 계속해서 승인하며,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관련 방면의 자문을 거쳐 새로운 전문직과 전문직 단체를 승인한다.

제13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기초 위에서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전과 개선에 관련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제131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봉사단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봉사방식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3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수요와 가능성에 따라 기존의 마카오에서 시행하던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오락·의료보건위생·사회복지·사회활동 등 방면의 민간단체조직에 대한 보조 지원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한다.

제133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교육·과학·기술·문화·뉴스·출판·체육·오락·전문직·의료보건위생·노동·여성·청년·귀국화교·사회복지·사회활동 등 방면의 민간단체 및 종교조직과 전국 기타 지구의 상응하는 단체 및 조직의 관계는 상호 예속되지 않고, 상호 간섭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는 원칙을 그 기초로 한다.

제134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교육·과학·기술·문화·뉴스·출판·체육·오락·전문직·의료보건위생·노동·여성·청년·귀국화교·사회복지·사회활동 등 방면의 민간단체 및 종교조직은 세계 각국, 각 지역 및 국제적 관련 단체 및 조직과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으며, 각 관련 단체와 조직들은 필요한 경우에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장 대외사무(對外事務)

제13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구성원의 자격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진행하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직접 관계되는 외교회담에 참가한다.

제13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경제·무역·금융·해운·통신·관광·문화·과학기술·체육 등의 적당한 영역에서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 단독으로 세계 각국, 각 지구 및 관련 국제조직과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제137조 국가를 단위로 하여 참가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계되는 적당한 영역의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대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대표를 파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 일원의 신분 또는 중앙인민정부와 상기 관련 국제조직 혹은 국제회의가 허용하는 신분으로 참가하고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 국가를 단위로 하지 않는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참가하고 있고 마카오도 이미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는 상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적당한 형식으로 이러한 조직에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직 참가하지 않고 있으나 마카오는 이미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적당한 형식으로 그 조직에 계속 참가하게 한다.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협정은 중앙인민정부가 상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참가하지 않았으나 마카오에 이미 적용되어온 국제협정은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다. 중앙인민정부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적절한 안배를 하도록 수권 또는 협조를 하여 기타 관련 국제조약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도록 한다.

제139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민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국공민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여권을 발급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기타 합법적인 거류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기타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술한 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각국 및 각 지구로 갈 때 유효하며, 소지자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 및 각 지구의 사람들의 입경(入境), 체류, 출경(出境)에 대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출입경 관리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0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각국 및 각 지구와 상호 비자면제협정을 협상 및 체결하도록 협조하거나 또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14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필요한 경우 외국에 관영 또는 반(半)관영 경제 및 무역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42조 외국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영사기구 또는 기타 관영, 반(半)관영 기구를 설립할 때에는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이미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마카오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관영기구는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직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아니한 국가가 마카오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관영기구는 상황에 따라 계속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또는 반(半)관영기구로 변경시킬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민간기구만을 설립할 수 있다.

제8장 본법(本法)의 해석과 개정

제143조 본법에 대한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본법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자치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을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본법의 기타 조항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와의 관계에 관한 본법의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는 종국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카오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을 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이 당해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 그전에 이미 내린 판결은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법에 대하여 해석을 내리기 전에 그 산하의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144조 본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본법의 개정제안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개정안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분의 2 이상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 다수의 동의와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동의를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마카오특별행정구 대표단을 통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법의 改正議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 전에 먼저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가 이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본법의 어떠한 개정도 중화인민공화국이 마카오에 대하여 기존에 정한 기본방침정책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부 칙

제145조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성립될 당시에 마카오에서 시행되어 온 기존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법과 저촉된다고 선언한 것을 제외하고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로 채용하고, 만약 이후에 본법과 저촉되는 법률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개정하거나 효력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마카오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문건, 증명서, 계약과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본법과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유효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승인과 보호를 받는다.

기존 마카오 정부가 체결한 유효기한이 1999년 12월 19일을 초과하는 계약은 중앙인민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기구가 중포연합성명의 과도기 안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다시 심사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法務資料 第289輯>

중국과 홍콩·마카오 CEPA의 이해

2009年 12月 日 印刷
2009年 12月 日 發行

監 修 **李千世**(法務部 統一法務課長)
執 筆 **朴起東**(法務部 統一法務課 檢事)
李相哲(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專門委員)
發 行 法務部 法務室 統一法務課
果川市 中央洞 1番地 政府果川廳舍
電 話 (02)2110-3223
팩 스 (02)507-0315
홈페이지 http//:www.moj.go.kr
印 刷 文 衆 印 刷(株)
電 話 (02)503-7765

발간등록번호 : 11-1270000-000569-14